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논문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이 혜 민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논문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이 혜 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지도교수 정 영 목 정 상 조
이 논문을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이 혜 민

이혜민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김 상 훈	(인)
부위원장	이 보 아	(인)
위 원	정 영 목	(인)
위 원	정 상 조	(인)
위 원	김 영 철	(인)

국 문 초 록

글을 쓰는 작가들과 음악을 창작하는 창작가들은 작품의 복제(reproduction)를 통한 재생산 및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대에 걸쳐 작품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반면,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은 한 작품(히트 송, 베스트셀러 서적)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복제물이 아닌 ‘원본’에 그 가치를 두는 미술작품의 경우, 단일성, 희귀성, 그리고 작가의 명성으로부터 이득을 확보한다. 미술가의 경우 작품 가치는 여러 해에 걸쳐 창작된 대규모 작품체(body of work)를 통해 확립되어 쌓은 명성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가(혹은 그의 가족)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보상들은 콜렉터, 딜러, 투자가, 갤러리, 경매 하우스 등 미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출판 등의 분야와 비교했을 때, 미술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의 법학자들은 미술 분야에서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산되는 것과 저작자들 간의 불공정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1920년 작품의 원본이 재판매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작가와 그 가족에게 할당하는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권리인 ‘추급권(Droit de Suite)’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추급권은 작가의 기본적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2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1920년 프랑스가 추급권을 처음 도입한 이래로 2001년 9월 21일의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 6월 13일의 「유럽공동체 미술가 재판매권 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을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의 법제도 조화가 이뤄졌고, 세계 각국이 추급권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운영해 왔기에 추급권의 도입이 미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EU의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해 적용해 온 만큼 한국도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급권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및 연구 필요성에서 본 논문은 추급권 제도 입법화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추급권에 대해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해외 법제 비교법 연구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① 2001년 9월 21일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 6월 13일에 채택된 「유럽공동체 미술가 재판매권 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을 반영해 최신 업데이트된 해외 입법 체계로 범위를 좁혀 추급권을 이미 자국 법으로 입법한 국가들과 입법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② 추급권이 EU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기인 2012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추급권 도입 후 미술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③ 추급권 도입 대비 정책 방향 및 입법 고려사항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세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제도적 동향과 차이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을 통해 한국이 제도적으로 채택 가능한 입법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 약 90여 개국이 도입 혹은 도입 추진 중인 추급권의 전 세계적 도입 가속화 추세는 확인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저자는 추급권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추급권의 일반화된 적용이 각 국의 작가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종식시키고, 미술 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미술 작가들의 권리를 제고하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판매’ 되는 작품들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매 현황 연구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겠다.

한국은 저작권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초래되는 여러 급격한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추급권의 도입 역시 곧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2015년 12월에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내 저작권 및 관련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WIPO SCCR)가 추급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 계속해서 여러 관련 단체에서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의 추급권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도 재협상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본다. 3년 후인 2020년은 프랑스에 추급권이 처음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도 가능한 많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열띤 추급권 논의가 일기를 기대해 본다.

.....

주요어: 추급권법, 미술작품 재판매, 미술가 재판매

로열티(ARR), 미술가 권리, EU지침2001/84/EC

학번: 2012-31016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1.2. 연구 목적	6
1.3. 연구 방법 및 범위	8
2. 추급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2.1. 추급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	15
2.1.1. 추급권에 대한 정의	15
2.1.2. 추급권과 미술작품의 가치	17
2.1.3. 추급권의 법체계: 대륙법 V. 보통법	20
2.1.4. 추급권의 특성	24
2.2. 추급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28
2.2.1. 추급권의 기원	28
2.2.2.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국제적 동향 및 성과	34
2.2.3. 추급권에 대한 개별 국가의 법적 제도화	39
2.2.4.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판결	46
2.2.5. 추급권 도입으로 인한 국가별 논쟁	54

3. 추급권 도입 및 도입 논의 중 국가별 동향	68
3.1. 기존 추급권 관련 사례 연구의 한계	68
3.2. 추급권 도입 국가의 수	74
3.3. 추급권 도입 국가의 입법 유형별 비교 분석	78
3.3.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Work Covered)	79
3.3.2. 로얄티 비율 퍼센트 (Royalty Rate)	86
3.3.3. 최저 판매가 기준 (Threshold Value)	94
3.3.4. 적용 기한 (Duration)	96
3.3.5. 적용 판매 경로 (Sales Covered)	98
3.3.6. 적용 대상 (Entitled)	102
3.3.7. 로얄티 추심기관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106
3.3.8. 로얄티 지급 방식 (Royalty Distribution Method)	111
3.3.9. 로얄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Administration & Management Charge for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112
3.3.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113
3.3.11. 의무 및 소멸시효 (Obligation & Statute of Limitations)	117
3.4. 추급권 도입 논의 중 국가별 사례 연구 및 시사점	128
3.4.1. 입법 추진 노력 중인 국가들	128
3.4.2. 도입 추진 논의 중인 국가들	156
4. 국내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각적 고찰	160

4.1. 국내 미술 시장 검토	160
4.1.1. 국내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160
4.1.2. 국내 미술 시장 생태계	167
4.1.3. 국내 미술 시장과 추급권 도입 찬반론	175
4.2. 법리적 및 입법적 검토	191
4.2.1. 국내 미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	191
4.2.2. 국내 관련법 고찰	194
4.2.3. 입법 쟁점 및 시사점	200
4.2.4. 입법 방향 및 고려사항	215
4.2.5. 추급권 입법에서의 예외 규정에 대한 고찰	218
 5. 결론	 223
5.1. 요약	223
5.2. 연구 논의 및 의의	227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229
 참고 문헌	 232
 <부록 1> 추급권 도입 국가 리스트	 266
<부록 2>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법안 요약	268
 도판	 352
영문초록	357

표 목 차

[표 1] 문헌 연구 (국내 추급권 관련 해외 사례 비교 분석 표)	10
[표 2]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	13
[표 3] 추급권 규정의 특성	26
[표 4] 아벨 페리(Abel Ferry), 1914년에 프랑스 국회에 제출한 문서 · 30	
[표 5]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제14조의 3	35
[표 6]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국제적 동향 및 성과	38
[표 7] 2001년의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74
[표 8] 추급권 도입 확인 불가 국가	75
[표 9]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에 대한 방기 협정 개정 협정, 1999 년 2월 24일	77
[표 10] 프랑스의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세부 조항	80
[표 11] 인정 혹은 비인정 되는 미술작품 범위	82
[표 12] 로알티 비율 퍼센트, 조지아	89
[표 13] 로알티 비율 퍼센트, ① 차등 비율	90
[표 14] 로알티 비율 퍼센트, ② 균일비율	92
[표 15] 로알티 비율 퍼센트, ③ 자율비율, ④ 추가적인 보상	93
[표 16] 로알티 비율 퍼센트, 세전 혹은 세후에서 적용	94
[표 17] 최저 판매가 기준	95
[표 18] 적용 기한	97
[표 19] 적용 판매 경로	99
[표 20] 적용 대상	102
[표 21] 로알티 추심기관 리스트	107

[표 22]	로열티 지급 방식	112
[표 23]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113
[표 24]	처벌 규정 존재유무	114
[표 25]	처벌 규정 종류	117
[표 26]	A.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120
[표 27]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122
[표 28]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124
[표 29]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125
[표 30]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126
[표 31]	F.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	127
[표 32]	미국 연방 차원 추급권 도입 시도 역사	138
[표 33]	국내 미술 시장 규모 요약	174
[표 34]	추급권 도입 찬반 논의 요약	176
[표 35]	로열티 추심기관 업무 예시	211
[표 36]	국내 추급권 도입 시 입법 고려 사항	216

그 림 목 차

[도판 1] 박수근(1914-1965), <굴비, 1962>	2
[도판 2] 이중섭(1916-1956), <황소, 1953>	3
[도판 3] 장-루이포랭(Jean-Louis Forain, 1852-1931), <굶주리는 미술가(Starving Artist), 1920>	29
[도판 4]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곡예사들(Family of Saltimbanques), 1905>	40
[도판 5] 그랜트 우드(Grant Wood, 1891-1942), <혁명의 딸(Daughter of Revolution), 1932>	44
[도판 6] 로버트 바라(Robert Ballagh, 1943-), <JP 돈레비의 초상(Portrait of JP Donleavy), 1969>	53
[도판 7] 로버트 바라(Robert Ballagh, 1943-), <워홀을 바라보는 소녀(Girl Looking at a Warhol), 연도미상>	53
[도판 8]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 <걸고 있는 남자(Walking Man I), 1960>	58
[도판 9]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해빙(Thaw), 1958>	128
[도판 10]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동시상영(Double Feature), 1959>	128
[도판 11]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더블 화이트 맵(Double White Map), 1965>	129
[도판 12]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플라워(Flower), 1964>	129

[도판 13] 마이클스미서(Michael Smither, 1939-), <밴 안의 가족(Family in the Van), 1971>	156
[도판 14] 천경자(1924-2015), <미인도, 1977>	182
[도판 15] 이우환(1936-), <점으로부터, 1970년대 시리즈작>, <선으로부터, 1970년대 시리즈작>	182
[도판 16]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 <공간 속의 새(Bird in Space), 1923>	192
[도판 17] 댄 플래빈(Dan Flavin, 1933-1996), <6개의 교번 형광등 쿨화이트/웜화이트 수직 및 중심(Six Alternating Cool White/Warm White Fluorescent Lights Vertical and Centered), 1973>	193
[도판 18]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여행 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 1935-1941>	199

1. 서론

한국에서 예술법 혹은 미술법(Art Law)에 대한 관심은 미술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1950년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고조되었다. 전 세계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함께 대중의 미술 향유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작품 거래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미술작가의 권리, 도난품, 위작, 미술작품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법을 학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어 강의와 세미나, 워크숍, 관련 서적 출판, 학술 논문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1966년 스캇 호드스(Scott Hodes)는 미술법 분야에서 최초의 책 중 하나인 “미술 및 골동품 법률: 미술가와 컬렉터를 위한 입문서(The Law of Art & Antiques: A Primer for Artists and Collectors)”를 출판하였다. 현재는 수많은 관련 서적과 학술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 비해 한국의 미술법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법에 대한 최초의 국내 서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출판되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미술법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술작품의 창작, 판매, 수집, 전시는 자연적으로 법률, 조례, 조약이나 판례에 의해 특별한 법률적 취급을 받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미술가의 보호와 미술 분야의 특별한 수요를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는 실정을¹⁾ 언급한 어느 논문의 지적처럼, 변화하는 미술 생태계에 발맞추어 미술가의 권리를 제고하고 폭넓은 연구로 미술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술법에 대한 학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

1) 구본진, “미술작품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미국의 Art Law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8-9, <http://www.riss.kr/link?id=T10104790>.

법 내에 추급권을 비롯해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연구 과제들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과 자생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 또한 발견될 것이다.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수 세기 동안 미술 시장이 거둬들이는 막대한 부[富]가 미술가에게로 흘러들어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반대로, 과거에 미술가들의 가난은 그들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룬 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 개선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²⁾ 신문기사를 보면 국내외 옥션에서 특정 미술작품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원작 미술작품은 그 희소가치로 인해 가치가 작가의 사후 점차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작품의 원저작자도 작품의 높아지는 가치에 비례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일까?

국내의 경우 1965년 작고한 박수근(1914-1965) 화백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경화로 삶을 마감하였다.³⁾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은 결혼 선물로 유족에게 받은 작품 <굴비, 1962>[도판 1]를 생활고 때문에 1970년 2만5천원에 판매하였다가 2002년 2억5천만 원에 되샀다. 32년 만에 작품 가격이 1만 배로 상승한 것이다. 이 작품은 현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 위치한 박수근미술관에

2) Elina Moustaira, "Chapter 3: Collectors' Rights 'Versus' Artists' Rights—Conservation and Collection Care," In *Art Collections, Private and Public: A Comparative Legal Study* (Berlin: Springer, 2015), 30.

3) 송세진, "그 곳엔 박수근과 이해인이 있었네," *Money Week*, February 6, 2015,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12817028030817&outlink=1>.

기증되어 2004년부터 전시 중에 있다.⁴⁾ 현재는 작품 가격이 무려 10억 원대에 육박하지만 박수근 화백 본인이나 그 가족이 급등한 작품 가격으로 인해 얻은 혜택은 전무하다.

이중섭(1916-1956) 화백도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와 간염 등 건강 문제로 41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시신은 사흘간 무연고자로 방치되었다고 한다. 그의 일본인 부인 이남덕(일본 명: 야마모토 마사코)과 두 아들은 6.25 때 피난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을 만나러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열렸던 <서울옥션> 경매에서 한 컬렉터는 이중섭의 <황소, 1953>[도판 2]를 무려 35억6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⁵⁾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품 가격과는 별개로 유족들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화가 이중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공원묘지 번호 103535에는 그의 유골이 초라하고 쓸쓸하게 묻혀있는데 초기에는 비석이나 추모비 하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작품이 고가에 경매되는 작가들이 생존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미술작품과 다른 저작물의 차이에 있다. 미술작품과 다른 저작물의 차이는 미술작품은 ‘원작(an original work)’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 혹은 출판 시장의 경우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 덕에 경제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지만, 미술작품은 원본에 그 가치가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한 번의 판매로는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우며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과는 달리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이용료가 발생하는

4) 권혁재, “박수근 유족이 결혼 선물로 준 ‘굴비’ 32년 새 값 1만 배로,” *중앙일보*, May 26, 2015, <http://news.joins.com/article/17879214>.

5) 서울미술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길 4-1) 설립자이자 서울유니온약품 대표이사인 안병광이 낙찰 받았다.

사례도 일부 유명한 작품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미술, 음악, 출판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박수근, 이중섭 사례처럼 젊고 무명인 시기에 그 가치를 가늠하지 못한 채 판매한 작품의 가치가 치솟아 작품 소유권자에게 큰 이익이 발생해도 원저작자는 그 현장(scene)에서 철저히 배제 당한다. 이는 다른 장르의 저작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작가가 미술작품의 사진(복제본)을 제품, 달력, 책 등에 활용하는 2차 저작물이 수입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작가들에게만 발생하는 이익이며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미술작품은 복제본이 아닌 원본에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저작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원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소유권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무엇인가?

해외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일찍 인식하여 저작자 간의 불공정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20년 프랑스는 작품의 원본이 재판매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작가와 그 가족에게 할당하는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추급권(Droit de Suite) 법」을 고안해내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체결된 「한-EU자유무역협정(South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Korea-EU FTA)」을 계기로 비로소 이 ‘추급권’이 널리 알려졌다. 당시 EU⁶⁾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급권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아직 추급권이 한국에는 생소한 제도이고, 한국 미술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 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 기간 중

6) EU는 2001년 당시에 15개국이었지만 2007년 9월 1일부터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이에 2008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향후 양측이 추급권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정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수석대표)⁷⁾의 한-EU FTA 제6차 협상 언론 브리핑을 보면, “유럽연합 측이 강하게 희망을 해왔던 추급권은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국에서만 채택되고 있어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했고, 다만 이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2년후에 다 시 한번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⁸⁾ 이에 따라 한-EU FTA 협정문⁹⁾ 중 제10장 지적재산, 제10조(미술가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에는 관련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¹⁰⁾

이처럼 협상에서 도입 여부의 결정을 ‘유보’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추급권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자간의 국제조약에서 ‘유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양국 간의 조약의 경우 유보는

7) 김한수 전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수석대표)는 이후 2012년 3월 초 주캄보디아 대사로 부임해 2년 9개월간의 재임기간을 마친 후 201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하였다.

8) 김은경 and 문상호, “한, EU FTA에 따른 미술작품 추급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68.

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글본 (제 10 장 지적재산),”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홈페이지, accessed July 1, 2016,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kor/k_eu_10.pdf.

10)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글본 (제 10 장 지적재산),”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홈페이지, accessed July 1, 2016,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kor/k_eu_10.pdf.

조약 내용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자는 새로운 제안으로 인정되고 있다.¹¹⁾ 하지만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급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답보 상태이다. [현재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추급권 관련 입법 추진 자료가 전무하며,¹²⁾ 행정자치부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시스템에서도 2011년 이후로 추급권 관련 학술 과제가 추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도에 추급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진전 사항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협상이 아직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급권 이슈가 조만간 다시 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2001년 최종 승인을 받아 공표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에 발표된 「유럽공동체미술가재판매권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은 추급권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두 ‘지침’과 ‘규정’ 이후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해왔기 때문이다.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 전에는 추급권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The

11)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4), 508, quoted in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2, <http://www.riss.kr/link?id=T12509817>.

12) “정부입법,”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Pln>.

13) “정책연구검색,” 행정자치부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accessed March 1, 2017,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rne Convention)」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2001년의 ‘지침’은 각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규정상의 상이함을 조화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치로서 작용하였다.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차별 원칙에 관련된 판결과 국적상의 이유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any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내 국민 대우의 원칙에 대한 존중으로서, 역내 시장의 기능에 역효과를 미치고 불평등을 초래하며 경쟁 조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추급권 의무화 강행 조치로 인해 기존의 추급권 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내용을 수용하여 각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추급권의 신설 도입국은 여러 찬반논란 속에 2006년 1월 1일까지 추급권을 입법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2006년에 공포된 「유럽공동체미술가재판매권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2006)」은 전술한 2001년의 ‘지침’ 이행 기간인 2006년 1월 1일까지 국내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 없이 EU 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동체 규범으로서 국내법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01년의 지침이 여러 예외 규정을 두어 국내 입법에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과는 달리 2006년 규정은 선별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2001년 ‘지침’과는 차이가 있으며 2006년도 ‘규정’은 국내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직접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¹⁵⁾ 그동안까지는 베른협약

14) 이윤정,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0, no. 4 (2007): 140-141.

15)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26, no. 3 (2014): 103.

상 추급권이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권리’였고, 베른협약 체약 당사국들은 각 협약이나 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를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른협약의 회원국이지만 추급권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것을 국제협약의 ‘최소한의 보호(minimum protection)’라고 칭하는데, 체약 당사국인 모든 회원 국가들은 자국 저작권법에 협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최소한의 보호 이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각국의 의지에 달려있다.¹⁶⁾]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 제 10장 지적재산, 제 10.10조(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는 추후 EU와의 재협상 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으며,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추급권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추급권 도입에 대비하여 추급권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와 각국의 입법례 연구를 통해 추급권의 본질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국제 협상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발의자나 정책 수립자들에게 추급권 도입을 위한 법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입법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추급권 도입 논의를 진작시키고, 추급권 입법화의 추진을 통해 도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미술가의 권리와 복지를 EU 수준으로 끌어올려 다른 저작자들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게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16) 채명기, *(알기쉬운)미술저작권 상담* (서울: 한국미술협회, 1999), 92.

본 연구는 추급권 관련 기존 국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았을 때, (1) 추급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2) 주요국 사례에만 집중했거나, (3) 1차 문헌인 각국의 법안 원문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차 문헌 위주로 쓰인 논문들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지는 해외 각국의 법안 특성상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관한 연구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법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는 작업을 통해 가장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선행 연구들 대다수가 최신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2001년 9월 21일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 6월 13일에 발효된 「유럽공동체미술가재판매권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이 반영되기 이전의 내용을 담은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국은 이제 막 미술 소비문화의 기반과 재판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랜 미술 시장 문화와 전통을 가진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교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미술 시장에서 0.5%도 못 미치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 주요국에서 발표되는 세계 미술 시장 연구 보고서나 통계에서 아예 거론되지 않거나 짧게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현재 전 세계 약 90여 개국 가까이 추급권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든 문헌에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축소 연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7년에 이미 28개 회원국을 포함 40여 개국 이상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조차 현재 유럽 몇몇 개국에서만 추급권을 채택하고 있다고 서술하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연구들이 2차 자료 성격의 논저들에서 내용을 서로 발췌한 연구들이 많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추급권 관련 해외 법안 ‘비교·분석표’는 아래

의 3개 논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 추급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1 참고]

[표 1]

문헌 연구 (국내 추급권 관련 해외 사례 비교 분석 표)

- (1)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120-121.
 - (2)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10, no. 4 (2007): 34-35.
 - (3)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추급권 제도의 현황 및 국내 실행환경의 이해,”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209-212.
-

1번 논문의 경우 23개국의 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있었는데 비교·분석표의 많은 부분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⁷⁾ 2번 논문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연구이지만 1988년도의 입법 현황을 다룬 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 3번 논문의 경우 33개국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는 가장 방대한 작업을 수행했지만, 2011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의 ‘지침’과 2006년도의 ‘규정’이 적용된 시점 이후의 법안을 비교·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4년도의 한 연구 논문에 실린 해외 법안 비교·분석표를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안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최신 사례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3번째 논문이 참고한 ‘비교·분석표’는 당시 아직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미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Australia)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인 “재판매

17) 본문 54쪽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뉴질랜드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도 하고, 본문 109-110쪽의 표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개정 전의 법안들을 다루고 있다.

로알티 제안 협의 토론 보고서(Proposed Resale Royalty Arrangement Discussion Paper, 2004)”를 참고한 것으로 무려 7년 전 연구 자료이므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가장 최신 버전의 법안 및 해외의 관련 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들과 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들을 통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내 추급권 제도 도입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조 작업을 통해 실제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들의 추급권 관련 법안 내용들을 본 논문에서 연구를 위해 도출한 총 11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법안 분석틀을 통해 해외 각국의 입법 체계와 제도적 차이의 비교·분석 및 해설을 시도하여 한국 맞춤형 입법 고려사항에 대한 이론적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국의 법안 원문 자료는 WIPO 혹은 각국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의 ‘국가법령정보센터’¹⁸⁾ 격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 35개국의 언어¹⁸⁾로 이루어진 각 국의 법안 원문은 직접 번역 후 감수를 거쳤다.)

제시한 총 11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의 경우**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추급권이 포함하고 있는 미술의 범위, 종류, 정의 등을 추출하였고, **(2) 로알티 비율의 경우**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로알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괄 적용인지 차등 적용인지의 여부와 몇 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추출하였다. **(3) 최저 판매가**

18)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스어, 체코어, 덴마크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알바니아어, 마케도니아어, 세르비아어,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보스니아어, 조지아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아랍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터키어.

기준은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저 판매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추출하였다. (4) **적용 기한**은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추급권이 적용되는 기간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조사하였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인정되는 재판매 방식이, 예를 들어 직접 판매, 딜러 판매, 기관 판매, 경매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인지를 조사하였다. (6) **적용 대상**은 각국의 추급권 안에서 추급권이 직계가족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까지를 인정하는지, 추급권의 적용 대상을 조사하였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로열티를 단일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여러 개의 기관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8) **로열티 지급 방식**은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로열티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 유무**는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추급권 관리 기관을 위한 예산을 법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나 따로 비율을 두어 징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재판매 로열티 미납 시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서는 각국의 추급권 법안에서 추급권 관련 의무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고, 각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내용은 6가지 항목인 A.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명시,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F.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로 재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표

2 참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제 2장 추급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경우 개념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 부분으로 나누어 1920년 추급권이 프랑스에 처음 도입되기까지의 종합적인 배경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 3장 추급권 도입 논의 및 도입 논의 중 국가별 동향 부분에서는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을 반

영한 최신 업데이트된 해외 법안과 추급권이 EU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기인 2012년 이후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각국의 법안에서 추급권이 포함하고 있는 미술의 범위, 종류, 정의 등을 추출하였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	각국의 법안에서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괄 적용인지 차등 적용인지의 여부를 추출하였다.
(3) 최저 판매가 기준	각국의 법안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저 판매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추출하였다.
(4) 적용 기한	각국의 법안에서 추급권이 적용되는 기간을 조사하였다.
(5) 적용 판매 방법	각국의 법안에서 인정되는 재판매 방식이 예를 들면 개인판매, 딜러 판매, 기관 판매, 경매 등 어떠한 방식이 인정되는지를 조사하였다.
(6) 적용 대상	각국의 법안에서 추급권이 직계가족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까지를 인정하는지를 조사하였다.
(7) 로열티 추심기관	각국의 법안에서 로열티를 단일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여러 개의 기관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8) 로열티 지급 방식	각국의 법안에서 로열티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혜 대상에게 분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	각국의 법안에서 추급권 관리 기관을 위한 예산을 법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나 따로 % 두어 징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각국의 법안에서 재판매 로열티 미납 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각국의 법안에서 추급권 관련 소멸시효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무 및 소멸시효는 각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항목으로 다시 재분류하였다.

- (11) 의무 및 소멸시효
- A.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명시
 -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 F. 재판매 로얄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

2. 추급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추급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1. 추급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 부분에서는 추급권에 대한 정의, 추급권과 미술작품의 가치, 추급권의 법체계: 대륙법 V. 보통법, 추급권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2.2. 추급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부분에서는 추급권의 기원,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국제적 동향 및 성과, 추급권에 대한 개별 국가의 법적 제도화,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판결, 추급권 도입으로 인한 국가별 논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은 추급권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추급권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념적, 역사적 관점에서 추급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2.1. 추급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

2.1.1. 추급권에 대한 정의

추급권은 1920년에 가장 먼저 프랑스에서 입법화 되었으며, ‘Droit de Suit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EU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Artist Resale Right’, ‘Artist’s Resale Royalty’, ‘Resale Royalty Right(RRR)’ 등으로 불리고 있다. 알바니아의 경우 ‘Right of Continuity’라고 불리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Derecho de Participación’, 브라질에서는 ‘Direito de Sequência’, 독일에서는 ‘Folgerecht’, 중국에서는 ‘추속권[追續權]’ 또는 ‘연속권[連續權]’, 일본에서는 ‘추구권[追求權]’ 또는 ‘추급권[追及權]’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미술가

재판매 로열티'보다는 '추급권'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하 논문에서는 미술작품 재판매 로열티, 추급권 등으로 지칭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추급권'이란, 일부 저작권법에서 미술 저작물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원본'이 공개적으로 전매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와 그 상속인 및 저작자 사망 후에는 법에서 정한 단체에게 부여하는 양도 불능의 권리를 말한다.¹⁹⁾ 저작물의 '원본'이란, 저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유형의 형식으로 고정될 때 그 '고정물'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무형의 범주의 원저작물과는 구별된다. 대개 원본의 전시나 판매에 기초하여 저작권이 행사되는 '미술 저작물 (주로 회화와 조각)의 원본'을 뜻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원본에 대한 동산적인 권리도 향유한다. 즉 저작자가 원본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복제, 실연 등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부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원본)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²⁰⁾

미술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더라도 작품의 경제적 권리를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대다수의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특히 추급권은 기존의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이나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있어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²¹⁾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배

19) "추급권(追及權)의 용어 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258>.

20) "저작물의 원본,"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217>.

21) 계승균,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정보법학* 14, no. 3 (2010): 6.

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이다.²²⁾ 하지만 이 원칙의 대상요건과 추급권의 적용요건은 다르다.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원본과 복제본의 내용상 차이가 없고 원본의 반복적인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술작품의 ‘원본’이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는 추급권과는 차이가 있다.²³⁾

2.1.2. 추급권과 미술작품의 가치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미술작품은 ‘원본’에 그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과 구별된다. 음악이나 출판 시장의 경우, 해당 장르의 저작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 덕에 경제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미술작품은 원본에 그 가치가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 번의 판매에 크게 의존하며,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과는 달리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다. 미술작품의 원본성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논의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가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발표한 “기술 복제 시대의 미술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에서 그는 아무리 완벽한 복제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결여되어 있기 마련인데, 미술작품의 ‘지금(now)’과

22)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07), 331, quoted in 이윤정,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고찰: 추급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8), 51,

<http://www.riss.kr/link?id=T11301683>.

23) 최재원, “미술저작물의 추급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30, <http://www.riss.kr/link?id=T12332542>.

‘여기(here)’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²⁴⁾

그가 제시한 ‘여기’ 개념은 특정 장소에서 작품이 지닌 유일무이한 ‘일회적 현존성(unique existence)’을 뜻한다. 이와 같이 원본이 갖는 ‘지금’과 ‘여기’의 속성은 원본의 ‘진품성(authenticity)’ 개념을 구성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기술적 복제가 실현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술작품의 여타 다른 속성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술작품의 진품성은 작품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그것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물리적 지속성, 역사적 증언으로까지 전달될 수 있는 순수한 본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미술작품의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사라지는 것은 미술작품의 ‘아우라(Aura)’라고 지적하며, 미술작품의 희소성으로 인한 원본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²⁵⁾ 이러한 미술작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원본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더 빛을 발하며,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문화적, 미술적 가치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원본성’은 추급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특수성이 바로 미술작품과 다른 저작물을 구별하는 준거가 된다. 동시에 이러한 점 때문에 한 번의 작품 판매에 의존하는 미술저작권자들과 음악, 출판 저작권자들 사이에 큰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무명작가들은 감의 위치에 있는 갤러리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계약 조건들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전시나 홍보 기회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

24) 도널드 프레지오시,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The Art of Art History: A Critical Anthology)*, Translated by 정연심 and 김정현 (서울: 미진사, 2013), 587-597.

25) 도널드 프레지오시,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The Art of Art History: A Critical Anthology)*, Translated by 정연심 and 김정현 (서울: 미진사, 2013), 587-597.

피하다. 하지만 훗날 작가의 노력을 포함해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작가가 유명세를 얻게 되면, 작품의 원본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작가도 그와 동일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은 작가 본인이 아니라 갤러리, 경매 회사, 딜러, 콜렉터 등 거래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이다. 이처럼 원저작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지만 소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는 미술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좀 더 일찍 인식한 프랑스는 1920년에 작품의 원본이 재판매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작가와 그 가족에게 할당하는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추급권(Droit de Suite) 법」을 고안해내어 저작자들 간의 불공정함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미술작품의 ‘원본성’ 때문에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미술작품은 중고품이라는 개념 대신에 보관상태만 정상적이라면 최초 구매 당시의 미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적된 상품적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전과 동일한, 혹은 더 높은 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⁶⁾ 추급권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미술작품의 재판매 가격 상승에는 작가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미술작품 ‘가치’ 상승의 생태(ecology)에는 작가 본인의 노력과 재능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갤러리나 딜러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 딜러의 명성, 유명인이나 이전 작품 소유자 이력, 주요한 미술비평가나 미술사가, 미술전문기자가 쓴 작가 관련 리뷰, 유명한 미술관·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및 회고전시, 유명한 미술관·박물관의 작품 소장 이력, 현재 미술 시장의 작품 구입 트렌드, 작가의 이른 죽음, 작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미술작품의 제작연도, 작품의 희소성(scarcity),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미술사적 선구성, 작품의 특이성(singularity), 미술 시장의 호황 여부, 작품의 보

26) 소병희, “미술작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7, no. 2 (2004): 5.

관 상태, 작품의 출처, 작품의 희귀성, 특정 유파 소속 여부,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스타일의 인기 여부, 개인의 취향, 카탈로그 레조네 존재 유무, 작품의 크기, 작품의 재질, 작품의 보존 상태, 인기 있는 작품 주제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과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이다. 국내외에서는 이런 다양한 변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미술작품의 가치나 미술작품의 가격 변동을 연구하고자 미술작품 가격지수(index)를 만들어 다른 산업 및 주가시장과 비교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미술 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미술작품이 투자대상으로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²⁷⁾

추급권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작품의 ‘가치’ 상승이 작가가 ‘인격(personality)’을 작품에 담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독창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원작자는 자신의 인격적 분신인 작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데에는 예술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술가와 그의 가족들이 작품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처사라고 인정한다. 이처럼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탄생한 추급권에서는 미술작품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 작가의 기여분과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술작품의 가치 상승에서 배제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미술 작가를 배려하고자 한 것이다.

2.1.3. 추급권의 법체계: 대륙법 V. 보통법

추급권은 ‘대륙법(Civil Law)’ 체계 속에서 생겨난 법 개념이기 때문에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²⁸⁾

27) 한국미술경영연구소,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3): 20.

프랑스의 대륙법적 관점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강조하였고, 다른 대륙법 체계 국가들도 ‘저작자 개인의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데 반해, 영국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 국가들은 ‘계약 자유(freedom to contract)의 원칙’ 내지 ‘사적 자치의 전통’이나 ‘권리 소진의 원칙’ 개념 때문에 추급권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은 보통법 체계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저작권자의 보호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이와 같은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추급권을 둘러싸고 대륙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과 보통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급권의 법체계를 정립하려면 국가별 차이에서 오는 인식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²⁹⁾ 이를 위해서는 대륙법과 보통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의 경우 프랑스의 입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법규범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보통법 체계인 영국의 경우 법을 뒷받침하는 작성된 문서가 없다. 영국 법은 성문 헌법이 없는 몇 안 되는 법적 시스템 중 하나이다. 영국 법률 및 정치 시스템은 사법부(법을 선언·해석하고 사실을 발견하는 역할), 입법부(상원과 하원), 그리고 행정부(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국무총리, 내각 및 공무원으로 구성)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삼권 분립 체제(tri-partite structure)는 세계의 많은 권력 시스템 중 전형적인 구조는 아니다.³⁰⁾ 영국, 미국 등 보통법 국가

28) 안경환,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 *(계간)저작권* 4 (1988): 32.

29) 이준형, “문화미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2008): 92.

30) Blu Tirohl, *Law for Artists: Copyright, The Obscene and All the Things in Between* (Abingdon,

들은 프랑스나 다른 대륙법 국가에 존재하는 강한 저작인격권(moral right) 전통이 없으며,³¹⁾ 저작권을 저작자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의 본질적인 권리로 보지 않는다.³²⁾ 그래서 보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경우 저작권의 출발점을 저작권(copyright), 즉 원본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던 것이 당연하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하여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원작자(authorship)’, 즉 자신의 인격적 분신인 작품에 대한 저작자 개인의 권리로써 추급권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제권자(유통업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는 (이 점은 독일 등 다른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대체로 비슷하다) 아무리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이중적 체계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창작 의욕을 높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키워왔다.³³⁾ 프랑스는 작가가 그의 작품이 ‘활용(utilization)’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작가는 이익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 재판매마다 총 판매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³⁴⁾ 프랑스 다음으로 1921년 추급권을 자국 내 법에

Oxon: Routledge, 2015), 2-3.

31) Judith B. Prowda, *Visual Arts and the Law: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Surrey: Lund Humphries, 2013), 123.

32) 정상조, and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서울: 홍문사, 2013), 357-358.

33) 이준형, “문화미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2008): 93.

일찍이 도입한 벨기에의 경우 ‘잔여적 권리(residual right)’ 계약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명세와 명성의 증가는 작가의 계약 조건의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의 변동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³⁵⁾ 우리 저작권법은 독일 등의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서 저작자가 자신의 인격적 표현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인격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³⁶⁾

주범으로 추급권을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급권의 도입은 보통법 체계 내에서 추급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은 2015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최초판매의 원칙’,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제5조의 수용조항과 적법절차조항(The Fifth Amendment’s Takings and Due Process Clauses)’, 그리고 ‘미국 사권박탈법(Bills of Attainder)’ 등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반한다는 이유와 캘리포니아의 법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취(preempted)’ 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다른 보통법 체계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24일 43년 만에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해 현재 탈퇴 협상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까닭에 보통법 체계 국가들의 추급권 도입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34) Diane B. Schulder, “Art Proceeds Act: A Study of the Droit De Suite and a Proposed Enactment for the United Stat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1, no. 19 (1966-1967): 30, quoted in Carol P. Glucksmann, “Art Resale Royalties: Symbolic or Economic Relief for the Fine Artist,”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 (1982): 125.

35) Carol P. Glucksmann, “Art Resale Royalties: Symbolic or Economic Relief for the Fine Artist,”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 (1982): 125.

36) 정상조, and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서울: 홍문사, 2013), 357-358.

2.1.4. 추급권의 특성

추급권의 법적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첫째**, 추급권을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추급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저작인격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양도 불가능한 ‘재산적 권리’라는 의견이다.³⁷⁾ **둘째**, 프랑스와 같이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추급권이 통상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사전에 추급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³⁸⁾ 또한 모든 법에서 추급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된 점이 추급권은 저작재산권 보다는 저작인격권에 가깝다고 보는 주장이다.³⁹⁾

셋째, 독일 입법자들은 추급권의 법률적 성질을 ‘저작재산권’도 ‘저작인격권’도 아닌, 하나의 특별한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⁴⁰⁾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

37) 김형렬,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371, <http://www.riss.kr/link?id=T11771191>.

38) 김은경 and 문상호, “한, EU FTA에 따른 미술작품 추급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4): 73.

39) 구본진, “미술작품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미국의 Art Law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121, <http://www.riss.kr/link?id=T10104790>.

40) Philipp Möhring and Käte Nicolini, *Urheberrecht: UrhG-Kommentar* (Franz Vahlen), 2nd ed. (Munich, Bavaria: Verlag C. H. Beck, 2000), §26, quoted in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

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당해 저작물에 자신의 정신 또는 개성을 투입시킨 것으로 간주해 그러한 자신의 정신 또는 개성과 저작물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또는 상업화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아 ‘저작재산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독일은 한국,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와는 달리(저작권 이원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권리라는 입장(저작권 일원론)을 취하고 있다.⁴¹⁾ **넷째**, 추급권은 미술작품 등의 거래가 일정액 이상으로 공신력 있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권리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 파악하기도 한다.⁴²⁾ **다섯째**, 추급권을 일종의 세금으로 해석해 ‘세법’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일종의 세금은 재판매가 이루어진 특별한 작가 그룹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작가들에게 사회적인 보장과 복지제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차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미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미술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우리 헌법이 「독일 문화기본법(Kulturverfassungsrecht)」의 일부로서 미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객관적 가치결단이 표현된 것이다. 즉 여기에서 언급된 미술가의 권리는 미술가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미술가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아울러 보호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구,” *창작과관리* 48 (2007): 190.

41) 정상조, and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서울: 홍문사, 2013), 357.

42)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10, no. 4 (2007): 12.

다.⁴³⁾ 유럽에서 추급권은 미술적 재능에 대한 사회의 인정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매에 있어 미술저작자의 기여분에 대한 인정은 문화에 기여하는 저작자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⁴⁴⁾ 이처럼 추급권을 둘러싸고 있는 성격의 이해는 각국마다 다르므로 국내의 법적 틀 안에서 추급권의 특성이 어디에 부합하는지 법학자와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법적 논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표 3]

추급권 규정의 특성	
1) 양도불가능성(Inalienability)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1조: 양도할 수 없음
(2) 정보공개청구권(Right to Obtain Information)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9조: 재판매 후 3년간의 기간을 두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3) 호혜주의(Reciprocity)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7조 제1항: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상호 추급권을 인정해 줌
(4) 홍보성 판매에 대한 예외(Exception de la vente promotionnelle)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1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에 이르지 않았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함

추급권 규정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3 참고] (1) 양

43) 이동기 and 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85 (2009): 54.

44)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64, <http://www.riss.kr/link?id=T12509817>.

도불가능성: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1조에는 추급권이 ‘양도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급권을 양도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작가들이 궁핍이나 기타 사정으로 추급권을 포기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계약상에서 을의 관계에 놓여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는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추급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Right to Obtain Information):** 동 지침 제9조에는 재판매 후 3년간의 기간을 두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추급권을 시행하는데 있어 미술시장전문가인 판매자나 중개인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는 조항이다.⁴⁵⁾

(3) 호혜주의: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는 추급권의 적용에 있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서로 추급권을 인정해주자는 조항이 있다.⁴⁶⁾ 이러한 호혜주의 조항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해외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었다. 반면 저작자는 그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에서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추급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일부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가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홍보성 판매에 대한**

45) 석종욱, “독일 제 5차 개정 ‘저작권법’ 상의 추급권(folgerecht)과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최신/외국법 제정보* (2007): 21-22.

46) 유럽 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7조 제1항: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only if legislation in the country of which the author or his/her successor in title is a national permits resale right protection in that country for authors from the Member States and their successors in title.

예외(exception de la vente promotionnelle) 규정: 동 지침 제1조에는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에 이르지 않았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작품을 최초로 구매한 갤러리가 그 작가를 홍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급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어야 그 활동이 원활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통상 3년 이내 재판매 시의 판매가격 자체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재판매 로알티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격의 한계 기준을 설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신진작가 장려정책과 이들을 도와주는 갤러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⁴⁷⁾

2.2. 추급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2.2.1. 추급권의 기원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잘 조직된 미술 시장이 18세기 초에서부터 존재했다. 공개 경매는 16세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1789년의 혁명은 사회를 변혁시켰으며, 19세기의 산업 박람회의 등장은 딜러들의 지원 없이도 대중들을 미술 시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했다.⁴⁸⁾ 추급권의 초기 개념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93년 2월 25일 변호사 알베르 보누아(Albert Vaunois)가 발표한 월

47) Vladimir Duchemin, "La Directive Communautaire sur le Droit de Suite,"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RIDA)* 191, (2002): 3, quoted in 이동기 and 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85 (2009): 55.

48) Roxana Azimi, "Chapter 13: France,"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134.

간 문학잡지 “파리 연대기(La Chronique de Paris)”의 기사에서 미술가가 팔아
치운 원작품이 재판매되어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추가지분을 지불해야 한
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베른협약에 의해 1896년 개최된 프랑스
국제문학과 미술협회(Associ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ALA
I)⁵⁰⁾ 회의에서는 변호사 에드와르 마크(Édouard Mack)가 재판매시 얻는 총액의
10%를 화가나 상속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추급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903년에는 파리에서 추급권 입법과 룩셈부르크 뮤지엄 설립을 위한 룩
셈부르크 뮤지엄의 친구들을 위한 단체(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u
Luxembourg; SAM)가 생성되기도 한다.

해외의 법학자들이 미술 작가들이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로 석판화, 수채화, 에칭 등을 작업했던
풍자화가 장-루이포랭(Jean-Louis Forain, 1852-1931)의 석판화(lithograph)의
작품 중 <굶주리는 미술가(Starving Artist), 1920>[도판 3]라는 제목의 작품이
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작품이 프랑스의 한 신문에 실리게 된 이래 프랑스 사
회에서 구체적인 추급권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 작품은 1912년 프랑스의 유서
깊은 경매장 도루오(Drouot)에서 열린 한 경매 장면을 풍자한 것인데, “100,000
프랑(franc)에 낙찰!” 이라는 경매사의 외침과 함께 허름한 냅마를 입은 두 어린
이가 “봐, 아빠 그림 중 하나야!(Un tableau de papa!)”라고 외치는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당대의 프랑스인들은 예술가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

49) Chronique de Paris, du 25 février, 1893, quoted in Sam Ricketson,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ademic study prepared by professor of law, Melbourne Law School and Barrister, Victoria, Australia, June 2015): 9.

50) 프랑스 프랑스 국제문학과 미술협회(Associ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ALAI)는 1878
년 빅터휴고(Victor Hugo)가 창시하였다.

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예술가들에 대한 많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리스 쿠엔틴 드 라 투어(Maurice-Quentin de La Tour, 1704-1788), 장-프랑수아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 에드가 드가(Edgar De Gas, 1834-1917), 오귀스트 르누와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 등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활동했던 6명의 작가들의 경우와 같이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팔려 그 소유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반면, 궁핍하게 살아가는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내에서 상당한 동정 여론이 촉발된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조성되었고, 이는 추급권 도입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발판으로 1920년 추급권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프랑스 정치인 아벨 페리(Abel Ferry)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초기 형태의 추급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술가들의 미망인을 원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으며, 실제로 특정 미술가를 위한 사회 부조의 역할로 작용하기도 하였다.⁵¹⁾ 하지만 아벨 페리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사망한다. 그가 1914년에 국회(Chambre des Députés)에 제출한 문서는 자료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 문서에서 미술저작권자와 문학가, 음악가, 극작가 등 다른 저작권자의 차이를 지적하며 미술 저작자들에게는 저작권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4 참고]**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서에 미술작품이 공공 경매에서 판매될 시 작가들에게 2%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⁵²⁾

51) The Arts Council of England, "Implementing Droit de Suite (Artist's Resale Right) in England by Dr. Claire McAndrew and Lorna Dallas-Conte," (2002): 8, quoted in 이준형, "문화미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2008): 94.

아벨 페리(Abel Ferry), 1914년에 프랑스 국회에 제출한 문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이윤분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상승이나 하락과는 관계없이 예술적 재산에 대한 법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다. 점점 발전되고 있는 「문학과 예술적 재산에 관한 법(Loi relative à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문학가, 음악가, 극작가 등은 강력한 연합의 회원으로서 각 연주, 공연, 발행마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혹 큰 수입이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는 반면, 미술가는 작품을 구입하는 단 한 명의 수집가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미술저작자)의 창작물은 (여타의 창작물과 달리) 발행될 수는 없으나 개인적 재산(personal property)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의 작품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미술저작자에게는 저작권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다른 저작자(intellectual workers)의 재산이 완전하고 분리되지 않는 반면 미술저작자의 재산은 불완전하다.⁵³⁾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추급권 법안은 1918년 다시 소개되고,⁵⁴⁾ 프랑스에서

52) "Accueil, Histoire et patrimoine, Abel Ferry(1881 - 1918), rédigée aux Archives de la Chambre des Députés," [France] Assemblée Nationale, accessed May 7, 2017,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tables_archives/abel-ferry.asp#1910.

53) Abel Ferry. "Chambre des Deputes, No. 3423." (1914): 150, quoted in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1-20, <http://www.riss.kr/link?id=T12509817>.

54) Liliane de Pierredon-Fawcett, *The Droit de Suite i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 Comparative Law Study* (New York, NY: Center for Law and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91), 4, quoted in Michael B.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a Right to a Resale Royalty,"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15,

1920년 5월 20일 폴 데샤넬(Paul Deschanel, 1855 - 1922)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는 역사를 지니게 된다. 초기 추급권 법안은 당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초기의 법안은 공공경매에 한해 페인팅, 조각, 드로잉, 프린트를 대상으로 가격이 1,000-10,000프랑(franc) 사이일 경우 1%를, 50,000프랑(franc) 이상일 경우 3%를 추급권료로 산정하였다.⁵⁵⁾ 이후 개정된 법안에는 작가의 생애와 작가의 사후 50년 동안 100프랑(franc) 이상의 모든 재판매를 대상으로 3%의 균일비율 로열티를 작가나 작가의 상속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공공경매만 인정 하던 것에서 딜러 간의 거래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딜러 간의 거래는 온전히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서 1921년에는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었으며,⁵⁶⁾ 체코에서는 1926년, 폴란드에서는 1935년, 우루과이에서는 1937년, 이탈리아에서는 1941년, 독일에서는 1962년에 프랑스의 뒤를 이어 자국 버전의 추급권 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1920년 5월 20일 프랑스 법률에서 최초로 규정된 추급권은 1922년 10월 27일자 법률과 1957년 3월 11일자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다가 2001년의 ‘지침’이 반영되어 2006년 8월 1일 동 법률이 다시 한 번 전면 개정되었다.⁵⁷⁾ 현재

no. 3 (1995): 516, <http://digitalcommons.l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97&context=elr>.

55) Katy Graddy and Noah Horowitz and Stefan Szymanski, “A Study into the Effect on the UK Art Marke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8): 40.

56) Liliane de Pierredon-Fawcett, *The Droit de Suite i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 Comparative Law Study* (New York, NY: Center for Law and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91), 4, quoted in Michael B.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a Right to a Resale Royalty,”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15, no. 3 (1995): 518, <http://digitalcommons.l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97&context=elr>.

프랑스의 추급권은 「지적재산권 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 L122-8조, 제L123-1조, 제L123-2조, 제L123-6조, 제L123-7조, 제L334-1조와 제 R122-2조, 제R122-3조, 제R122-4조, 제R122-5조, 제R122-6조, 제R122-7조, 규정 제R122-8조, 제R122-9조, 제R122-10조, 제R122-11조, 제R122-12조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5년 5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자국 저작권법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미술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의 종말이 강력한 법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⁵⁸⁾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프랑스 법안은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나 프랑스 법률, 규정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통합 사이트인 레지프랑스(Légifr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⁹⁾⁶⁰⁾ 국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프랑스 저작권법 번역본을 제공하나 2015년에 프랑스 저작권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여야 한다.⁶¹⁾ 개정된 프랑스의 추급권

57) 이준형, “문화미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2008): 94.

58) Roxana Azimi, “Chapter 13: France,”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135.

59) “Homepage,” [France] Conseil Constitutionnel,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60) “Informations,” [France]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egifrance.gouv.fr>.

61)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guide/france/view.do?brdctsn=377>.

법안은 <부록 2>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법안 요약에서 참고할 수 있다.]

2.2.2.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국제적 동향 및 성과

추급권이 오늘날 국제적인 법안으로 부상하게 된 시초는 1886년 9월 9일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⁶²⁾부터 볼 수 있다. 1800년대 말부터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 1802-1885)가 회장으로 있던 프랑스 국제문학과 미술협회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인 입법을 촉진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1886년 베른 조약 제3회 회의에서 세계최초의 저작권 법 관련 국제 협약이 탄생하게 된다.⁶³⁾ 그러나 베른 조약이 각국의 저작권법의 통일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일곱 차례의 개정 과정(① 1896년 파리 추가규정, ② 1908년 베를린 개정, ③ 1914년 베를린 추가규정, ④ 1928년 로마 개정, ⑤ 1948년 브뤼셀 개정, ⑥ 1967년 스톡홀름 개정, ⑦ 1971년 파리 개정)에서 비준한 조약이 서로 달라 보호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⁶⁴⁾ 이런 보호의 차이는 베른협약의 초창기 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베른협약은 추급권, 인격권, 복제권, 번역권, 공연권, 낭독권, 번안권, 영화화권, 방송권, 녹음권 등을 보호한다.]

62) 베른협약은 1886년 10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다국 간 조약으로 1886년 12개국으로 시작하여 2016년 4월 12일 기준 17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1996년 5월 21일 가입하여 1996년 8월 21일 발효되었다. 베른협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의해 관리된다.

63) 김평수, *문화공공 성 시대의 저작권* (서울: 스토리하우스, 2012), 93.

64) 송영식, and 이상정, and 김병일, *지적재산법(제11정판 수정증보판)* (서울: 세창출판사, 2011), 415-416.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제14조의 3

(1)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미술저작물 및 작가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first transfer) 한 후에 어떤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입법으로 그와 같이 허용한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각 동맹국에서 주장될 수 있다.

(3)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국내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이후 1948년 개최된 브뤼셀에서 열린 베른협약에서는 추급권이 채택되게 된다.⁶⁵⁾

1928년 6월 2일에는 로마에서 베른협약 개정 회의가 개최되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벨기에 등의 대표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안되어 베른협약 로마 규정 제6조의2로 신설되었다.⁶⁶⁾ 이후 1948년 6월 26일에는 브뤼셀에서 열린 베른협약 개정 회의에서 1928년 추급권을 베른협약에 추가하자고 제의한지 20년 만에 추급권이 조항 14bis에 채택된다. 1928년 로마 개정 회의에서 승인된 결의문을 바탕으로 베른협약상 추급권은 ‘선택적인 권리’로 매우 유연한 적용요건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⁶⁷⁾ 이후

65)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E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ccessed July 1, 2016, http://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3698.

66) 구본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91-192.

67) 김은경 and 문상호, “한, EU FTA에 따른 미술작품 추급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4): 70-71.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개정 회의에서는 추급권 조항이 14ter으로 옮겨진다. 베른협약의 제14조의 3에는 3개의 조항으로 추급권 관련 내용이 삽입되었는데, 베른협약 제14조의 3(3)에 의하면 베른협약상 추급권은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권리’이지만 회원국은 추급권을 국내법으로 제정 및 개정 할 재량권이 있다.⁶⁸⁾ **【표 5 참고】**

1996년 3월 13일에는 유럽연합이 「추급권에 관한 지침(The Resale Right Directive)」을 제안하게 된다. EC는 다양한 EU 차원의 ‘지침’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 간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EU 차원에서의 규범에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규정’, ‘지침’, ‘결정’, 이 세 가지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반면, ‘권고’와 ‘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 ‘지침’의 경우,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과는 달리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하게 되어있어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회원국에서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⁶⁹⁾

유럽연합이 추급권을 제안한 이유는 (1) 다른 창조적인 예술가들과 그래픽·조형 미술 작가들의 경제적 상황 사이의 균형을 바로 잡고,⁷⁰⁾ (2) 2차 미술시장에

68)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eptember 9, 1886, As Revised at Paris on July 24, 1971 and Amended in 1979), <https://perma.cc/M4BE-X9QX>.

69) 남영숙,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82 (2008): 8.

70) Jennifer B. Pfeffer, “The Costs and Legal Implications Facing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Union’s Droit de Suite Directive in the United Kingdom,”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4, no. 2 (2004): 540,

서 작가에게 역할을 부여하고,⁷¹⁾ (3) 다른 EU 국가들과 법 조화를 이뤄 회원국들의 미술 시장 조건을 맞추고, (4) 모던과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에서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⁷²⁾ 특히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주요쟁점으로 삼은 문제는 법률의 조화, 즉 유럽 내 법제도의 통합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EU 공동의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가 각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지침’을 통해 그들 간의 상이한 법규범을 통일해 가도록 노력을 기울였다.⁷³⁾ 유럽연합의 추급권에 관한 ‘지침’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되었고, 추급권에 대한 ‘지침’ 초안은 1996년 제출되었다.

1996년 3월 13일 EC는 미술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럽의회(European

<http://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579&context=njilb>.

71) Mark A. Reutter, "Artists, Galleries and the Market: Histor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Artist-Dealer Relationships," *Villanova Spo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8, no. 1 (2001): 99, 112, quoted in Jennifer B. Pfeffer, "The Costs and Legal Implications Facing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Union's Droit de Suite Directive in the United Kingdom,"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4, no. 2 (2004): 540,

<http://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579&context=njilb>.

72) Jennifer B. Pfeffer, "The Costs and Legal Implications Facing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Union's Droit de Suite Directive in the United Kingdom,"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4, no. 2 (2004): 540,

<http://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579&context=njilb>.

73) 석종욱, "독일 제 5차 개정 '저작권법' 상의 추급권(folgerecht)과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최신외국법 제정보* (2007): 20.

Parliament; EP)와 위원회가 만든 “추급권 지침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EU의 발전에 있어 각국의 법안의 차이점과 그 복잡성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기에 법규범의 통일을 통해 EU 내 경쟁(intra-Union competition)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C는 특히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불가 및 경쟁의 왜곡(distortions of competition), 회원국 간의 법률의 차이, 그리고 회원국의 다양한 법조문에서 추급권 적용이 불확실한 것이 미술작품 관련 시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고,⁷⁴⁾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전체가 추급권을 채택하고 적용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통일해 갈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1996년 EC는 이 ‘지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유럽의회는 초안을 승인하여 1997년 개정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행 규정’인 2001년의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 2006년의 「유럽공동체미술가 재판매권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2006)」이 유럽 내에 적용이 되었다. 추급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6 참고]

[표 6]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국제적 동향 및 성과	
1886년 9월 9일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20년 5월 20일	프랑스 법 제정
1928년 6월 2일	로마 개정협의회 추급권 도입 승인
1948년 6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베른협약 제3차 수정회의에서 추급권 채택 (조항 14bis)

74) Martina Supper, “An Analysis of Droit de Suite from a Law and Economic Perspective” (Master’s thesis, European Master in Law & Economics, 2000), 3.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개정협의회에서 추급권 조항이 옮겨짐 (조항 14ter)
1993년 10월 20일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필 콜린스(Phil Collins) v. IMTRAT 상사(Imtrat Handelsgesellschaft mbH.) 판결 결과
1995년 2월 24일	EU 공청회
1996년 3월 13일	유럽연합의 추급권에 관한 지침 제안
1996년 8월 21일	한국 베른협약 발효 (제14조 3항 유보)
2001년 9월 21일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2006년 6월 13일	2006년 유럽공동체미술가재판매권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S.I. No. 312 of 2006)

2.2.3. 추급권에 대한 개별 국가의 법적 제도화

해외에서는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계약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삽입하거나, 갤러리에서 작가들을 위해 추급권을 도입하거나, 작가 스스로 추급권을 주장하거나 하는 식이다. 가장 처음 추급권과 비슷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도한 자는 프랑스의 미술작품 컬렉터인 앙드레 르벨(André Level, 1863-1947)이다.⁷⁵⁾ 그는 1904년 그 자신을 포함 13명의 회원을 모아 “곰가죽(Peau de l'Ours)”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좋은 미술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점에 착안해 매년 1월에 250프랑(franc)씩

75) James Surowiecki, "Cash for Canvas," *The New Yorker*, October 17, 2005,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05/10/17/cash-for-canvas>, quoted in 김캐슬린, *예술법* (서울: 학고재, 2013), 103.

내서 모던 미술작품을 구입했고 10년 후에는 약 100여점의 작품을 모을 수 있었다. 1914년에는 호텔 도루오(Drouot)에서 경매를 진행하였고, 이 모임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경비를 제외하고 20%를 작가들에게 분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⁷⁶⁾ 1914년 열렸던 경매의 총액은 100,000프랑(franc)에 달하였고, 총투자 금액은 25,000프랑(franc)으로 소유한 작품들 중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곡예사들(Saltimbanques), 1905>[도판 4]의 경우 1908년에 1,000프랑(franc)에 구입한 것이 1914년 12,500 프랑(franc)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⁷⁷⁾

추급권 도입을 위한 자체적인 움직임은 2001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법 내에 추급권을 도입하였기에 유럽 내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아직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예술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존재해왔는데, 1934년 페인터, 조각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아티스트 유니언(Artists' Union)은 '재판매 로열티'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박물관들이 예술가들에게 '대여료(rental fees)'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물관들이 자신들의 작품으로 공공 전시를 할 때 매달 노동의 공정한 가치(fair value of the work)에서 10%를 지불하는 방식을 요구하였다. 이는 아트다이제스트(Art Digest) 매거진의 편집장인 페이튼 보스웰(Peyton Boswell)의 지지를 받았고, 뉴욕 휘트니 뮤지엄(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을 포함해 여러 뮤지엄에서 수용하였다.⁷⁸⁾ 실제로 1935년 한 해 동안 뉴욕 휘트니 뮤지엄은 자신들이

76) 김캐슬린, *예술법* (서울: 학고재, 2013), 103.

77) Katy Graddy and Noah Horowitz and Stefan Szymanski, "A Study into the Effect on the UK Art Marke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8): 41-42.

전시한 작품들의 모든 작가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모든 다른 주요 박물관들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고, 다음 해에 철회되었다.⁷⁹⁾

미국 뉴욕의 프로젠스키 계약(Projansky Contract)도 널리 알려진 시도 중 하나이다. 1971년 딜러 세스 시겔럽(Seth Siegel)과 뉴욕 주 변호사 로버트 프로젠스키(Robert Projansky)는 “미술가의 소유 권리 양도 및 판매 계약(The Artist’s Reserved Rights Transfer and Sale Agreement)” 혹은 “프로젠스키 계약(Projansky Contract)”⁸⁰⁾으로 알려진 계약을 생성하여 아트포럼(Artforum)과 스튜디오 인터내셔널(Studio International)에 이를 공개하였다. 이 계약은 매번 작품이 재판매되거나, 기부되거나, 교환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될 때 평가 가치(최초 판매 가격과 현재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의 15%의 로열티를 판매자가 작가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열티 이외에도 이 합의는 작품이 공공에 전시될 때마다 작가에게 동의를 얻고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요구하며, 작가에게 작품 전시를 위해 60일 한도 내에서 작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⁸¹⁾

78) John Henry Merryman and Stephen K. Urice and Albert E. Elsen,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5th ed.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597.

79) Randall E. Filer,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Artists’ Resale Royalties Legisl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8, no. 1 (1984): 22.

80) 세스시겔럽과 밥프로젠스키 합의문 영문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GeheimRat: <http://geheimrat.com/thecontract.html>.

81) Tad Crawford, *Legal Guide for the Visual Artist*, 4th ed. (New York: Allworth Press, 1999), 117, quoted in Valentina Poland, *Visual Artists and Resale Royalties: Considerations, Copyright and the Droit De Suite Issue* (New York, NY: Nova Science, 2014), 56.

이 표준 계약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추급권을 통해 미술 작가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콜렉터와 딜러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추급권을 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큰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하였다.⁸²⁾ 이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 매번 이동될 때마다 작품 가치의 15% 인상(increase in value), (2) 모든 작품의 소유자 기록, (3) 전시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4) 전시를 위해 작품을 대여할 권리, (5) 작품 수리(repairs)가 필요할 시 작가와 상의할 권리, (6) 소유자가 작품을 빌려줄 시 수익의 50%를 받을 권리, (7) 모든 복제권 등을 작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다방면으로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었다.⁸³⁾

비슷한 사례로는 변호사 찰스(Charles Jurrist)와 조각가 에드(Ed Kienholz, 1927-1994)가 개발한 표준계약서가 있다. 이 표준계약서는 총 재판매 이익의 15%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재판매에만 해당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표준계약서도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⁸⁴⁾ 이밖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M. J. 보가틴(M. J. Bogatin)도 그의 고객을 위해 세스 시겔럽 & 밥 프로젠스키 합의와 비슷한 계약을 이용하였지만 이런 시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⁸⁵⁾ 이처럼 작가들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에

82) Judith B. Prowda, *Visual Arts and the Law: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Surrey: Lund Humphries, 2013), 127.

83) Randall E. Filer,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Artists' Resale Royalties Legisl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8, no. 1 (1984): 15.

84) Judith B. Prowda, *Visual Arts and the Law: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Surrey: Lund Humphries, 2013), 127.

85) Akiko Ogawa, "The Potential of Implementing Droit de Suite in US," Waseda Institute for

추급권 관련 조항을 삽입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 뉴욕의 재판매협상권리(Negotiated Resale Rights; NPR)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콜렉터들을 대변하는 컨설팅 회사 보이드 레벨(Boyd Level)은 미술작품의 최초 가격 할인 대가로 향후 재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작가에게 되돌려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NPR 문서를 배포해 작가와 구매자들이 동의하도록 장려하였다.⁸⁶⁾ NPR은 2005년 변호사 프랭클린 보이드(Franklin Boyd)가 창안했고, 뉴욕 미술 컨설턴트 보이드 레벨이 운영하였다. NPR은 첫 번째 재판매를 대상으로 작품의 재판매가 이뤄질 경우 일정 비율을 작가 몫으로 제공했는데 작가와 딜러는 콜렉터와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신에 첫 번째 판매 시 금액을 할인해주며, 계약 당사자들은 로열티와 작품 판매 시 할인 비율을 상호 상의 하에 결정할 수 있었다.⁸⁷⁾

이밖에도 캐나다 오타와(Ottawa)에 소재한 <큐브(Cube)> 갤러리는 거의 10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작품의 재판매 시 화가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유명 미술 경매전문회사인 <리치(Ritchies)>는 작품의 재판매 시 캐나다와 외국 작가 모두에게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⁸⁸⁾ 이밖에도, 변호사를 통해 계약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삽입하거나, 갤러리에서 작가들을 위해 추급권을 도입하는 사례 외에도 예술가 본인이 직접 추급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177,

<https://dspace.wul.waseda.ac.jp/dspace/bitstream/2065/12997/1/11.pdf>.

86) "Boyd Level, incubator of the Negotiated Resale Right, has now launched Level Rights," [USA] Boyd Level, accessed July 1, 2016, <http://boydlevel.com/home/home.php>.

87) "Boyd Level, incubator of the Negotiated Resale Right, has now launched Level Rights," [USA] Boyd Level, accessed July 1, 2016, <http://boydlevel.com/home/home.php>.

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한스 하케(Hans Haacke, 1936-)의 경우 그의 작품을 다루는 콜렉터가 그가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계약서의 조항에는 미래에 일어날 재판매 이익의 15%를 한스 하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⁸⁹⁾ 그랜트 우드(Grant Wood, 1891-1942)의 경우, <혁명의 딸(Daughter of Revolution), 1932>이라는 작품[도판 5]의 가치가 단기간에 4배가 된 것에 분개하여 1940년에 다음 작품에 대한 계약에서 재판매에 대한 이익의 50%를 요구하기도 하였다.⁹⁰⁾ 안젤로 디 베네데토(Angelo de Benedetto, 1913-1992)는 1942년부터 그의 작품을 판매할 때 재판매 로열티 계약서를 적용하였다. 이밖에도 계약서를 통해 재판매를 통한 가치상승 시 일정 비율의 몫을 받았던 작가들로 칼 안드레(Carl Andre, 1935-), 솔 르윗(Sol Le Witt 1928-2007),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1938-), 에드워드 킨홀츠(Edward Kienholz, 1927-1994) 등을 거론할 수 있다.⁹¹⁾

88) "The Unstoppable Revival of Ritchies Now Includes Artist's Resale Rights," [UK] Blouin Artinfo, accessed May 15, 2016,

<http://ca.blouinartinfo.com/news/story/903138/the-unstoppable-revival-of-ritchies-now-includes-artists>.

89) "Artists add their voices to US resale royalties debate: New York panel pits lawyers against practitioners," [UK] *The Art Newspaper*, accessed July 1, 2016,

<http://theartnewspaper.com/market/art-market-news/artists-add-their-voices-to-us-resale-royalty-debate/>.

90) 백명선 and 변용완, "한-EU FTA의 추급권(Droit de Suite)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과제," *제 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2007): 162.

91) Randall E. Filer,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Artists' Resale Royalties Legisl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8, no. 1 (1984): 14.

이 중 디지털 아트 작가로 유명한 라파엘 로젠달(Rafaël Rozendaal, 1980-)의 경우 매우 특이한 사례라 주목할 만하다. 그는 독일-브라질 국적의 작가이지만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는 그의 디지털 작품의 일환인 웹사이트도 작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웹사이트 형식의 디지털 아트 작품은 경매에서 판매가 진행되지 않으며, 관련 표준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로젠달은 그의 개인 홈페이지⁹²⁾에 웹사이트 판매 계약/정품인증서(Website Sales Contract/ Certificate of Authenticity)를 올려 두어 작품 인증서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고, 이 계약/정품인증서의 조항 8에는 ‘재판매’ 관련 내용을 두어 디지털 아트 작품의 재판매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계약서⁹³⁾에 따르면, 재판매 시 a) 작품이 반드시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있어야 하며, b) 작가가 새로운 작품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하며, c) 새로운 작품 구매자는 위 계약/정품인증서에 서명해 복사본을 보내야 하고, d) 이 계약의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⁹⁴⁾ 라파엘 로젠달의 시도는 매우 참신하며,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작가 자신이 일정한 조건을 삽입한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92) 라파엘 로젠달(Rafaël Rozendaal, 2014-)의 웹사이트: <http://www.artwebsitesalescontract.com/>

93) 이 계약/정품인증서는 12개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 1. 작품(Artwork) 2. 구매(Purchase), 3. 배송(Delivery), 4. 데이터의 전송(Transfer of Electronic Data) 5. 도메인 이름의 전송(Transfer of Domain Name), 6. 작가의 의무(Artist's Obligations), 7. 소유자의 의무(Owner's Obligations), 8. 추급권(Resale Rights), 9. 저작권법(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 전시권(Exhibition Rights) 11. 기술적 플랫폼(Technical Platform) 12. 적용 법률 및 관할 법원(Applicable Law and Competent Court)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4) Rafaël Rozendaal, "Website Sales Contract/Certificate of Authenticity," 2014.

2.2.4. 추급권에 대한 유럽 국가의 판결

추급권 관련 주요 소송 및 판결 결과는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유럽연합이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추급권 관련 주요 소송 및 판결 결과는 1993년 10월 20일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필 콜린스(Phil Collins) V. IMTRAT 상사(Imtrat Handelsgesellschaft mbH.)를 들 수 있다. 필 콜린스 판결 결과가 추급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 회원 국민의 ‘차별대우 금지(non-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⁹⁵⁾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추급권의 법제도 조화를 이루는 데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EU 간의 법조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추급권 관련 재판 판결들 중 핵심적인 사례들을 선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2.4.1. 독일

1993년의 필 콜린스 V. IMTRAT 상사의 판결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1994년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에서 나온 판결로, 판매가 최소 부분적으로나마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독일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의 제26조 추급권(Folgerecht)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1994년 6월 16일 독일의 저명한 화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95) David Boot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Directive Harmonizing the Droit de Suite,"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2 (1998): 6, <https://www.escholar.manchester.ac.uk/uk-ac-man-scw:1b7663>.

1921-1986)의 작품 세 점이 독일에 거주하는 소장자에 의해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로 운송되어 독일 마르크(Deutsche Mark; DEM)로 DEM 1,418,340(약 9억 원)에 판매되자 보이스의 미망인이 독일 저작권법 제26조를 근거로 5%의 재판매 로열티를 청구하는 추급권 관련 소를 제기했던 사례이다. 보이스의 미망인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를 포함한 작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인 DEM 75,881.19에 더해 1990년 2월 13일부터의 이자 4%도 함께 청구하였다.⁹⁶⁾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재판매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권리가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는 다른 나라의 관할권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⁹⁷⁾

위와 같은 판결은 국제 저작권법에서 ‘영역성 원칙(territoriality principle)’을 따른 것인데, 영역성 원칙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법률 적용 범위를 다른 국가로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 판매자가 추급권을 제공하는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작품을 판매할 경우 화가의 상속인들에게 판매세의 일부를 (재판매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⁹⁸⁾ 물론 이러한 사건이 현 시점에서 일어난다면 독일 법원은 더 이상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영국 역시 추급

96) “Bundesgerichtshof Urt. v. 16.06.1994, Az.: I ZR 24/92,” [Germany] WoltersKluwer Jurion, accessed May 10, 2017, https://www.jurion.de/urteile/bgh/1994-06-16/i-zr-24_92/.

97) Alexander Peinze, *Internationales Urheberrecht in Deutschland und England* (Tübingen: Mohr Siebeck, 2002), 150-154.

98)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in Zivilsachen(BGHZ)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Folgerecht bei Auslandsbezug,” (1994): 2888-2890, quoted in Martina Supper, “An Analysis of Droit de Suite from a Law and Economic Perspective” (Master’s thesis, European Master in Law & Economics, 2000), 4.

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⁹⁾

추급권의 법조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또 다른 판결 결과는 2008년 7월 17일 독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잠룽 알라스(Sammlung Ahlers) 사건의 판결 결과이다. 1911년에서 1914년 활동했던 청기사파(Der Blaue Reiter)의 작품들과 1905년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다리파(Die Brücke)의 작품들을 비롯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표현주의 미술(expressionist art)’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잠룽 알라스는 2001년 1월 ‘알라스 컬렉션’을 판매하였고, 아직 저작권이 소멸하기 이전의 작품들이 여러 점 있었기에 이 작품들의 판매는 2006년 독일 저작권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 버전의 추급권 적용을 받게 된다. 매각자는 알라스 AG(Ahlers AG)를 포함 알라스 그룹(Ahler group) 회사들이었고, 이들은 중개인을 통해 2002년 1월 26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판매계약이 판매자에 의해 독일에서 서명됨) 작품들은 스위스의 면세 창고(duty-free bonded warehouse)에 보관되어 있어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다.¹⁰⁰⁾ 독일 연방대법원은 재판매는 적어도 일부라도 반드시 독일 영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판매계약과 소유권의 법적 양도 둘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의 배경 때문에 이 재판도 EU 내의 추급권 법제도 조화(harmonization)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99) Christopher Phillips, "Court Fight over Beuys Resale Royalties," *Art in America* 80, no. 7 (1992): 29.

100) "Sammlung Ahlers Collection: Case No. I ZR 109/05," [Germany] Federal Supreme Court(Bundesgerichtshof), accessed July 1, 2016,

http://libproxy.snu.ac.kr/8b9e4c5/_Lib_Proxy_UrL_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zeits%2fLIC%2f2009%2fcont%2fLIC%2e2009%2e604%2e1%2ehtm.

2.2.4.2. 프랑스

추급권 귀속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규율할 때 ‘양도불가능’ 한 특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혈족 관계에 있는 직계 가족이나 법적 상속인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일부 국가들은 ‘유언(will)’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추급권 귀속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소송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 소송이다. 스페인 태생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1989년 1월 23일 상속인 5명과 막대한 작품(oevre)을 남기고 스페인에서 사망하였다. 달리는 마지막 ‘유언’에 스페인 정부를 그의 포괄적 수유자(universal and unconditional heir)로 지정하여 그의 전 재산과 저작권, 미술작품을 양도하였고, 그의 저작권은 1983년 달리의 발의로 스페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갈라살바도르달리재단(Gala Salvador Dalí Foundation)’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1997년 재단은 스페인 법 하에 세계에 걸친 달리 작품의 저작권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관리를 스페인 조형미술가관리시각단체(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Plásticos; VEGAP)에 위탁하였다. VEGAP는 프랑스 ADAGP와 자매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부터 ADAGP는 프랑스에서 달리의 작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로알티를 징수하여 그 금액을 VEGAP를 거쳐 달리 재단에 지급해왔다.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가 자국 저작권법 제L123-7조에 의거 발생한 재판매 로알티를 유언에 의한 수유자(스페인 정부)를 배제한 채 달리의 5명의 상속인들에게만 지급한 데 있었다.¹⁰¹⁾ 원고 측인 달리 재단과 VEGAP는 달리가 마지막 유언에 스페인 정부를 그의 포괄적 수유자로 지정한 점과 스페인 법을 들어 프랑스에서 생긴 재판매 로알티를 달리의 상속인들이 아니라 달리 재단에 지급해야

101) Joerg Wuenschel, “Artists’ Resale Right: Dalí’s Royal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5, no. 8 (2010): 555.

한다고 주장하였고, 프랑스 지방법원에서 ADAGP를 상대로 재판매 로알티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 재판소에 의하면 재판매 로알티에 관한 각 유럽 회원국의 국내법은 유럽적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스페인 법은 프랑스 법정에서 원용할 수 없고, 또한 미술작품 재판매 로알티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에서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 재판매 로알티 청구권자의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 지방법원은 피고(ADAGP)가 화가 달리의 작품을 프랑스에서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원고(달리 재단)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화가의 작품에 대한 ‘재판매 로알티’만은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화가 달리의 유언과 관계없이 그 화가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¹⁰²⁾ 이와 같이 프랑스 법은 법정 상속인 중에서도 가족들만 추급권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3-7조에 의하면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 추급권은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자의 수유자(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리 지방법원에 추급권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 해당 조항이 추급권의 귀속 대상을 법정상속인에게만 국한함으로써 수유자를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사법재판소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하고,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지만 상속인뿐 아니라 수유자

102) “[EU] Salvador Dali 사건 (추급권)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EU 지침 해석과 파리 지방법원 판결,” *한국 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no=973>.

도 추급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프랑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속이란 부모와 그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는 민법이 보장하는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러한 가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추급권은 상속을 통해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를 요구하는 유언을 통하면 온전히 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급권의 입법 목적과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급권은 법정상속인만이 향유하여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¹⁰³⁾ 2012년 9월 18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추급권을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추급권을 굳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로 규정한 것은 계약상으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화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추급권은 법정상속인만이 향유하여야 마땅한 바,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프랑스 법은 법정상속인 중에서도 가족들만 추급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게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ADAGP가 달리의 법정 상속인들에게만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¹⁰⁴⁾

최근 프랑스에서 재판매 로얄티 지급 의무와 관련이 있었던 판례는 <크리스티 프랑스(Christie's France Snc)> V. 파리 국립 고미술협동 조합(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사건이다. 예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프랑스>가 약관을 변경하여 ‘판매자(seller)’가 아닌 ‘구매자(buyer)’에게 재판매 로얄티를

103)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정상속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합헌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634>.

104)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정상속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합헌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634>.

지급하게 하자, 파리 국립 엔티크 조합이 재판매 로얄티 지급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 L122조의 8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약관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¹⁰⁵⁾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제L122조의 8에는 ‘판매자’에게 지불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11년 파리 지방법원은 <크리스티>의 해당 약관은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2012년 파리 항소법원은 ‘계약’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침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사법재판소인 프랑스 파기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판매자’에게 추급권료 지급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이 ‘계약’에 의하여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결 판단을 요청하였다.

2015년 2월 26일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재판매 로얄티의 지급 의무를 규정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이 추급권료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지침의 도입을 통해 EU 내 법제도 조화를 이뤘지만 입법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법 상 차이점을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저작자에게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재판매 로얄티 액수’는 국내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지만, ‘재판매 로얄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까지 국내법에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판매자나 거래에 관여한 미술시장 전문가가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할 ‘책임(liability)’과

105) 박경신,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20, no. 1 (2016): 82-83.

‘의무(responsibility)’가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다른 이와 의 계약을 통하여 다른 이가 재판매 로열티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구매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를 구분함으로써 EU 내 법제도 조화의 목적은 저작자가 효과적으로 재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에 국한되며,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에 이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⁶⁾

2.2.4.3. 아일랜드

추급권의 늦은 도입으로 손해를 본 작가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가이자 디자이너 중 하나인 로버트 바라(Robert Ballagh, 1943-)는 2006년 1월 1일의 합의된 데드라인까지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에 따라 추급권을 도입하는 데 실패하자 소를 제기하였고, 아일랜드의 고등법원으로부터 €5,000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았다. 아일랜드는 추급권이 정해진 시기보다 5개월 반 정도 뒤쳐진 2006년 6월 13일에 도입되었다. 로버트 바라는 2006년 경매에서 <JP 돈레비의 초상(Portrait of JP Donleavy), 1969>[도판 6]이 €40,000, <워홀을 바라보는 소녀(Girl Looking at a Warhol), 연도미상>[도판 7]이 €26,000에 낙찰되는 등 총 €82,700 상당의 작품이 팔린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급권이 정상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3,000의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판

106) 박경신,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20, no. 1 (2016): 82-83.

사 자라스 오닐(Iarfhlaith O'Neill)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여 소송절차 비용 이외에도 로알티 €3,0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⁰⁷⁾

하지만 추급권 도입이 늦어져서 손해를 입은 모든 작가들이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의 화가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잭 버틀러 예이츠(Jack Butler Yeats, 1871-1957)는 작품이 2011년 9월 경매에서 €1,000,000에 팔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만약 4개월 후에 팔렸다면 €12,500를 로알티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¹⁰⁸⁾ 아일랜드 정부는 2006년 추급권을 첫 도입한 당시에는 생존한 미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만 추급권을 적용하였다. 이미 사망한 미술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2012년 1월 1일로 유예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생존 작가들뿐만 아니라 사후 작가들을 대상으로 법이 확장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 추급권 제도의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2012년 이후부터라고 봐야 한다.)

2.2.5. 추급권 도입으로 인한 국가별 논쟁

추급권의 도입에 있어 가장 반대가 심했던 국가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의 반대파들은 계속해서 영국 미술 시장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소수의 예술가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지침 도입에 반대하였다. 모든 EU 국가들이 추급권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1990년대 초반 영국 정부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 추급권 도

107) "Ballagh Gets Euro 5,000 for Royalties Loss After Resale Law Failure," *Irish Times*(Dublin, Ireland), Jul 1, 2006,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08902858?accountid=6802>.

108) Michael Parsons, "Heirs of Artists in Line for Resale Windfall," *The Irish Times* (Dublin, Ireland), Jan 9, 2012, <http://search.proquest.com/docview/914573587?accountid=6802>.

입 ‘지침’의 진행을 막기 위해 EC의 설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99년 당시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영국 미술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염려하여 추급권 지침은 국제적인 협의에 이를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추급권 도입을 미루는 것과 생존 작가만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제안은 EU의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반대되었지만 결국 채택되게 된다.

영국 이외에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지역 국가들은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이후로 추급권을 별 무리 없이 자국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영국의 강한 주장으로 당시 추급권을 새로 도입하는 회원국(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8조 제2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는 예술인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라고 하여 수용 입법화하는 기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는 ‘생존 작가’만을 대상으로 추급권 제도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유예 규정을 두었다. 말타(Malta)의 경우에도 2004년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였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예 규정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도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게끔 했다. 이 밖에도 유럽위원회는 (추급권을 새로 도입하는 회원국들을 위해) 2010년 1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 이외에도 동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해 추가 2년의 유예 기간을 더 허용함으로써 유연한 선택권을 주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2008년 말의 경제 상황의 여파로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유럽위원회에 통보하였고, 2012년 1월 1일까지 생존 작가에 대해서만 추급권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추급권을 이미 자국의 법에 도입하고 있어 지침을 따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만이 이전에 추급권이 없

었던 유일한 회원국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유예 기간을 받아들이게 된다.¹⁰⁹⁾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추급권의 도입에 있어 반대가 심했던 국가 중 한 곳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9년부터 추급권 도입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부의 반대로 20년 동안이나 추급권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갖은 로비를 비롯해 오랜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해나가는 기간을 거쳤기에 법 집행 후에는 효과적으로 추급권이 운영될 수 있었다.

2.2.5.1. 영국

영국 런던은 미술 거래 시장의 수준과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미술 경매 판매량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가히 국제 미술 시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¹¹⁰⁾ 영국에서는 유럽보다 늦은 2006년 2월 13일에 총 17개의 조항으로 「미술가 재판매 권리 규정(2006 No. 346 Intellectual Property-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이 제정되었는데, 이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유럽의 압력을 비롯해 많은 지역 사회 예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5년 10월 27일에는 영국 팝아티스트인 피터 토마스 블레이크(Sir Peter Thomas Blake, 1932-)와 YBAs 소속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가 천 명의 영국 작가들과 뜻을 모아 영국 미술가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우닝 거리(Downing

109) Joanna Cave, "An Overview of the European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UK via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5,"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1, no. 4 (2006): 243.

110) Godfrey Barker, "Chapter 41: The United Kingdom,"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328.

Street)¹¹¹⁾에 커다란 캔버스를 배달시키는 방식으로 국무총리에게 추급권을 청원하기도 한 해프닝도 있었다.¹¹²⁾ 영국 작가들의 경우에는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편이며, 관련 실태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5,800명의 영국 시각예술 창작자(디자이너, 순수 미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35%가 부업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이들의 임금은 순수 미술가의 경우 £10,000, 사진가의 경우 £15,000로 나타나 이들 예술가들이 중간 임금 계층에 속하지만 영국 전체 국민의 중간 임금인 £21,320에는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이러한 통계 조사 결과와 예술가들의 청원, 그리고 EU의 압력은 영국의 강력한 지침 도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급권을 도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영국 정부는 2006년 2월 13일 추급권을 처음 도입했던 당시에는 생존한 미술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만 추급권을 적용하기로 했고, 이미 사망한 미술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2010년 1월 1일로 유예하였다. 하지만 2008년 12월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의 국무 장관이었던 존 덴햄(John Denham)은 “2008년도 있었던 세계 경제 침체를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은 영국 미술 시장이 추급권을 사망한 작가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논조의 편지를 보내 법의 부분적 적용 시기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¹¹⁴⁾ 이에

111) 다우닝 거리(Downing Street):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곳으로 영국 총리와 정부를 가리킨다.

112) McSmith, Andy, and Louise Jury. “Art Resale Law Means More Money for Poor Artists.” *The Independent*, Dec 16, 2005.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10884784?accountid=6802>.

113) The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Copyright Contracts and Earnings of Visual Creators: A Survey of 5,800 British Designers, Fine Artists, Illustrators and Photographers,” (2011):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에도 추급권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영국을 비롯하여 다른 유럽연합의 회원 국가들(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8조에 따라 2012년부터 확대 적용을 시작하였다.¹¹⁵⁾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영국 작가 중 제이콥 엡스타인(Jacob Epstein, 1980-1959), 폴린느 보티(Pauline Boty, 1938-1966), 바바라 헤프워스(Barbara Hepworth, 1903-1975),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엘리자베스 프링크(Elisabeth Frink, 1930-1993), 폴 니그(Paul Neagu, 1938-2004) 등이 2012년부터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¹⁶⁾ 하지만 안타깝게도 혜택에서 제외된 작가들도 존재했다. 가령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의 <걷고 있는 남자(Walking Man I), 1960>[도판 8]는 2010년 2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전례가 없는 £58 million(약 844억 원)에 판매되었는데, 만약 영국 정부가 추급권을 예정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했었다면, 그리고 스위스가 추급권을 도입했더라면 유족이 받을 수 있었던 재판매 로열티는 €12,500이었다.¹¹⁷⁾ 이 작품의 구매자 프리미엄(Buyer's

114) Henry Lydiate, "Artist's Resale Right: Fourth Year Report," *Art Monthly* 333, 2010, 37.

115) "[영국]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확대 적용으로 유족들이 혜택 볼 듯,"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7976&list.do?pageIndex=1&brdct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

116) Henry Lydiate, "Artist's Resale Right: Fourth Year Report," *Art Monthly* 333, 2010, 37.

117) Resale Right Organization[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 European Visual Artists(EVA), 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Premium)¹¹⁸⁾이 £ 7 million(약 102억 원) 정도였다면 재판매 로얄티(€12,500) 액수는 구매자 프리미엄의 0.16%정도로 전체 해머 프라이스(Hammer Price)의 0.02%를 차지해 우려와는 달리 재판매 로얄티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¹¹⁹⁾

영국에서 추급권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영국 미술 시장의 규모가 세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영국 미술 시장은 2009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랭크되었으며, (전체 미술 시장에서 29%) 영국 내 미술작품과 골동품 판매량은 £7.7 billion에 달하는 데다 유럽에서 가장 큰 예술품 수익 및 수출국이고, 모던과 컨템포러리 부문의 예술품 거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통한다.¹²⁰⁾ 추급권이 완전히 적용된 2013년의 경우에도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술 시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미술 시장에서 20%), 영국 내 미술과 골동품 판매량은 £8.0 billion 규모로 집계되었다. 영국 미술 시장이 2010년 이후 세계

Composers(GESAC)], "What is the Artists Resale Right," (2014): 4.

118) 구매자 프리미엄(Buyer's Premium)은 영국 런던 크리스티에서 1975년 7월에 처음 도입하였다. 구매자 프리미엄은 구매자에게 추가되는 요금으로 현재 크리스티와 소더비 모두 최종 입찰 가격의 첫 번째 \$50,000에 대해 25%를 \$50,000부터 \$1 million 사이의 금액에 대해 20%를, \$1 million 이상일 경우 12%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Judith Bressler and Ralph Lerner, *Art Law: The Guide for Collectors, Investors, Dealers & Artists* (New York, NY: Practising Law Institute, 2013), 318.)

119)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Artist's Resale Right: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Questionnaire," (2014): 9.

120)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BAMF), "The British Art Market in 2010 by Arts Economics," (2010): 5-7.

미술 시장에서 2위에서 3위로 순위를 내준 것은 (1) 전후 & 컨템포러리(Post War & Contemporary Art) 부문의 예술품 경매 실적이 떨어진 것과 (2) 생존 작가의 미술작품 판매가 줄은 점, (3) 중국 미술 시장의 급부상, 그리고 (4) 미국 미술 시장의 강세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¹²¹⁾ 영국에서는 추급권을 전면 도입한 2012년 이후부터 시장의 침체가 감지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영국 미술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추급권 도입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보고서들이 나오기도 했다.

미술법 전문 변호사인 헨리 리디아이트(Henry Lydiate)는 추급권 도입이 영국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추급권 도입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07년 2월 14일에 나온 추급권 시행 결과 분석 보고서는 2006년 2월 14일 이후 영국의 미술 시장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된 모던 및 컨템포러리 미술작품 판매 숫자와 가격의 수준이 공개 경매와 직접 매매 모두에서 기록적인 재판매를 이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그는 영국 미술 시장이 추급권의 도입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¹²²⁾ 2008년 1월 영국의 지적재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도 독립적인 공공연구그룹인 지적재산권기관(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IP Institute)에 의뢰하여 새로운 법이 영국 미술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 연구에서 추급권(보고서가 발행된 당시에는 생존 미술가에게만 제한)이 미술작품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나, 이 법의 적용이 영국 미술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미술작품과 자본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국가(미국, 스위스, 중국 등)의 미

121)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BAMF), "The British Art Market in 2014 by Arts Economics," (2014): 4-6.

122) Henry Lydiate, "Artists' Resale Right: First Year Report," *Art Monthly* 303, 2007, 40.

술 시장으로 옮겨가 ‘판매의 이동’을 촉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1년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채넌 반턴간사(Chanont Banterngghansa)와 브랜다이스대학(Brandeis University)의 캐서린 그래디(Kathryn Graddy)의 논문 “영국의 추급권 영향: 실증 분석(The Impact of the Droit de Suite in the UK: An Empirical Analysis)”은 추급권 법의 도입이 영국 경매 미술 시장에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격 상승과 매출 성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데이터로는 1993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의 히슬롭 미술 판매 지수(Hislop’s Art Sales Index)를 이용하였으며, 추급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작품군과 만약 영국에서 판매되었다면 추급권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겠지만 다른 국가(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판매된 작품군을 비교하였다. 추급권 도입 당시 영국이 가장 우려했었던 점은 추급권 미도입 국가로 시장의 축이 이동하는 문제와 미술작품 거래의 위축, 초기 구매 시 딜러의 가격 협상으로 인한 작품 판매가의 하락 등이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우려와는 달리 시장의 중심축은 이동하지 않았으며,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국 경매 미술 시장 성장률은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³⁾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영국의 추급권 도입 효과의 부정적인 논쟁과 우려는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다.

123) Chanont Banterngghansa and Kathryn Graddy, “The Impact of the Droit de Suite in the UK: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5, no. 2 (2011): 98, <http://people.brandeis.edu/~kgraddy/working%20papers/journaljan09.pdf>.

2.2.5.2. 오스트레일리아

신생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술 역사는 비교적 짧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도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와 17세기 무렵으로, 이주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을 선발해 새로운 식민지의 식물군(flora)과 동물군(fauna)을 기록한 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미술작품으로 간주되어왔다. 이후 전문 미술가들이 도착하면서 잠재적인 정착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풍경을 묘사한 회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²⁴⁾ ‘풍경’ 테마를 제외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인기를 끄는 미술은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느낌이 강한 ‘원주민 미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캐나다 등지와 비슷하게 원주민 미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목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미술은 조각, 목조, 석조, 나무껍질 페인팅, 워빙 등 자연적인 색채가 강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술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된 <소더비>에 따르면,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미술은 <소더비> 비즈니스에서 거의 25% 가까이를 차지하였다고 한다.¹²⁵⁾ 이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원주민 미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연방 예술 장관(Federal Arts Minister)인 피터 가렛(Peter Garrett)이 공식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미술 상업 행위 규범(The

124) Georgina Pemberton and Josh Pullan, "Chapter 3: Australia,"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54.

125) Georgina Pemberton and Josh Pullan, "Chapter 3: Australia,"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57.

Indigenous Australian Art Commercial Code of Conduct)」을 출범시켰다.

「원주민 미술 법안(Indigenous Art Code)」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부패한 딜러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관행인 원주민 작가들의 작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¹²⁶⁾ 원주민 미술 법안의 목표는 일련의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원주민 작가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원주민 미술작품 판매와 홍보의 투명성을 높이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주민 미술 법안은 딜러, 에이전트, 원주민 작가들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보관, 홍보 및 브랜딩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¹²⁷⁾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급권이 도입된 데는 원주민 작가들을 범망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계기가 크게 작용했다.

몇몇 주요 사례를 들자면, 유명한 원주민 작가인 조니 와랑쿨라 주퍼룰라(Johnny Warangkula Tjupurrula, 1925-2001), 에밀리 카메 킹와레예(Emily Kame Kngwarreye, 1910-1996), 클리포드포섬 티야팔야리(Clifford Possum

126) "Art Market gets Ugly as Indigenous Bubble Bursts by Nicolas Rothwell," [Australia] Aboriginal Art Directory, accessed January 8, 2010,

<http://news.aboriginalartdirectory.com/2010/08/art-market-gets-ugly-as-indigenous-bubble-bursts.php>, quoted in Daniel Day, "The Art Market Down Under: A Case Study of Australian Aboriginal Art Market Regulation and U.S. Art Market Implication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3, no. 1 (2014): 152.

127) "Indigenous Art Code," [Australia] Indigenous Art Code Limited, accessed April 20, 2017, <http://www.indigenousartcode.org/>, quoted in Daniel Day, "The Art Market Down Under: A Case Study of Australian Aboriginal Art Market Regulation and U.S. Art Market Implication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3, no. 1 (2014): 152-153.

Tjapaltjarri, 1932-2002) 등의 작품들은 경매에서 약 6,000배까지 상승한 가격으로 재판매되었지만 작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작가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망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¹²⁸⁾ 이처럼 원저작권자가 처해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추급권을 도입하는 데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급권이 도입된 데 작용한 또 다른 배경에는 예술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인식이 자리한다. 2002년도 루퍼트 마이어(Rupert Myer)의 “컨템포러리 시각 미술 및 공예 조사 보고서(Report of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and Craft Inquiry)”와 2003년도 맥쿼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찰스 데이비드 스로스비(Charles David Throsby)와 버지니아 홀리스터(Virginia Hollister)가 오스트레일리아 미술 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의 편당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인 “본업을 포기하지 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문 예술가들에 대한 경제적 연구(Don't Give Up Your Day Job An Economic Study of Professional Artists in Australia)”는 예술가들이 처한 모순적인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중 찰스 데이비드 스로스비의 2003년도 버전의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예술가¹²⁹⁾들 중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가 대부분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

128) “Royalties for Art's Sake,” [Australia] The Sydney Morning Herald Fairfax Archives, accessed September 1, 2016, <http://www.smh.com.au/articles/2002/09/05/1031115911326.html>, quoted in Victoria Till,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 no. 3 (2007): 7.

129) 작가, 시각 예술가, 공예 전문가(craft practitioners), 배우, 디렉터, 댄서, 안무가, 음악가, 가수, 작곡가, 지역 문화 발전 근로자(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workers)

요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8,500-10,000명으로 추정되는 예술가들의 소득은 매년 평균 \$20,000(중간 값 \$9,20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¹³⁰⁾ 이처럼 원주민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예술가들의 실상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추급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추급권을 도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추급권 도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시각미술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s; NAVA)가 15년 동안이나 강력하게 도입을 위한 로비를 진행해왔고, 마지막 몇 년 간은 NAVA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위원회(Australian Copyright Council; ACC), 오스트레일리아 시각미술저작권징수 에이전시(Visual Arts Copyright Collecting Agency; VISCOPY),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술법센터: 미술을위한국립지역사회법률센터(The National Community Legal Centre for the Arts; Arts Law Centre of Australia)가 힘을 합쳐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했던 것이 작용했다.¹³¹⁾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작가들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원주민 커뮤니티의 지지가 신호탄이 되어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은 2004년과 2006년 3월 일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Private Member's Bill)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1968년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을 이행하려 하였다.¹³²⁾ 2008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

130) Australia Council, "Don't Give Up Your Day Job An Economic Study of Professional Artists in Australia by Charles David Throsby, Virginia Hollister," (2003): 45.

131) Victoria Till,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 no. 3 (2007): 4.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에 의해 「시각 미술가를 위한 재판매 로열티 법안(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Bill 2008)」 보고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1989년부터 추급권 도입을 고려했음을 지적하며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¹³³⁾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결국 2010년 6월 9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09 시각 미술가를 위한 재판매로열티법(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급권 제도는 도입 후 1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반대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수의 자국 미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1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 에이전시 법인(Australia Copyright Agency Limited; CAL)의 CEO인 짐 알렉산더(Jim Alexander)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추급권 도입으로 인해 2년 만에 \$1 million(약 8.5억 원)이 넘는 혜택이 500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들에게 돌아갔고, 5,000번이 넘는 재판매에 적용이 되었으며, 혜택을 받은 작가들 중 90%가 생존 작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¹³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추급권 도입 3년째 되는 해에 “2013 오스트레일리아 위원회가 제출한 재판매 로열티 제도 검토(Australia Council Submission 2013 Review of the Resale Royalty Scheme, 2013)” 보고서를 발표하여 추급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제도 시행일인

132)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 (Discussion Paper),” (2007): 12-13.

133)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Bill 2008 (Bill Digest),” (2008): 4.

134) “Resale Royalty Scheme Reaches \$1m for Artists,” [Australia] Copyright Agency, accessed July 1, 2016, <http://copyright.com.au/2012/11/resale-royalty-scheme-reaches-1m-for-artists/>.

2010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12,800번의 재판매를 통해 1,200명의 작가에게 총 \$4.3 million(약 36.5억 원) 혜택이 돌아갔으며, 로열티의 최저 금액은 \$50달러, 최고 로열티는 \$55,000달러로 조사되었고, 평균 \$50-\$500 사이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체 1,200명의 작가 중 65%가 앞서 언급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혹은 토레스해협섬사람(Torres Strait Islander) 출신 원주민 작가들이었으며, 전체 재판매 로열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장 많은 재판매 로열티를 받은 상위 50명의 작가 중 22명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으로 나타나 추급권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¹³⁵⁾

오스트레일리아 미술 위원회도 “2013년 시각 미술가를 위한 재판매 로열티 권리법 검토(2013 Review of the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보고서를 출간하여 추후 추급권 법안 개정 대비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추급권 법안의 경우, ‘홍보성 판매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재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주식으로 구입(bought as stock)’한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작품 구입 후 재판매한 기간(time frame)과 가격 한도는 작가와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상의 하에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저 판매가 기준을 \$1,000에서 조정하는 것과 로열티 비율을 차등 비율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고,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물품·용역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후에서 재판매 로열티를 계산하고 있지만 물품·용역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¹³⁶⁾

135) “About the Scheme,” [Australia] Copyright Agency, accessed July 1, 2016,

<http://www.resaleroyalty.org.au/>.

136)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ustralia Council Submission 2013 Review of the Resale Royalty Scheme,” (2013): 3.

3. 추급권 도입 및 도입 논의 중 국가별 동향

제3장 추급권 도입 및 도입 논의 중 국가별 동향 부분에서는 기존 추급권 관련 사례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추급권 도입 국가의 수와 리스트에 대해 첨언하였다. 또한,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입법 유형별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안 원문을 통해 앞서 언급한 11가지 분석틀을 이용해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입법 유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2001년도의 ‘지침’과 2006년도의 ‘규정’ 이후로 최신 업데이트 된 법안들을 가지고 비교 법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기존 선행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추급권 도입 논의 중인 국가별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부분에서는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 입법 추진 노력 중인 국가들과 스위스, 일본 등 도입 추진 논의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 이들의 추급권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3.1. 기존 추급권 관련 사례 연구의 한계

기존 연구에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축소 연구되었다는 점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추급권은 1991년에 이미 29개국에서 국내법으로 제정된 상태였으며,¹³⁷⁾ 2007년 당시에도 EU 28개국 회원국을 포함 40여개국 이상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조차 유럽 몇몇 개국에서만 추급권을 채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내 문헌의

137) Liliane de Pierredon-Fawcett, *The Droit de Suite i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 Comparative Law Study* (New York, NY: Center for Law and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91), 106.

경우 2000년도 논문에서는 ‘30여 개국’,¹³⁸⁾ 2004년도 논문에서는 ‘몇몇 나라’,¹³⁹⁾ 2007년도 논문에서는 ‘소수의 국가’,¹⁴⁰⁾ 2009년도 논문에서는 ‘17개국’,¹⁴¹⁾ 또 다른 2009년도 논문에서는 ‘50개국’,¹⁴²⁾ 2010년도 논문에서는 ‘일부 국가’¹⁴³⁾ 등으로 기재하는 등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 문헌의 경우에도 30여 개국에서부터 80개국까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렇듯 추급권 도입 국가의 수는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다.

추급권 도입 국가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고서들에서 많은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07년 4월 뉴질랜드 문화유산부(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CH)에서 제출한 토론 보고서인 “시각미술가 재판매 권리: 뉴질랜드에 적용 가능한 옵션(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은 몰타, 이라크, 라오스, 모로코 등의 국가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보고서가 2007년 4월에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38) 양재훈,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93, <http://www.riss.kr/link?id=T7766980>.

139) 소병희, “미술작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7, no. 2 (2004): 3.

140) 석종욱, “독일 제 5차 개정 ‘저작권법’ 상의 추급권(folgerecht)과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 21.

141)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교려법학* 53 (2009): 256.

142) 박은정, “예술저작품의 추급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X, <http://www.riss.kr/link?id=T11731112>.

143) 김민아, “미술작품 시장 및 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0), 113, <http://www.riss.kr/link?id=T12016486>.

년 6월 분리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한 국가로 기재하고 있었다.¹⁴⁴⁾ 캐나다 예술인대표(CARFAC: Canadian Artists'Representation)의 2010년 보고서 “캐나다의 추급권을 위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an Artist Resale Right in Canada)” 13쪽에 따르면,¹⁴⁵⁾ 몰타, 이라크, 라오스, 몽고, 모로코의 경우도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쓰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문서는 크로아티아를 비EU 국가라고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 역시 2010년 11월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에 분리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하나의 국가로 기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된 60개국의 추급권 도입 국가 리스트는 유럽 국가들만 해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를 누락하고 있다.

2012년에 발간된 추급권 관련 저서인 “예술가 재판매 권리(추급권): 영국 법률 및 실무(Artist's Resale Right(Droit de Suite): UK Law and Practice” 73쪽을 보면, 이라크, 라오스, 모로코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역시 2006년 6월에 분리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한 국가로 기재되어 있다.¹⁴⁶⁾ 또한 미국 저작권청의 2013년도 보고서 “재판매 로열티: 최신의 분석(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119-123쪽에서 언급하고 있는¹⁴⁷⁾ 몰

144)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 (Discussion Paper),” (2007): 39.

145) Canadian Artists'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 “Recommendations for an Artist Resale Right in Canada,” (2010): 13.

146) Simon Stokes, *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 UK Law and Practice*, 2nd ed. (Built Wells: Institute of Art and Law, 2012), 73.

147)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2013): 119-123.

타와 모리셔스의 경우에도 법안 확인 결과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몰타의 경우 L.N. 174 of 2006 Copyright Act (Cap. 415)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에 모리셔스의 경우 Copyright Act 1997, art. 4(2)(a)에 관련 법안이 실려 있다고 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2014년 재판매법 단체인 국제작가및작곡가단체연합(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uthors and Composers Societies; CISAC), 유럽시각미술가(European Visual Artists; EVA) 단체, 유럽작가·작곡가단체그룹(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GESAC)이 함께 만든 보고서인 “추급권이 무엇인가(What is the Artists Resale Right)” 문서 5쪽에서는 콜롬비아, 이라크, 라오스, 몰타, 모로코,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¹⁴⁸⁾ 엘리자베스 M. 페티(Elizabeth M. Petty)의 2014년도 논문 “라우셴버그, 로얄티, 미술가 권리: 미국의 잠재적인 추급권 입법(Rauschenberg, Royalties, and Artists' Rights: Potential Droit de Suit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에서도 모로코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¹⁴⁹⁾

엘리자 D. 돌(Elisa D. Doll)의 2014년도 논문 “2011년도 시각미술가형평법: 비교 고찰을 통한 미국에서의 효과적인 재판매 로얄티 제도 제작(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 of 2011 (EVAA): Crafting an Effective Resale Royalty

148) Resale Right Organization[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 European Visual Artists(EVA), 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GESAC)], “What is the Artists Resale Right,” (2014): 5.

149) Elizabeth M. Petty, “Rauschenberg, Royalties, and Artists' Rights: Potential Droit de Suit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2, no. 3 (2014): 985, <http://scholarship.law.wm.edu/wmborj/vol22/iss3/8>.

Scheme for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ative Meditation)”에서는 기니 비사우의 수도인 ‘비사우(Bissau)’를 나라 이름으로 기재하였으며, 몰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모리타니 등에서도 추급권을 도입 중이라고 했으나 법안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다수의 논문에서 중복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콜롬비아’가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최초의 시도이기에 의미가 있다.¹⁵⁰⁾ 이밖에도 마리암 딜마가니 & 짐 앵글 워닉(Maryam Dilmaghani and Jim Engle-Warnick)의 2012년 논문인 “추급권의 효율성: 실험적 평가(The Efficiency of Droit de Suite: An Experimental Assessment)”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추급권 관련 입법 추진이 2009년에 무산된 뉴질랜드를 추급권 도입 국가의 사례로 논문 전반에서 거론하고 있다.¹⁵¹⁾ 2015년 샘 리켓슨(Sam Ricketson)의 보고서 “추급권에 관한 국제 조약 제안(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의 경우에도 81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쓰고 있으나 법안을 폐지한 미국 캘리포니아나 르완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 확인이 불가능한 콜롬비아, 몽고, 모로코, 이라크, 라오스, 몰도바, 바티칸 시국, 우크라이나 등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¹⁵²⁾ [본 논문에서 찾은 알바니

150) Elisa D. Doll, “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 of 2011 (EVAA): Crafting an Effective Resale Royalty Scheme for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ative Meditation,” *Indian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24, no. 2 (2014): 491.

151) Maryam Dilmaghani and Jim Engle-Warnick, “The Efficiency of Droit de Suite: An Experimental Assessment,”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 9, no. 1 (2012): 117.

152) Sam Ricketson,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ademic study prepared by professor of law, Melbourne Law School and Barrister, Victoria, Australia, June 2015).

아, 마케도니아, 차드, 코모로, 지부티, 가봉,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엘 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등은 제외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가장 근접한 국가 수를 제시한 자료는 2015년 8월 28일 <아트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의 기자 애니 쏘(Anny Shaw)가 저술한 “추급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인가?(Will Artist Royalty Rights Go Global?)”라는 기사로, 이 글에서는 전 세계 81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가장 근접한 국가 수를 제시하였다.¹⁵³⁾ 하지만, 현존하는 연구 중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수와 리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추급권을 도입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추급권의 ‘호혜주의(reciprocity)’ 특성 때문이다. 추급권의 적용에 있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서로 추급권을 인정해주자는 호혜주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서는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 EC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2001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제2장 제7조에 제 2항 **[표 7 참고]** 자국 시민의 재판매 권리를 보호하는 제3국가의 목록을 게재하고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¹⁵⁴⁾ 2014년까지 EC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목록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으며,¹⁵⁵⁾ 2017년 현재에도 정확

153) Anny Shaw, “Will Artist Royalty Rights Go Global?: Some Say an International Treaty Will Be Fairer for All, Others That It Will Mainly Benefit the Famous and Dead,” *The Art Newspaper* (London, UK), August 28, 2015, <http://www.theartnewspaper.com/market/art-market-news/158603/>.

154) “Commission Directive 2006/84/EC of 23 October 2006,” [EU] EUR-Lex: European Union Law, accessed July 1, 201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84&qid=1467483190737>.

155)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Resale Right,” [EU] EC: European Commission, accessed

한 저작권 도입 국가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국의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들조차 정확한 리스트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국내외 많은 개인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7]

2001년의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Chapter II. Particular Provisions

Article 7. Third-country nationals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

2.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mber States,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s soon as possible an indicative list of those third countries which fulfil the condition set out in paragraph 1.

This list shall be kept up to date.¹⁵⁶⁾

3.2. 저작권 도입 국가의 수

전수 조사 결과 저작권은 유럽지역 이외에도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구 결과 현재 저작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82개국 정도로 유럽지역 40개국, 아프리카 지역 18개국, 남미 지역 15개국, 아시아 지역 5개국, 중동 지역 2개국, 오세아니아 지역 1개국, 북미 지역 1개국 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텍사스 주 변호사인 마릴린 J. 크렛신저(Marilyn J.

July 1, 2016,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resale-right/index_en.htm.

156) [EU] EUR-Lex: European Union Law.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accessed August 1, 201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L0084:EN:HTML>.

Kretsinger)는 1993년 개제한 글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급권의 생존은 그것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달려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1993년 현재 36개국에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만 향후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밝혔다.¹⁵⁷⁾ 25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추급권 도입 국가의 수는 82개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추급권이 생존했음은 물론 점차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이다. 이밖에도 여러 문헌에서 중복적으로 추급권을 도입중이라고 했지만 관련 법안이 확인 불가능한 했던 국가는 약 12개국으로 콜롬비아, 이라크, 라오스, 몰타, 모리셔스, 몽고, 모로코, 바티칸시국, 몰도바 등으로 나타났다. 12개국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르완다, 푸에르토리코 등 3개국은 추급권을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민법 31, 제2부, 파트 4-A. 지적재산권, 조항1401h에 제정되어 있었지만 폐지(repealed) 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⁸⁾ [표 8 참고]

[표 8]

추급권 도입 확인 불가 국가			
법안 확인 불가 국가 (12)		법안 폐지 국가 (3)	
유럽 지역: 몰타(Malta), 몰도바(Moldova), 우크라이나(Ukraine), 바티칸시국(Vatican City State, Holy See)		북미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남미 지역: 콜롬비아(Colombia)		남미 지역: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157) Marilyn J. Kretsinger, "Droit de Suite: The Artist's Right to a Resale Royalty,"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5, no. 4 (1992): 973.

158) Laws of Puerto Rico Unannotated Title 31. Civil Code, Subtitle 2. Property Ownership and Its Modifications, Part IV-A. Intellectual Property, §1401h (2012) (Puerto Rico), <https://www.lexisnexis.com/hottopics/lawsofpuertorico/>.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모리타니

Rico)

(Mauritania), 모리셔스(Mauritius), 모로코(Morocco),

아프리카 지역: 르완다(Rwanda)

아시아 지역: 라오스(Laos), 몽고(Mongolia)

중동 지역: 이라크(Iraq) 등

유럽 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40여 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었다. EU 국가들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급권을 자국법에 제정해왔기 때문이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영향과 베른협약 제14조의 3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럽 지역의 추급권 법안에는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¹⁵⁹⁾ 가입 국가들 간의 호혜주의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찾아볼 수 있는데, EU 국가들은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EEA에 가입해 있으며, EEA 국가들 중 몰타만 추급권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 다음으로 18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EEA과 비슷한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OAPI)’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OAPI는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에 대한 방기 협정 개정 협정(Agreement Revising the Bangui Agreement of March 2, 1977, on the Creation of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February 24, 1999)”

15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총 31개국: 27개국 EU States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K) + 1개국 EU State with Provisional Membership (Croatia) + 3개국 EFTA States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이라는 문서의 제3장 조항 10에 ‘재판매 로열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¹⁶⁰⁾ [표 9 참고] OAPI에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17개국이 가입해 있는데,¹⁶¹⁾ 이 협정에 실린 재판매 로열티 관련 내용 때문에 13개국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⁶²⁾

[표 9]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에 대한 방기 협정 개정 협정, 1999년 2월 24일

Chapter III. Rights Protected, Article 10. Resale Royalty

(1) Authors of graphic and three-dimensional works, and of manuscripts, shall have an inalienable right, regardless of any transfer of the original work,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s of any sale of such work or manuscript by public auction or through a dealer, whatever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ransaction was carried out by the latter. (2) The above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works of architecture or to works of applied art. (3) The conditions for exercising such right, as also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proceeds of sal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¹⁶³⁾

160)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greement Revising the Bangui Agreement of March 2, 1977, on the Creation of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February 24, 1999),” (1999): 129.

161)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OAPI) 가입국은 총 17개국으로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세네갈, 토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모리타니, 니제르 등이 가입해 있다.

162)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아프리카 18개국 중 알제리,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튀니지 5개국만 OAPI에 가입해 있지 않다.

163)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greement Revising the Bangui Agreement of March 2, 1977, on the Creation of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3. 추급권 도입 국가의 입법 유형별 비교 분석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82개국은 도입 연도나 입법 배경 및 입법 내용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미술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타저작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문제를 재고하며, 미술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추급권이 어느 법에 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 내에 추급권을 포함하고 있었다. 추급권이 ‘저작권법(Copyright Law)’ 내에 속한 경우가 17개국,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내에 속한 경우가 23개국, 그리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내에 속한 경우가 18개국,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내에 포함된 경우가 8개국,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내에 포함된 경우가 9개국이 있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저작권, 전통문화 및 관련권리법(Copyright, Folklore and Related Rights)’ 안에 포함된 사례가 2개국(차드, 토고)에서 발견되었으며, 아예 새로운 법률로 ‘재판매권리법(Resale Right Law)’만 따로 제정된 경우도 4개국(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인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민법(Civil Law)’ 안에 추급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국의 법안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법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만큼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

(February 24, 1999),” (1999): 129.

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정교한 법안을 갖추고 있는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안의 내용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편이었는데, 가령 오스트레일리아는 총 39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EU 비가입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단 2줄로 법안이 쓰여 있는 등 국가마다 법안의 정교함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추급권의 도입 시기도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1920년 프랑스이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는 2001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에 따른 2006년 1월 1일의 테드라인이 2010년 1월 1일로 (만약 필요하다면 2년의 추가 연장기간) 연기되었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2006년 1월 1일 법안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 2년 동안은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만 법안이 적용이 되었고, 이후 확대 적용되었다. 가장 최근에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2009년 12월 14일에, 파나마는 2012년 10월 10일에 각각 도입했다. 아래 장에서는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국의 입법 동향을 정리·분석하였다.

3.3.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Work Covered)

미술 분야 법률의 제정, 실행, 그리고 해석의 과정과 그 결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미술 사회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미술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정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철학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¹⁶⁴⁾ 국내의 경우에는 미술의 법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으나 현안을 그대로 따를 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

분히 수렴하여 근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외 각국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미술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었다. 가장 상세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였는데 법안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옮겨 보면, “그래픽미술이나 조형미술 원본 예를 들면 그림, 콜라쥬,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성”으로 미술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으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법안은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세부 조항으로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é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성은 12점의 복제본이 허용된다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 관계자가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 **[표 10 참고]**

[표 10]

프랑스의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세부 조항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

164) 이지수, “Money and Soul: Refining Considerations to Legalize Droit de Suit in Korea,” *정보법학* 17, no. 2 (2013): 157-158.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é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테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본이 허용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프랑스 이외에도 많았다. 작가의 동의에 의해 조수 등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나 판화 등과 같은 번호가 매겨지는 한정판 작품들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전체 82개국 중 총 34개국으로 41.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추급권 법안에는 미술전공자의 입장에서 고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현대미술 분야인 비디오미술(video artworks)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만한 내용들도 눈에 띄었는데, 니카라과의 경우 사진 제판법에 의한 오목판 인쇄로 잉크 층의 얇고 두꺼움에 따라 사진, 그림 따위의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라비어(gravures)’를, 아이슬란드의 경우 고무를 수채화 물감에 섞어 불투명 효과를 내는 물감을 뜻하는 ‘구아슈(gouache)’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는 ‘북아트’로도 불리며 문학과 미술이 결합한 형태의 책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작품을 총칭하는 ‘미술가들의 책(artists’ books/livre d’artiste)’이나 ‘바틱미술’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베냉, 카메룬, 콩고, 토고, 지부티, 가봉, 기니의 경우는 ‘모자이크’를 범위에 포함시켰고, 체코,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미술 장신구(jewellery art)’가 범위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사진’이나 ‘개인의 음악·영상 이미지’ 등은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건축’ 혹은 ‘건축 관련 파생 작품이나 상품들’, ‘구조물’, ‘응용미술’ 등을 제외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았다. 필리핀의 경우 프린트, 동판화, 판화, 응용미술 등 원판을 중심으로 복제를 진행하여 복제본을 얻을 수 있는 미술 장르는 전부 제외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빌딩 드로잉’, ‘빌딩 도면’이나 ‘모형’, ‘회로 레이아웃’,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 등은 제외 시켰다. 일반적으로 추급권이 적용되는 미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1) 건축, (2) 회로 레이아웃, (3) 빌딩 모형, (4) 기계·건물 등의 설계도 도면, (5) 구조물, (6) 미니어처, (7) 지도, (8) 지형도 등을 들 수 있다. [표 11 참고]

[표 11]

인정 혹은 비인정 되는 미술작품 범위	
작가나 그의 동의를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p>인정 3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르메니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p>
범위에서 제외 (기준은 국가별 상이)	<p>✓ 사진, 개인의 음악·영상 이미지</p> <p>✓ 응용미술</p> <p>✓ 프린트, 동판화, 판화 (일부 국가)</p> <p>✓ 건축(architecture), 건축 관련 파생 작품이나 상품들, 구조물(structures), 빌딩 드로잉, 설계도 도면(plans), 빌딩 모형(model for a building), 회로 레이아웃(circuit layout), 미니어처(miniatures), 지도(maps), 지형도(topography)</p>

추급권의 범위 중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 등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아예 범위에서 제한하는 경우와 폴란드처럼 특별 조항을 두어 따로 5%의 로얄티 비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있다. 이처럼 ‘원고 원본’을 추급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21개국¹⁶⁵⁾으로 이중 일부 국가는 ‘문학’이나 ‘음악 작품 원고 원본’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명한 작품의 초판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초판 등의 경우 경매에서 항상 고가에 낙찰이 되는데, 2014년 8월 24일 <이베이> 경매에서는 “액션코믹스 No.1(Action Comics No.1)”에서 1938년에 (단 10센트의 가격으로) 출판된 상태가 훌륭한 “슈퍼맨(Superman)” 초판이 역대 기록을 깨고 \$3,207,852(약 36억3,600만원)에 낙찰되기도 하였다.¹⁶⁶⁾ 이밖에도 국내에서는 2014년 한글날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하면서 한글에 관련된 물건들을 수집하였는데, 이 중 서울대 컴퓨터연구회 출신인 이찬진, 김택진 등 4명이 만 들어 1989년 4월 발매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자 2013년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아래아 한글1.0> 패키지의 초판[5.25인치 플로피디스크, 설명서, 박스]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였지만¹⁶⁷⁾ 결국 찾지 못해 2016년 6월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인직(1862-1916)이 쓴 우리나라 최초 신소설인

165) 리투아니아,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카메룬, 기니비사우,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인도, 필리핀, 멕시코

166) Alexander Forbes, “\$3.2 Million on eBay for Superman Comic Sets New Auction Record,” *Huffpost Arts & Culture*, August 27, 2014,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8/27/superman-action-comics-no_n_5719399.html.

167) 김윤종, “1989년 발매된 워드용 프로그램 201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 한글박물관 시중서 못 구해 수배,” *동아닷컴 뉴스*, January 21, 2015, <http://news.donga.com/3/all/20150121/69193916/1>.

<혈의 누(血-淚)>의 경우에도 재판본 경매 시작가가 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가에 거래되는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초판의 경우에도 추급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각국의 ‘저작권법’에 나온 미술작품 범위 관련 용어들을 추출하여 분류해 보면 각국의 미술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인정되는 작품의 범위를 이야기 할 때 (1) 미술을 광범위하게 지칭하거나¹⁶⁸⁾ (2) 세부 장르를 지칭하거나¹⁶⁹⁾ (3) 미술 기법이나¹⁷⁰⁾ (4) 미술 재료¹⁷¹⁾ 혹은 (5) 미술 전문 용어¹⁷²⁾를 자

168) (1) 미술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경우 응용 미술(applied art), 묘사 미술(descriptive art), 디자인 (design), 구상 미술(figurative art), 미술(fine art), 그래픽 미술(graphic art), 지적 작품(intellectual work), 그림(painting, pictorial work, pictures), 조형 미술(plastic art), 입체 미술(three-dimensional art), 시각 미술(visual art) 등으로 지칭하였다.

169) (2) 미술의 세부 장르를 제시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의인화(all kinds of personifications), 미술적 은, 금 [공예] 작품(artistic silver and gold works), 미술가들의 책(artists' books/livre d'artiste), 음악·영상 이미지, 음악·영상 작품(audiovisual images, audiovisual works, plastic art creation on audiovisual), 바틱 미술(batiks, batik art), 카툰, 코믹, 그래픽 코믹(cartoons, comics, graphic comic), 도자기 [공예] 미술 (ceramic, ceramic art), 점토, 미술적 점토 작품(clay, artistic works made of clay), 디지털 미술작품, 디지털 미디어(digital artworks, digital media), 드로잉(drawing), 에나멜 작품(enamel, enamel works, handmade enamel), 판화(engraving, various material by engravings), 동판화(etchings), 패션(fashion), 유리·금속 조형(glass and metal shaping), 유리제품, 유리 미술, 유리 오브제(glassware, glass art, glass objects), 수공예 오브제(handicraft objects), 육필 작품(handwritten works),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s), 설치(installations), 장신구 미술, 미술 장신구(jewellery art, fine art jewelry), 키네틱 미술 (kinetic art), 구리판화(koparstungu), 석판화(lithographs, lithography), 기념비 미술, 기념비적인 장식 미술(monumental art, monumental decorative ar), 다중 매체 미술작품(multimedia artwork), 사진, 사진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작품(photo, photographs, photography, photographic works, works

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미술의 범위는 넓고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술의 범위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해외의 경우는 미술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 받을 수 있는 미술의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created by a process analogous to photography, works made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works produced using techniques analogous to photography), 지형 관련 조형 작품(plastic works relative to geography), 자기(porcelain), 프린트(prints), 실용화를 위한 제작용품(products intended for practical use), 조각(sculpture, sculptures), 실크 프린트(silk print), 스케치(sketch, sketches), 무대 디자인(stage design), 태피스트리(tapestry, tapestries, handmade tapestries), 텍스타일(textile, textiles), 타이포그래픽 작품(typographic works, typewritten text), 비디오 미술작품(video artworks, video art piece), 위빙(weaving, weavings), 목각화(wood engravings), 목판화(woodcuts, wood cuttings), 풍경 작품(works of scenery), 자라비 미술(Zaraby art) 등으로 분류하였다.

170) (3) 특정 미술 기법을 포함하는 경우, 천육조, 천부조, 저부조, 박부조(bas-relief, bas-reliefs), 카빙(carving, carvings in high/low relief), 콜라주(collage, collages), 금박, 도금(gildings), 그라비어(gravures), 모자이크(mosaics), 장식 상감(ornamental inlay), 장식(ornamentation), 패턴(patterns)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었다.

171) (4) 미술 재료를 뜻하는 용어들도 간혹 등장했는데 아크릴(acrylic), 구아슈(gouache), 유화(oil painting), 파스텔(pastel), 템페라(tempera), 수채화(watercolor) 등의 용어가 법안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172) (5) 미술 전문 용어들은 자주 등장했는데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épreuves d'artiste), 에디션(edition), 미술가의 전체 작품(œuvre), 원판(planche), 복제화(reproductions) 등의 용어들을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3.3.2. 로얄티 비율 퍼센트 (Royalty Rate)

추급권의 로얄티 비율 산정 방식은 ① 차등비율(sliding scale), ② 균일비율(flat rate), ③ 자율비율(% share in the proceeds by decree), ④ 추가적인보상(additional compensation)으로 나뉘볼 수 있다. 또한 로얄티를 ① 재판매 가격 전체(gross resale price)를 두고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② 상승한 재판매 가격에서 이전 판매 가격을 빼서 그 증가분에 국한해 산정해야 되는지 등을 법안에 자세하게 제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재판매 로얄티를 작품 가격이 이전의 가격보다 올랐을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오른 비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는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판매 로얄티를 작품 가격이 이전의 가격보다 올랐을 경우가 아니라 재판매가 이루어졌을 시 재판매 가격에서 각국 법안이 정한 로얄티 비율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작품 가격이 떨어졌을 시를 일일이 추적하여 재판매 로얄티를 적용하지 않거나 작품가격이 이전 재판매 가격보다 상승했을 시 그 차액에서 계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추적하기 복잡한 문제이며, 실제로 작품 가격이 떨어져 재판매 로열티 납입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된 사례나 소송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처럼 추급권료를 산정할 때 판매가격의 증가분이 아니라 판매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¹⁷³⁾

해외 미술작품 가격 지수 중 미국의 S&P500 지수와 비교한 메이&모세스미술지수(Mei & Moses Art Index)를 살펴보면, 미술작품 가격은 재판매될 때마다 그 가치가 상승하며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S&P500 지수에 연동돼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유명 작가의 작품들은 작가의 사

173) 이재희, *미술경제학: 현대 미술시장의 이해* (서울: 탐북스, 2012), 270.

후 혹은 생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매 경매 때마다 가격이 갱신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 기자는 1973년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있었던 로버트 스컬과 로버트 라우센버그 사건 이후로 40년 후인 2012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11월에 열린 <소더비>와 <크리스티> 컨템포러리 미술 경매에서 \$787.3 million(약 8,849억 원)이 모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미술 시장은 단순한 ‘거품’을 넘어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recession-proof)’ 영역일지도 모른다고 제시하기도 했다.¹⁷⁴⁾ 2년 후인 2014년 11월에도 <소더비>는 컨템포러리 미술 경매에서 \$380.6 million(약 4,278억 원)을 모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으며,¹⁷⁵⁾ <크리스티>는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경매 기록인 \$691.6 million(약 7,773.6억 원)으로 또 다시 신기록을 세웠다.¹⁷⁶⁾ 2016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하락이 있었지만 <크리스티>는 \$694 million(약 7,800.6억 원), <소더비>는 \$4.1 billion(약 5조 2천억 원)의 컨템포러리 미술 경매 결과를 기록했다.¹⁷⁷⁾ 이 같은 이유로 각국의 법학자,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미술작품은 단일하고, 희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

174) William Cole, "Invitation to a Dialogue: An Art Market Bubbl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 2013,

<http://www.nytimes.com/2013/01/02/opinion/invitation-to-a-dialogue-an-art-market-bubble.html>.

175) Chris Michaud, "A \$105 Million Warhol Top Pick at Sotheby's Best-Ever \$380 Million Auction," *The Reuters*, November 14,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us-art-auction-idUSBRE9A604L20131114>.

176) Kathryn Tully, "The Most Expensive Art Ever Sold at Auction: Christie's Record Breaking Sale," *The Forbes*, November 13, 2013,

<https://www.forbes.com/sites/kathryntully/2013/11/13/the-most-expensive-art-ever-sold-at-auction-christies-record-breaking-sale/#5f3000655416>.

는 특징이 있어 작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법안에 작품 가격이 하락했을 시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작품 가격이 하락하여도 (depreciated) 추급권을 적용하고 있다.

추급권의 로열티 비율 중 ① 차등비율(sliding scale) 방식은 가격구간대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82개국 중 총 36개국이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차등비율은 다시 5가지 방식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Type A, B, C, D, E로 나누었다. **Type A**는 €50,000 이상 4%, €50,000 - €200,000 사이는 3%, €200,000 - €350,000 사이는 1%, €350,000 -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에는 0.25%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한 작품 당 재판매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2,500를 넘을 수 없다. Type A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총 14개국이 있다. 이 방식을 예를 들어 보면, 런던 <크리스티>에서 €600,000에 작품이 판매되면, €2,000(€50,000의 4%인 가격) + €4,500(€150,000의 3%인 가격) + €1,500(€150,000의 1%인 가격) + €750(€150,000의 0.5%인 가격) + €250(€100,000의 0.25%인 가격)을 더해서 원작자는 총 €9,000의 금액을 재판매 로열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판매 로열티는 DACS에서 제공하는 로열티 계산기(royalty calculators)로 계산 후 재검증해볼 수 있다.¹⁷⁷⁾

Type B는 €3,000 이상은 5%, €3,000 - €50,000 사이는 4%, €50,000 -

177) Scott Reyburn, "Auction Sales Down at Christie's, Sotheby's and Phillips, in a Challenging 2016," *The New York Times*, February 9, 2017,

<https://www.nytimes.com/2017/02/09/arts/christies-sothebys-phillips-2016-auction-sales.html>.

178) "ARR royalty calculator," [UK]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accessed July 11, 2016, <https://www.dacs.org.uk/for-art-market-professionals/arr-royalty-calculator.aspx>.

€200,000 사이는 3%, €200,000 - €350,000 사이는 1%, €350,000 -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한 작품 당 재판매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2,500를 넘을 수 없다. Type B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중 아이슬란드만 예외적으로 €3,000 이하의 작품 한정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 가격이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작가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매우 관대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Type C**는 €50,000 이상은 5%, €50,000 - €200,000 사이는 3%, €200,000 - €350,000 사이는 1%, €350,000 -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 역시 한 작품 당 재판매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2,500를 넘을 수 없다. Type C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이 중 폴란드의 경우 특별 조항이 있는데 문학이나 음악 작품의 원고에 따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삽입해 저술가의 초판본이나 음악 작품의 악보 원본 등의 재판매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Type D는 4%, 3%, 1%, 0.5%, 0.25% 요율을 구간 대 별로 유로화가 아닌 각국의 통화로 재계산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 작품 당 받을 수 있는 총 금액도 각국의 통화로 재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4개국인 Type D를 택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복잡한 계산 방식을 자체적으로 택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표 12 참고]** 가격대 구간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 금액을 더 합산해서 가져갈 수 있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로열티 비율 퍼센트, 조지아	
• 4%:	€500(약 26만원) - €100,000(약 5,125만원) 사이
• 3%:	€ 100,000 - €400,000(약 2억500만원) + €4,000(약 205만원)
• 1%:	€ 400,000 - €700,000(약 3억5,877만원) + €13,000(약 666만원)

-
- 0.5% of the €700,000 - €1,000,000(약 5억1,252만원) + €16,000(약 820만원)
 - 0.25% of the sum over €1,000,000 + €17,500(약 897만원)
-

Type E의 경우 자체적인 방식을 택한 경우인데 오스트리아와 기니비사우 총 2개국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작품 재판매 가격의 첫 번째 €50,000은 4%를 적용하며, 두 번째 €150,000에는 3%를 적용하고, 세 번째 €150,000에 대해서는 1%를 적용, 네 번째 €150,000에는 0.5%를 적용하며, 5번째 €150,000에는 0.25%를 적용하고, 이후 가격이 €150,000만큼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 0.25%씩 적용을 한 액수가 로열티에 더해진다. 처음의 €50,000를 제외한 €150,000 금액에 4%, 3%, 1%, 0.5% 비율로 차등을 두며, 그 이후 분에는 0.25%씩을 계속 적용해나가는 방식이다. 아래의 표는 차등비율(sliding scale) 방식 Type A, B, C, D, E와 각 국가별 채택하고 있는 모델을 정리한 표이다. **[표 13 참고]** Type A가 가장 많은 국가들(총 14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로열티 비율 퍼센트, ① 차등 비율(sliding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to €50,000 • 3% for the price from €50,000 - €200,000 • 1% for the price from €200,000 - €350,000
Type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for the price from €350,000 – €500,000 • 0.25% for the price exceeding €500,000 • maximum amounts may not exceed €12,500 per artwork
14개국: 몬테네그로, 영국,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체코, 키프로스,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to €3,000 • 4% for €3,000 – €50,000 • 3% for €50,000 – €200,000 • 1% for €200,000 – €350,000
Type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for €350,000 – €500,000 • 0.25% for the price exceeding €500,000 • maximum amounts may not exceed €12,500 per artwork <p>6개국: 아이슬란드(10% of €3,000;),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up to €50,000 • 3% for €50,000 – €200,000 • 1% for €200,000 - €350,000
Typ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for €350,000 – €500,000 • 0.25% for the price exceeding €500,000 • maximum amounts may not exceed €12,500 per artwork <p>10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5% for the manuscripts of literary and musical works),라트비아, 헝가리, 그리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크로아티아</p>
Type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3% 1% 0.5% 0.25%을 각국의 통화로 범위를 정해서 적용 • 한 작품 당 받을 수 있는 총 금액도 각국의 통화로 적용 <p>4개국: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p>
Type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of the first €50,000, 3% for the other €150,000, 1% for the other €150,000, • 0.5% for the other €150,000, 0.25% for all other • 10% on sales of up to 10,000\$(약 만원), 20% for sales above that figure <p>2개국: 오스트리아, 기니비사우</p>

② 균일비율(flat rate)은 작품 재판매가에 균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로얄티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균일비율은 다시 2%, 3%, 5%, 10%로 나뉜다. 82개국 중에 총 38개국이 이 균일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2%의 균일비율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총 3개국이며, 3%의 균일비율을 도입한 국가는 총 4개국이다. 페루의 경우 3%를 적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비율의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5%의 균일비율을 도입한 국가는 총 27개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판매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적어도 20% 이상 상승했을 시만 적용이 가능하다. 에콰도르의 경우에도 협상을 통해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작품 재판매 가격에 차이가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작품 가치의 상승(any gain in value)’이 꼭 전제되어야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높은 10%의 균일비율을 도입한 국가는 총 4개국이다. 터키의 경우 ‘이전 판매 가격과 상당한 차이(substantial disparity between such sale price and the previous sale price)’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 저작권청(India Copyright Board)은 각 사례마다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균일비율(flat rate) 방식 2%, 3%, 5%, 10%와 각 국가별 채택하고 있는 모델을 정리한 표이다. 5%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27개국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참고]

[표 14]

로얄티 비율 퍼센트, ② 균일비율(flat rate)	
2%	3개국: 도미니카 공화국, 엘 살바도르, 베네수엘라
3%	4개국: 모나코, 코모로, 페루, 우루과이
5%	27개국: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알제리, 카메룬, 지부티, 가봉, 기니,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토고, 튀니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0% 4개국: 인도, 과테말라, 차드, 터키

③ 자율비율(% share in the proceeds by decree)의 경우 법안에 정확하게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8개국을 뜻한다. 이 국가들의 경우 법안에 재판매시 판매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비율을 정하거나 국가에서 비율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5 참고]** ④ 추가적인 보상(additional compensation)의 경우에는 재판매 로열티 이외에 저작권자가 요청 시 일부 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기니비사우의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평가에는 작가의 작품 전체가 고려된다. 판사는 공정한 의사 결정에 따라 보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표 15 참고]**

[표 15]

로열티 비율 퍼센트, ③ 자율비율(% share in the proceeds by decree)

8개국: 러시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콩고, 코트디부아르, 말리, 나이지리아, 멕시코

로열티 비율 퍼센트, ④ 추가적인 보상(additional compensation)

2개국: 조지아, 기니비사우

마지막으로 로열티 비율을 산정할 때, 재판매 작품 가격에 각종 부가가치세, 물품·용역소비세 혹은 문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 세금 등을 원천 징수해서 ① **세후(after-tax)** 가격에서 계산할지, 아니면 ② **세전(pre-tax)** 가격에서 계산할지에 대한 고민은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추급권 관련 법안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할 것을 명시한 국가가 34개국으로, 세후금액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2개국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고]**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가에 물품·용역소비세를 더한 가격에서 재판매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전 금액(판매가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재판매 로열티를 계산하지만, 각 국의 **적용 판매처**(딜러 판매, 기관 판매, 경매 등)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갤러리의 경우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에서 재판매 로열티를 계산하기도 하고, 경매전문회사의 경우에는 해머 프라이스에서 계산하는 식이다.

[표 16]

로열티 비율 퍼센트, 세전 혹은 세후에서 적용	
세전 금액으로 계산(calculated pre-tax)	세후 금액으로 계산 (calculated after tax)
3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조지아, 모나코, 노르웨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모로, 가봉	
2개국: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3.3. 최저 판매가 기준 (Threshold Value)

추급권의 최저 판매가 기준은 낮게 잡으면 더 많은 미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높게 잡을수록 소수의 작품 가격이 고가에 형성된 미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을 갖는다. 추급권의 초기 취지인 예술인 복지 측면에서 보자면 낮은 최저 판매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많은 미술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달성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법의 운용에 있어 과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최저 판매가 기준을 설정한 국가들도 있다. 최저 판매가 기준은 ① 1-10만원, ② 10-50만원, ③ 50-100만원,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⑦ 400-5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82개국 중 38개국만 설정하고 있었다. 각 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저 판매가를 원화 기준으로 재분배해 보면 구간별로 가장 낮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폴란드로 한화 1만3천원(€100) 가량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반면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리히텐슈타인으로 한화 552만원(CHF 4,7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각 구간별로 1-10만원 사이 7개국, 10-50만원 사이 9개국, 50-100만원 사이 5개국, 100-200만원 사이 6개국, 200-300만원 사이 1개국, 300-400만원 사이 9개국, 400-500만원 사이 1개국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중간 값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1,000(약 88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최저 판매가 기준 설정은 각 국에서 재판매에 해당되는 작품 가격대 분포도를 연구해서 적용한 사례가 많다. [표 17 참고]

[표 17]

최저 판매가 기준	
① 1-10만원	7개국: 폴란드 €100(약 1만3천원), 코모로 CF5000(약 13,100원), 헝가리 €16/HUF 5,000(약 2만1천원), 알바니아 Leks 5000(약 5만원), 에스토니아 €64(약 8만원), 크로아티아 €500(약 8만5천원), 차드 CFA50,000 (약 98,300원)
	9개국: 인도 ₹10,000 (약 17만원), 조지아 ₾500 (약 26만원), 스웨덴 €231(약 29만원), 핀란드 €255(약 32만원), 불가리아 €300(약 39만원), 루마니아 €300(약 39만원), 마케도니아 €300(약

	39만원), 덴마크 €300(약 39만원), 리투아니아 €300(약 39만원)
③ 50-100만원	5개국: 독일 €400(약 52만원), 아르메니아 ₴ 250,000(약 60만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KM1,000(약 66만원), 오스트레일리아 \$1,000(약 88만원), 프랑스 €750(약 97만원)
④ 100-200만원	6개국: 세르비아 PCД 100,000(약 106만원), 슬로바키아 €1,000(약 130만원), 몬테네그로 €1,000(약 130만원), 영국 €1,000(약 130만원), 스페인 €1,200(약 156만원), 체코 €1,500(약 189만원)
⑤ 200-300만원	1개국: 벨기에 €2,000(약 260만원)
⑥ 300-400만원	9개국: 오스트리아 €2,500(약 325만원), 키프로스 €3,000(약 390만원), 아일랜드 €3,000(약 390만원), 이탈리아 €3,000(약 390만원), 네덜란드 €3,000(약 390만원), 포르투갈 €3,000(약 390만원), 룩셈부르크 €3,000(약 390만원), 아이슬란드 €3,000(약 390만원), 노르웨이 €3,000(약 390만원)
⑦ 400-500만원	1개국: 리히텐슈타인 CHF 4,700(약 552만원)

3.3.4. 적용 기한 (Duration)

추급권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 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추급권의 적용기간은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① 50년 동안, ② 60년 동안, ③ 70년 동안, ④ 75년 동안, ⑤ 80년 동안, ⑥ 99년 동안, ⑦ 100년 동안 등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①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50년 동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를 포함 19개국이다. ②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60년 동안을 적용

하고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인도 2개국이며, ③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70년 동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EU 27개국과 EU 비가입국가인 알바니아 등을 포함한 총 56개국이다. ④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75년 동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2개국이며, ⑤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80년 동안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기니 1개국, ⑥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99년 동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코트디부아르 1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100년을 보호하고 있는 멕시코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동 저작물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공동 저작물일 경우에는 마지막 생존 저자의 사후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작가 사망 후 다음해 1월부터 계산하는 국가와 사망일로부터 계산하는 국가가 있다. 온두라스처럼 국가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적용 기한이 더 길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국가도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 2013년도 의회에 저작권법 보호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자고 했으나 기각됐다는 기록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특별 조항이 있는데 저자가 러시아 조국 해방 전쟁(The Great Patriotic War, 1941-1945)에 참여했었을 경우 적용 기한을 4년 연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표 18 참고]

[표 18]

적용 기한	
19개국: 벨라루스, 모나코, 알제리, 카메룬, 코모로, 콩고, 지부티, 가봉,	
① 50년 동안	기니비사우, 토고, 튀니지,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 살바도르, 우루과이,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② 60년 동안	2개국: 베네수엘라와 인도

	56개국: EU 27개국과 EU 비가입국가인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러시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마다가스카르,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㉓ 70년 동안	
㉔ 75년 동안	2개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㉕ 80년 동안	1개국: 기니
㉖ 99년 동안	1개국: 코트디부아르
㉗ 100년 동안	1개국: 멕시코

3.3.5. 적용 판매 경로 (Sales Covered)

관련법에 나와 있는 판매 경로를 종합해본 결과 ① 직접 판매, ② 업체를 통한 판매, ③ 갤러리나 뮤지엄 컬렉션의 판매, ④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⑤ 경매를 통한 판매, ⑥ 정부 컬렉션(건축물미술작품 포함)의 판매, ⑦ 중개인을 통한 판매로 나뉘볼 수 있었다. [표 19 참고] ① 직접 판매의 경우 작가에게서 직접 혹은 (비전문가에 속하는) 개인 컬렉터에게 직거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② 업체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장, 상점, 쇼룸, 매장 내 혹은 온라인 매장, 거래 영업체, 미술 살롱, 골동품 상점, 상업적인 영업체 등에 방문해 구입하는 경로를 뜻한다. ③ 갤러리나 뮤지엄 컬렉션의 판매의 경우 갤러리, 뮤지엄에서 소유자 혹은 운영자를 통해 구입하는 경로이다. ④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는 일회성 혹은 매해 열리는 미술 쇼, 미술 전시회, 미술 박람회 등에 방문해 구입하는 경우이다. ⑤ 경매를 통한 판매는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공개 경매, 경매 전문 회사 등에서 전문 경매인을 통해 구입하는 경로이다.

⑥ 정부 컬렉션(건축물미술작품 포함)의 판매는 정부미술은행이나 공공미술 혹은 기타 정부 컬렉션을 담당자를 통해 구입하는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⑦ 중개인을 통한 판매는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해외에서는 미술시장 전문가에 속하는 아트 딜러, 판매자, 거래상, 매각자, 판매 에이전트, 중개인, 판매 대리인, 무역상, 브로커, 대리인, 중재인 등을 고용해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경로를 뜻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작품을 비영리 공공 뮤지엄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일 시 추급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비영리 공공 뮤지엄이 개인에게 구입했을 시 추급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특이하게 미술 경매 자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 하다. 또한 라트비아의 경우 유일하게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로도 포함시키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개인적인 판매는 제외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직접 판매는 제외하고 있으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가 이루어진 날짜 기준으로 3년이 채 안되었거나 작품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하는 홍보성 판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표 19]

적용 판매 경로	
① 직접 판매	작가에게 직접 혹은 (비전문가에 속하는) 개인 컬렉터에게서 직거래
② 업체를 통한 판매	판매장, 상점, 소품, 매장 내 혹은 온라인 매장, 거래 업체, 미술 살롱, 골동품 상점, 상업적인 영업체 등에 방문해 구입
③ 갤러리나 뮤지엄 컬렉션	갤러리, 뮤지엄에서 소유자 혹은 운영자를 통해 구입

④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일회성 혹은 매해 열리는 미술 쇼, 미술 전시회, 미술 박람회 등에 방문해 구입
⑤ 경매를 통한 판매	공개 경매, 경매 전문 회사 등에서 전문 경매인을 통해 구입
⑥ 정부 컬렉션 (건축물미술작품 포함)	공공미술이나 정부 컬렉션을 담당자를 통해 구입
⑦ 중개인을 통한 판매	미술시장전문가에 속하는 아트 딜러, 판매자, 거래상, 매각자, 판매 에이전트, 중개인, 판매 대리인, 무역상, 브로커, 대리인, 중재인 등을 고용해 구입

정부가 추급권을 저작권법 내에 도입할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 경매 이외의 미술 시장 거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¹⁷⁹⁾ 이와 같은 정보의 부족은 국내외를 막론한 미술 시장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급권 적용 판매 경로를 고려할 때 직접 판매 등 비공개 판매나 인터넷 판매 등에서 추급권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작품이 매입이 아니라 ‘증여’일 경우나, 작품이 ‘기부’된 경우, 작가 본인이 본인 작품을 ‘재구매’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매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예를 들면 건축물 미술작품처럼 작품이 건물과 함께 지어졌는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등에 대한 해답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아르헨티나시각미술가협회(Asociación de Artistas Visuales Argentinos; SAVA)는 미술시장전문가 외에도 갤러리, 공개 경매, 개인 경매, 온라인 등 다양한 상업 채널의 개입이나 심지어 인터넷 판

179) Nobuko Kawashima, "The Artist's Resale Right Revisited: A New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4, no. 3 (2008): 301.

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매까지 추급권을 확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관련법에 나와 있는 판매 경로는 각 국에서 매우 다양한 사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 관련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재판매 로얄티 ‘적용 판매 경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다.¹⁸⁰⁾ 딜러나 브로커 등이 활발하지 않은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생소한 판매 경로들이 있으므로 각국의 미술 시장에서 인정하는 판매 경로를 연구하고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시장전문가(art market professional)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역할을 하는 상인들을 어떻게 인정할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180) 법안에서 등장한 용어들을 종합해 보면, 에이전트, 대리인(agents, commercial agent, sales agent), 골동품 상점(antique shops), 미술 딜러(art dealer, dealers, established dealer), 갤러리(art gallery, galleries, gallery of fine art, gallery of visual art), 미술시장전문가(art market professional), 미술 살롱(art salon), 미술 쇼, 미술 전시회, 미술 박람회(art show, art exhibitions, art selling exhibitions), 미술 거래(art trade), 경매, 경매 전문 회사(auction, auction house, art auctions), 경매인(auctioneer), 브로커, 브로커 활동(broker, brokerage activities), 구매자(buyer), 상업적인 영업체, 상업적인 재판매(commercial establishments, commercial resale), 매장 내 혹은 온라인 매장(in-store or online store), 중개인(intermediaries, commercial intermediary, professional intermediary), 중재인(mediator), 무역상(merchant), 뮤지엄 소유자 혹은 운영자(museum owner or operator), 직접 판매, 개인 판매(private person sales, private sales), 공개 경매(public auction), 구매자(purchaser), 판매 에이전트, 판매 대리인(sales agent), 판매장(salesrooms), 판매자(sellers, sales person), 상점(shop), 쇼룸(showrooms), 거래 영업체(trade establishment, commercial establishment), 거래상(trader, professional trader), 매도인(vendor)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3.3.6. 적용 대상 (Entitled)

추급권 수령권자의 인적범위의 경우 ① 작가 본인에만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 ② 작가와 그의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③ 작가와 그의 상속인, 후계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수유자, 양수인까지 수령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표 20 참고] 앞서 언급한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나 ‘적용 판매 경로’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적용 대상’을 나타내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¹⁸¹⁾ 국내의 경우 ‘상속인’의 법적 정의는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며, ‘후계자’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재산 상속권을 가진 이를 의미한다. ‘수혜자’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수유자’는 유언에 의하여 유증(遺贈)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자연인 외에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한자를 뜻한다. 이처럼 추급권 수령권자의 인적범위는 각국의 법적 정의와 범위 내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표 20]

적용 대상

181) 예를 들면 ‘저작권 보유자(copyright holder)’, ‘상속인(heirs)’, ‘같은 혈족의 상속인(consanguineous heirs)’,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상속인(universal and unconditional heir)’, ‘수혜자(beneficiary, beneficiaries)’, ‘수유자(legatees)’, ‘수유자 및 양수인(legatees and assigns)’, ‘수유자 및 자격이 있는 후계자(legatees and successors in title)’, ‘후계자(successor)’, ‘자격이 있는 후계자(successor in title)’, ‘법적 후계자(legal successor)’, ‘양수인(assignees)’, ‘계승권에 의한 양수인(assignees under succession)’, ‘유언 집행자·법정 대리인(representatives)’ 외에도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작가 본인에만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

2개국: 브라질(unless in the marriage contract), 칠레

63개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② 작가와 그의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러시아, 알제리, 베냉, 카메룬, 차드, 코모로, 지부티,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나이지리아, 토고, 튀니지,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③ 작가와 그의 상속인,

후계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수유자, 양수인까지

수령권을 인정을 하는 경우

17개국: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부르키나파소,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비사우, 세네갈 볼리비아,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밖에도 추급권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들 [(1) 호혜주의, (2) 외국인 거주자, (3) EU, EEA,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회원국 출신 작가, (4) 유언의 자유, (5) 용익권 (usufruct/usufruit), (6) 예술 경력이 국가에 기여, (7) 상속자가 없음]이 각국의 법안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규정된다. **(1) 호혜주의 인정:** 적용 대상에 호혜주의 원칙하에 외국 국적의 작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20개국¹⁸²⁾이며,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EU 국가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호혜주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2) 외국인 거주자 인정:** 적용 대상에 해당 국가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나 혹은 상당 기간 거주한 외국인 저작자를 인정하는 국가는 13개국¹⁸³⁾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혜주의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은 ‘거주자시험(Residency Test)’과 유언에 의한 처분의 경우 개인, 자선 단체, 혹은 커뮤니티 단체가 ‘상속시험(Succession Test)’을 통과해야 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3) EU, EEA, EFTA 회원국 출신 작가 인정: 법안에 EEA 회원국 출신에게 추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¹⁸⁴⁾으로 덴마크의 경우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EEA 회원국에 상당 기간 거주한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저작자의 출신 국가가 EU 소속이거나,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네덜란드에 상시 거주하는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며, 조항 43g(2)에 의거해 만약 저작권자가 EU나 EEA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도 저작자의 출신 국가에서 EU 출신 저작권자에게 추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호혜주의 원칙하에 수령권자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재판매 당시 폴란드 영토에 영주하는 장소가 있거나 EFTA 국가 출신인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작가의 국적이 EU 회원국 출신이거나 EFTA 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출신의 저작권자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182)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지부티, 오스트레일리아

183)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오스트레일리아

184)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4) 유언의 자유 인정: 추급권은 일반적으로 혈족 관계에 있는 직계 가족이나 법적 상속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문에서 유언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가령 김영림은 국내에서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를 규율할 때 저작자의 유언의 자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⁸⁵⁾ 해외 법안에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3개국은 스웨덴,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이며,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수유자를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17개국¹⁸⁶⁾이었다. 반면 프랑스와 모나코 등은 법안에서 ‘수유자’를 배제시킴(excluding)을 명하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프랑스가 자국 저작권법 제L123-7조에 의거해 발생한 재판매 로알티를 ‘유언에 의한 수유자(스페인 정부)를 배제한 채 달리의 5명의 상속인들에게만 지급한 데서부터 발생한 살바도르 달리 소송도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할지에 대한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다. 원칙적으로 추급권의 입법 목적과 ‘양도 불가능성’에 입각하면 추급권은 상속을 통해서만 보장되어야 하지만 유언의 자유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용익권을 인정: 국내에서는 생소한 용익권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4개국¹⁸⁷⁾이 용익권 관련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는 생존 배우자 재혼 시 권리 행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법안에 기재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배우자(spouse)’ 혹은 ‘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 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는 국가는 7개국¹⁸⁸⁾ 등이다. **(6) 예술 경력이 국가에 기여했**

185) 김영림,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 *국제법무* 6, no. 2 (2014): 130.

186) 부르키나파소,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마다가스카르, 말리, 세네갈, 볼리비아,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87) 프랑스,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말리

다고 인정: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특별 조항으로, 만약 저작권자의 ‘예술 경력 (artistic career)’이 프랑스 미술에 기여 했고 적어도 5년 동안 (연속 5년이 아니어도) 프랑스에 상시 거주했다면 호혜주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도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자의 상속자에게도 해당된다.

(7) 상속자가 없을 시: 이탈리아의 경우, 만약 작가가 6촌 이내에 상속자가 없다면 추급권료는 이탈리아 화가·조각가·음악가·저술가·극작가 연금 및 사회보장기금 국립에이전시(L’Ente nazionale di assistenza e previdenza per i pittori e gli scultori, i musicisti, gli scrittori e gli autori drammatici; ENAP)에 귀속되어 화가, 조각가, 뮤지션, 작가, 극작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손을 남기기 않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를 둘러싸고 그의 상속인이었던 조카가 사망하자 브라크의 5촌과 6촌에 해당하는 사촌이 조카의 미망인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다. 그들은 1957년 버전의 프랑스 추급권 제42조에 의거해 사망한 조카의 미망인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1982년도의 공공경매에서 발생한 두 작품의 재판매 로열티를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1989년도 프랑스 최고사법재판소인 파기원은 이에 가히 획기적으로 작가와 혈족관계 요건을 폐지하였고, 이는 상속인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추급권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작가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많은 경우로 추급권료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해당 추급권 추심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3.3.7. 로열티 추심기관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188) 덴마크, 프랑스, 모나코, 말리,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추급권료를 추심하는 기관은 ①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과 ② 다중의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③ 저작자가 직접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영국에서는 의무적인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 독점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다중 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경쟁 요소를 도입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에 비용과 재정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이 올라가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영국은 현재 디자인미술가저작권단체(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DACS)와 미술가들의징수단체(Artists' Collecting Society; ACS) 두 곳의 기관에서 추급권을 담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19개국의 추급권 추심기관 리스트를 정리한 표이다. [표 21 참고]

[표 21]

국가 이름 (19)	로열티 추심기관 리스트
<p>* 덴마크 (Denmark) COPY-DAN Billeder</p>	<p>덴마크 시각미술권리보유자기구(Copy-Dan Billeder/Copy-Dan Visual Rights; COPY-DAN) 웹사이트: http://visda.dk/foelgeret/ (재판대 관련 우편 접수 가능)</p>
<p>단일 플랫폼 * 핀란드 (Finland) KUVASTO</p>	<p>핀란드 시각미술가분야저작권단체·카탈로그협회(Visuaalisen alan taiteilijoiden tekijänoikeusyhdistys Kuvasto ry:n/Visual Artists in the Field of Copyright Society Catalogue Association; KUVASTO) 웹사이트: http://kuvasto.fi/jalleenmyyntikorvaus/ 추급권 전용 웹사이트: https://kuvasto.gruppo.fi/e-asiointi/index.php?page=jalleenmyyntikorvaus</p>

(재판매 관련 온라인 등록 기능)

프랑스 (France)	프랑스 그래픽조형미술작가단체(Société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Society of Authors in the Graphic and Plastic Arts; ADAGP)
	ADAGP
	웹사이트: http://www.adagp.fr/en/author-right/property-rights/resale-right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독일 (Germany)	독일 시각미술가징수단체(Verwertungsgesellschaft Bildender Künstler/Painter Collecting Society; VBK) *단체이름변경
	웹사이트:
	VBK http://www.bildkunst.de/en/copyright/resale-right/resale-right-what-is-it.html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시각미술권리기구(Irish Visual Artists Rights Organization; IVARO)
	IVARO
	웹사이트: http://ivaro.ie/artists-resale-right/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작가·출판업자단체(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The Italian Society of Authors and Publishers; SIAE)
	웹사이트:
	SIAE https://www.siae.it/en/online-services-term/resale-right-declaration (재판매 관련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시각미술가저작권징수단체(de auteursrechtenorganisatie voor visuele makers in Nederland/The Collecting Society for Visual Artists in the Netherlands; Pictoright)
	PICTORIGHT
	웹사이트: http://www.pictoright.nl/english/ (재판매 관련 우편 접수 가능)

<hr/>	
	폴란드 시각미술가협회(Association of Polish Visual Artists; ZPAP)
폴란드	웹사이트:
(Poland)	http://www.zpap.org.pl/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6
ZPAP	6%3Adroit-de-suite-&catid=80%3Adla-tworcow&Itemid=216&lang=pl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hr/>	
루마니아	루마니아 시각미술분야의저작권징수단체(Societatea de Gestiune
(Romania)	Colectivă a Drepturilor de Autor în domeniul Artelor Vizuale/Copyright
VISARTA	Collecting Societies in the Field of Visual Arts; VISARTA)
	웹사이트: http://www.visarta.ro/suita.html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hr/>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작가단체(autorská spoločnosť/Society of Authors; LITA)
(Slovakia)	웹사이트: http://www.lita.sk/droit-de-suite/ (재판매 관련 이메일 접수 가능)
LITA	
<hr/>	
스페인	스페인 조형미술가관리시각단체(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Spain)	Plásticos/Visual Management Entity of Plastic Artists; VEGAP)
VEGAP	웹사이트: http://www.vegap.es/inicio.aspx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hr/>	
* 스웨덴	스웨덴 시각미술저작권단체(Bildkonst Upphovsrätt i Sverige/Visual Arts
(Sweden)	Copyright Society in Sweden; BUS)
BUS	웹사이트: http://www.bildupphovsratt.se/blanketter (재판매 관련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hr/>	
조지아	조지아 저작권협회(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საავტორო უფლებათა
(Georgia)	ასოციაცია/Georgian Copyright Association; GCA)
GCA	웹사이트: http://www.gca.ge/index.php?cid=&lang=geo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hr/>	

		노르웨이 (Norway)	노르웨이 시각예술인저작권단체(Billedkunst Opphavsrett i Norge/Norwegian Visual Artists Copyright Society; BONO)
		BONO	웹사이트: http://www.bono.no/vare_tjenester/folgerett_introduksjon/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러시아 (Russia)	러시아 시각미술작품작가지적재산권(Управис/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uthors of Visual Arts Works; UPRAVIS)
		UPRAVIS	웹사이트: http://www.upravis.ru/payers/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브라질 (Brazil)	브라질 시각작가권리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os Direitos de Autores Visuais/Brazilian Association of Visual Rights of Authors; AUTVIS)
		AUTVIS	웹사이트: https://autvis.org.br/cadastro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
		*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 에이전시 법인(Australia Copyright Agency Limited; CAL)
		CAL	웹사이트: http://www.resaleroyalty.org.au/ (재판매 관련 온라인 등록 기능)
다중 플랫폼		* 벨기에 (Belgium)	SABAM: 벨기에 작가단체(Société d'Auteurs Belge/Belgian Society of Authors; SABAM)
		SABAM +	SOFAM: 벨기에 멀티미디어·시각미술작가단체(Société Multimédia des Auteurs des Arts Visuels/Multimedia Visual Arts Authors' Society;
		SOFAM	SOFAM)
		(eRR: 단일 플랫폼)	추급권 전용 웹사이트: https://resalright.be/pls/apex/f?p=20000:1:0::NO (재판매 관련 온라인 등록 기능)
		*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디자인미술가저작권단체(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DACS)

	웹사이트: http://artistscollectingsociety.org/ (재판매 관련 온라인 등록 기능)
ACS	영국 미술가들의징수단체(Artists' Collecting Society; ACS)
DACS	웹사이트: https://www.dacs.org.uk/for-artists/artists-resale-right (재판매 관련 온라인 등록 기능)

3.3.8. 로열티 지급 방식 (Royalty Distribution Method)

재판매 권리가 미술시장전문가들의 일상 환경으로 통합된 국가들에서는 많은 관련 기관들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추급권 추심 및 로열티 지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1) 먼저 재판매가 있었음이 통지·고지되고, (2) 재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하고, (3) 관련 고지서가 송부되고, (4) 재판매 로열티에 해당되는 몫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추심 기관이 금액을 수령하면 그것을 다시 예술가들에게 재판매 로열티로 분배하는데, 이때 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은 분배를 수행하기 위해 예술가 본인 혹은 상속인들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위한 온라인 직접 등록 기능, 검색 가능한 예술가 데이터베이스, 로열티 계산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추급권료 분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로열티 지급을 용이하게 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기반이 된다.

로열티 지급 방식은 재판매 시 발생한 로열티를 모아두었다가 ① 매달 지급하는 방식, ② 일 년에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③ 분기마다 한 번씩 일 년에 4번 지급하는 방식, ④ 일 년에 1번 지급하는 방식, ⑤ 매번 작품이 팔릴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벨기에의 경우, 재판매 후 1달 안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2달 안에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벨기에의 추급권 추심기관인 SABAM이 재판매 후 로얄티 지불 요청 청구서를 발행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 중 한 곳인 DACS는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ACS는 4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 COPY-DAN Billeder의 경우 분기마다 한번씩 일 년에 4번 지급하는 방식(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2월 28일)을 따르고 있다. 스웨덴 BUS에서는 연 3회로 나누어 추급권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추급권료는 3월 1일에, 1월 1일 - 4월 30일 동안 발생한 추급권료는 6월 1일에, 5월 1일 - 9월 30일 동안 발생한 추급권료는 11월 1일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 VG Bild-Kunst의 경우 추급권료는 일 년에 한번 12월에 배분된다. 슬로바키아 LITA의 경우에도 일 년에 한번 추급권 로얄티를 지급한다. [표 22 참고]

[표 22]

로얄티 지급 방식	
① 매달 지급하는 방식	영국의 DACS
② 일 년에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스웨덴 BUS
③ 분기마다 한 번씩 일 년에 4번 지급하는 방식	덴마크 COPY-DAN Billeder
④ 일 년에 1번 지급하는 방식	독일 VG Bild-Kunst 슬로바키아 LITA
⑤ 매번 작품이 팔릴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	벨기에 SABAM + SOFAM

3.3.9. 로얄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Administration & Management Charge for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일반적으로 재판매 로열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할당해 걷어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 중 한 곳인 DACS에서는 재판매 로열티의 15%를, ACS의 경우에도 15%를 걷고 있다. 또한 작가가 재판매 로열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 혹은 해당 기관에 귀속되거나 문화·예술의 발전 혹은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대부분 10%에서 20% 내에서 책정되고 있다. [표 23 참고]

[표 23]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10%	독일 VG Bild-Kunst
15%	영국 DACS와 영국ACS 오스트레일리아 CAL
20%	프랑스 ADAGP 스웨덴 BUS

3.3.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전체 82개국 중 61개국이 저작권법 내에 관련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혹은 추급권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처벌’의 경우 징역형(sentence), 구류(custody/detention), 금고(imprisonment/confinement), 벌금(fine), 벌칙(penalty), 손해 배상(financial monetary compensation) 등 다양한 민·형사상 처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총 19개국이며, 추급권 관련 통지·고지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정보청구권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추심기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하는 국가는 총 13개국이었다. 이 중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국(불가리아, 프랑스, 세르비아)으로, 이들 국가가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나머지 32여 개국은 저작권법 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각 국의 저작권법 내에 삽입되어 있었는데, 저작권자들은 각국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확립된 절차대로 법원에 요청해 권리를 찾고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민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연방 법원 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 등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29개국의 경우에는 추급권을 위한 특별 처벌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 24 참고]

[표 24]

민·형사상 처벌 규정 존재유무	
(1) 저작권법 내에 관련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32개국: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카메룬,
	콩고, 지부티,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터키, 멕시코
(2) 추급권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29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토고, 칠레,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A.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	19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토고, 칠레,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B. 추급권 관련 통지·고지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정보청구권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추심기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 규정	13개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노르웨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C. 둘 다에 해당	3개국: 불가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재판매 로얄티를 보상하는 것과 추급권료 불납 시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나뉘질 수 있다. ① 먼저 재판매 로얄티 보상은 로얄티 총액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콰도르의 조항 304는 저작권 침해자는 권리보유자가 받았어야 할 재판매 로얄티 총 액수의 3배에서 5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토고의 경우에도 조항 91에 의거 추급권 위반 시, 구매자, 판매자, 공공 경매 책임자 등은 재판매 로얄티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행하라고 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베냉은 조항 110

과 113에, 부르키나파소는 조항 104에, 차드는 조항 130에, 코모로는 조항 76에, 코트디부아르는 조항 74에, 기니는 조항 54에 의거 추급권 침해 시 관련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두 번째 규정은 추급권료 불납 시 벌금형 선고이다. 말리는 조항 147 f)와 148에 의거 재판매 로알티 불납 시 관련 기관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조항 217에 의거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가 재판매 후 30일 이내 재판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조항 97(12)에 의거 2달 안에 재판매 로알티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의 경우 유일하게 추급권 위반 시 벌금 액수에 대해 상세하게 법안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조항 172(3)에 의거 €1,034에서 €5,165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 조항 139에 의거 추급권 침해 시 저작권법 위배로 간주되어 RON 3,000 RON 30,000 사이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조항 115에 의거 추급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③ 세 번째 규정은 추급권 추심기관이나 관계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지 혹은 통지 의무 불이행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조항 XV.110에 의거, 덴마크의 경우 조항 76 (1) (iv)에 의거, 핀란드의 경우 조항 261에 의거, 슬로베니아의 경우 조항 185 (1) 3에 의거해 정보제공 불응 시 처벌이 이루어지며, 노르웨이의 경우 54 e)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조항 217에 의거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가 재판매 후 30일 이내 해당 작가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 불가리아에서는 조항 97(12)에 의거 원저작자에게 2달 안에 재판매 관련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아니지만 조항 8(3)에 의거 작가가 재판매 관련자에게 재판매 로알티 지급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90일 안에 수행을 못할 시 작가가 고등법원에 법원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네 번째 규정은 형사처벌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추급권 위배 시 조항 172(3)에 의거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폴란드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82개국 중 가장 세부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경우 조항 r122-12에 의거 재판매 로알티 지불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조항 r122-9(2)를 위반 해당 저작권자에게 재판매 로알티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조항 r122-9(3)에 의거 추급권 추심기관에 통지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혹은 조항 r122-10에 의거 저작권자에게 정보청구권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제28조에 의거 재판매 통지·고지 의무에 소홀했을 시 개인에게는 200 페널티 유닛(Penalty Unit)의 민사 처벌(Civil Penalty) 별점이, 단체일 경우에는 1,000 페널티 유닛이 부과되며, 제29조 정보 제공·요청 의무에 소홀했을 시에는 개인의 경우 100 페널티 유닛, 단체일 경우에는 500 페널티 유닛이 부과된다. [표 25 참고]

[표 25]

처벌 규정 종류	
추급권 위반 시 처벌	① 재판매 로알티 보상
	② 추급권료 불납 시 벌금형
	③ 추급권 추심기관이나 관계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지 혹은 통지 의무 불이행시 벌금형
	④ 형사처벌

3.3.11. 의무 및 소멸시효 (Obligation & Statute of Limitations)

각국의 법안에서는 추급권 관련 다양한 의무 및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아래 장에서는 각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6가지 항목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A.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는 재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혹은 고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는 재판매의 특성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해도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권리가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는 재판매 로열티를 재판매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법안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는 추급권료 납부 기한 등이 법안에 지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는 재판매 로열티를 어느 기간 안에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F.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는 관련 작가 등을 찾을 수 없을 시 재판매 로열티를 추급권 추심기관에서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이와 같이 분류한 6가지의 항목을 통해 추급권에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았다. 세밀한 법안일수록 6가지의 항목 모두를 법안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전혀 포함하지 않은 법안도 존재했다.

3.3.11.1.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The

Obligation of Notifying & Reporting of Resales and Its Statute of Limitations)

통지(notify)·고지(report) 의무는, 각국의 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는 재판매 관련 판매자, 중개인, 미술시장전문가, 딜러, 공공 혹은 정부의 관리, 거래 영업체 매니저, 경매인, 에이전트 등은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웹사이트)이나 작가, 상속자, 추급권 징수 기관, 관련 기관의 종합 관리 매니저 등에게 각 국의 법에 정해진 기간인 ① 3일, ② 8일, ③ 15일, ④ 1달, ⑤ 1달 반, ⑥ 2달, ⑦ 3달, ⑧ 3년, ⑨ 다음해 1월 31일 안에 재판매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 통지 혹은 고지 기간은 짧으면 재판매일로부터 3일에서부터 길면 3년까지 국가마다 매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재판매를 알리는 통지나 고지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① 작품 이름, ②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③ 작품 종류, ④ 판매된 작품 숫자, ⑤ 관련 책임자 정보, ⑥ 재판매 장소와 날짜, ⑦ 재판매 검증과 지불 실행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서 (재판매 작품 확인을 위한 자료, 계약 당사자, 중개인, 작가 정보 등), ⑧ 관련자 주소, ⑨ 기타 관련 정보들이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재판매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급권 추심기관은 적절한 절차에 걸쳐 수혜자를 찾아내야 한다. 수혜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다른 추심기관에 연락을 취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적절한 광고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 1분기(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경우 5월 15일 안에, 2분기(4월 1일에서 6월 30일)의 경우 8월 15일 안에, 3분기(7월 1일에서 9월 30일)의 경우 11월 15일 안에, 4분기(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의 경우 1월 15일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 년에 5번 통지·고지가 이루어지는데 1

분기(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경우 4월 15일 안에, 2분기(4월 1일에서 6월 30일)의 경우 7월 15일 안에, 3분기(7월 1일에서 9월 30일)의 경우 10월 15일 안에, 4분기(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의 경우 1월 15일 안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매년 2월 1일에는 연례 신고서(annual declarations)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ADAGP의 경우 양식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당 예술가에게 추급권료 지불을 위한 인보이스(invoice)를 발행한다. 슬로바키아 LITA의 경우 재판매 관련 통지는 재판매가 이루어진 다음해 1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표 26 참고]

[표 26]

의무 및 소멸시효	
A.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통지·고지 대상: 재판매 관련 판매자, 중개인, 미술시장전문가, 딜러, 공공 혹은 정부의 관리, 거래 영업체 매니저, 경매인, 에이전트 등은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웹사이트)이나 작가, 상속자, 추급권 징수 기관, 관련 기관의 종합 관리 매니저 등
	통지·고지 기한: 재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① 3일, ② 8일, ③ 15일, ④ 1달, ⑤ 1달 반, ⑥ 2달, ⑦ 3달, ⑧ 3년, ⑨ 다음해 1월 31일 안에
	통지·고지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 ① 작품 이름, ②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③ 작품 종류, ④ 판매된 작품 숫자, ⑤ 관련 책임자 정보, ⑥ 재판매 장소와 날짜, ⑦ 재판매 검증과 지불 실행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서 (재판매 작품 확인을 위한 자료, 계약 당사자, 중개인, 작가 정보 등), ⑧ 관련자 주소, ⑨ 기타 관련 정보 등

3.3.11.2.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The

Obligation of Providing and Claiming Information and Its Statute of Limitations)

정보 제공(provide)·요청(claim) 의무 및 소멸시효는 재판매 로얄티 지불을 위해 지불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의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상속자, 판매자, 구매자, 딜러, 미술시장전문가, 거래상, 경매사, 무역상, 에이전트 등은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웹사이트)이나 추심기관, 관련 관리 기관 등에 의해 재판매 로얄티 지급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다. 일반적으로 제공 요청 받는 정보들은 ① 작품 이름, ② 작가 이름, ③ 작품 소유자 이름, ④ 관련 중개인 정보, ⑤ 재판매 로얄티 수혜자 정보 ⑥ 주소, ⑦ 계약서, ⑧ 진품인 증서, ⑨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⑩ 재판매 로얄티 비율 및 재판매 로얄티 금액, ⑪ 재판매 장소와 날짜, ⑫ 지불 합의에 관련된 문서, ⑬ 기타 결제 수행에 필요한 문서, ⑭ 관련 기관 연례보고서 등이다. 이 문서들은 재판매가 있었음을 통지 혹은 고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혹은 재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혹은 정보 제공 청구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① 21일, ② 1달, ③ 2달, ④ 3달, ⑤ 3년, ⑥ 5년, ⑦ 매년 6월 1일 안에 ⑧ 다음 년 12월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미술시장전문가는 요청을 받을 경우 결제 통지서(payment notification)를 재판매가 일어난 분기의 마지막 일자 기준으로 3달 안에 우편으로 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판매자나 에이전트가 관련 기관에 매년 6월 1일 작년 한해의 작품 재판매 내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인회계사나 등록된 회계 감사관을 통해 감수 받은 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판매자, 중개인, 구매자가 관련 기관에 매해 작품 판매 장부(account)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정보 요청 의무는 2016년도에 일어난 재판매의 경우 2017년 12월까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된다. [표 27 참고]

의무 및 소멸시효	
	정보 제공·요청 대상: 저자, 상속자, 판매자, 구매자, 딜러, 미술시장전문가, 거래상, 경매사, 무역상, 에이전트 등
	정보 제공·요청 기한: 재판매가 있었음을 통지 혹은 고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혹은 재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혹은 정보 제공 청구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①
B. 정보청구권:	21일, ② 1달, ③ 2달, ④ 3달, ⑤ 3년, ⑥ 5년, ⑦ 매년 6월 1일 안에 ⑧ 다음 년
정보 제공·요청	12월 안에
의무 및 소멸시효	정보 제공·요청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 ① 작품 이름, ② 작가 이름, ③ 작품 소유자 이름, ④ 관련 중개인 정보, ⑤ 재판매 로열티 수혜자 정보 ⑥ 주소, ⑦ 계약서, ⑧ 진품인증서, ⑨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⑩ 재판매 로열티 비율 및 재판매 로열티 금액, ⑪ 재판매 장소와 날짜, ⑫ 지불 합의에 관련된 문서, ⑬ 기타 결제 수행에 필요한 문서, ⑭ 관련 기관 연례보고서 등

3.3.11.3.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The Subject of Payment Obligation)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는 각 국가마다 달랐는데 재판매에 참여한 미술시장전문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경매인, 무역상, 에이전트, 매각자, 공공 경매의 주최자, 갤러리 오너, 아트 딜러, 상업적인 영업체의 매니저, 공공 혹은 정부 관리, 기업 혹은 관련 판매 기관 대표 등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페인, 슬

로베니아처럼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리아처럼 판매자와 중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여러 명의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참여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있거나 그들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경매의 경우 미술시장전문가가 재판매 로얄티 지불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만약 여러 명의 미술시장전문가가 거래에 참여했다면 (1) 판매자, (2) 중개인 (3) 구매자 순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1) 판매자, (2) 미술시장전문가 순으로 책임을 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한 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했을 경우 모든 판매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또한 미술시장전문가의 능력을 가지고 판매자의 역할을 한 개인이나 에이전트 등도 이에 해당된다. 만약 판매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무는 구매자에게 미술시장전문가나 에이전트의 능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만약 구매자에게 에이전트가 없으면 재판매 로얄티는 구매자의 책임이 되며, 여러 명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면 모든 구매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만약 여러 명의 미술시장전문가가 거래에 참여했다면, 판매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판매자가 없을 시 중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밖에도 핀란드의 경우에는 (1) 판매자나 (2)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는데 만약 미술작품 거래에 구매자 이외에 어떤 판매자나 중개인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3)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1)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만 만약 판매자가 미술시장전문가가 아니라면 미술시장전문가인 (2) 구매자나 (3)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재판매 로얄티는 딜러에 의해서 추급권 추심기관에 납부된다. 만약 여러 명의 딜러가 거래에 참여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 딜러들이 합의를 했으면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판매자의 역할을 한 딜러가 없다면, 구매자가 재판

매 로열티에 책임이 있다. [표 28 참고]

[표 28]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재판매에 참여한 미술시장전문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경매인, 무역상, 에이전트, 매각자, 공공 경매의 주최자, 갤러리 오너, 아트 딜러, 상업적인 영업체의 매니저, 공공 혹은 정부 관리, 기업 혹은 관련 판매 기관 대표 등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 재판매 로열티 (1) 판매자와 중개인 공동 책임인 경우
	지불 책임 공동 (2)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 공동 책임인 경우
	주체 (기준은 (3) 판매자 공동 책임인 경우 국가별 상이) (4) 딜러 공동 책임인 경우
✓ 재판매 로열티	만약 여러 명의 미술시장전문가가 거래에 참여했다면?
	지불 책임 주체 (1) 판매자 → (2) 중개인 → (3) 구매자: 프랑스
	우선순위 (기준은 (2) 판매자 → (2) 미술시장전문가: 포르투갈
	국가별 상이) (3) 판매자 → (2) 중개인: 스페인

3.3.11.4.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Resale Royalty

Payment Obligation and Its Statute of Limitations)

재판매 로열티 지불의 경우 기준이 확실한 편인데, 먼저 통지를 받은 후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로 청구서를 받은 후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세 번째로 계약 체결 후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매가 진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지불 데드라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① 10일, ② 1달, ③ 2달, ④ 3달, ⑤ 4달, ⑥ 1년, ⑦ 3년, ⑧ 5년, ⑨ 6년, ⑩ 해당분기의 다음달 20일, ⑪ 통지 후 다음해 1월까지를 데드라인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재판매 로열티 지불은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웹사이트)이나 작가, 상속자, 추급권 징수 기관, 관련 기관의 종합 관리 매니저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표 29 참고]

[표 29]

의무 및 소멸시효	
	재판매 로열티 지불 방식: ① 통지를 받은 후 지불하는 방식, ② 청구서를 받은 후 지불하는 방식, ③ 계약 체결 후 지불하는 방식
D. 재판매 로열티	재판매 로열티 지불 기한: 통지를 받은 후/청구서를 받은 후/계약 체결 날짜를
지불 의무 및	기준으로 ① 10일, ② 1달, ③ 2달, ④ 3달, ⑤ 4달, ⑥ 1년, ⑦ 3년, ⑧ 5년, ⑨
소멸시효	6년, ⑩ 해당분기의 다음달 20일, ⑪ 통지 후 다음해 1월까지
	재판매 로열티 지불 대상: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웹사이트)이나 작가, 상속자, 추급권 징수 기관, 관련 기관의 종합 관리 매니저 등

3.3.11.5.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Resale Royalty

Collecting Obligation and Its Statute of Limitations)

만약 재판매 로열티를 일정 기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관련 기관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법안에 기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때 데드라인은 재판매 날짜 혹은 재판매가 통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로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⑤ 20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재판매 통지 후 3년간 재판매 로알티를 찾아가지 않을 시 문화 개발을 목적으로 페루 국립문화기관(Instituto Nacional de Cultura/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of Peru; INC)에 기부된다는 조항이 추급권 법안에 삽입되어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에도 재판매 통지 후 1년간 재판매 로알티를 찾아가지 않을 시 수급 기한이 만료되며, 그 금액은 문화발전기금으로 파라과이 국립지적재산권국에 적립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30 참고]

[표 30]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알티 수급	재판매 로알티 수급 기한: 재판매 날짜 혹은 재판매가 통지된 날짜를
의무 및 소멸시효	기준으로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⑤ 20년 등

3.3.11.6. 재판매 로알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Resale Royalty Depository Obligation)

이밖에도 만약 작가의 소재를 찾지 못했거나 작가가 재판매 로알티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매 로알티를 보관(depositories)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의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 중 한 곳인 DACS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뱅크시(Robin Gunningham Banksy, 1974-)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판매 로알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뱅크시처럼 작가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작가에게 당장 추급권을 지급할 수 없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루마니아 VISARTA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판매 로알티 중 상속자를 찾지 못한 152명의 작가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PDF로 올려 두는 경우도 있었다.¹⁸⁹⁾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건대 작가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표 31 참고]

[표 31]

의무 및 소멸시효	
F. 재판매 로알티 보관 의무	작가의 소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작가가 재판매 로알티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작가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189) "Sume Nerevendicate in Sold la 31.12.2013 de Distribuit in 2017," [Romania] VISARTA, Accessed July 1, 2017, <http://www.visarta.ro/07.03.2017/sume%20nerevendicate%20DE%20REPARTIZAT%20IN%20%202017.pdf>.

3.4. 추급권 도입 논의 중 국가별 사례 연구 및 시사점

3.4.1. 입법 추진 노력 중인 국가들

3.4.1.1. 미국

요약: 1976년 「캘리포니아재판매법(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CRR A)」 도입 → 2015년 위헌 판결 → 2015년 「ART 법안(American Royalties Too Act; ART)」 입법 추진 → 2015년 114번째 의회에서 연방법 도입에 실패 → 수정된 ART 법안 다시 제출 준비 중

미국에서 재판매 로열티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이 일게 된 계기는 1973년 있었던 <소더비> 경매 결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 회사로 부를 축적한 유명 현대 미술작품 컬렉터인 로버트 스컬(Robert Scull, 1917-1986)은 미국 뉴욕의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작품 중 <해빙(Thaw), 1958>[도판 9]을 \$900에 <동시 상영(Double Feature), 1959>[도판 10]을 \$2,500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약 15년 후인 1973년 뉴욕 <소더비 파크 베넷(Sotheby Parke Bernet)>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이 두 작품은 무려 \$85,000과 \$90,000에 낙찰되었다. 당시 이 경매를 지켜보던 라우센버그는 스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당신에게 이 이익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다. 당신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 경매에 참가한 모든 작가들에게 일주일간의 택시비를 무료로 대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진행된 경매에는 라우센버그 외에도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 등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고, 이 작가들 역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존스의 <더블 화이트 맵(Double White Map), 1965>[도판 11]의 경우 \$10,500에 구매한 작품이 \$240,000으로 22배 상승하였으며, 당시 생존 미국 작가 중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톰블리의 경우 \$750에 구입한 작품이 \$40,000로 판매되었으며, 워홀의 <플라워(Flower), 1964>[도판 12]는 \$3,500에 구입한 작품의 가격이 \$135,000으로 치솟는 기록적인 장면을 연출했다.¹⁹⁰⁾ 존 스콧(John Schott)과 E. J. 보간(E. J. Vaughn)이 찍은 다큐멘터리 <미국의 Pop 컬렉터: 로버트 스컬 1974년의 컨템포러리 미술 경매(America's Pop Collector: Robert C. Scull-Contemporary Art at Auction, 1974)> 필름에는 바로 이 장면이 담겨있다.¹⁹¹⁾

이 사건을 계기로 라우센버그는 추급권 도입 캠페인에 앞장서게 되는데,¹⁹²⁾ 고군분투했던 라우센버그의 노력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와 오하이오 주 입법부에 추급권이 소개되었고,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 도입에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앨런 시로티(Alan Sieroty)는 1975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급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 제출하였고, 이 초안은 수정을 거쳐 1976년 「캘리포니아재판매법(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CRRA)」으로 제정되어 197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¹⁹³⁾ 이 법안은 당시 주지사였던 에드문드 G. 브라운 주니어(Edmund G. Brown, Jr.)가 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로버트

190) Katy Graddy and Noah Horowitz and Stefan Szymanski, "A Study into the Effect on the UK Art Marke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8): 42.

191)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동향," *고려법학* 76 (2015): 32.

192) David Widenor, "Visual Artists Lack Protection Under Current Laws," *Buffalo Law Journal* 82, no. 42 (2010): 15A.

라우센버그, 앨런 시로티와 루벤 골위츠(Ruben Gorewitz)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⁹⁴⁾ CRRA는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1,000 이상의 미술작품(페인팅, 조각, 드로잉, 유리 작품)을 대상으로 판매가에서 5%를 재판매 로열티로 작가에게 지급하며, 작가의 생애와 사후 20년 동안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미술위원회(California Arts Council; CAC)의 재판매 로열티 법률 코디네이터 패티 밀치(Patty Milich)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이 시행된 후 34년 동안 약 400명의 미술가들이 총 \$328,000의 재판매 로열티를 수령하였다고 한다.¹⁹⁵⁾ 하지만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지급권을 인정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지급법은 2011년 10월 작가 척 클로스(Chuck Close, 1940-), 라디 존 딜(Laddie John Dill, 1943-), 조각가 로버트 그레이엄(Robert Graham, 1938-2008)과 추상표현주의 작가 샘 프란시스(Sam Francis 1923-1994)의 재산권자가 <소더비>, <크리스티>, <이베이(eBay)>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다.¹⁹⁶⁾

2011년 원고 측은 경매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판매자의 신원과 캘리

193) 백명선 and 변용완, “한-EU FTA의 지급권(Droit de Suite)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과제,” *제 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2007): 162.

194) Elizabeth T. Russell, *Art Law Conversations: A Surprisingly Readable Guide for Visual Artists* (Middleton, WI: Ruly Press, 2005), 157.

195) Patricia Cohen, “Artists File Lawsuits, Seeking Royaltie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 2011, <http://www.nytimes.com/2011/11/02/arts/design/artists-file-suit-against-sothebys-christies-and-ebay.html>.

196) 작가 척 클로스 및 여러 작가가 주도한 재판(Estate of Graham v. Sotheby's Inc. & Sam Francis Foundation v. Christie's Inc.)

포니아에서 일어난 판매들을 고의로 감추어 온 패턴을 보여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법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원고 측에 그동안의 재판매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경매 회사 측은 세 건의 혐의에 근거하여 이 소송을
 기각 할 의향을 제기하였다. (1) 캘리포니아의 추급권은 '통상 조항'을 위배했고,
 (2) 개인의 사유 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수용조항
 (Takings Clause)'과 '캘리포니아 주법'의 위반이며, (3) 캘리포니아의 추급권 법
 령이 1976년의 연방 저작권법 조항에 의해 '선택' 된다는 이유에서였다.¹⁹⁷⁾ 결국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앙 지구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판사 재클린
 H. 응우옌(Jacqueline H. Nguyen)에 의해 2012년 5월 17일 '통상 조항' 위배로
 각하 되게 된다. 통상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
 외부의 주에서 일어난 판매에 대해 규제를 시도하였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을 다시 미국 제9연방고등법원(9th circuit)에 항소한다. 또한
 작가들은 판사 마이클 피츠제럴드(Michael W. Fitzgerald)에게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Motion to Stay)'을 제출했으나 기각 당한다. 그러자 작
 가 측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마이클 A. 보우스(Michael A. Bowse)는 판사 재클
 린 응우옌(Jacqueline Nguyen)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해당 법이 시행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캘리
 포니아 주의 추급권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언
 론 매체에게 통보하기도 했다.¹⁹⁸⁾ 하지만 결국 미국 제9연방고등법원 항소 법원

197) Estate of Graham v. Sotheby's Inc. 860 F. Supp. 2d at 1119. (Case No. CV-11-08604-MWF),
 quoted in Elizabeth M. Petty, "Rauschenberg, Royalties, and Artists' Rights: Potential Droit de Suit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2, no. 3 (2014): 994,
<http://scholarship.law.wm.edu/wmborj/vol22/iss3/8>.

판사들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밖의 미술작품 판매를 규제하는 법조항이 ‘내재적 주 상호간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¹⁹⁹⁾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3호는 연방의회에게 ‘외국과의 통상 및 주 상호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한다. 본 사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른바 주 상호간 통상 조항의 경우인데 주 상호간 상거래에 대해 연방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연방헌법에는 연방 법률이 없는 경우 주 상호간의 상거래에 대해 주 법률이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주 의회가 주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수 있고, 주 법률의 위헌여부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연방의회가 내린다. 즉,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연방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⁰⁰⁾ 판사 수잔 P. 그래버(Susan P. Graber)는 판결에서 ‘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뉴욕에 아파트가 있어 뉴욕에서 지내다가 노스다코타 출신 작가의 조각 작품을 집을 꾸미려 구입했고, 나중에 이 조각 작품을 뉴욕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판매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조각 작품이나 작가는 캘리포니아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의 영향을 받게

198) Andrew Russeth, "Court Ruling Reminds Art World That California Resale Royalty Law Remains in Effect," *The Observer*, June 8, 2012,

<http://observer.com/2012/06/court-ruling-reminds-art-world-that-california-resale-royalty-law-remains-in-effect/>.

199) Eileen Kinsella, "Will Christie's Stop Selling Expensive in California?" *Artnet News*, May 6, 2015, <https://news.artnet.com/market/court-restricts-california-resale-law-294993>.

200)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26, no. 3 (2014): 117.

되고 이는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²⁰¹⁾

위태롭게 운영되던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은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여러 법적 근거와 충돌을 일으켰고, 2016년 초에는 2015년 5월 15일 미국 제9연방고등법원에서 내린 위헌판결에 대한 상고 허가 검토(certiorari review)가 거부된다. 결국 2016년 4월 11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이 전체 법이 저작권법에 의해 '선취'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²⁰²⁾ CRRA는 1976년 제정되어 1977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2016년 4월 1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이 캘리포니아 미술 시장에 해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대형 경매 회사들과 딜러들의 격렬한 반대와 로비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추급권은 결국 사라졌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는 추급권과 비슷한 조항이 다른 주의 주법에 존재하기도 한다. 2013년 미국 조지아(Georgia) 주의 법 §8-5-7(3)에서는 주 빌딩을 위해 미술작품 창작을 의뢰 받은 미술가들은 후에 국가가 제3자에 판매하는 의뢰 작품에 대해 재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문의 의뢰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예술 작품이 이후 국가에 의해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수익금의 명시된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²⁰³⁾ 2015년 개정된 미국 조지아 주의 법에는 여전히 주법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작가 대상으로 일정 %의

201) Eileen Kinsella, "Will Christie's Stop Selling Expensive in California?" *Artnet News*, May 6, 2015, <https://news.artnet.com/market/court-restricts-california-resale-law-294993>.

202) "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Claims Dismissed as Preempted by Copyright Law," [USA] The Art Law Repor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sandw.com/assets/htmldocuments/B2031660.PDF>.

203) 2013 Georgia Code, Title 8-Building and Housing, Chapter 5-Art in State Building, § 8-5-7(3) (2013) (Georgia, USA), <http://law.justia.com/codes/georgia/2013/title-8/chapter-5/section-8-5-7/>.

로열티를 줄 수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²⁰⁴⁾ 이러한 내용은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 주법 §1-22-16(5)에도 같은 내용으로 존재한다.²⁰⁵⁾

2015년 추급권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연방차원에서 추급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예컨대, 1978년 대의원 헨리 왁스만(Henry Waxman)의 「왁스만 법안 혹은 시각미술가의잔여적권리법안(The Visual Artists' Residual Rights Act of 1978; Waxman Bill)」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1986년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와 대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의 「케네디-마키 법안(The Senator Kennedy-Markey Bill)」, 1990년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와 로버트 카스텐마이어(Robert W. Kastenmeier)의 「시각미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이 있었다. 1992년에는 미국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이 추급권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1년에는 「시각미술가형평법(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 EVAA)」이 추진되었고, 2013년에는 저작권청이 124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인 “재판매 로열티(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를 다시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5년의 「ART 법안: 미국로열티법(American Royalties Too Act; ART)」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비록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음), 1986년 케네디 마키 법안이 수정되어 1990년 VARA가 탄생한 것은 시각미술가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귀중한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²⁰⁶⁾

204) 2015 Georgia Code, Title 8-Building and Housing, Chapter 5-Art in State Building, § 8-5-7(3)

(2015) (Georgia, USA), <http://law.justia.com/codes/georgia/2015/title-8/chapter-5/section-8-5-7/>.

205) 2016 South Dakota Code, Title 1-State Affairs and Government, Chapter 22-Arts, §1-22-16(5)

(2016) (South Dakota, USA),

<http://law.justia.com/codes/south-dakota/2016/title-1/chapter-22/section-1-22-16/>.

VARA 법안의 경우 1987년 처음 초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추급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1989년에 법안이 재상정되면서 1990년 12월 1일 조지 H. W. 부시(George H. W. Bush)가 서명해 입법되었을 때의 최종 버전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1991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VARA 법안은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원주민 미술은 포함되지 않는 등, 전체적인 보호(holistic protection) 대신 제한적인 보호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²⁰⁷⁾ 예를 들면 보호 범위에서 영화는 제외되었고, 응용 미술이나 작가가 인부들을 고용해서 만든 작품들도 배제되었으며,²⁰⁸⁾ 공예는 명시적으로는 배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판례법은 디자이너 바지의 자수, 인형극에 쓰는 인형, 그리고 극장(무대) 세트는 시각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²⁰⁹⁾ 또한 사진 작품의 경우 철저하게 ‘전시’를 목적으로 창작한 작가에 의해 서명되거나 번호가 매겨진 한정판 작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05년 릴리 V. 스타웃(Lilley V. Stout) 사례에서 법원은 사진작가인 원고 게리 릴리(Gary Lilley)가 화가인 르네 스타웃(Renee Stout)의 부탁으로 그녀의 작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스타웃의 <다섯 시의 빨간 방(Red Room at Five)> 작품의 일부로

206)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동향,” *고려법학* 76 (2015): 29.

207) Amy Skelton, “VARA’s Orphans: How Indigenous Artists Can Still Look for Hope in the Moral Rights Regime,” *Indiana Journal of Law and Social Equality* 1, no. 1 (2013): 263.

208)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VARA), §601-§610,” [USA] Wikisource, accessed July 7, 2016, https://en.wikisource.org/wiki/Visual_Artists_Rights_Act_of_1990.

209) Jessica L. Darraby, *Art, Artifact, Architecture and Museum Law* (Eagan, MN: Thomson West, 2009), 673, quoted in Amy Skelton, “VARA’s Orphans: How Indigenous Artists Can Still Look for Hope in the Moral Rights Regime,” *Indiana Journal of Law and Social Equality* 1, no. 1 (2013): 274.

사용된 것에 대해 작품 연구를 목적으로 창작된 사진 작품들은 시각 예술 작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²¹⁰⁾ 한 저자는 응용 미술에 포함되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퀼트 작품 중에서는 전시 용도의 창작성도 있어 VARA 법안의 보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¹¹⁾ 비록 최종 버전에는 추급권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되었지만, VARA 법안의 제608조(b)에는, 미술가들이 본인 작품의 상승된 가치를 재정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저작권청이 다양한 그룹들과 협의하여 연구를 수행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있다.²¹²⁾

위의 조항에 따라 나온 보고서가 1992년 12월 1일 저작권청에서 나온 “추급권: 예술가의 재판매 로얄티(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라는 보고서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 내에 추급권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충분한 경제적 및 저작권 정책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미술작품 재판매 빈도를 나타내는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²¹³⁾ 이 보고서는 이처럼 추급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만약 EU가 기존 추급권 법제도 ‘조화’를 이루고, EU 내 모든 국

210) Patty Gerstenblith,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Cases and Materials*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2), 183.

211) Michelle Moran, “Quilt Artists: Left Out in the Cold by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14, no. 2 (2010): 408.

212) Visual Artists Rights Act(VARA) §608b (1990) (USA), quoted in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동향,” *고려법학* 76 (2015): 39.

213)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Copyright Office Report Executive Summary,”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16, no. 3 (1992): 390.

가가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의회도 추급권에 대해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²¹⁴⁾ 1992년에 나온 이 보고서²¹⁵⁾의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보고서는 2013년에 발표되었다. 2013년에 나온 저작권청의 124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는 시각 미술가 형평 법안인 EVAA 법안이 관련 업계의 로비와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시 추급권 관련 연구·조사에 착수한 후 발간되었다. [EVAA 법안은 2011년 12월 15일 허브 콜(Herb Kohl) 전 위스콘신 상원의원과 제롤드 내들러(Jerrold Nadler) 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지난 1992년 보고서의 추급권 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연방차원의 추급권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²¹⁶⁾²¹⁷⁾ 추급권의 도입이 미국의 미술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²¹⁸⁾ 아래의 표는 1970년대부터 미국 연방 차원에서 있었던 추급권 도입 시도 역사를 정리한 표이다. **[표 32 참고]** 현재까지는 1990년도의 VARA 만이 유일하게 도입에 성공한 법안이다.

214) "Moral Rights, Termination Rights, Resale Royalty, and Copyright Term," [USA]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gov/regstat/2014/regstat07152014.html>.

215) The Register of Copyrigh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1992): 1-76.

216) "[미국] 저작권청, 시각 미술가를 위한 추급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848>.

217) 공개 질의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copyright.gov/fedreg/2013/78fr19326.pdf>.

218)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2013): 66.

미국 연방 차원 저작권 도입 시도 역사		
연도	법안 이름	법안 추진 내용
1978년	[도입 실패] 왁스만 법안 혹은 시각미술가의잔여적권리법안(The Visual Artists' Residual Rights Act of 1978; Waxman Bill)	-시각미술국립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Visual Arts; NCVA) 창립, 시각미술기금(Visual Arts Fund) 창립 -\$1,000 이상의 모든 시각미술작품 판매가에서 5%, 작가의 생애 + 사후 50년 (판매자의 구매가격에서 105% 보다 재판매가격이 낮으면 제외)
1986년	[도입 실패] 1986년 시각미술가권리수정안(Visual Artists Rights Amendment of 1986)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의거 추가권을 독점판매권(exclusive right)으로 추가하려고 함 -\$500 이상의 모든 시각미술작품 판매가에서 7%, 작가의 생애 + 사후 50년 (판매자의 구매가격에서 140% 보다 재판매가격이 낮으면 제외)
1987년	[도입 실패] 1987년 시각미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87; VARA) or 케네디-마키 법안(The Senator Kennedy-Markey Bill)	-\$1,000 이상의 모든 시각미술작품 판매가에서 7%, 작가의 생애 + 사후 50년 (판매자의 구매가격에서 150% 보다 재판매가격이 낮으면 제외)
1990년	[도입, 최종적으로 제외] 1990년 시각미술가권리법(Visual	-5가지의 버전이 있었으나 저작권 관련 내용은 배제됨. 하지만, 마지막 버전의 제608조(b)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도입을 위한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NEA와 협의하여 타당성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 *1991년 6월 1일 발효	연구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됨. 이 조항에 따라 나온 보고서가 1992년 저작권청에서 나온 “추급권: 예술가의 재판매 로열티(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임
---	--

2011년	[도입 실패,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 시각미술가형평법(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 EVAA)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의거 추급권을 독점판매권(exclusive right)으로 추가하려고 함 -공공 경매에서 \$10,000 이상에 거래 되는 페인팅, 드로잉, 프린트, 조각, 사진 작품(조각이나 사진 작품은 200점 이내에서 작가의 서명 혹은 식별 표시가 있고, 작가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것에 한정) 판매가에서 7%, 작가의 생애 + 사후 70년

2015년	[도입 실패] ART 법안: 미국로열티법(American Royalties Too Act; ART)	-공공 경매에서 \$5,000 이상에 거래되는 모든 페인팅, 드로잉, 프린트, 사진 작품 등 시각미술작품을 대상으로 5%, 작가의 생애 + 사후 70년

2013년에 나온 저작권청의 124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 이후 2014년 2월 26일 하원 의원 제럴드 네들러, 상원 의원 태미 발드윈(Tammy Baldwin), 그리고 상원 의원 에드 마키(Ed Markey)는 공동으로 시각 미술가의 추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인 ART 법안을 발의하지만 도입에는 실패한다. 이 법안은 2013년도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네들러 하원 의원이 2011년 발의한 EVAA 법안의 개정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¹⁹⁾ 네들러 의원은 인터뷰에서 미국 미술가들이 부당하게 대

219) “[미국] 시각 미술작품의 재판매 시 수익의 일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돼,” 한국

우받고 있다고 주장하였고,²²⁰⁾ 발드윈 의원은 미국의 저작권법이 작가와 뮤지션에게까지 확장되어 그들의 미술적 창의성을 장려하는 것처럼 시각 미술가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²²¹⁾ 내들러 의원은 발드윈, 마키 의원과 함께 2015년 4월 16일 ART 법안을 또 다시 발의한다.²²²⁾

미국에서는 추급권 입법 추진 노력 이외에도 미술계 각계각층에서 추급권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2015년 7월 22일에는 뉴욕에 위치한 <트라이베카 미술 공간(TriBeCa Artists Space)>에서 독일 개념 미술 화가 한스 하케(Hans Haacke, 1936-), 뉴욕 기반 화가 R. H. 하비 쿠에이트만(R. H. Quaytman, 1961),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인 로렌 반 하프턴 쉬크(Lauren van Haften-Schick), 미술가권리단체(Artists Rights Society; ARS) 관계자, 그리고 뉴욕 대법원 판사인 바바라 자피(Barbara Jaffe)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앞서 저술한 라우센버그와 스컬 일화를 담은 필름이 상영되었고, 보류된 ART 법안에 대

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897>.

220) Patricia Cohen, "New Bill Proposes Auction Royalties for Artists," *ArtsBeat* (The New York Times Blogs), February 26, 2014, http://artsbeat.blogs.nytimes.com/2014/02/26/new-bill-proposes-auction-royalties-for-artists/?_php=true&_type=blogs&_r=1.

221) Kelly Crow, "Lawmakers Propose Bill to Give Royalties to Visual Artists: Painters Would Get 5% of What Artworks Sell for at Auction Houses," *Wall Street Journal*, Feb 27, 2014,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502069828?accountid=6802>.

222) Nicholas O'Donnell, "Third Time a Charm? New Resale Royalty Bill Filed in Congress," *Art Law Report*, April 23, 2015, <http://www.artlawreport.com/2015/04/23/third-time-a-charm-new-resale-royalty-bill-filed-in-congress>.

한 소개와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판사 지피는 순수 미술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며 연방 차원의 법률로서 이 책임을 정부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법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의 현대 미술작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²²³⁾

2015년 제 14회를 맞은 미국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의 감독으로 임명된 노아 호로비츠(Noah Horowitz)는 인터뷰에서 추급권은 100년 동안 작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뜨거운 토론 주제라고 지적했다.²²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 몇몇 의원들의 추급권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추진 노력, 미술계 각계각층이 추급권 홍보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미국은 추급권 도입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추급권 도입과 관련해서 EU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16년 5월 독립적인 비영리 글로벌캠페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GP)²²⁵⁾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관련해서 공개한 문서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EU 협상가가 작성한 미국의 추급권 관련 내용이 담긴 이 문서에는 미국의 저작권법 개선 노력은 ‘빙하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TTIP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었고, EU에서 향후 주요한 협의 대상으로 꼽은 것은 ‘중계권’, ‘공연권’

223) Tess Thackara, "What's At Stake in the Artist's Resale Right Debate?" *Artsy*, July 31, 2015,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what-s-at-stake-in-the-artist-s>.

224) "Art Basel Director Noah Horowitz Takes the Long View," [UK] Blouin Artinfo, accessed July 1, 2016, <http://www.blouinartinfo.com/news/story/1288556/art-basel-director-noah-horowitz-takes-the-long-view>.

225) 그린피스: 독립적인 비영리 글로벌캠페인 단체로 환경보호와 평화증진을 위해 일하며 비폭력적이고 독창적인 직접행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http://www.greenpeace.org/korea/>

그리고 ‘추급권’이라는 내용이다.²²⁶⁾ 이는 EU 협상가가 고의로 흘린 문서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EU가 추급권을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로 만들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EC가 제3국이 재판매 권리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²²⁷⁾ 이러한 세계 각국의 추급권 도입 가속화 움직임으로 미국도 머지않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4.1.2. 캐나다

요약: 2010년 Bill C-32 입법 추진 → 법안 계류

캐나다에는 최초의 국제 작가로 알려진 장 파울 리오펔(Jean-Paul Riopelle, 1923 - 2002)을 비롯해 잭 부시(Jack Bush, 1909-1977), 마이클 스노우(Michael Snow, 1929-) 등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이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매력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²²⁸⁾ 캐나다 경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장 파울 리오펔을 비롯하여 로렌 해리스(Lawren Harris, 1885-1970), 에밀

226) "Weekly Copyright Issues Wrap Up - May 6, 2016," [USA] Copyright Alliance(CA), accessed July 1, 2016, https://copyrightalliance.org/content/weekly_copyright_issues_wrap_-_may_6_2016.

227) European Commission(EC), Brussel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878 final)," (2011): 11.

228) Calin Valsan and Derrick Chong and Elisabeth Bogdan, "Chapter 7: Canada,"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90.

리 카(Emily Carr, 1871-1945) 등 50명 정도의 유명 작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캐나다 내부 미술 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2012년 5월에는 캐나다미술가대표(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 CARFAC)²²⁹⁾가 캐나다(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DCH)에 추급권 제정을 촉구하며 로비를 진행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²³⁰⁾ 비록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이들이 입법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도 앞서 언급한 여러 국가들처럼 자국의 예술가들이 불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캐나다의 유명한 극사실주의 화가 매리 프랫(Mary Pratt, 1935-)은 작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정작 그녀 자신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로한 그녀는 여러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대답했다.²³¹⁾ 추상미술 작가인 론 블로어(Ron Bloore, 1925-2009), 크리스티안 마르셀 바보(Christian Marcel Barbeau, 1925-2016), 조각가이자 추상미술 작가인 토니 어퀴트(Tony Urquhart, 1934-) 등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경매전문회사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그로 인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²³²⁾ 원주민 작가들도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

229) 캐나다 미술가대표(CARFAC)는 캐나다 국민인 전문 시각 미술가의 발언권을 위한 협회로 연방정부에 편입되었다.

230) Murray Whyte, "Ritchies To Pay Artists Royalties," *Toronto Star* (Ontario, Canada), May 14, 201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50384307?accountid=6802>.

231) Jennifer Ditchburn, "Canadian Artists Have Budget Hopes," *Whitehorse Star* (Whitehorse, Yukon, Canada), Mar 14, 201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17219979?accountid=6802>.

232) Canadian Artists'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RFAC), "Recommendations

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캐나다 누나부트 미술과 공예협회(The Nunavut Arts and Crafts Association; NACAARTS)가 밝힌 바에 의하면, 많은 이누이트 미술가들이 평균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한다고 한다. 퀘백 작가인 조 탈리루닐리(Joe Talirunili, 1893-1976), 이누이트 미술가인 파우타 사일라(Pauta Saila, 1916-2009), 이누이트 유명 조각가인 유다 알루라크(Judas Ullulaq, 1937-1999)의 작품들 또한 미술 시장에서 고가에 낙찰되고 있지만 원 작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했다.²³³⁾

이처럼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캐나다 본토와 원주민 작가들은 해외의 사례처럼 작가들이 자체적으로 작품 판매 동의 약정서에 추급권과 비슷한 조항을 삽입하거나,²³⁴⁾ 양심 있는 경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판매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의 <리치스(Ritchies> 경매사는 2013년 5월 29일에 열리는 현대미술 경매부터 자발적으로 생존 작가들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캐나다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로 알려졌다.²³⁵⁾ 캐나다의 원주민 작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국

for an Artist Resale Right in Canada,” (2010): 5.

233) “Judas Ullulaq,” [Canada] Waddingtons.ca, accessed July 1, 2016, <http://waddingtons.ca/prices-realised/share/78622-768817336>, quoted in 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RFAC), “Recommendations for an Artist Resale Right in Canada,” (2010): 18.

234) Lesley Ellen Harris, *Canadian Copyright Law*, 4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14), 161.

235) Murray Whyte, “Ritchies To Pay Artists Royalties,” *Toronto Star* (Ontario, Canada), May 14, 201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50384307?accountid=6802>.

제 미술 시장에서 고유한 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2차 시장에서 제3자들에 의해 그들의 노력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수렴되었다. 많은 캐나다의 원주민 작가들은 고립된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도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작품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캐나다의 한 학자는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하는 것도 벅찬 미술가들에게 노후 대비 저축을 한다는 것은 살바도르달리(Salvador Dalí, 1904-1989)의 초현실주의 작품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그들의 작품이 후에 인지도가 높아져 재판매될 경우 \$100 달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CARFAC는 추급권 규정을 저작권 현대화를 위한 법안인 Bill C-32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를 진행하였다. 자유당(Liberal Party)의 당수인 마이클 이그나티프(Michael Ignatiff)는 2010년 12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의 제도와 유사한 추급권”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하고 CARFAC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로비를 벌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만일 Bill C-32가 개정되지 못한다면, 의원 입법 법안을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²³⁶⁾ 현재 계류 중인 법안 C-3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가들의 작품이 옥션이나 갤러리에서 “1천 달러 이상”에 재판매될 경우, 미술가나 그의 상속인이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캐나다의 기본 저작권 보호 기간인 “미술가의 사망일로부터 50년간” 인정해야

236) “[캐나다] 미술작품 ‘추급권’, 캐나다에도 도입될까?: CARFAC, 저작권 현대화 법안(Bill C-32) 추가 로비,”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026>.

한다는 내용이다. 추급권 행사에 따른 수익 분배는 중앙 행정 기관인 캐나다 미술가대표저작권집단(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 Copyright Collective; CARCC)이 주관하며, 경매소나 갤러리로부터 보고받은 판매 내역을 바탕으로 발생한 로열티를 미술가나 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캐나다의 법안 C-32는 현재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CARFAC와 퀘백시각미술작가재편(The Regroupment des Artistes en Arts Visuels du Québec/The Regroupment Artists in Visual Arts of Quebec; RAAV)²³⁷⁾이 2010년 발행한 “법안 C-32에 관한 권고: 시각 미술과 디지털 환경 관련(Recommendations on Bill C-32: Regarding the Visual Arts and the Digital Environment)”이라는 보고서는 캐나다가 법안 C-32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수정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²³⁸⁾ 이밖에도, 캐나다의 CARFAC와 RAAV는²³⁹⁾ 시각 미술가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관심이 많다. 캐나다 미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캐나다 (문화)유산부, 온타리오 미술위원회(Ontario Arts Council)가 켈리 힐(Kelly Hill)과 캐

237) 퀘백시각미술작가재편(The Regroupment des Artistes en Arts Visuels du Québec/The Regroupment Artists in Visual Arts of Quebec; RAAV)은 퀘백의 시각미술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단으로 보호하는 전문적인 협회이다.

238) 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RFAC) and Regroupement des artistes en arts visuels du Québec(RAAV), "Recommendations on Bill C-32, Regarding the Visual Arts and the Digital Environment," (2010): 5.

239) 법안 C-32에 대해 보고서를 발행한 CARFAC와 RAAV는 파트너로서 작가들의 경제적·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와의 공정한 거래에 대해 대중을 교육시키고, 미술가법(Status of the Artist Act)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예술가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캐나다의 18,000명 이상의 시각 미술인들을 대변하는 대표로 인정받았으며, 이 중 4,000명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슬린 카프리오티(Kathleen Capriotti)에게 의뢰한 보고서인 “캐나다의 예술가 통계 프로파일: 2006년도 센서스를 기준으로(A Statistical Profile of Artists in Canada: Based on the 2006 Census)”는 예술가를 9가지 분류로 나누어 인구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인데,²⁴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페인터, 조각가, 시각 예술가로 묶인 예술가 군은 17,115명이며, 2005년도 평균 수입이 \$13,976(중간 수입 \$7,899)으로 나타나 모든 예술가군을 합친 평균인 \$22,731 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 예술가 군 중 17%를 차지하는 3,600명은 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¹⁾ 이처럼 캐나다 예술가들의 실상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와 캐나다의 원주민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법안 C-32 도입 촉구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미루어 볼 때, 캐나다에도 추급권이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해볼 수 있겠다.

3.4.1.3. 중국

요약: 2014년 제4차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 → 2014년 6월 저작권법 임시개

240) (1) 프로듀서, 디렉터, 안무가 등(producers, directors, choreographers, etc.), (2) 작가와 저술가(authors and writers), (3) 지휘자, 작곡가, 편곡자(conductors, composers and arrangers), (4) 배우와 코메디언(actors and comedians), (5) 다른 공연자(other performers), (6) 장인과 기능공(artisans and craftspersons), (7) 음악가와 가수(musicians and singers), (8) 시각 예술가(visual artists), (9) 댄서(dancers)

241) Canada Council for the Arts,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Ontario Arts Council, “A Statistical Profile of Artists in Canada: Based on the 2006 Census by Kelly Hill and Kathleen Capriotti from Hill Strategies,” (2009): 9-11.

정안 공개(추급권 포함) → 2017년 현재 법안 대기 중(의견 수렴 및 내용 보완)

중국에서 추급권에 대한 논의는 2010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 미술가 협회 회장이었던 우 조렌(吳作人, Wu Zuoren)의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 1990년 9월 중국 저작권법 입법 당시 「저작권법」의 통과를 기념하여 국가판권국은 유명 예술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우 조렌은 “추급권이 없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²⁴²⁾ 1990년 12월 11일에는 중국 미술가 협회, 우 조렌 순수미술 국제 기금, 중국 저작권 협회, 매일신문이 심포지엄을 열어 저작권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때 추급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²⁴³⁾ 지난 중국 저작권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중국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위하여 제1차 개정이 있었으며, 2010년에는 제2차 개정이 있었다.²⁴⁴⁾ 2010년에는 중국 양회[兩會]에 제출된 “저작권집단관리조직건설[關於加強著作權集體管理組織建設]”이라는 문건에서 추급권 제도 도입에 관해 공식적으로 다룬 바 있다.

242)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 25호: 중국의 추급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by 정상철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cessed May 1, 2017,

https://policydb.kcti.re.kr/frt/acp/mon/domesticMonthly/selectDomesticMonthlyIssuesDetail.do?nttId=61920&bbsId=BBSMSTR_000003001013.

243) 김민아, “미술작품 시장 및 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0), 39, <http://www.riss.kr/link?id=T12016486>.

244)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901>.

2010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²⁴⁵⁾ 위원이자 중국작가협회 부주석겸 국무원 참사장인 장강강[張抗抗]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 예술 작품의 추속권이 EU에서는 법률로 확립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중국도 경매시장이 점점 활발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지만 중국에는 예술작품이 시장경매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마땅히 대가를 획득할 권리가 없다. 정리하면, 현재 중국 저작권법에는 추속권 규정이 없어 중국 예술가들이 국외의 저작권료를 수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²⁴⁶⁾ 이어 2011년에는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중국 경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중국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²⁴⁷⁾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처음 입법된 이후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11년 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양회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 부국장과 중국영상저작권협회 부주석을 역임한 리위광[李玉光] 외 16명의 위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건의 초안”을 공동 제출하고, 「저작권법」 중 기한을 넘긴 조항 개정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특히 시각미술작품의 추속권[追續權]의 추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²⁴⁸⁾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45)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 최고 정책 자문회의,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되며, 국정 방침에 대해 토의·제안·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두산백과, accessed May 1, 2015,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20374.)

246)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돌보기 제 25호: 중국의 추속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by 정상철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cessed May 1, 2017, https://policydb.kcti.re.kr/ftr/acp/mon/domesticMonthly/selectDomesticMonthlyIssuesDetail.do?nttId=61920&bbsId=BBSMSTR_000003001013.

247)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901>.

은 최초 건의된 이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²⁴⁹⁾ 2012년 7월 6일 중국의 국가관권국이 공개한 「저작권법 개정안(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改草案) 초안 (제1차)」의 제11조(第十一條), 저작재산권(著作權中的財產權利包括), 제13항에는 추급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²⁵⁰⁾²⁵¹⁾ 2014년 3월 3일부터 10일간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어 위원들이 현행 저작권법과 국제 조약과의 정합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을 현행 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의 입법 과제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국무원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²⁵²⁾

가장 최근에 공표된 「저작권법 임시개정안(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訂草案送審稿) (제4차)」은 2014년 6월 6일에 공개되었다.²⁵³⁾ 「저작권법 임시개정

248) “[중국] 16명의 정협위원, 저작권법 개정 공동제안,”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229>.

249) PRC Copyright Law (Third Amendment Revision), Article 11 (2012) (China) quoted in David S. W. Ma, “Right to Integrity and the Proposed Resale Royalty and Notification Right in the PRC Copyright Law,”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 no. 2 (2013): 479.

250)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修改草案, Article 11 (2012),” [China] 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745.html>.

251) (十三) 追续权, 即美术作品、摄影作品的原件或者作家、作曲家的手稿首次转让后, 作者或者其继承人、受赠人对该原件或者手稿的每一次转售享有分享收益的权利, 追续权不得转让或者放弃

252)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1901>.

253) Eunice R. Chung, “Amendments To The PRC Copyright Law,” *DLA Piper Law Firm Blog*,

안」의 제2 저작권(第二章 著作權), 제1절 저작권 소유자 및 권리규제(第一節 著作權人及其權利), 제14조(第十四條)를 보면 여전히 추급권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²⁵⁴⁾ 미술이나 사진 혹은 원고의 재판매 시 수익금의 일부분이 원저자나 그 후손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다.²⁵⁵⁾²⁵⁶⁾ 이와 같은 성과는 2014년 1월 15일 추급권 관련 단체인 CISAC가 중국의 추급권 입법 로비 활동을 위해 베이징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사무실을 연 것과 관련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²⁵⁷⁾ 2017년 현재 추급권이 포함된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은 추급권 외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각계 전문

August 1, 2014, <https://www.remarksblog.com/2014/08/amendments-to-the-prc-copyright-law-the-practical-implications-for-rights-owners/>.

254) "PRC Copyright Law (Fourth Amendment Revision), Article 14 (2014)," [China] China Law Translate,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chinalawtranslate.com/prc-copyright-law-revision-draft-for-solicitation-of-comments/>.

255) **第十四条** 美术、摄影作品的原件或者文字、音乐作品 的手稿首次转让后, 作者或者其继承人、受遗赠人对原件或者手稿的所有人通过拍卖方式转售该原件或者手稿所获得的增值部分, 享有分享收益的权利, 该权利专属于作者或者 其继承人、受遗赠人。其保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256)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修订草案送审稿), Article 14 (2014)." [China] 国务院法制办公室,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chinalaw.gov.cn/article/cazjgg/201406/20140600396188.shtml>.

257) "The Resale Right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witzerland?" [Denmark] VG Bild-Kuns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bildkunst.de/en/copyright/resale-right/the-resale-right-in-the-united-states-china-and-switzerland.html>.

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도 추급권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과 더불어 만약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의 주요국들 대부분이 추급권을 도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CISAC가 베이징 사무실을 오픈한 것과 2014년 추급권 신설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제출되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에서 입법을 요구한 제도가 민간의 반대에 의해 좌절된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편이다.²⁵⁸⁾

3.4.1.4. 뉴질랜드

요약: 2009년 3월 추급권 관련 법안 의회 제출 → 무산

뉴질랜드는 2007년 4월 뉴질랜드 문화유산부(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CH)에서 제출한 토론 보고서인 “시각미술가 재판매 권리: 뉴질랜드에 적용 가능한 옵션(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으로 인해 추급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 되었다. 뉴질랜드 문화유산부는 이 제안서에서 1994년의 저작권법에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으로 판단하여 1994년의 저작권법에 9A를 새롭게 신설하고, 204A부터 204R에 해당하는

258)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 25호: 중국의 추급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by 정상철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cessed May 1, 2017, https://policydb.kcti.re.kr/frt/acp/mon/domesticMonthly/selectDomesticMonthlyIssuesDetail.do?nttId=61920&bbsId=BBSMSTR_000003001013.

부분에 추급권 조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사진, 조각, 콜라주, 모델, 예술적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부터 페인팅, 드로잉, 다이어그램, 지도, 차트, 도면, 판화,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프린트 등과 이름 있는 작가가 제작한 장신구나 가구도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건축 작품은 제외하였다. 로알티 비율은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저 판매가 기준은 \$500로 설정하였고,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 적용 판매 방법은 작품이 경매전문회사, 갤러리, 딜러, 혹은 중개인(intermediary)을 통해 판매되거나 미술시장 전문가가 미술작품 거래에 참여했을 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작가나 호혜주의 하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작가로 설정되었으며, 처벌규정은 204P에 포함시켰고,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재판매 로알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⁵⁹⁾ 이밖에도 재판매 로알티 지불 책임 주체의 경우 판매자와 판매에 참여했던 중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EU와 비슷한 수준인 \$25,000으로, 재판매 로알티는 물품·용역소비세 구매자 프리미엄, 그리고 에이전트 수수료(Agent's Commission)를 제외한 ‘해머 프라이스’나 ‘티켓 프라이스(Ticket Price)’에서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²⁶⁰⁾

위에서 언급한 제안서에서는 추급권 도입 시 뉴질랜드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259) New Zealand Arts, Culture and Heritage. "Copyright (Artists' Resale Right) Amendment Bill (by Minister Hon Judith Tizard)." (2008): 1-24.

260)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 (Discussion Paper)," (2007): 7-8.

도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2006년도 뉴질랜드 경매에서 판매된 뉴질랜드 작가의 작품은 3,600점(작가 801명)이었으며, 대부분이 페인팅, 프린트, 석판화, 사진 작품이었고, 재판매 로열티에 해당되는 작품은 2,800점(작가 636명)으로 집계되었다. 작품의 총 판매 액수는 \$14.17 million(약 115억 원)이었고, 이중 재판매 로열티에 해당되는 작품의 총 판매 액수는 \$9.96 million(약 80.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작가에게 재판매 로열티로 분배되는 금액은 \$0.498 million(약 4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추급권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15%로 설정할 경우에 \$0.423 million(약 3.5억 원), 20%로 설정할 경우에 \$0.398 million(약 3.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작품 가격대의 경우에는 2006년도 뉴질랜드 경매에서 판매된 801명의 뉴질랜드 작가의 3,600점의 작품 중 99%가 \$100,00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01명 중 5% 만이 \$100,000 이상에 해당되었다.

뉴질랜드는 동 제안서에서 최저 판매가 기준을 \$100, \$500, \$1,000, \$2,000 중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고심해 왔다. 2006년 기준 재판매 로열티에 해당하는 2,800점의 작품(작가 636명)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저 판매가 기준이 \$100일 경우 220점의 작품(작가 138명)이 제외되었으며, \$500일 경우 840점의 작품(작가 373명)이 제외되었고, \$1,000일 경우 1,297점의 작품(작가 475명)이, \$2,000일 경우 1,969점의 작품(작가 570명)이 채택에서 제외되어 \$2,000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경매에서 팔린 작품의 55%에 육박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를 EU와 비슷한 수준인 \$25,000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10년 동안 \$25,000의 재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작품 액수인 \$500,000 이상의 가격에 팔린 작품이 3점 밖에 없지만 제안서에서는 EU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²⁶¹⁾

많은 논의 끝에 추급권 관련 법안은 2009년 3월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미술가

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행정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에 뉴질랜드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갤러리나 작가들이 자체적으로 재판매 로얄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2015년 2월에는 뉴질랜드의 <디팟 아트스페이스(Depot Artspace)>라는 갤러리의 담당자 린다 블링코(Linda Blincko)가 갤러리에 전시된 79점의 작품 중 \$1,000불 이상의 가격으로 팔린 작품에 한해서 5%를 작가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자체적으로 선언하며 《(Pre-Loved, Re-Loved), 2015.2.7.-2015.2.25.》 전시를 홍보하였고, 이는 추급권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 2015년 8월에는 오클랜드(Auckland)의 갤러리 지구에 문을 연 공동창업자 사이몬바워뱅크(Simon Bowerbank)와 찰스니나우(Charles Ninow)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인 <바워뱅크니나우(Bowerbank Ninow) 갤러리>가 자발적으로 재판매 시 경매 해머 프라이스의 2.5%를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발표하였다. 니나우는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로얄티 지급을 시행하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언젠가는 추급권을 도입하는 나라 목록에 이름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밝혔다.²⁶²⁾ 이 갤러리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26명의 뉴질랜드 작가에게 \$9,025.25의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하였다고 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²⁶³⁾

이밖에도 추급권을 개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작가도 있었다.

261)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 (Discussion Paper)," (2007): 26, 28, 43, 45.

262) Jenny White, "New Zealand Business Breaks New Ground with Voluntary Artists' Resale Royalty," *Private Art Investor* (Surrey, UK), July 1, 2015, <http://www.privateartinvestor.com/art-business/new-zealand-business-breaks-new-ground-with-voluntary-artists-resale-royalty>.

263) "Resale Royalty," [New Zealand] Bowerbank Ninow, accessed June 1, 2016, <http://bowerbankninow.com/resale-royalty/>.

1972년 뉴질랜드 웰링턴의 콜렉터 레스&밀리파리스(Les & Milly Paris)는 갤러리 오너인 피터 맥레비(Peter McLeavey)에게 \$400를 주고 한 작품을 사들였다. 이 작품은 마이클 스미서(Michael Smither, 1939-)의 <밴 안의 가족(Family in the Van), 1971>이라는 작품[도판 13]으로 작가는 \$100의 딜러 수수료를 제하고, \$300을 작품 값으로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 작품은 <아트+오브젝트(Art+Object)> 갤러리에서 40년 만에 무려 500배인 \$200,000에 재판매되었다. 이후 충격을 받은 작가 스미서는 개인적인 추급권 계약서를 만들어 그에게 직접 작품을 사는 콜렉터들을 대상으로 재판매 가격의 5%를 지급하라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스미서는 약 20-30개의 약정을 맺었고, 이 중 2-3번의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마치 ‘양심 상자(honesty box)’와도 같아 재판매를 일일이 추적하는 일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변호사를 필요로 해서 자신이 경찰인지 작가인지 헷갈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작가로서 작품에 집중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²⁶⁴⁾ 이처럼 뉴질랜드가 2009년 3월 의회에 제출한 추급권 관련 법안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이유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추급권 대비 탄탄한 연구 자료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갤러리나 작가들이 자체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라도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관측된다. [뉴질랜드는 미국, 중국, 캐나다와 더불어 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이다.]

3.4.2. 도입 추진 논의 중인 국가들

264) "Or Fair Share? Pure Greed," *Sunday Star Times* (Auckland, New Zealand), Feb 15, 2015,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655119693?accountid=6802>.

3.4.2.1. 스위스

요약: 2014년 3월 스위스 의회 저작권법 내 추급권 도입 요구 제안 상정 →
2014년 법안 도입 실패

스위스에서는 1988년 의원 도리스 모프(Doris Morf)가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에 추급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연방 의회에 요청하였지만 결국 1992년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 누락되었다. 2001년에는 의원 레기네 애플와트만(Regine Aepli Wartmann)이 스위스도 2001년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에 따라 추급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미술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관련 단체들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도입이 재차 무산되었다. 2006년도 스위스의 저작권법 부분 개정 당시 미술 거래상들은 치밀한 로비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것을 막았으며,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위스 문학·시각미술저작권단체(Schweizerische Urheberrechtsgesellschaft für Literatur und bildende Kunst; PROLITTERIS)와 예술가들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 간의 합의 도출이 실패로 돌아갔다. 2007년에는 아니타 타나이(Anitha Thanei)에 의해 추급권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무산되었고, 2013년 12월에는 의원 베르나 루긴블(Werner Luginbühl)에 의해 추급권이 다른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요청되기도 하였다. 같은 달에는 추급권을 소개하는 캠페인이 스위스 PROLITTERIS와 스위스전문시각미술협회(Berufsverband Visuelle Kunst; VISARTE)에 의해 개최되기도 하였다.²⁶⁵⁾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265) "The Resale Right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witzerland?" [Denmark] VG Bild-Kuns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bildkunst.de/en/copyright/resale-right/the-resale-right-in-the-united>

의 다양한 입법적 절차 속에서 추급권을 도입하려는 작가 단체들과 다른 로비들의 시도는 현재까지 실패하여 왔다.

스위스의 추급권의 도입은 국제 미술 시장에서 스위스 미술 시장의 점유율 증가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인 간섭을 받아왔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추급권의 영향 아래 있는 모더니티(modernity) 미술작품들의 2차 시장이 런던에서처럼 수익이 나지 않으며, 작품 거래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스위스 컨템포러리 미술 분야는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추급권의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스위스 미술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²⁶⁶⁾ 딜로이트와 아트택틱(Deloitte & ArtTactic)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스위스의 수출은 2000년도에 비해서 57%가 성장했고, 수입은 30%가 성장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추급권의 부재가 그 중 하나라는 추측 또한 제기된다.²⁶⁷⁾ 하지만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스위스에서도 추급권 도입을 위한 로비가 계속되고 있고 EU도 스위스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급권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추급권 관련 보고서는 스위스연방지적재산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의해 2017년 발간을 목표로 작성 중에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스위스의 추급권 도입을 어떻게 파악할지 기대해볼 수 있겠다.²⁶⁸⁾

-states-china-and-switzerland.html.

266) Dirk Boll, "Chapter 37: Switzerland,"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312.

267) Deloitte & ArtTactic, "Art & Finance Report 2016 (4th edition)," (2016): 100.

268) "Switzerland: Fourth Attempt to Introduce the Artist Resale Right," [UK] The Institute of Art

3.4.2.2. 일본

요약: 2016년 추급권 관련 심포지움 개최

일본에서도 추급권 도입에 대한 연구나 토론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가장 최근 있었던 추급권 관련 움직임은 2016년 3월 CISAC와 일본 미술가권리보호단체(アーティスト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日本協會; JASPAR), 일본 문화청(文化廳; ACA), 일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文部科學省; MEXT)가 와세다 대학교[早稻田大學]의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 RCLIP)와 함께 “재판매권리 도입 가능성(The Potential for Introducing the Resale Right)”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진행한 것이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CISAC의 사무총장인 가디 오론(Gadi Oron)과 RCLIP의 겸임 연구원인 아키코 오가와(Akiko Ogawa) 박사 등이 추급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²⁶⁹⁾ 일본에서는 추급권 관련 연구나 발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법 추진은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 Law, accessed June 1, 2017,

<http://www.ial.uk.com/switzerland-fourth-attempt-to-introduce-the-artist-resale-right/>.

269) [EU] European Visual Artists(EVA). “Japan: steps forward for adoption of the Resale Right, The list of countries which are considering an adoption of the Resale Right is growing.” Accessed July 1, 2016, <http://resale-right.org/japan-steps-forward-for-adoption-of-the-resale-right>.

4. 국내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각적 고찰

제 4장 국내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각적 고찰 부분에서는 먼저 국내 미술 시장을 검토하였다. 국내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를 조사하였고, 국내 미술 시장 생태계를 가늠해 보았다. 앞서 제3장의 연구에서는 2001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 이후 유럽 회원국 간의 법률 조화가 이루어져 법령의 큰 틀은 제시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재량 행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법리적 및 입법적 관점에서 각국의 입법례의 차이를 통해 각국이 추급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규정하고 있는지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서술하여 추급권 입법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미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와 국내 관련법을 연구하였고, 입법 쟁점 및 시사점을 통해 입법 방향 및 고려사항을 도출해 내었다. 이밖에도 추급권 입법에서의 예외 규정과 추급권 추심기관 도입에 대한 모색 등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추급권 제도를 연구하였다.

4.1. 국내 미술 시장 검토

4.1.1. 국내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 합의된 미술 분야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게 직업을 총 10개의 대분류로 표준화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미술 관련 직종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현재의 미술 분야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가장 최신의 개정안은 2007년도에 이루어진 6차 개정안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르면 미술 분야의 인력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는 미술 분야의 2841. 화가 및 조각가,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등의 창작관련 인력이 분포하고 있다.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에는 79111. 도자기 공예원, 79113. 목 공예원 등 기술관련 인력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관련 인력과 기술관련 인력을 나눈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소분류를 보면 일부 겹치는 직종들도 있다. 미술 분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타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미술 관련 직종 분류체계에서도 미디어 아티스트, 퍼포먼스 아티스트, 환경 아티스트 등 배제되어 있는 직종들이 많은데 이들을 **2841. 화가 및 조각가**로 전부 치부해 버리기에는 성향이 매우 다르므로 추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술 분류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미술 분류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추후 국내 추급권 도입 시 ‘적용 판매 경로’에서 등장하는 ‘미술시장전문가’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복지’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예술인의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문제’를 국정 의제화 하면서부터이다. 해외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UNESCO가 현대 사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의제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1974년에는 ILO의 자문을 얻어 ‘예술인의 지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부터이다. 일련의 노력 끝에 1980년 10월 27일 UNESCO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를 채택하여 이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수립했다.²⁷⁰⁾ 이 권고에서 정의하는 예술가는 창조적으로 표현하거나, 미술작품을 재창조하여 제공하고, 그의 삶에서 ‘예술적 창작(artistic creation)’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협회나 고용 여부에 구속받지 않고 예술가로 인식을 받는 사람이다. 이 문서는 위와 같이 정의한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은 곧 한 국가의 문화적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예술가 자체도 문화적 유산으로 보고 있는 UNESCO의 포용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UNESCO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의 보호를 위해 예술가의 예술적 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며, 사회에서 이들의 ‘경제적인 안전장치(economic safeguards)’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발표된 새 미술정책 보고서 『미술의 힘』에서 1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가 미술 정책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예술인복지 정책이 국가 의제로 설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²⁷¹⁾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2.11.18.]」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련한 다양한 문구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정책적

270)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88, no. 7 (2012): 7-8.

271)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88, no. 7 (2012): 10-11.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만성적인 인력 과잉 배출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복지의 수준 문제로 인해 예술인들은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2012년에는 “모든 예술인들이 직업으로서 미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보호 장치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중 산재보험만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계속되는 산재보험 관련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예술인의 ‘특수성’과 이에 수반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예술인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²⁷²⁾ 예술인의 상당수는 근로자로도, 자영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영역에서 프리랜서의 형태로 미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가까운 지위라고 할 수 있다.²⁷³⁾ 예술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운 지위라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률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2013년 10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조사 결과 “비정규직 예술인 57,72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274명으로 가입률이 0.4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복지공관에서 산업재해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⁴⁾ 최근 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2016년 5월까지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건수는 980여 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석 달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자동 해지된 상태로, 고정 수익이 없는

272)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 no. 2 (2011): 98.

273)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2): 2.

274) 임춘원, “비정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경기신문*, August 15, 2013,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14>.

예술인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결과가 나왔다.²⁷⁵⁾

이밖에도, 예술인의 보험가입률 연구는 2014년 한해 14개 분야의 예술²⁷⁶⁾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5,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건강보험 95.2%, 국민연금 56.8%, 산재보험 26.0%, 고용보험 25.1%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타 분야에 비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⁷⁷⁾ 이처럼 예술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예술가는 저조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복지사업 차원에서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작지원금이 일부 예술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예술인들이 불규칙하게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들의 소득은 ‘소득평준화전략(income averaging)’마저 적용되지 않아 개인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예술인의 ‘특수성’은 아직도 예술인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추급권과 같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도입은 예술인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에 있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예술가는 일종의 사업가(entrepreneur)로 볼 수 있다. 예술가는 작업실이 있어야 하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관련 재료들을 구입해야 하고, 완성된 작품을

275) 임수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980명 불과,” *YTN*, May 16, 2016,

http://www.ytn.co.kr/_ln/0106_201605160848341156.

276)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277) (주)월드리서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25.

판매하는 유통 경로가 있어야 하며, 작품과 작가를 마케팅하고, 주요 컬렉터와 친분을 유지하고, 판매한 작품들을 유지·보수해야 하며, 완성된 작품들의 보관·관리에 힘써야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이를 옆에서 지원해 줄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존 H. 메리맨(John H. Merryman) 교수는 예술가들은 체계적인 작품 기록 유지, 쇼 준비, 작품 판매 취급, 미납 부채 처리, 각종 서신 답변, 작품 촬영, 작품 프레이밍(framing) 작업, 작품 보험 처리, 작품 포장 및 발송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런 일에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작품 활동에 집중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²⁷⁸⁾ 현대에 들어서는 더 복잡한 차원의 일들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활동 이외에도 각종 협회/단체 등에 가입 및 활동, 작품 및 작가 마케팅을 위한 SNS 활동, 작가 개인 웹사이트 관리, 각종 개인전/단체전 및 국내외 미술 페어 출품, 전시 도록 출판, 각종 세금 납부 이외에도 정부 정책 및 지원 등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신청하거나,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술법 관련 내용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등 점차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인식한 영국에서는 미술가들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 미술가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트퀘스트(Artquest)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는 런던미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과 영국미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가 지원하고 있는데,²⁷⁹⁾ 2009년 11월에는 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 후,²⁸⁰⁾ 현재까지

278) John Henry Merryman and Stephen K. Urice and Albert E. Elsen,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5th ed.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595.

279) "About," [UK] Art Ques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quest.org.uk/>.

도 많은 영국의 미술가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예술가들의 노력 대비 삶의 질이나 임금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2011년 국립미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이 발표한 “미국 미술가와 미술 관련 노동자: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5-2009)”와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센서스(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 2010)” 연구 결과를 보면 각 미술가들의 직업 및 특정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5-2009년 미술가들²⁸¹⁾의 중간 임금 및 급여는 \$33,982 달러로, 작가나 저자²⁸²⁾의 평균 임금 및 급여 \$44,792 달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³⁾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2014년도 국내 예술인 가구의 총 수익은 ‘중앙값 4,000만원’, ‘평균값 4,684만원’으로 ‘2천만 원 미만’이 15% 정도였고, ‘예술 활동

280) Henry Lydiate, “Artlaw Online: Artquest’s Artlaw Services,” *Art Monthly* 332, 2010, 41.

281) 화가, 조각가, 일러스트레이터, 멀티미디어 미술가 포함, 사진작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제외

282) 광고 작가, 잡지 작가, 소설가, 희곡작가, 극작가, 영화작가, 작사가, 그리고 크로스워드 퍼즐 (crossword-puzzle) 제작자 등등

28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NEA),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5-2009) and the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 (2010) (NEA Research Note #105),” (2011): 10, quoted in Valentina Poland, *Visual Artists and Resale Royalties: Considerations, Copyright and the Droit De Suite Issue* (New York, NY: Nova Science, 2014), 30.

수익이 없다'라는 응답도 36.1%로 적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은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전업 예술인'의 70%이상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어,²⁸⁴⁾ 응답한 14개 분야의 예술인 5,008명 중 절반이 겸업 예술인 이라는 점은 이 분야 종사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이다.

예술인 자체도 문화적 유산으로 보는 UNESCO의 태도처럼 한국도 예술인의 법적 지위,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은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지역, 사회, 국가, 세계인의 인류 문화적 유산임으로 이를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 인류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술 분야의 정의나 분류체계가 우선 재정립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연구해 보아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예술인들의 실상은 동일한 조사를 수행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심각하게 나타났기에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추급권이 제도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4.1.2. 국내 미술 시장 생태계

앞 장에서는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각적 고찰을 위해서 국내 미술 시장의 검토를 통해 국내 미술 작가의 법적 지위, 권리 및 복지의 수준을 진단해 보았고, 이 장에서는 국내 미술 시장 생태계 분석을 통해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와 국내 미술 시장의 인력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미술 시장

284) (주)월드리서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19-21.

규모가 객관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연구인 『2008 미술 시장 실태 조사』를 그 기점으로 본다. 이 보고서는 통계조사, 설문조사, 외부 관련기관 문헌자료 등을 통해 국내 미술 시장 유통영역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미술 시장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미술 작가와의 직거래, 개인 간의 직거래, 음성화 된 거래나 이 조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인터넷 사이트나 외국에서의 거래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에 잡히는 수치들만을 포괄하여 추산한 연구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한국 미술작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논문²⁸⁵⁾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미술작품 유통의 형식별 분류에서 화랑거래가 약 40-50%, 건축물 미술작품이 약 20% 전후, 개인거래가 20% 전후, 경매가 10% 전후, 인터넷거래가 10% 미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⁸⁵⁾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2014년 한해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화랑거래가 약 51.46%(2,048억), 경매가 약 19.55%(778억), 아트페어가 약 15.68%(624억), 건축물 미술작품이 약 12.8%(510억), 미술은행이 약 0.5%(20억)으로 추산되며, 이전의 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화랑 거래 점유율이 50% 정도를 차지해 온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 유럽순수미술재단(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TEFAF)의 미술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2014년도 글로벌 미술 시장의 규모는 약 €51 billion(약 64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한다. 가장 최신의 버전인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 미술 시장

285) 최병식, “한국 미술작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작품 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5, no. 2 (2002): 51.

작품거래 규모는 **총 3,496억 원**(화랑 2,048억 원, 경매회사 778억 원, 아트페어 624억 원)으로 나타났다.²⁸⁶⁾ 이를 계산해 보면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는 총 3,496억 원으로 세계 미술 시장에서 약 0.5%에 못 미치는 규모로 추산해 볼 수 있겠다.

국내 미술 시장 생태계는 크게 **(1) 창작, (2) 유통·매매, (3) 소비**(민간영역 & 공공영역) 3단계로 나뉠 수 있다. 주요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창작의 경우 예술가가 이에 해당하며, 유통·매매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미술관, 갤러리, 경매회사, 아트페어, 인터넷 거래 등이다. 소비의 경우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개인 및 기업 등에 이에 해당되고,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미술은행제도, 미술관 등을 들 수 있다.²⁸⁷⁾ 국내 미술 시장의 주요 유통영역은 다양한 통계 보고서를 통해 수치를 추산해 볼 수 있다. 『2015 미술 시장실태조사』의 경우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의 주요 유통영역 결과를 보면 주요 유통영역으로는 화랑(기획·상설·대관 화랑), 경매회사(일반·온라인 경매회사), 아트페어(화랑참가·작가참가 아트페어)를 포함시켰고, 공공영역으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미술관(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전국 국·공립·대학·사립미술관)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중 주요 유통영역의 규모는 화랑 433곳, 경매회사 10곳, 아트페어 35곳으로, 이를 합한 업체 수는 **총 478곳**으로 나타났다.²⁸⁸⁾

국내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정 회사들의 이익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유통영역의 시장 점유율을

28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34.

287)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19.

28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36.

보면, 화랑 433곳 중 상위 10개 화랑의 시장 점유율이 82.6%, 경매회사 10곳 중 상위 2개 경매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0.3%, 아트페어 35곳 중 상위 5개 아트페어의 시장 점유율이 74.2%으로 나타나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독식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⁸⁹⁾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2003년부터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미술관 수는 총 202개소로 이중 사립 미술관이 전체 69.3%를 차지하는 140개소이며, 국립미술관 1개소, 공립미술관 50개소, 대학미술관 11개소로 나타났다.²⁹⁰⁾ 따라서 주요 유통영역의 규모는 화랑(갤러리) 433곳, 경매회사 10곳, 아트페어 35곳, 미술관 202개소로, 이를 합한 업체 수는 **총 680곳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신설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권장시기 → 의무화시기 → 규제완화시기 → 기금제도입기’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정착되었다.²⁹¹⁾ 이 제도로 인해 공공미술작품 시장이 활성화 되었는데 1995년 이후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2016년 10월 26일 기준) 총 15,140점이며 전체 미술작품의 가격은 1조 99억 원(1,098,626,000,000원)에 육박한다.²⁹²⁾

28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41.

290)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2015): 25-27.

291) 1972년 8월14일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비의 1% 이상에 한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권장사항으로 도입되었고, 1995년 7월 9일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비의 1% 이상에 한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다. 2000년 7월 13일에는 설치비용을 건축비의 1% 이하로 완화하였고, 2011년 11월 26일에는 ‘미술장식’ 대신에 ‘미술작품’ 개념이 도입되며, 선택적 기금제의 채택으로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도 한해에만 총 490점의 건축물 미술작품 510억 원어치가 설치되었다.²⁹³⁾

정부 미술은행의 경우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2005년 2월 설립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은 공모형 또는 제안형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형식이며, 제안형은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작품가치심사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구입할 작품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²⁹⁴⁾ 2016년 9월 21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술은행은 2005년 설립 이래 12년차가 되었으며, 2015년까지 총 190억 원의 예산으로 2,997점의 작품을 구입하였고, 13,974회 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⁹⁵⁾ 2014년도 한해에만 총 241점의 작품이 20억 원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⁹⁶⁾ 미술관의 경우 2014년 한해 국립·공립 미술관에서는 107억 원, 사립·대학 미술관에서는 15억 원을 작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⁷⁾ 이처럼, 2014년도 한국 미

292) 양현미 외,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개선 연구: 작품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과제 (2014): 22-23.

293)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2.

294) “미술은행 소개,” *국립현대미술관*,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bank.go.kr/home/contents.do?loc=h11>.

295) “보도자료 [국감기] 미술은행 제도 시행 12년, 작품구입의 기회의 형평성 고려 필요,” 국회의원 유은혜 블로그, Accessed July 1, 2016, <http://blog.naver.com/way2yoo/220817508930>.

29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2.

술 시장의 총 작품거래 규모, 총 거래 작품 수,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수, 공공영역인 미술관 수,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설치된 작품 수 및 전체 작품 가격 총액, 정부미술은행의 총 예산 및 전체 구입 작품 수 등은 자료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술 작가의 수나 컬렉터 수 등은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앞서 언급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 연구에는 예술가들의 정확한 수를 예측한 내용이 없지만 작품 판매수를 통해 유추해 보면, 2014년도 의 경우 거래 작품 수는 **총 26,912점**(화랑 10,045점, 경매회사 11,414점, 아트페어 10,028점)으로²⁹⁸⁾ 중복 작가를 제외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수는 26,912명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 결과 예술가의 절반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예술 활동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이며, 전업 예술인이더라도 70% 이상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²⁹⁹⁾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정확한 숫자를 얻기 어렵다. 관련 미술 협회 등을 통해 미술작가 수를 유추해 보았을 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기준 회원수가 31,883명 정도이며³⁰⁰⁾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의 경우 각 회원 수가 40,0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 활동 증명자의 경우 16,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³⁰¹⁾ 미술작가 수를 추산하는 데 있어 가장 어

297)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167.

29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34.

299) (주)월드리서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21.

300) “협회소개, 회원 현황,”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kfaa.or.kr/>.

려운 점은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과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미술작가들의 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규제 없이 신설한 미술 관련 학과의 수가 폭증하여,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매년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16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도 미술 전공 관련³⁰²⁾ 대학 학부 졸업자가 19,516명, 석사 졸업자가 2,948명, 박사 졸업자가 346명으로 나타나³⁰³⁾ 2015년 한 해에만 미술 관련 학과 졸업생이 **22,810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미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컬러리스트기사 등)과 전공자는 아니지만 취미나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도 잠재적인 미술 작가 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정리하면, 국내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현역 작가는 약 30,000명 이내이며, 잠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가들은 기존 대학교·대학원 관련 전공자만 포함해도 현역 작가 수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처럼 정확한 미술가의 숫자나 미술 관련 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국내 관련 보고서들이 미술가 혹은 미술 관련 인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범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보고서마다 숫자에서 큰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301) 이윤미, “<이 사람-예술인 생활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 예술인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헤럴드 경제*, July 29, 20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9000392&md=20150729110120_BL.

302) <예체능계열>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303) “2016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accessed July 1, 2016,

<http://kess.kedi.re.kr/index>.

만들어야 향후 미술 작가의 인력 규모나 컬렉터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판매 규모 연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추급권 도입에 있어 효과적인 법안 및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추급권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한국 미술 시장이 역사가 짧고, 세계에서 약 0.5% 정도를 차지하는 작은 미술 시장이기 때문에 추급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 자체가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82개국 중 등락에 따라 10-2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경매 시장의 경우 2015년에 들어서는 김환기(1913-1974), 박서보(1931-), 이우환(1936-), 정상화(1932-) 등을 필두로 한 단색화 열풍과 K-옥션(K-Auction) 붐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는 깜짝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도 앞지른 규모이다.³⁰⁴⁾ **[표 33 참고]** 이처럼 현재 국내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와 국내 미술 작가 인력 규모는 추급권 제도 도입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33]

국내 미술 시장 규모 요약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 작품 거래 규모 → 총 3,496억원]	
1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 작품 거래 규모	✓ 화랑 2,048억 원 (51.46%)
	✓ 경매회사 778억 원 (19.55%)
	✓ 아트페어 624억 원 (15.68%)
	✓ 건축물 미술작품 510억 원 (12.88%)

304) Art Market Monitor of Artron(AMMA), "The Art Market in 2015," (2016): 25.

		✓ 미술은행 20억 원 (0.5%)
2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의 주요 유통영역	<p>[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의 주요 유통영역 → 총 478곳]</p> <p>✓ 화랑(기획·상설·대관 화랑) 433곳</p> <p>✓ 경매회사(일반·온라인 경매회사) 10곳</p> <p>✓ 아트페어(화랑참가·작가참가 아트페어) 35곳</p> <p>[공공영역]</p> <p>✓ 건축물미술작품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p> <p>✓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운영)</p> <p>✓ 미술관(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전국 국·공립·대학·사립미술관) 202개소</p>
3	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 거래 작품 수	<p>[2014년도 국내 미술 시장 거래 작품 수 → 총 26,912점]</p> <p>✓ 화랑 10,045점</p> <p>✓ 경매회사 11,414점</p> <p>✓ 아트페어 10,028점</p>
4	2015년도 국내 미술 시장 작가 수 예측	<p>[2015년도 국내 미술 시장 현역 작가 수 약 30,000명 이내 (잠재 작가 수 예측 불가능)]</p> <p>✓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회원 수 31,883명</p> <p>✓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 수 40,000명 미만</p> <p>✓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 활동 증명자 16,000여명</p> <p>✓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5년 미술 관련 학과 졸업생 총 22,810명 (학사 19,516명, 석사 2,948명, 박사 346명)</p>

4.1.3. 국내 미술 시장과 추급권 도입 찬반론

국내에서 추급권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추급권 제도 도입에 대해 국내 화가들과 미술협회 등은 찬성하는 반면, 갤러리와 경매사 등 미술작품 유통업체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추급권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시 추급권에 대해 설명한 후 추급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찬성’이 80.3%, ‘반대’가 19.7%으로 조사되었다. 작가 영역의 찬성비율은 90.1%(미술작가 90.5%, 사진작가 80%)이며, 예비 작가는 94.3%, 공공 영역은 69.8%(국립미술관 47.4%, 사립미술관 79.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통 영역의 찬성비율은 35%(갤러리 34%, 경매회사 28.6%, 아트페어 100%)로 작가 영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³⁰⁵⁾ 문헌 연구를 통해 추급권 도입 찬반 논의에 대한 쟁점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입장을 나뉘볼 수 있겠다. 추급권 도입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34참고]

[표 34]

추급권 도입 찬반 논의 요약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미술	✓ 미술 시장의 위축 가능성
시장 ✓ 미술 시장 투명성 확보	✓ 음성적 미술 거래의 상승 가능성
측면	✓ 세계 주요 미술 시장 축의 이동 가능성

305) “추급권(追及權)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8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신고 및 세금 신고 미지수 문제 ✓ 추급권 도입 시 딜러들의 작품 가격 인하 요구 문제 ✓ 한국 미술 시장의 특수성 (짧은 역사, 파이가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와의 법 통일성 도모 	
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Right of Integrity) 유지에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법적 규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거래의 경우 추적 불가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작가들에게 좀 더 나은 창작 환경 제공 ✓ 미술 작가들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라 보엠 혹은 가난한 예술가 이론('La Bohème' or 'Starving Artists' Theory)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 발생 ✓ 추급권 징수 및 분배 기관의 설립 비용 부담
정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저작자들과 동일선상(equal footing)에 놓일 수 있는 발판 마련 혹은 불평등 해소 ✓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의 역할 및 구조적 문제의 해결 ✓ 창작성이 저하된 작가들에게 노후 연금의 역할 ✓ 위작시비가 있을 시 보증의 역할 ✓ 창작 의욕 상승에 기여 ✓ 예술가의 죽음 이후 작품 관리 및 보존비용으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유명 작가 혹은 사망한 작가에게 혜택의 쏠림 혹은 부의 재분배(wealth redistribution) 현상 ✓ 미술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운택하다는 주장
미술		
작가		
측면		

4.1.3.1. 찬성 입장

다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는 “우리는 미술을 보존하는데 있어 추급권의 재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이 일을 하고 있고, 작가들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영국 법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³⁰⁶⁾ 이와 같이 추급권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찬성 측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미술 시장 투명성 확보:** 스위스의 유명 아트 딜러인 이브 부비에(Yves Bouvier, 1963-)는 2015년 2월 모나코에서 자금 세탁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미술계에 비일비재하다. 추급권 도입 시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절하며 미술 시장의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2) EU와의 법 통일성 도모:** 2001년 ‘지침’과 2006년의 ‘규정’에 따라 모든 EU 소속 국가들이 재판매 로열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갔으며, 세계 미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EU 국가들과 법체계 조화를 이루는 일이 필수적이다. **(3)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Right of Integrity) 유지에 일조:** 추급권은 작가 본인이 자신이 생산한 모든 작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재판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고, 만약 원저작자가 이런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를 대신해 공적인 기관이 미술작품에 대한 추적과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미술작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데 일조할 것이다.³⁰⁷⁾ 또한 작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저작인격권

306) Henry Lydiate, “Artist’s Resale Right: Bought and Sold,” *Art Monthly* 353, 2012, 41.

307) 소병희, “미술작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7, no. 2 (2004): 14.

의 유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강화: 한스만과 산틸리(Hansmann and Santilli)에 따르면 추급권은 법률로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는 극도로 시행하기 어려운 작가와 딜러의 사이의 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³⁰⁸⁾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의 형태로, 부실 계약서를 통해 혹은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작가와 딜러 사이의 계약에서 추급권의 도입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5) 미술 작가들에게 좀 더 나은 창작 환경 제공:** 추급권료는 미술작가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다. **(6) 미술 작가들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라 보엠 혹은 가난한 예술가 이론('La Bohème' or 'Starving Artists' Theory) 근거]:** 여러 학자들은 작품의 가치가 증대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대상은 작가 본인이 아니라 갤러리, 경매 회사, 딜러, 콜렉터 등 거래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추급권 제도는 작가들을 경제적으로 보조/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샌디에고 대학교(University of San Diego) 법대 교수인 허버트 라제로(Herbert Lazerow)에 따르면, 가난한 작가들은 집세나 식비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는 등 착취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³⁰⁹⁾ 협상력이 낮은 작가들을 보호해줄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추급권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7) 다른 저작자들과 동일선상(equal footing)에 놓일 수 있는 발판 마련

308) Michael Rushton,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sts' Inalienable Righ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5, no. 4 (2001): 13.

309) Herbert Lazerow, *Mastering Art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4), 169.

혹은 불평등 해소: 추급권의 도입은 미술 작가들의 ‘평등의 문제(matter of equality)’이다. 재판매 권리는 미술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작품 가치에서 공평한 몫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다른 저작자들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발판이다. 추급권 찬성론자인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는 문학,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의 특허 저작권자 모두 미국 시각 미술가보다 더 나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³¹⁰⁾ 그는 작곡가, 작사가, 배우, 각본가, 시나리오 작가들 모두 후시 제작, 공연이나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시각 미술가는 재판매 로열티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 미국 창조 사회에서 자신의 작품의 ‘잔여적 권리 지급금(residual right payments)’을 받지 않는 유일한 회원으로 남아있으며, 작품의 가치 상승을 통한 이후 판매에서 파생된 이득은 전적으로 컬렉터, 경매 전문 회사, 그리고 갤러리 몫으로 축적되는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미국의 추급권 도입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재차 밝혔다.³¹¹⁾ 즉 미술, 음악, 출판 저작권자들 사이에 구조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함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8)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의 역할 및 구조적 문제의 해결: 추급권은 기존의 판매 계약을 ‘파기(terminating)’하고 ‘재협상(renegotiating)’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작가에게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³¹²⁾ 작가는 평생을 할

310) Patricia Cohen, "Artists File Lawsuits, Seeking Royaltie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 2011, <http://www.nytimes.com/2011/11/02/arts/design/artists-file-suit-against-sothebys-christies-and-ebay.html>.

311) Resale Right Organization[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 European Visual Artists(EVA), 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GESAC)], "What is the Artists Resale Right," (2014): 7.

애하여 ‘전체 작품(œuvre)’을 생산하고, 이들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작품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상승에는 저작자의 노력 등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정당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놓친 기회 비용을 보상 받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작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 후, 그리고 몇 단계의 재판매를 거치면서 배가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급권이 없다면 작가가 자신의 작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9) 창작성이 저하된 작가들에게 노후 연금의 역할: 일반적으로 작품의 질과 작가의 창작성은 작가의 연령에 비례해 저하된다. 다시 말해 고령의 작가들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며 창작성이 감소되기 마련인 것이다. 재판매 로열티는 화가들에게 노후 퇴직금이나 보험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작가들의 경우 그들의 명성을 초기작에서 얻게 되는데, 미술가의 작품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가격의 작품을 제작할 수가 없다.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나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³¹³⁾ 이에 따라 연금 개념으로 추급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312) U.S Code, Title 17. Copyrights, Chapter 2. Copyright Ownership and Transfer §203, Chapter 3. Duration of Copyright §304 (c), (d), quoted in “Moral Rights, Termination Rights, Resale Royalty, and Copyright Term,” [USA]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gov/regstat/2014/regstat07152014.html>.

313) Henry Hansmann and Marina Santilli, “Royalties for Artists Versus Royalties for Authors and Composers,”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250 (2001): 8,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1392.

(10) 위작시비가 있을 시 보증의 역할: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이우환 등 국내에서도 위작 문제로 많은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출품된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1991>[도판 14]가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미술계가 발각 뒤집혔으며, 2005년 이중섭과 박수근의 위작 사건은 미술계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³¹⁴⁾ 이우환(1936-) 화백의 경우에도 최근 위작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화백의 위작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동 한 화랑을 2015년 10월 16일 압수수색하고 화랑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시리즈[도판 15] 위작들이 2012-2013년 유통됐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³¹⁵⁾ 전문가들은 추급권을 도입하면 시장 투명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위작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 창작 의욕 상승에 기여: 재판매 로열티는 작가가 일생의 노력을 통해 얻는 명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저작자에게 창작 의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12) 예술가의 죽음 이후 작품 유지 및 보존비용으로서의 역할:** 예술가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과 상속자들은 작품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작품 유지(maintenance)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보존(conservation)을 위해 작품 보호 처리에 힘써야 한다. 이밖에도 간간이 복원 및 보수에도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특정 작가의 후손들은 직접 연구를 해야 하기도 하는 등 예술가의 유산을

314) 김아미, “수년전부터 위작 논란...이우환은 왜 모두 진품이라고 말했을까?” *헤럴드경제*, October 22, 20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22000049&md=20151022075136_BL.

315) 디지털뉴스부, “이우환 화백 위작 유통 가능성...10여 년간 낙찰총액 712억 원,” *국제신문*, October 22, 20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22.99002000517>.

관리할 부담까지 함께 상속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손들의 작품 유지 및 보존비용으로 추급권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4.1.3.2. 반대 입장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추급권 제도의 현황 및 국내 실행환경의 이해』 보고서의 추급권 실태조사 응답결과에 따르면 작가들은 창작활동을 통한 수익으로는 생계는커녕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 유통 영역의 인식은 그것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다. 특히 추급권 제도에 대한 유통 영역 종사자들(경매회사)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실정인 데 반해, 추급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3가 반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견도 2/3 이상에 달해, 작가 영역의 90% 이상이 추급권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³¹⁶⁾ 이는 얼핏 작가들과 미술협회 등이 대부분 찬성 의견을 표명했고, 미술작품 유통업체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작가 대 유통 업체 간의 대결 구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모든 작가가 찬성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중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38-), 외르크 임멘도르프(Jörg Immendorf, 1945-2007), 고타르트 그라우브너(Gotthard Graubner, 1930-2013), 안토니 카로(Sir Anthony Caro, 1924-2013), 마르쿠스 뢰페르츠(Markus Lüpertz, 1941-),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 등은 추급권 도입 반대에 대한 열린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들 이외에도 조각가 장 텅겔리(Jean Tinguely, 1925-1991),

316) 한국저작권위원회,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추급권 제도의 현황 및 국내 실행환경의 이해*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79-180.

버나드 루긴뵐(Bernhard Luginbühl, 1929-2011)과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Phalle, 1930-2002) 등은 스위스 저작권법의 첫 번째 개정 때 추급권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³¹⁷⁾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 수 있다.

(1) 미술 시장의 위축 가능성: 재판매 로얄티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추급권의 보호 기간이 작가의 전 생애와 사후 70년에 해당되므로 추급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1850년대 이전의 미술 시장만 활성화되거나 모던과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2) 음성적 미술 거래의 상승 가능성:** 미술작품 거래의 경우 계약서가 없는 거래가 허다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시장에서 추급권의 도입으로 인해 음성적인 거래가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3) 세계 주요 미술 시장 축의 이동 가능성:** 영국 딜러들을 대변하는 영국 미술 시장연맹(British Art Market Federation; BAMF)의 의장 안토니 브라운(Anthony Browne)은 추급권으로 인해 주요 경매 회사가 중요한 사업을 뉴욕으로 이전할 가능성과 예술 작품의 ‘이동성(mobile)’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국 미술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³¹⁸⁾ 또 다른 런던 딜러는 인터뷰에서 추급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대미술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추급권이 없는)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뉴욕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것

317) Kuno Fischer, "Switzerland without Resale Right (Droit de Suite): Supplementary Paper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Kunst und Recht(KUR)* 10, no. 3-4 (2008): 67,

http://www.fischerauktionen.ch/UserData/Download_41920_00.pdf.

318)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Artist's Resale Right by Philip Ward and Grahame Danby," (2010): 11-12.

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³¹⁹⁾ 반대 입장을 취하는 많은 이들은 추급권으로 인해 기존 미술 시장의 주도권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4) 거래 신고 및 세금 신고 미지수 문제: 고가가 오고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자체를 비밀로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경매인들이 “3 Ds”라고 부르는 사망(death), 부채(debt), 그리고 이혼(divorce)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혼은 발생하고, 사람들은 사망하고, 부채는 탕감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컬렉터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빠른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³²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판매자들은 거래 신고 자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미술계의 저작권 관련 현황 및 개선사항』에서 저자는 로열티 지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의 정확한 기록과 세금신고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³²¹⁾

(5) 추급권 도입 시 딜러들의 작품 가격 인하 요구 문제: 미술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딜러의 노력은 모든 미술 작가들의 작품 가치를 높이는데 기반

319) Ben Wright, “Art Business: Will Droit de Suite(Artists’ Royalties) Hamper London’s Challenge to New York as the Art Market Capital of the World, Asks Ben Wright?” *Apollo Magazine* 166, no. 546, 2007, 100.

320) Richard M. Smith, “The Art of Auctions: Christie’s CEO Edward Dolman,” *Newsweek*, February 11, 2010, <http://www.newsweek.com/art-auctions-christies-ceo-edward-dolman-74999>, quoted in Valentina Poland, *Visual Artists and Resale Royalties: Considerations, Copyright and the Droit De Suite Issue* (New York, NY: Nova Science, 2014), 42.

321) 이정현, “알랑가몰라, 추급권,” *퍼블릭아트* 5, 2013, 61-67.

이 된다.³²²⁾ 많은 학자들은 만약 추급권을 도입한다면 딜러들이 자신들의 ‘홍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품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미술작품의 최초 판매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구는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작가가 이러한 위험에 처할 확률을 더 높일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추급권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술작품을 판매해 온 작가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들 작가들의 경우 (추급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품의 최초 판매 가격 감소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³⁾ 영국 팝 아티스트이자 유명한 추급권 반대론자인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도 “추급권의 도입은 대다수 영국 미술가에게 별 의미가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우리 미술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을 붉은 테이프로 봉쇄하게 될 것이며, 아트 딜러들이 신진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²⁴⁾

(6) 한국 미술 시장의 특수성 (짧은 역사, 파이가 작음): 한국 미술 시장은 세계에서 약 0.5% 정도를 차지하는 작은 시장이다. 2014년도 한국 미술 시장의

322) Henry Hansmann and Marina Santilli, “Royalties for Artists Versus Royalties for Authors and Composers,”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250 (2001): 9,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1392.

323) Maximilian Gaber, “Chapter 13. The Resale Right Direc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ement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Market*, ed. Valentina Vadi and Hildegard E. G. S. Schneider (Berlin: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4), 300.

324) Patricia Cohen, “Artists File Lawsuits, Seeking Royaltie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 2011, <http://www.nytimes.com/2011/11/02/arts/design/artists-file-suit-against-sothebys-christies-and-ebay.html>.

작품 거래 규모는 총 3,496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이 그리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며, 추급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7) 과도한 법적 규제:** 찰스 루이스(Charles Lewis) 외 몇몇 학자들은 추급권 지침이 과도한 시행(over-implementation)으로 일반적인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값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²⁵⁾ 이들은 추급권이 법적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이 ‘강제적인 권리’가 아닌 ‘선택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술가들은 추급권의 양도불가능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예술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8) 개인 거래의 경우의 추적 불가능의 문제: 재판매 로얄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미술작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³²⁶⁾도 제기된다. 미술작품 경매와 같이 공개된 거래 형식에 있어서는 재판매 로얄티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공개된 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미술작품 양도소득세’에서도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미술작품 거래 자료의 정확한 기록과 세금 신고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급권 도입은 미술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³²⁷⁾ 이밖에도 프랑스 ADAGP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티안 하몬버드(Christiane Ramonbordes)는 인터넷에서 경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판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³²⁸⁾ 인터넷으로 이루어

325) Charles Lewis, "Implementing the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 no. 5 (2007): 301.

326) "추급권(追及權)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8336>.

327) 최병식, *미술 시장과 아트딜러* (서울: 동문선, 2008), 330.

지는 미술작품 판매나 개인 간의 직거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9) 도입 시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 발생: 추급권 도입은 추급권 추심 기관 설립 등 기본 체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운영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비용적 부담 이외에도 경매전문회사나 딜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배정되기 때문에 업무 과다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0) 도입 시 실질적인 집행(enforce)의 문제:** 추급권이 도입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2001년의 ‘지침’과 2006년의 ‘규정’ 시행 이전에도 추급권을 자국법에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잘 집행되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하였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추급권이 견히지 않았고, 프랑스, 벨기에, 독일,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만 집행이 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³²⁹⁾] 또한 추급권 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를 감시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추급권을 걷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1) 추급권 징수 및 분배 기관의 설립 비용 부담: 추급권 징수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 시스템 혹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설립 비용과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12) 일부 유명 작가 혹은 사망한 작가에게 혜택의 쏠림**

328) Christiane Ramonbordes, "Economic Impact of the European Directive on the Artist's Resale Right or Droit de Suite," *Copyright Bulletin* 34, no. 2 (2000): 31.

329) The Arts Council of England, "Implementing Droit de Suite (Artist's Resale Right) in England by Dr. Claire McAndrew and Lorna Dallas-Conte," (2002): 15.

혹은 부의 재분배(wealth redistribution) 현상: 추급권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오히려 추급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부 부유한 작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³³⁰⁾ 추급권이 이미 유명한 작가들이 ‘부의 재분배(wealth redistribution)’ 혜택을 입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도입할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가나아트> 총괄사업주임은 대부분의 추급권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극소수의 유명작가가 될 개연성이 크고, 가난한 예술가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어 작가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기도 했다.³³¹⁾

(13) 미술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윤택하다는 주장: 추급권은 19세기 후반을 그리워하는 옛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적 형식으로 쓴 라보엠이라는 비판도 있다.³³²⁾ 이 때문에 시각 미술가들은 가난하지도 않거니와 불리한 ‘거래 입장(bargaining position)’에 놓여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가난한 예술가 원리(Starving Artists Rationale)’라고 불리는 재판매 로열티, 혹은 추급권 제정의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³³⁾ 존 H. 메리맨(John H. Merryman) 교수는 1993년 그의 논문 “로버

330) 천혜선, “한국의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88-90, <http://www.riss.kr/link?id=T11051619>.

331) 이정현, “알랑가몰라, 추급권,” *퍼블릭아트* 5, 2013, 61-67.

332) Guy A. Rub, “Government Policy and Economic Security for Artists: The Case of the Droit de Suite,” *The Yale Law Journal* 77, no. 7 (1968): 1335, quoted in 박성호, *문화산업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306.

333) Guy A. Rub, “The Unconvincing Case for Resale Royalties,” *The Yale Law Journal Forum* 124 (2014): 3. <http://www.yalelawjournal.com/forum/the-unconvincing-case-for-resale-royalties>.

트 라우센버그의 분노(The Wrath of Robert Rauschenberg)”에서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와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는 부유했고,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억만장자였으며,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호안 미로(Joan Miro, 1893-1983), 장 뒤뷔페(Jean Philippe Arthur Dubuffet, 1901-1985),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등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남겼고,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 1922-1993),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1923-2015),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헬렌 프랑켄탈러(Helen Frankenthaler, 1928-2011) 등도 생전에 부유했으며,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짐 다인(Jim Dine, 1935-),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 등도 여전히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그들은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의 적극적인 수혜자들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³³⁴⁾ 또한 프랑스에서 추급권료의 혜택은 이미 사망한 4명의 유명 작가[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1881-1955),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에게 돌아갔으며 그 혜택은 전체 재판매 로얄티 총액의 70%에 육박하는데, 이들 중 굶주린 작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³³⁵⁾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334) John H. Merryman, “The Wrath of Robert Rauschenberg,”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1, no. 1 (1993): 109.

335) Franklin Boyd, “Presentation on Artists’ Resale Royalty Rights,” (March 6, 2012), quoted in Alexander Bussey, “The Incompatibility of Droit de Suite with Common Law Theories of Copyright,”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23, no. 3 (2013): 1081,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248177.

자 2001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은 각국이 가격 구간대별로 적용 비율을 0.25%에서 5% 사이로 달리하는 ‘차등비율(sliding scale)’ 방식을 도입하였고,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를 €12,500으로 설정하여 부의 쏠림 현상을 낮추고자 했다.]

4.2. 법리적 및 입법적 검토

4.2.1. 국내 미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

4.2. 장에서는 법리적 및 입법적 관점에서 국내 추급권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술의 정의는 저작권법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술의 정의의 범주에 소속되어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의 법적 정의는 우리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 따르면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그 밖의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등이 미술에 포함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³³⁶⁾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도 미술의 정의를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미술관”이란 문화·미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³⁷⁾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예술(응용예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

336)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33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文],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다.³³⁸⁾ 이처럼 여러 법에서 미술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미술의 특성상 미술의 정의에 대한 정립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에 관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미술의 정의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미술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인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혹은 통일상품 설명 및 코딩 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s; HS)이라 불리는데 미술에 속하는 예술품과 골동품의 경우 '97. 예술품·골동품'에 분류되어 있다. 이 코드는 미술을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 9702. 원작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9703. 원작 조각과 조상 및 9706. 골동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술의 정의에 대한 정립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미술 분류체계로 인해 미술작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관련 소송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송은 “브랑쿠시 v. 미국(Brancusi v. United States)”으로 미술법 역사에서도 손꼽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적인 조각가인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는 브론즈와 대리석 등으로 15가지 버전의 <공간 속의 새(Bird in Space), 1923>[도판 16]를 완성하였다. 이 중 일부를 1926년 뒤상이 기획한 <브루머 갤러리(Brummer Gallery)>에서 열릴 전시를 위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보내게 된다. 당시 미국은 조각을 포함한 미술작품에 수익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지만 미국 세관 직원은 브랑쿠시의 작품을 미술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 세관 직원에 따르면, 미국 관세법상 조각 작품으로 충족되는 조건은 “조각 또는 주조를 통한 재현, 자연물, 주로 인간의 형태의 모방”인데, 브랑쿠시의 작품은 전혀 ‘새’

338) “문화미술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심 끝에 미국 세관은 브랑쿠시의 작품을 ‘부엌용품 및 병원 용품(Kitchen Utensils and Hospital Supplies)’으로 통관하고, 작품 가격의 4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였다. 뉴욕에서 추상표현주의가 유명해진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인 1940년대 중반부터이니 이 작품이 당시 비미술계 사람들에게 작품이 아닌 것으로 비취진 것은 초현실주의 작품이 유행하고 있던 당시의 미술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사건이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헨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 v. 영국 국세청(Haunch of Venison Partners Limited v. British HM Revenue and Customs Office)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미술의 정의에 있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 댄 플라빈(Dan Flavin, 1933-1996)과 빌 비올라(Bill Viola, 1951-)의 설치 작품은 수입되는 과정에서 미술작품에 부과되는 5%의 부가가치세 대신에 20%의 일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200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런던에 있었던 <헨치 오브 베니슨(Haunch of Venison)>³³⁹⁾이라는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는 빌 비올라의 비디오 설치 작품을 6개로 분해해 들여오는 과정에서 댄 플라빈의 형광등 조각 작품인 <6개의 교번 형광등 쿨화이트/웜화이트 수직 및 중심(Six Alternating Cool White/Warm White Fluorescent Lights Vertical and Centered), 1973> 설치작품[도판 17]도 같이 들여온다. 영국 세관은 두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이를 미술작품으로 인정해 5%의 과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36,000의 높은 과세를 매겼다. 그 이유는 분해되어 있었던 형광등 작품과 DVD를 보고 이를 부속품이지 미술작품이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12월 EC는 아트 딜러들과 비평가, 대중들을 뒤로 하고 댄 플라

339) <헨치 오브 베니슨(Haunch of Venison)>는 2013년 폐업하였다.

빈의 형광등 조각은 ‘벽 조명(wall lighting fittings)’에 가까워 형광등에 부과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빌 비올라의 비디오-사운드 작품은 DVD에 녹화된 영상이라 ‘DVD 플레이어와 프로젝터(DVD players and projectors)’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빌 비올라의 작품에는 DVD 이외에도 그가 만든 DVD를 재생할 목적으로 만들어질 정교한 프로젝터를 위한 상세한 설명서도 선적에 포함되었지만, 이들이 미술작품인 상태로 온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나뉘어져서 배송되었기 때문에 미술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EU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EU 규정³⁴⁰⁾ 731/2010(EU Regulation 731/2010)은 세금을 목적으로 컨템포러리 미술의 종류를 분류할 때 존재하는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³⁴¹⁾ 이와 같이 미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의 설정은 현재 진행형이며, 현대 미술의 경우 주기적으로 그 개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추급권의 도입에 있어서도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를 논할 때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가, 학계, 미술계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2.2. 국내 관련법 고찰

추급권을 저작권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9년 컴퓨

34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731/2010 of 11 August 2010,” [EU] EUR-Lex: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accessed May 17, 201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0R0731>.

341)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in 2011: Observations on the Art Trade over 25 Years,” (2012): 176.

터프로그래밍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한-EU FTA 이행입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생애기간과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저작권법 제39조)³⁴²⁾ 프랑스를 비롯하여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저작권법」 내에 추급권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 특별법이나 기타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추급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내 「저작권법」은 최초판매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급권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³⁴³⁾ 이밖에도 추급권을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재산권’ 안에 추가 조항으로 삽입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추급권을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면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3조(추급권)으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규정은 시행령에서 세세하게 언급하는 식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추급권을 세금으로 해석해 「세법」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추급권에 해당할 수 있는 미술작품 거래는 「소득세법」 법 내에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미술 작가 개인은 세법상 개인 사업자이며, 자영업자인 작가는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작가들을 자영업자로 본다. 그러므로 미술작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조 제 1항 제7호 또는 제15호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다만 미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미술가는 사업가가 아니므로 아마추어 작가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으로 공모전 등에 참가하여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기

342) 1993년 10월에는 EU저작권보호기간 통일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343)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53 (2009): 257.

타소득에 해당된다.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미술작품의 경우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작품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영업자인 화가는 사업자로서 미술작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³⁴⁴⁾ 해당 미술작품이 창작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 과정, 창작 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³⁴⁵⁾ 가령 사업자가 미술작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으로 보지 아니하며,³⁴⁶⁾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예술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³⁴⁷⁾ 해외 법안의 경우 복제한 판화를 추급권의 미술작품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

‘미술작품 양도소득세’는 논란 끝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추급권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작품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 유고 작가만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존 작가와 작가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장하는 추

344)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고양: 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2), 396-397.

345)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6015-558(1999.02.26.), quoted in 명순구, and 김기영, *미술작품의 거래법과 세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101.

346) 부가가치 세법기본통칙 12-35-6(모방 제작한 미술작품 등), quoted in 명순구, and 김기영, *미술작품의 거래법과 세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101.

347)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0615-3245(2000.09.19.), quoted in 명순구, and 김기영, *미술작품의 거래법과 세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101.

급권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작품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 넘을 경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작품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까지, 10년 이상일 경우 90%의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술작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에 지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제1항 25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해당 범위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3항에 따르면 국내 생존 및 해외 작가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1조 제13항 제 1호에는 서화·골동품의 정의를 (가) 회화, 대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원작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3항 제 2호에는 별도로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미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미술작품 양도소득세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사업자인 개인 소장가의 미술작품 양도소득은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경상적·계속적 소득) 또는 양도소득(일시적·우회적)으로 구분된다.³⁴⁸⁾ 미술작품 양도소득세는 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많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간 용역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미술 시장 규모 및 국내외 경매회사, 아트 페어, 미술은행 등지에서 거래된 작품판매금액을 토대로

348) 양건열,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1):

산출했을 때 2007년의 예상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세수는 45.8억-60.4억, 2008년의 예상 세수는 29.2억-36.8억, 2009년의 예상 세수는 12.8억-16.4억에 이른다.³⁴⁹⁾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걸린 세수는 2013년 13.5억, 2014년 21.1억 (2015년은 미집계)³⁵⁰⁾ 등으로 나타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간 용역 보고서의 예측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국내의 경우에는 유럽 국가 대부분이 예술품에 부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의 제16항에 의거 면제이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1. 도자기류, 2. 악기류, 3. 기타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대 미술처럼 예술창작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에서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 특정 작품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³⁵¹⁾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미술작품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는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 기타의 자에 대해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를 말한다.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하여 하나의 법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이 다루고 있다.³⁵²⁾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349) 양건열,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1): 22-24.

350) 왕진오, “20억 원 거두려 성장하던 6천억 원 미술 시장 4천억 원 시장으로 위축시켜,” *이코노미톡*, October 16, 2016,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68>.

351)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6015-804), 2001, quoted in 김선미,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14, <http://www.riss.kr/link?id=T11786966>.

의 징수유예)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 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은 상속세액의 징수가 유예된다. 만약 재판매 로 알티가 작가의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 상속·증여세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국내에 추급권 도입 시 수입한 해외 작가의 미술작품이 국내 경매를 통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 로알티는 다시 해외에 있는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법」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국내의 경우 미술작품 수입·수출은 ‘면세’이지만, 미술작품 수입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2008년 10월 관세청은 외국에서 회화 작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두루마기 형태로 말아 휴대품으로 가장해 들어온 갤러리들을 외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200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작품 <여행 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 1935-1941>[도판 18]를 반입할 때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미술작품은 관세율이 0%이고 작품의 운송·통관은 학예실장 전결사항인 점을 볼 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관세법」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³⁵³⁾ 이밖에도 HS코드가 제시하는 미술작품 수·출입에 대한 공개된 통계자료의 부재로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미술작품 금액의 총액, 반대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술작품 금액의 총액과 수·출입 중량 정

352) 이상정, *미술과 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9), 217.

353)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고양: 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2), 411.

보를 제외하고는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도 한계에 속한다.³⁵⁴⁾ 이와 같이 국내 여러 관련법에서 추급권 도입 시 명확하게 규정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정비해야 되는 법령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고해야 한다.

4.2.3. 입법 쟁점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해외 입법 체계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 기존 저작권법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만약 추급권을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면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3조(추급권)으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규정은 시행령에서 세세하게 언급하는 식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82개국의 국가들은 추급권을 어느 법 안에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법,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내에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국도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개별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 저작권법 내에 추급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장에서는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국의 입법 동향을 정리·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고려하여 고안

354) 2014년의 경우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수출: \$72,392/수익: \$65,899), 9702 원작 판화·인쇄화·석판화(수출: \$29,018/수익: \$52,914), 9703 원작 조각과 조상(수출: \$29,018/수익: \$52,914), 9706 골동품(수출: \$9,741/수익: \$8,646)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의 경우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수출: \$406,051/수익: \$117,876), 9702 원작 판화·인쇄화·석판화(수출: \$644 /수익: \$2,868), 9703 원작 조각과 조상(수출: \$24,719/수익: \$55,532) , 9706 골동품(수출: \$7,802/수익: \$12,332)으로 집계되었다.

한 내용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Work Covered)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의 경우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 각국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미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학계, 미술계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의 경우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을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를 추출해 보면 ‘회화·소묘·서예·조각·판화·공예·도자기·프린트·사진저작물’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르별 작품판매 규모는 화랑의 경우 서양화, 조각·설치, 사진, 한국화, 판화, 미디어아트, 현대공예 순으로 경매회사의 경우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순으로, 아트페어의 경우 서양화, 한국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미디어아트, 판화 순으로 판매 규모가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³⁵⁵⁾ 이밖에도 전체 82개국 중 총 34개국처럼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해 창작된 한정판 작품들을 원본으로 인정할지의 문제도 중요한데 만약 인정한다면 프랑스의 사례처럼 한정판 판화나 프린트 작품은 몇 개의 원판까지 가능한지,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몇 점까지 가능한지, 자신의 작품을 복제한 복제본 작품은 몇 점까지 가능한지, 사진 작품은 몇 점의 복제본까지만 허용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디지털 미술’을,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비디오미술’

355)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46.

을, 프랑스처럼 ‘음악·영상 혹은 디지털 미디어 조형 미술 창 작품’을 인정할 지의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미술의 범위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정교해 그만큼 보호 받을 수 있는 미술의 범위가 더 넓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북아트’나 ‘바틱미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나 아이슬란드 외 8개국은 ‘모자이크’를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했고, 체코 외 4개국은 ‘미술 장신구’가 범위에 속해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미술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 전통 미술이나 민예품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지의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 총 21개국은 ‘원고 원본’도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초판본, 서적의 초판본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 (Royalty Rate)

저작권의 로열티 비율 산정 방식은 ① 차등비율(sliding scale) 36개국, ② 균일비율(flat rate) 38개국, ③ 자율비율(% share in the proceeds by decree) 10개국, ④ 추가적인보상(additional compensation) 2개국으로 나뉘는데, 국내의 경우 전체 미술 시장 대비 재판매 미술 시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등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균일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38개국을 따라 2%, 3%, 5%, 10% 중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처사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장 최근에 도입한 오스트레일리아 외 27개국처럼 재판매 가격 전체에서 5%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무리한 저작권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작품 가격 하락의 폭이 크거나 소유자가 작품을 보존이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 못한다면 저작권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판매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적어도 20% 이상 상승했을 시만 적용이 가능하며, 브라

질의 경우에도 ‘작품 가치의 상승’이 꼭 전제되어야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로얄티 비율을 산정할 때, 재판매 작품 가격에 각종 부가가치세 혹은 문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 세금 등을 원천 징수해서 ① 세후 가격에서 계산할지 아니면 ② 세전 가격에서 계산할지에 대한 고민은 기존 연구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추급권 관련 법안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34개국으로 세후금액으로 계산하라고 규정한 2개국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기준으로 국내 적용 시에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겠다.

(3) 최저 판매가 기준 (Threshold Value)

최저 판매가 기준은 낮게 잡으면 더 많은 미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높게 잡을수록 소수의 작품 가격이 고가에 형성된 미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각 국의 법안 연구 결과 최저 판매가 기준은 ① 1-10만원, ② 10-50만원, ③ 50-100만원,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⑦ 400-5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82개국 중 37개국이 설정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미술작품 양도소득세」에서 미술작품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을 6,000만원에 기준을 두고 있는 선례가 있으므로, 추급권의 경우에도 최저 판매가 기준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5년도 한국의 대표작가 50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한국미술작품가격지수 (Korea Art Market Price Index 50; KAMP 50)에서 국내 상위 작가 50명의 10호 당 평균가는 6,448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³⁵⁶⁾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

356) 김용운, “미술시장 활황...상위작가 50명 26.2% 가격상승,” *이데일리*, October 10, 201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141&newsid=01318566609531608&DCD=A404&OutLnk>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랑에서 판매된 10,045점의 작품 총 매출은 2,048억 원이며 평균 가격은 2,039만원, 경매회사에서 판매된 11,414점의 작품 총 매출액은 779억 원이며 평균 가격은 682만원, 아트페어에서 판매된 10,028점의 작품 총 매출액은 624억 원이며 평균가격은 622만원으로 나타났다.³⁵⁷⁾ 이와 같은 국내 실정에 따라서 각국이 최저 판매가 기준으로 설정한 ① 1-10만원, ② 10-50만원, ③ 50-100만원,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⑦ 400-500만원 중 가장 낮은 기준과 가장 높은 기준을 제외하고,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사이의 기준 중에 실제 국내에서 몇 개의 작품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해 최저판매가를 설정하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폴란드로 한화 1만3천원(€100) 가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리히텐슈타인으로 한화 552만원(CHF 4,7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중간 값인 \$1,000(약 88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작품 판매 평균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622만원-2,039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4) 적용 기한 (Duration)

추급권의 적용 기한은 국내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으로 보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을 따르면 적당하다고 본다. 각국의 추급권의 적용기간은 작가의 생애기간과 작가의 사후 ① 50년 동안이 19개국, ② 60년 동안이 2개국, ③ 70년 동안이 56

Chk=Y.

357)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2.

개국, ④ 75년 동안이 2개국, ⑤ 80년 동안이 1개국, ⑥ 99년 동안이 1개국, ⑦ 100년 동안이 1개국으로 각 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 저작물 규정의 경우 마지막 생존 저자의 사후부터 적용이 된다. 하지만, 작가 사망 후 다음해 1월부터 계산하는 국가와 사망일로부터 계산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5) 적용 판매 경로 (Sales Covered)

각국의 입법 동향을 정리·분석 한 내용에 따라 판매 경로를 종합해보면, ① 직접 판매, ② 업체를 통한 판매, ③ 갤러리나 뮤지엄 콜렉션, ④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⑤ 경매를 통한 판매, ⑥ 정부 콜렉션(건축물미술작품 포함), ⑦ 중개인을 통한 판매로 나뉘볼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는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 ② 업체를 통한 판매, ③ 갤러리나 뮤지엄 콜렉션, ④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⑤ 경매를 통한 판매, ⑥ 정부 콜렉션(건축물 미술작품 포함) 등에는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내의 경우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에서 판매되는 작품들의 총 액수와 개수 등은 매년 『미술 시장 실태 조사』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물미술작품 포함 정부 콜렉션들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판매 경로로 설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추급권 적용 판매 경로를 고려할 때 비공개 판매나 인터넷 판매 등에서 추급권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개인거래와 인터넷 거래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추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라트비아의 경우 유일하게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로도 포함시키고 있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미술작품을 보거나 구입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지만 현대인들은 온라인으로 작품을 점차 더 많이 구입하고 있으며,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은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술 시장 규모 연구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미술작품 보험회사인 <히스콧보험회사(Hiscox Insurance Company Inc.)>와 미술 시장 분석회사 <아트택틱(ArtTactic)>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미술 거래 보고서(Online Art Trade Report, 2013)”는 온라인 미술작품 구입 추세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미술작품 컬렉터의 71%가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소비자들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참가한 미술작품 컬렉터의 25%는 온라인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50,000 파운드 이상을 소비하였다고 조사되었다.³⁵⁸⁾

2013년도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경매전문회사, 딜러, 온라인 기반 회사)는 €2.5 billion(약 3조 2천억 원)이상을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10 billion(약 12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³⁵⁹⁾ 또한 <아트론 아트 마켓 모니터(Art Market Monitor of Artron; AMMA)>에서 2015년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4,500여개의 경매전문회사 중 현재 95%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에는 3%정도로 추산되었다.)³⁶⁰⁾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도

358) Hiscox(International Specialist Insurance Group listed on the London Stock Exchange) and Arttactic(London-based Art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Firm), “The Online Art Trade 2013,” (2013), 7. <http://arttactic.com/product/hiscox-report-online-art-trade-2013/>, quoted in Valentina Poland, *Visual Artists and Resale Royalties: Considerations, Copyright and the Droit De Suite Issue* (New York, NY: Nova Science, 2014), 26.

359)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TEFAF Art Market Report 2014: The Global Art Market, with a Focus on the U.S. and China,” (2014): 13.

고려해 법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작품 매입이 아니라 증여일 경우와 작품이 기부된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밖에도 작가 본인이 본인 작품을 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도 예외로 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시 (예를 들면 건축물 미술작품처럼 작품이 건물과 함께 지어졌는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등에 대한 해답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작가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법안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가 이루어진 날짜 기준으로 3년이 채 안 되었거나 작품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하는 홍보성 판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술 위원회의 경우에도 2013년 시각 미술가를 위한 재판매 로열티 권리법 검토(2013 Review of the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보고서에서 향후 추급권 법안 개정을 대비해 ‘홍보성 판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작가와 미술 시장 전문가들과의 상의 하에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기도 했다.

(6) 적용 대상 (Entitled)

추급권 수령권자의 인적범위의 경우 ① 작가 본인에만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 2개국, ② 작가와 그의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63개국, ③ 작가와 그의 상속인, 후계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수익자, 양수인까지 수령권을 인정하는 경우인 17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추급권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작가 본인과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추급권의 기본 취지를 살

360) Art Market Monitor of Artron(AMMA). "The Art Market in 2015." (2016): 6.

려 유언의 자유는 제외하는 쪽이다. 이밖에도 벨기에 외 20개국처럼 호혜주의 원칙하에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작가들을 상호 간에 인정할지의 여부와 이탈리아처럼 작가가 상속자가 없을 시 추급권료를 국가 기관에 귀속하여 문화·미술 분야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용익권 개념은 제외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7) 로열티 추심기관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재판매료를 추심하는 기관은 프랑스처럼 ①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과 벨기에나 영국처럼 ②다중의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③ 저작자가 직접 징수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도 단일 기관을 설립하여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겠다. 특히 해외의 사례처럼 통합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은 많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테파니 B. 터너(Stephanie B. Turner) 뉴욕 주 변호사도 미술작품 거래 당사자에게 재판매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재판매 ‘등록제도(registration scheme)’가 추급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가망성이 있는 시스템일 것이라고 제시한 적 있다.³⁶¹⁾ 추급권 추심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예컨대 ① 추급권 관련 웹사이트 제작, ② 추급권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작가 혹은 상속자와 작품 리스트 및 서치 데이터베이스 확보, ③ 재판매 관련 정보 수집(관련 기관에서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 기반 마련, ④ 작가 혹은 상속자 정보 수집(작가 혹은 상속자가 직접 입력) 기반 마련, ⑤ 이메일, 문자, 우편 등 발송 처리, ⑥ 연

361) Stephanie B. Turne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Overcoming the Information Problem,"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19, no. 2 (2012): 370,

<http://www.cooley.com/files/Turner-The%20Artist'sResaleRoyalty.pdf>.

레포트서 제작 업무, ⑦ 추급권 관련 홍보 활동, 세미나 및 설문 조사, ⑧ 추급권 갤러리 제공 업무, ⑨ 추급권 계산기 제공, ⑩ 오류 및 누락 문제 해결 등을 관련 업무로 꼽을 수 있겠다. [표 35 참고]

“영국 미술 시장 재판매 로열티의 영향(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보고서는 추급권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량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1) 딜러, (2) 대형 경매전문회사, (3) 소형 경매전문회사로 나누어 그들에게 추가로 할당된 업무, 업무 절차, 비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1) 딜러의 경우 이들에게 추가된 업무는 **1. 자격이 있는 작가와 작품을 결정하는 것과 2. 유로로 표시된 최저 판매가 기준을 산정하는 것, 3. 수정 및 환불 처리하는 것이 있었다.** 많은 딜러들은 인터뷰에서 추급권 추심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자격이 있는 작가를 식별하는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딜러들은 그들이 누락한 지불 건(추가적인 추급권 지불금의 처리와 고객에게 잘못 부과된 추가 부담금 환불 업무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청구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계산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³⁶²⁾ (2) 대형 경매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작품의 양으로 인해 작품 판매 이전에 어떤 작품들이 재판매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카탈로그의 표시를 통해 작품이 재판매 로열티 대상인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으며,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청구서를 보내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딜러와 마찬가지로 경매전문회사는 작품 판매 당시의 구매자에게 건어지지 않은 로열티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362)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9,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검증 업무가 추가되었다.³⁶³⁾ 대형 경매전문회사에게 추가된 업무는 1. 여러 부서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set-up) 하는 것, 2. 자격이 있는 작가와 작품을 결정하는 것, 수정 및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런던의 대형 경매전문회사들은 재판매 로얄티를 관리하는데 있어 회사 내의 여러 부서에 큰 영향이 있었으며, 이들 또한 (딜러와 같이) 자격이 있는 작가들의 국적을 일일이 파악해 선별해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였다.³⁶⁴⁾ 국내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급권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작가 혹은 상속자를 위한 통합 서치 데이터베이스(Searchable Database)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35]

로얄티 추심기관 업무 예시	
① 추급권 관련 웹사이트 제작	-추급권 징수 관련 단일 플랫폼 제작으로 작가, 상속자, 재판매 관련 판매자, 중개인 등이 접근이 용이하게 함
② 추급권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작가 혹은 상속자와 작품 리스트 및 서치 데이터베이스(Searchable Database)	-작가의 국적, 해외 영주권 등 확인 -작품 가격이 추급권 최저 판매가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363)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0,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364)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1,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Database) 확보	
③ 재판매 관련 정보 수집 (관련 기관에서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	-작품 이름,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작품 종류, 판매된 작품 숫자, 관련 책임자 정보, 재판매 장소와 날짜, 재판매 검증과 지불 실행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서 (재판매 작품 확인을 위한 자료, 계약 당사자, 중개인, 작가 정보 등), 관련자 주소, 기타 관련 정보 등 수집
④ 작가 혹은 상속자 정보 수집 (작가 혹은 상속자가 직접 입력)	-작품 소유자 이름, 작품 이름, 작가 이름, 관련 중개인 정보, 재판매 로열티 수혜자 정보(작가 혹은 상속자), 주소, 계약서, 진품인증서, 재판매 가격(세금 전 혹은 후의 가격), 재판매 로열티 비율 및 재판매 로열티 금액, 재판매 장소와 날짜, 지불 합의에 관련된 문서, 기타 결제 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 수집
⑤ 이메일, 문자, 우편 등 발송	-재판매 관련 각종 고지서 발송
⑥ 연례보고서 제작	-매년 추급권의 혜택을 받는 작가 및 상속자들과 총 액수 등 소개
⑦ 추급권 관련 홍보 활동, 세미나 및 설문 조사	-추급권 관련 홍보활동이나 연례 세미나 개최, 홍보 책자 제작 및 설문 조사
⑧ 추급권 갤러리 제공	-작가 동의하에 추급권에 해당되는 작품 온라인 전시
⑨ 추급권 계산기 제공	-온라인으로 추급권 해당되는 작품 계산할 수 있는 툴 제공
⑩ 오류 및 누락 문제 해결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리스트에서 빠진 작가 혹은 상속자들 문제 해결

(8) 로열티 지급 방식 (Royalty Distribution Method)

로열티 지급 방식은 해외의 사례처럼 통합 웹사이트를 만들어 (1) 재판매가가 있었음을 통지·고지하고, (2) 재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며, (3) 관

런 고지서를 발송하고, (3) 재판매 로열티에 해당하는 몫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예술가들이 등록,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급권 관련 다양한 자료들과 로열티 계산기 등의 도구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로열티 지급 방식은 재판매 시 발생한 로열티를 모아두었다가 ① 매달 지급하는 방식, ② 일 년에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③ 분기마다 한 번씩 일 년에 4번 지급하는 방식, ④ 일 년에 1번 지급하는 방식, ⑤ 매번 작품이 팔릴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며,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 중 한 곳인 DACS는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ACS는 4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연 3회로 나누어 추급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④ 일 년에 1번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단계부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9)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Administration & Management Charge for Royalty Collecting Institution)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에서 20% 내에서 책정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10%,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5%,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20%를 책정하고 있는 식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에 최적화되어 많은 부분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10% 정도를 추정하여 행정·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방안으로 보인다.

1971년부터 영국의 미술과 골동품 시장을 연구·분석하고 출판해온 앤티크트

레이드가제트(Antiques Trade Gazette)와 미술 시장전문가인 토비 프로샤우어(Toby Froschauer)가 연구한 “영국 미술 시장 재판매 로열티의 영향(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보고서는 영국에 추급권 혹은 미술가의 재판매 권리가 시행된 2006년 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갤러리, 딜러, 경매전문회사로부터 지불된 로열티 금액, 혜택을 받은 예술가 숫자 외에도 재판매 로열티를 관리하는 데 관련된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제 거래 당 £23.30에서 £53.60 (전체 건한 재판매 로열티 비용에서 2.9%-6.8% 사이에 분포)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³⁶⁵⁾ 재판매 로열티의 도입으로 인해 미술 시장에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추급권 추심기관 도입에 있어 최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처벌 규정의 경우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전체 82개국 중 61개국이 저작권법 내 관련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혹은 추급권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총 19개국이 있었으며, 추급권 관련 통지·고지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정보청구권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추심기관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개국이 있었다. 이 중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가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3개국으로 이들 국가가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추급권 도입 시 벌금형 정도로 규제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365)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4,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겠다.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재판매 로얄티를 보상하는 것과 추급권료 불납 시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불가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처럼 일정 기간 안에 재판매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벌금형을 부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같이 처벌 규정이 강력한 국가들에서 처벌 규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해볼 필요도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Obligation & Statute of Limitations)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1)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2)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3)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4)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5)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6) 재판매 로얄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등 전부를 고려하여 관련 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추급권 법안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세밀한 법안일수록 6가지의 항목 모두를 법안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법안도 존재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법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쟁 소지가 다분하므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매를 알리는 통지나 고지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나 통지나 고지를 알려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야 하며, 재판매 로얄티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요청에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한 안에 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나 포르투갈처럼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와 ‘우선순위’까지 법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재판매 로얄티 지불에 있어서도 기한이 정해져야 관련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불 데드라인이 설정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령 기한이 정해져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 국가 기관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법안에 기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의 경우처럼 작가의 소재를

찾지 못했거나 작가가 재판매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을 시 혹은 작가가 익명으로 활동해서 작가를 찾지 못했을 시 재판매 로열티를 보관하는 의무를 국가에서 저야 하는지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4.2.4. 입법 방향 및 고려사항

위에서 논의한 추급권 도입 시 입법 쟁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의 경우 회화·소묘·서예·조각·판화·공예·도자기·프린트·사진저작물로,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 전체에서 5%로 (세전 가격에서 계산), (3) 최저 판매가 기준의 경우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사이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4) 적용 기한은 국내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을 적용하며, (5) 적용 판매 경로는 업체를 통한 판매, 갤러리나 뮤지엄 콜렉션,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경매를 통한 판매, 정부 콜렉션(건축물미술작품 포함) 등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좁혀볼 수 있겠다. (6) 적용 대상은 작가 본인과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급권 본 취지를 고려하고, (7) 로열티 추심기관의 경우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8) 로열티 지급 방식은 일 년에 1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 (9)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은 10%로 설정하되 많은 부분을 자동화 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하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벌금형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6가지 전부를 고려해 법망을 촘촘하게 설정하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표 36 참고]

국내 추급권 도입 시 입법 고려 사항	
11개 항목	내용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	<p>✓ 회화·소묘·서예·조각·판화·공예·도자기·프린트·사진저작물</p> <p>[고려사항]</p> <p>☑ 한정판 판화나 프린트 작품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p> <p>☑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몇 점까지?</p> <p>☑ 자신의 작품을 복제한 복제본 작품은 몇 점까지?</p> <p>☑ 사진 작품은 몇 점의 복제본까지?</p> <p>☑ 미디어 아트, 디지털 미술, 비디오미술 혹은 한국 전통 미술이나 민예품(folk art)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지?</p> <p>☑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초판본, 서적의 초판본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지?</p>
	<p>✓ 재판매 가격 전체(gross resale price)에서 5% (세전 가격에서 계산)</p> <p>[고려사항]</p> <p>☑ 실제 국내의 재판매 미술시장의 규모를 분석하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 (전체 미술 시장 사이즈에서 재판매 시장 비율과 예상 재판매 작품 수, 재판매 혜택 작가 수, 총 재판매 로열티 액수)</p>
	<p>✓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사이의 기준</p> <p>[고려사항]</p> <p>☑ 실제 국내에서 몇 개의 작품들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최저판매가를 설정하면 적합</p>
(4) 적용 기한	<p>✓ 국내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p>

후 70년간	
(5) 적용 판매 경로	✓ 업체를 통한 판매, 갤러리나 뮤지엄 콜렉션, 아트페어를 통한 판매, 경매를 통한 판매, 정부 콜렉션(건축물미술작품 포함) 등에 적용하는 방안
✓ 작가 본인과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 인정하는 방향 [고려사항]	
(6) 적용 대상	☑ 호혜주의 원칙하에 취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작가들을 상호 간에 인정할지의 여부? ☑ 작가가 상속자가 없을 시 취급권료를 국가 기관에 귀속하여 문화·미술 분야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몇 점까지?
(7) 로열티 추심기관	✓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 채택
(8) 로열티 지급 방식	✓ 일 년에 1번 지급
(9)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	✓ 10%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 벌금형 도입
(11) 의무 및 소멸시효	✓ (1)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2)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3)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설정, (4)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5)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6)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 도입

4.2.5. 추급권 입법에서의 예외 규정에 대한 고찰

(1) 미디어 아트, 디지털 미술, 비디오 미술과 추급권

각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는 ‘음악·영상 혹은 디지털 미디어 조형 미술 창 작품’을,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미술’을 추급권이 인정되는 미술 작품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비디오 미술’을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작가가 ‘디지털 미술’이나 ‘비디오 미술’ 등을 재판매할 때 추급권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소수이며, 이는 추급권의 기본 개념인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복제본이 아닌 ‘원본’의 미술작품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법적 논리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학계, 미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본이 아닌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digital image)’로 이루어진 디지털 미술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존적인(technology-reliant) 뉴 미디어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매 혹은 재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후속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작품 매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작품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고, 하드웨어의 경우 부품이 충분히 있거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하며, 항상 온라인 접속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특정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영상 소스 파일이 사용되는지 등 세부 환경을 디테일 한 부분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각종 플레이어, 프로젝터, 스피커 등의 관리 주기가 있는지, 작품의 생애주기(life span)이 있는지, 작품 설치 및 해체 방법이 어떠한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가 이외의 다른 사람도 작품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작품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문서로 남겨 주어야 향후 분쟁 소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케이스인 라파

엘 로젠달과 같이 ‘웹사이트’ 자체가 작품이며 판매도 진행하고 있는 작가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에 ‘판매계약서’를 올려두어 ‘재판매’ 관련 내용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에 언급한 2006년 빌 비올라의 비디오 설치 작품과 댄 플라빈의 형광등 조각 작품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영국 세관이 이를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처럼 뉴미디어 미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의 설정은 현재 진행형이며, 현대 미술의 경우 주기적으로 그 개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추급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추급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뉴미디어 작가들이 보고된 바 없지만 뉴미디어 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므로 ‘디지털 미술’이나 ‘비디오 미술’ 등의 재판매는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입법 및 제도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작품이 공공의 목적으로 뮤지엄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미술작품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사용할 때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예술 작품이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인 뮤지엄이나 문화예술기관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공공의 전시에 이용되는 경우 많은 국가들은 추급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공 미술 컬렉션을 장려하고, 미술작품이 문화, 예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뮤지엄 컬렉션이 후대에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과 뮤지엄의 공식 혹은 비공식 채널의 교육 콘텐츠가 커뮤니티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창조적 효과를 인정하는 처사이고, 뮤지엄이나 문화예술기관의 고질적인 재원 조성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익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일 경우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인 DACS의 한 직원은 뱅크시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판매 로열티를 DACS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뱅크시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DACS 입장에서는 익명 예술가 이슈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지급이 가능할 때까지 재판매 로열티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³⁶⁶⁾ 이처럼 작가가 익명으로 활동할 시 작가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재판매 로열티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중국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일 경우

이중국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초래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런던의 경매전문회사들은 자격이 있는 작가들을 선별해 내는 것에 많은 헤프닝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상하이 출신 작가인 얀페이밍(Yan, PeiMing, 1960-)과 리슈안(Li, Shuang, 1957-)은 둘 다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들의 작품이 판매되고 난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두 명의 작가는 프랑스 여권 소지자로서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얀페이밍의 경우에는 경매전문회사가 DACS에게서 그가 중국인이라는 정보를 받자마자 재판매 로열티를 수집한 것을 구매자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에도 얀페이밍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작가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후 DACS가 얀페이밍이 프랑

366)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5,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스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려 했을 때 경매 전문회사는 그동안 이루어진 안페이밍의 모든 작품 거래에 대한 추급권료 £28,000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다.³⁶⁷⁾ 이밖에도 두 개의 추가적인 사건에서 DACS는 미국인 작가를 유럽인으로 잘못 식별했는데 한 경매전문회사는 DACS가 크리스토 블라디미로브 야바셰브(Christo Vladimirov Javacheff, 1935-)를 유럽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는 불가리아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직접 DACS로 연락을 해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매전문회사는 DACS에게 8명의 고객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환불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작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인데, 그의 경우에도 경매전문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가 스웨덴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라고 정정하였다.³⁶⁸⁾ 이러한 문제는 추급권 추심기관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특정 작가의 신분(status)이나 국적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여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아야 한다.

(5) 작가가 추급권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에이전시는 2013년 5월까지 총 105건의 (추급권의) 선택적 불참(opt-outs)이 있었고, 이에 해당하는 전체 재판매 로열티의 가치는 총

367)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3,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368) Toby Froschauer,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4,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157,561 이었으며, 이 중 80%가 그들의 재판매 로열티를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³⁶⁹⁾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급권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이 정착 될 때까지만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을 걷고 이후에는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6) 추급권의 ‘캐스케이드 효과(Cascade Effect)’

아트 딜러들은 재판매 권리의 오점인 ‘캐스케이드 효과’를 비난해 왔는데, 이는 추급권이 모든 거래(재판매)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는 반대로 거래상끼리의 거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만약 아트 딜러가 직접 작품을 구매해서 다시 판매하는 두 차례의 연속적인 거래에 모두 관여되었을 경우, 같은 작품을 대상으로 재판매 로열티를 두 번 연속으로 납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³⁷⁰⁾ 이는 각 국가마다 추급권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대부분은 판매자와 중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 2>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법안 요약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69) Australia Copyright Agency, "To. Resale Royalty Review Team," (2013): 2.

370) European Commission(EC), Brussel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878 final)," (2011): 9.

5. 결론

5.1. 요약

미술작품과 다른 저작물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원본’에 그 가치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 덕에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는 달리 미술작품은 단 한 번의 판매에 크게 의존하며,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함과 구조적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미술가의 권리를 위해서 추급권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각국이 추급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규정하고 있는지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국내에 추급권 도입 시를 대비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조사와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고안해 내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것과 같이 여러 국가들은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자는 원칙을 지닌 추급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UNESCO나 WIPO 혹은 베른협정의 모든 회원국들이 추급권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추급권 도입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2015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가 탈세와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불투명한 국제 미술

시장의 개선을 위해 개혁과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였다.³⁷¹⁾ 2014년도 <딜로이트> “미술 및 금융 리포트(Deloitte Art and Finance Report)”에서도 미국 변호사 스티븐 쉰들러(Steven Schindler)가 현 미술 시장은 규제의 체계, 정보 가용성, 투명한 소유권 등의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³⁷²⁾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이 더 많은 개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추급권이 미술 시장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미술 시장도 마찬가지로 친분을 통한 거래, 음성적인 거래, 계약서 없는 거래가 허다하다. 한 미술작품 투자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국내의 미술작품 구입 신고는 2014년의 경우 100여 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거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미술작품 상속·증여에 관한 신고는 고작 14건 뿐이었다고 한다.³⁷³⁾ 추급권은 이러한 국내 미술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 도입 필요성을 논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에 명시된 목적에는 유럽인들 간의 단결을 보다 강화하는 기초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 간의 동질성을 보다 증진시키며, 유럽을 분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공통 시장(common market) 내의 경쟁이 왜

371) Little, Henry. “Does the Art Market Need More Regulation?” *Apollo Magazine* 182, no. 633, 2015, 35.

372) Little, Henry. “Does the Art Market Need More Regulation?” *Apollo Magazine* 182, no. 633, 2015, 35.

373) 김준석, “[집중취재] 은밀한 미술작품 거래, 세금 내면 바보?” *MBC뉴스*, September 26, 20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541143>.

곡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다.³⁷⁴⁾ 이 조약의 제12조에는 국적상의 이유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대우 금지 조항(non-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도 규정되어 있어 유럽 회원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하고 있다. 추급권에 관한 회원국 간의 법률적 균형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의 경우에도 EU와의 무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국제 미술 시장에서의 장벽 없는 경쟁을 위해서는 추급권의 도입을 통한 법제도 조화부터가 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미술 시장의 추급권의 도입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들은 단순히 작품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복지는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본’에 그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의 특성상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작가에게는 경제적인 수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추급권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 또한, 작가의 사망 시 작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일도 일반적이지만 작가의 유족들은 철저히 혜택에서 배제된 채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변호사 아멜리아 V. 베트론(Amelia V. Vetrone)은 추급권의 명백한 목적은 작가가 유명하지만 가난한 채로 작고할 가능성과 딜러가 작가 대신 거부가 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며 작가의 미술적인 능력과 시장 지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업이라고 하였다.³⁷⁵⁾ 추급권은 작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기 있는 일

374)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10, no. 4 (2007): 16-17.

375) Amelia V. Vetrone, *The Legal & Moral Rights of All Artists* (Lincoln, NE: iUniverse, 2003), 47.

아멜리아 V. 베트론(Amelia V. Vetrone)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1991년 베트론 미술 재단(Vetrone

부 유명 작가들이 혜택을 더 볼 수밖에 없어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유리한 재분배 효력(redistributive force)은 아니지만 기존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작가들의 잃어버린 경제적 권리를 되찾아 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국내 미술 시장 내 추급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의 추급권 입법화 동향 및 유형을 요약해보면,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의 경우 해외 각국의 법안은 미술의 범위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정교해 상세히 미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만큼 보호 받을 수 있는 미술의 범위가 더 넓었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의 경우 차등비율, ② 균일비율, ③ 자율비율, ④ 추가적인 보상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을 두었으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의 경우 가장 낮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한화 1만원부터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한화 550만 원가량으로 각국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4) 적용 기한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이 가장 압도적이었으나 국가별로 50년이나 100년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5) 적용 판매 경로의 경우에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 각국의 문화적 차이가 가장 많이 엿보이는 규정이었다. (6) 적용 대상의 경우 각국의 법안에서 인정하는 추급권 수령권자의 인적범위 및 정의가 달라 많은 시사점들이 있었지만 추급권의 기본 취지를 살려 양도불가능하고 작가와 그의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나 후계자까지만 인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의 경우 단일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었다. (8) 로열티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 년에 한번 혹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9) 로열티 추심기관의 행정·운영 등을 위한 할당 예산은 10%-20% 내에서 걷고 있었다.

Foundation for the Arts)을 설립하였으며, 미술가의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약 29개국 정도가 추급권 관련 처벌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 기존에 법의 집행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세밀한 법안일수록 6가지의 항목 모두를 법안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법안도 존재해 각국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5.2. 연구 논의 및 의의

국내에서는 추급권 도입 시 국내 미술 시장에 미칠 영향과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가장 크게 꼽히는 이유로는 (1) 국내 미술 시장의 위축 가능성, (2) 음성적 미술 거래의 상승 가능성, (3) 한국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재판매 미술 시장의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예측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추급권의 도입이 세계 미술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C가 2011년 12월 14일에 발간한 “추급권 지침 2001/84/EC의 도입 및 효과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에 따르면,³⁷⁶⁾ EU 28개국 중 10개국의 추급권 추심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a. 추급권으로 혜택을 받은 작가의 수, b. 총 분배된 재판매 로얄티)를 취합한 결과 2007년

376) European Commission(EC), Brussel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878 final),” (2011): 14, quoted in Anthony O. Dwyer, “The Droit de Suite, An Analysis Across Two Jurisdictions: Cross Fertilization Towards Inclusivity,” *Cork Online Law Review* 12 (2013): 76, <http://corkonlinelawreview.com/editions/2013/AnthonyODwyer.pdf>.

에는 약 €14.4 million의 재판매 로얄티가 7,107명의 작가와 관련 상속자에게 분배되었으며, 2010년에는 약 €14 million의 재판매 로얄티가 6,631명의 작가와 관련 상속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밝히며, 추급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³⁷⁷⁾ 제시된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분배된 재판매 로얄티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나타난 이슈 중 하나는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판매 로얄티가 전체 미술 시장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매 로얄티는 한 작품의 구매자 프리미엄의 0.16%정도, 해머 프라이스의 0.0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급권이 국내 미술시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미술 시장 규모를 가진 영국의 경우 영국의 추급권 추심기관인 DACS에서 걷히는 재판매 로얄티는 영국 전체 미술 시장의 0.15% 정도의 수준이며, 모던과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의 0.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³⁷⁸⁾ 따라서 국내 미술 시장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우려보다는 실질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파급 효과를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추급권 도입에 있어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에서 재판매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2) (혜택 대상인) 국내 미술 작가 인력 규모가 추산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3) 2013년 도입한 미술작품 양도소득세와 같이 도입 효과가 미미한 데에서 그칠

377) European Commission(EC), Brussel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878 final)," (2011): 10.

378)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DACs Response to the Inquiry into the Resale Royalty Right by the US Copyright Office," (2012): 1.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 때문에 국내 현황을 잘 파악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사전에 파악하여 인지하고, 향후 있을 국제 협상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이 제시한 입법 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향후 법안 발의자나 정책 수립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정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급권 관련 연구를 진행한 선행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정량적 데이터의 오류로 논문들 간에 도출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추급권 미도입 국가인 미국의 경우 추급권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시의 경제적인 여파를 수치로 분석하는 논문들 중 “미술재판매권리와 미술재판매시장: 후속 연구(Art Resale Rights and the Art Resale Market: A Follow-up Study)”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200여 곳의 경매전문회사와 357명의 미국 작가, 99명의 외국 작가 등을 대상으로 재판매 시장을 연구하였고, 233,000명의 미국 미술 작가 중에 0.15%정도가 \$1,000 이상의 가격대에서 재판매가 형성되고 있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내놓았다.³⁷⁹⁾ 또 다른 연구자는 후즈 후 아메리카(Who's Who in American Art) 등에서 데이터를 얻어 2,718명의 오일과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하는 미국 국적의 페인팅 작가들의 옥션 판매 수치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가 추적한 2,718명의 작가 중 옥션에서 작품이 팔린 경험이 있는 작가는 총 611명으로, 이 중 1985년부터 2005년 초기

379) Jeffrey C. Wu, “Art Resale Rights and the Art Resale Market: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46, No. 4 (1999): 543-545.

까지 최저 판매가 기준을 \$1,000으로 잡았을 때 재판매 혜택에 해당하는 작가는 352명으로 전체작가 중 12.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하였다.³⁸⁰⁾ 두 논문의 연구 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인 0.15%와 12.95%는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국내 선행 연구의 경우 한 논문은 3년간(2010-2012)의 국내 경매회사들의 미술작품 재판매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내 추급권료 규모를 추정하고 추급권료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급권료 징수 대상을 최저거래 한도 100만원과 400만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연간 추급권료 시장 규모는 11억 원 내지 13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추급권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미술작가에게 배분되는 액수는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⁸¹⁾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 시장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도 한국 미술 시장 작품거래 규모 중 경매회사의 거래 규모는 586억 원(2010년), 782억 원(2011년), 853억 원(2012년)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추급권료의 규모대로 라면 국내 경매회사의 거래 규모에서 추급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미만으로 추산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 논문들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에 사용한 미술 시장 데이터에 따라 도출되는 수치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매전문회사,

380) Yuanshu Deng, "Another Pricey European Import? An Economic Analysi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Duke Journal of Economics* 17 (2005): 36, <https://econ.duke.edu/uploads/assets/dje/2005/Deng.pdf>.

381) 정상철. "추급권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급권료의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107 (2014): 144.

아트페어, 화랑 등의 재판매 거래 자료나 작가의 국적, 나이 등 개인 신상 정보는 연구원 개인이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수와 세부 리스트처럼 재판매가 전체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한 수치 또한 (정량적 데이터의 오류로) 논문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는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 한계이다. 로저 맥케인(Roger A. McCain)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 그가 추급권을 경제 이론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이러한 계산은) 미술 시장에 대한 가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이론을 통한 분석 그 자체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³⁸²⁾ 따라서 추급권 관련 추후 연구 과제는 경매전문회사, 아트페어, 화랑 등에서 정확한 재판매 거래 자료를 수집해 추급권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시의 경제적인 여파를 수치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국내 추급권 도입 실효성에 있어 매우 활용도가 높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82) Roger A. McCain, "Artists' Resale Dividends: Some Economic-Theoretic Considerat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3, no. 1 (1989): 46.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1. 구본진. *미술가의 저작권격권*.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김캐슬린. *미술법*. 서울: 학교재, 2013.
3.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고양: 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2.
4. 명순구, and 김기영. *미술작품의 거래법과 세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5. 박성호. *문화산업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6. 송영식, and 이상정, and 김병일. *지적재산법(제11정판 수정증보판)*. 서울: 세창출판사, 2011.
7. 이상정. *미술과 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9.
8. 이재희. *미술경제학: 현대 미술 시장의 이해*. 서울: 탐북스, 2012.
9. 정상조, and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서울: 홍문사, 2013.
10. 채명기. *(알기쉬운)미술저작권 상담*. 서울: 한국미술협회, 1999.
11. 최병식. *미술 시장과 아트딜러*. 서울: 동문선, 2008.
12. 프레지오시, 도널드.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The Art of Art History: A Critical Anthology)*. Translated by 정연심 and 김정현. 서울: 미진사, 2013.
13. 한국저작권위원회. *추급권(재판대권) 제도 연구: 추급권 제도의 현황 및 국내 실행환경의 이해*.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국내 학위논문

14. 구본진. “미술작품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미국의 Art Law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15.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16. 김민아. “미술작품 시장 및 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0.
17. 김선미.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18. 김형렬.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19. 양재훈.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20. 이운정.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고찰: 추급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8.
21. 천혜선. “한국의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22. 최재원. “미술저작물의 추급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3. 계승균.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정보법학* 14, no. 3 (2010): 1-23.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ISSN: 1598-5911)
24.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동향.” *고려법학* 76 (2015): 27-6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ISSN: 1598-1584)
25.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10, no. 4 (2007): 3-4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ISSN: 1229-6910)
26.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 no. 2 (2011): 89-1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ISSN: 1738-1258)
27.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26, no. 3 (2014): 97-13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ISSN: 1225-9969)

28. 남영숙.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82 (2008): 4-18. (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ISSN: 1226-0967)
29. 박경신.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20, no. 1 (2016): 77-111.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ISSN: 1598-5911)
30.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88, no. 7 (2012): 5-2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ISSN: 1738-5121)
31. 안경환.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 *(계간)저작권* 4 (1988): 30-33. (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ISSN: 1226-0967)
32. 이규호. “멕시코 저작권법제의 개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3, no. 1 (2009): 131-154.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ISSN: 2092-6138)
33.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53 (2009): 249-27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ISSN: 1598-1584)
34. 이동기, and 솔하 김.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85 (2009): 47-71. (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ISSN: 1226-0967)
35. 이윤정.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0, no. 4 (2007): 123-17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ISSN: 1229-6910)
36. 이준형. “문화미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2008): 81-1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ISSN: 1738-1258)
37. 이지수. “Money and Soul: Refining Considerations to Legalize Droit de Suit in Korea.” *정보법학* 17, no. 2 (2013): 137-164.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ISSN: 1598-5911)
38. 정상철. “추급권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급권료의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107 (2014): 143-166. (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ISSN: 1226-0967)

39.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권리* 48 (2007): 180-201. (세창출판사, 창작과권리)
40. 김영림. “미술자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 *국제법무* 6 no. 2 (2014): 129-156.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41. 소병희. “미술작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7, no. 2 (2004): 3-19.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42. 최병식. “한국 미술작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작품 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5, no. 2 (2002): 47-68.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국내 신문

43. 권혁재. “박수근 유족이 결혼 선물로 준 ‘굴비’ 32년 새 값 1만 배로.” *중앙일보*, May 26, 2015.
<http://news.joins.com/article/17879214>.
44. 김아미. “수년전부터 위작 논란...이우환은 왜 모두 진품이라고 말했을까?” *헤럴드경제*, October 22, 20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22000049&md=20151022075136_BL.
45. 김용은. “미술시장 활황...상위작가 50명 26.2% 가격상승.” *이데일리*, October 10, 201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l41&newsid=01318566609531608&DCD=A404&OutLnkChk=Y>.
46. 김윤중. “1989년 발매된 워드用 프로그램 201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 한글박물관 시중서 못 구해 수배.” *동아닷컴뉴스*, January 21, 2015. <http://news.donga.com/3/all/20150121/69193916/1>.
47. 김준석. “[집중취재] 은밀한 미술작품 거래, 세금 내면 바보?” *MBC뉴스*, September 26, 20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541143>.
48. 디지털뉴스부. “이우환 화백 위작 유통 가능성...10여 년간 낙찰총액 712억 원.” *국제신문*, October 22, 20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22.99002000517>.
49. 송세진. “그 곳엔 박수근과 이혜인이 있었네.” *Money Week*, February 6, 2015.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12817028030817&outlink=1>.

50. 왕진오. “20억 원 거두려 성장하던 6천억 원 미술 시장 4천억 원 시장으로 위축시켜.” *O/코노미톡*, October 16, 2016.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68>.
51. 이윤미. “<이 사람-예술인 생활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 예술인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헤럴드경제*, July 29, 20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9000392&md=20150729110120_BL.
52. 임수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980명 불과.” *YTN*, May 16, 2016. http://www.ytn.co.kr/_ln/0106_201605160848341156.
53. 임춘원. “비정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경기신문*, August 15, 2013.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14>.

국내 인터넷 자료

54.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 Law). “문화미술진흥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55.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 Law).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56.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 Law). “저작권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go.kr>.
57. 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미술은행 소개.”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bank.go.kr/home/contents.do?loc=h11>.
58. 국회의원 유은혜 블로그 “보도자료 [국감7] 미술은행 제도 시행 12년, 작품구입의 기회의 형평성 고려 필요” Accessed July 1, 2016. <http://blog.naver.com/way2yoo/220817508930>.
59. 두산백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Accessed May 1, 2016.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20374.
60.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Pln>.
6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Korean Fine Arts Association; KFAA). “협회소개, 회원 현황.” Accessed July 1, 2016. <http://www.kfaa.or.kr/>.

62.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EU FTA 홈페이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글본 (제 10 장 지적재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kor/k_eu_10.pdf.
6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6 교육통계연보.” Accessed July 1, 2016. <http://kess.kedi.re.kr/index>.
64. 한국문화관광연구원(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 25호: 중국의 추급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by 정상철 (2016).” Accessed May 1, 2017.
https://policydb.kcti.re.kr/ft/acp/mon/domesticMonthly/selectDomesticMonthlyIssuesDetail.do?nttId=61920&bbsId=BBSMSTR_000003001013.
65.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EU] Salvador Dali 사건 (추급권)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EU 지침 해석과 파리 지방법원 판결.”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973>.
66.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독일] 저작권법 (2010년 번역).”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9215>.
67.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미국] 시각 미술작품의 재판매 시 수익의 일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돼.”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897>.
68.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미국] 저작권청, 시각 미술가를 위한 추급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848>.
69.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영국] 미술자작물의 추급권 확대 적용으로 유족들이 혜택 볼 듯.”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7976&list.do?pagen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70.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오스트레일리아] 시행 1년을 맞은 오스트레일리아
추급권 제도.”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ground_view.do?bd_seq=8634&cPage=1&CT_NO.
71.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중국] 16명의 정협위원, 저작권법 개정 공동제안.”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229>.
72.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901>.
73.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캐나다] 미술작품 ‘추급권, 캐나다에도 도입될까?:
CARFAC, 저작권 현대화 법안(Bill C-32) 추가 로비.’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026>.
74.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프랑스] 저작권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guide/france/view.do?brdctsno=377>.
75.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정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합헌 결정.”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634>.
76.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저작물의 원본.”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217>.
77.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추급권(追及權)의 용어 사전.”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258>.
78. 행정자치부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정책연구검색.” Accessed March 1, 2017.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국내 기타 자료

기타 학술자료

79. 김은경, and 문상호. “한, EU FTA에 따른 미술작품 추급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14): 162-18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80. 백명선, and 변용완. “한-EU FTA의 추급권(Droit de Suite)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과제.” *제 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2007): 151-17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모전 수상작)
81. 석종욱. “독일 제 5차 개정 '저작권법' 상의 추급권(folgerecht)과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 20-24.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발간물, 최신외국법제정보)

기타 정부 연구용역 자료

82. 김달진 미술연구소.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과제 (2006): 1-319.
83.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2015): 1-676.
84. 양건열. “미술작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1): 1-131.
85. 양현미 외.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개선 연구: 작품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과제 (2014): 1-585.
8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미술 시장 실태 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1-127.
87. ㈜월드리서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5): 1-297.
88.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2): 1-165.
89. 한국미술경영연구소.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2013): 1-151.
90. 한국정보통계. “추급권(追及權)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 (2011): 1-216.

기타 시사 교양지

91. 이정현. “알랑가몰라, 추급권.” 퍼블릭아트 5, 2013, 61-62.

국외 단행본(Books)

92. Azimi, Roxana. "Chapter 13: France."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134-140.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93. Barker, Godfrey. "Chapter 41: The United Kingdom."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328-336.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94. Boll, Dirk. "Chapter 37: Switzerland."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306-312.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95. Bressler, Judith, and Ralph Lerner. *Art Law: The Guide for Collectors, Investors, Dealers & Artists*. New York, NY: Practising Law Institute, 2013.
96. Candela, Guido, and Antonello E. Scorcù, eds. *Artist's Resale Right: Old Issues and New Problem*. Suffolk, England: Antique Collectors Club, 2012.
97. Gaber, Maximilian. "Chapter 13. The Resale Right Direc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ement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Market*, edited by Valentina Vadi and Hildegard E. G. S. Schneider, 297-318. Berlin, Germany: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4.
98. Gerstenblith, Patty.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Cases and Materials*.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2.
99. Harris, Lesley Ellen. *Canadian Copyright Law*. 4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14.
100. Lazerow, Herbert. *Mastering Art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4.
101. Merryman, John Henry, and Stephen K. Urice, and Albert E. Elsen.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5th ed.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102. Moustaira, Elina. "Chapter 3: Collectors' Rights 'Versus' Artists' Rights-Conservation and Collection Care." In *Art Collections, Private and Public: A Comparative Legal Study*, 21-35. Berlin, Germany: Springer, 2015.
103. Peinze, Alexander. *Internationales Urheberrecht in Deutschland und England*. Tübingen, Germany: Mohr Siebeck, 2002.

104. Pemberton, Georgina, and Josh Pullan. "Chapter 3: Australia."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53-66.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105. Pierredon-Fawcett, Liliane de. *The Droit de Suite i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 Comparative Law Study*. New York, NY: Center for Law and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91.
106. Poland, Valentina. *Visual Artists and Resale Royalties: Considerations, Copyright and the Droit de Suite Issue (Fine Arts, Music and Literature)*. New York, NY: Nova Science, 2014.
107. Prowda, Judith B.. *Visual Arts and the Law: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Handbooks in International Art Business)*. Surrey, England: Lund Humphries, 2013.
108. Russell, Elizabeth T.. *Art Law Conversations: A Surprisingly Readable Guide for Visual Artists*. Middleton, WI: Ruly Press, 2005.
109. Stokes, Simon. *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 UK Law and Practice*. 2nd ed. Builth Wells, England: Institute of Art and Law, 2012.
11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111. Tirohl, Blu. *Law for Artists: Copyright, The Obscene and All the Things in Between*. Abingdon, Oxon: Routledge, 2015.
112. Valsan, Calin, Derrick Chong, and Elisabeth Bogdan. "Chapter 7: Canada."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s: The Essential Guide for Collectors And Investors*, edited by James Goodwin, 90-97. Philadelphia, PA: Kogan Page, 2008.
113. Vetrone, Amelia V.. *The Legal & Moral Rights of All Artists*. Lincoln, NE: iUniverse, 2003.

국외 학위논문(Thesis/Dissertations)

114. Supper, Martina. "An Analysis of Droit de Suite from a Law and Economic Perspective." Master's diss., European Master in Law & Economics, 2000.

국외 학술지(Scholarly Journals)

Issn

115. Banterghansa, Chanont, and Kathryn Graddy. "The Impact of the Droit de Suite in the UK: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5, no. 2 (2011): 81-100.
<http://people.brandeis.edu/~kgraddy/working%20papers/journaljan09.pdf>. (Springer,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ISSN: 1573-6997)
116. Booton, David. "A Critical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Directive Harmonizing the Droit de Suite."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2 (1998): 165-191.
<https://www.escholar.manchester.ac.uk/uk-ac-man-scw:1b7663>. (Sweet and Maxwell,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ISSN: 1364-906X)
117. Bussey, Alexander. "The Incompatibility of Droit de Suite with Common Law Theories of Copyright."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23, no. 3 (2013): 1063-1104.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248177. (Fordham University,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ISSN: 1079-9699)
118. Cave, Joanna. "An Overview of the European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UK via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5."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1, no. 4 (2006): 242-246.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ISSN: 1747-1540)
119. Day, Daniel. "The Art Market Down Under: A Case Study of Australian Aboriginal Art Market Regulation and U.S. Art Market Implication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3, no. 1 (2014): 133-164. (Yeshiva University, The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SSN: 1069-3181)

120. Deng, Yuanshu. "Another Pricey European Import? An Economic Analysi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Duke Journal of Economics* 17 (2005): 1-44. <https://econ.duke.edu/uploads/assets/dje/2005/Deng.pdf>. (Duke University, Duke Journal of Economics, ISSN: 1527-1919)
121. Dilmaghani, Maryam, and Jim Engle-Warnick. "The Efficiency of Droit de Suite: An Experimental Assessment."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 9, no. 1 (2012): 93-121. (The Society for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SERCI),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 ISSN: 1698-1359)
122. Doll, Elisa D.. "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 of 2011(EVAA): Crafting an Effective Resale Royalty Scheme for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ative Meditation." *Indian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24, no. 2 (2014): 461-514. (Indiana University, Indian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ISSN: 1061-4982)
123. Dwyer, Anthony O.. "The Droit de Suite, An Analysis Across Two Jurisdictions: Cross Fertilization Towards Inclusivity." *Cork Online Law Review* 12 (2013): 59-78.
<http://corkonlinelawreview.com/editions/2013/AnthonyODwyer.pdf>. (University College Cork, Ireland, Cork Online Law Review, WorldCat: 64252262)
124. Filer, Randall E..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Artists' Resale Royalties Legisl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8, no. 1 (1984): 1-28. (Springer,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ISSN: 1573-6997)
125. Fischer, Kuno. "Switzerland without Resale Right (Droit de Suite): Supplementary Paper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Kunst und Recht(KUR)* 10, no. 3-4 (2008): 66-71.
http://www.fischerauktionen.ch/UserData/Download_41920_00.pdf. (Schleuen Verlag OHG(Berlin), Kunst und Recht(KUR), ISSN: 1437-2355)
126. Glucksmann, Carol P.. "Art Resale Royalties: Symbolic or Economic Relief for the Fine Artist."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 (1982): 115-136. (Yeshiva University,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ISSN: 0736-7694)

127. Kawashima, Nobuko. "The Artist's Resale Right Revisited: A New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4, no. 3 (2008): 299-313. (Taylor & Franci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ISSN: 1477-2833)
128. Kretsinger, Marilyn J.. "Droit de Suite: The Artist's Right to a Resale Royalty."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5, no. 4 (1992): 967-980.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ISSN: 1061-6578)
129. Lewis, Charles. "Implementing the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 no. 5 (2007): 298-304.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ISSN: 1747-1540)
130. Ma, David S. W.. "Right to Integrity and the Proposed Resale Royalty and Notification Right in the PRC Copyright Law."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 no. 2 (2013): 477-490. (Stanford Law School,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SSN: 0731-5082)
131. McCain, Roger A.. "Artists' Resale Dividends: Some Economic-Theoretic Considerat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3, no. 1 (1989): 35-51. (Springer,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ISSN: 1573-6997)
132. Merryman, John H.. "The Wrath of Robert Rauschenberg."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1, no. 1 (1993): 103-127. (The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ISSN: 0002-919X)
133. Moran, Michelle. "Quilt Artists: Left Out in the Cold by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14, no. 2 (2010): 393-409.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ISSN: 0025-3987)
134. Petty, Elizabeth M.. "Rauschenberg, Royalties, and Artists' Rights: Potential Droit de Suit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2, no. 3 (2014): 977-1009.
<http://scholarship.law.wm.edu/wmbrj/vol22/iss3/8>. (William & Mary Law School,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ISSN: 1943-135X)

135. Pfeffer, Jennifer B.. "The Costs and Legal Implications Facing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Union's Droit de Suite Directive in the United Kingdom."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4, no. 2 (2004): 533-562.
<http://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579&context=njilb>.
(Northwestern University,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ISSN: 0196-3228)
136. Pfennig, Gerhard. "The Resale Right of Artists(Droit de Suite)." Copyright Bulletin 31, no. 3 (1997): 20-29.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0/001099/109965eb.pdf#109953>. (Unesco, Copyright Bulletin, ISSN: 1817-4167)
137. Phillips, Christopher. "Court Fight over Beuys Resale Royalties." *Art in America* 80, no. 7 (1992): 1-29.
(Art in America, ISSN: 0898-297X)
138. Ramonbordes, Christiane. "Economic Impact of the European Directive on the Artist's Resale Right or Droit de Suite." *Copyright Bulletin* 34, no. 2 (2000): 25-32. (Unesco, Copyright Bulletin, ISSN: 1817-4167)
139. Reddy, Michael B..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a Right to a Resale Royalty."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15, no. 3 (1995): 509-546.
<http://digitalcommons.l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97&context=elr>. (Loyola Marymount University and Loyola Law School,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ISSN: 1536-5751)
140. Rub, Guy A. "The Unconvincing Case for Resale Royalties." *The Yale Law Journal Forum* 124 (2014): 1-10. <http://www.yalelawjournal.com/forum/the-unconvincing-case-for-resale-royalties>. (The Yale Law Journal Company, The Yale Law Journal Forum, ISSN: 0044-0094)
141. Rushton, Michael.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sts' Inalienable Righ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5, no. 4 (2001): 243-257. <http://www.uregina.ca/arts/economics/assets/docs/pdf/papers/095.pdf>. (Springer,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ISSN: 1573-6997)
142. Till, Victoria.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 no. 3 (2007): 287-302. (Taylor & Francis On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ISSN: 1477-2833)

143. Turner, Stephanie B..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Overcoming the Information Problem."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19, no. 2 (2012): 329-370.

<http://www.cooley.com/files/Turner-The%20Artist'sResaleRoyalty.pd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ISSN: 1939-5523)
144.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Copyright Office Report Executive Summary."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16, no. 3 (1992): 381-394. (Columbia Law School,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ISSN: 2161-9271)
145. Widenor, David. "Visual Artists Lack Protection Under Current Laws." *Buffalo Law Journal* 82, no. 42 (2010): 15A. (American City Business Journals, Buffalo Law Journal, ISSN: 0197-4955)
146. Wu, Jeffrey C.. "Art Resale Rights and the Art Resale Market: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46, no. 4 (1999): 531-561.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ISSN: 0886-3520)
147. Wuenschel, Joerg. "Artists' Resale Right: Dali's Royal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5, no. 8 (2010): 555-556.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ISSN: 1747-1540)

No Issn

148. Hansmann, Henry, and Marina Santilli. "Royalties for Artists Versus Royalties for Authors and Composers."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250 (2001): 1-25.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1392. (Yale Law School,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149. Ogawa, Akiko. "The Conditions Need To Be Consider for Implementing the Resale Royalty Right."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8): 368-381. <http://www.win-cls.sakura.ne.jp/pdf/14/29.pdf>. (Waseda University,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150. Ogawa, Akiko. "The Potential of Adapting "Droit de Suite" in Japan-Based on the Interviews and Researches Held in France, Finland, and U.K.."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221-234. <http://www.win-cls.sakura.ne.jp/pdf/6/15.pdf>. (Waseda University,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151. Ogawa, Akiko. "The Potential of Implementing Droit de Suite in US."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175-187. <https://dspace.wul.waseda.ac.jp/dspace/bitstream/2065/12997/1/11.pdf>. (Waseda University,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152. Skelton, Amy. "VARA's Orphans: How Indigenous Artists Can Still Look for Hope in the Moral Rights Regime." *Indiana Journal of Law and Social Equality* 1, no. 1 (2013): 260-296.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Indiana Journal of Law and Social Equality)

국외 시사/교양지(Magazines)

153. Little, Henry. "Does the Art Market Need More Regulation?" *Apollo Magazine* 182, no. 633, 2015, 34. (Press Holdings, Apollo: The International Art Magazine, ISSN: 0003-6536)
154. Lydiate, Henry. "Artist's Resale Right: Bought and Sold." *Art Monthly* 353, 2012, 41. (Britannia Art Publications, Art Monthly, ISSN: 0142-6702)
155. Lydiate, Henry. "Artist's Resale Right: Fourth Year Report." *Art Monthly* 333, 2010, 37. (Britannia Art Publications, Art Monthly, ISSN: 0142-6702)
156. Lydiate, Henry. "Artists' Resale Right: First Year Report." *Art Monthly* 303, 2007, 40. (Britannia Art Publications, Art Monthly, ISSN: 0142-6702)
157. Lydiate, Henry. "Artlaw Online: Artquest's Artlaw Services." *Art Monthly* 332, 2010, 41. (Britannia Art Publications, Art Monthly, ISSN: 0142-6702)

158. Wright, Ben. "Art Business: Will Droit de Suite(Artists' Royalties) Hamper London's Challenge to New York as the Art Market Capital of the World, Asks Ben Wright?" *Apollo Magazine* 166, no. 546, 2007, 100.
(Press Holdings, Apollo: The International Art Magazine, ISSN: 0003-6536)

국외 신문(Newspapers)

159. Cohen, Patricia. "Artists File Lawsuits, Seeking Royaltie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 2011.
http://www.nytimes.com/2011/11/02/arts/design/artists-file-suit-against-sothebys-christies-and-ebay.html?_r=1.
160. Cohen, Patricia. "New Bill Proposes Auction Royalties for Artists." *ArtsBeat(The New York Times Blogs)*, February 26, 2014.
http://artsbeat.blogs.nytimes.com/2014/02/26/new-bill-proposes-auction-royalties-for-artists/?_php=true&_type=blogs&_r=1.
161. Cole, William. "Invitation to a Dialogue: An Art Market Bubbl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 2013.
<http://www.nytimes.com/2013/01/02/opinion/invitation-to-a-dialogue-an-art-market-bubble.html>.
162. Crow, Kelly. "Lawmakers Propose Bill to Give Royalties to Visual Artists; Painters Would Get 5% of What Artworks Sell for at Auction Houses." *Wall Street Journal*, Feb 27, 2014.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502069828?accountid=6802>.
163. Ditchburn, Jennifer. "Canadian Artists Have Budget Hopes." *Whitehorse Star* (Whitehorse, Yukon, Canada), Mar 14, 201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17219979?accountid=6802>.
164. Fernandes, Kasmin. "Give Artists What They Deserve." *The Times of India* (Gurgaon, India), Jul 6, 2012.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023493998?accountid=6802>.
165. Forbes, Alexander. "\$3.2 Million on eBay for Superman Comic Sets New Auction Record." *Huffpost Arts & Culture*, August 27, 2014.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8/27/superman-action-comics-no_n_5719399.html.

166. Irish Times(Dublin, Ireland). "Ballagh Gets Euro 5,000 for Royalties Loss After Resale Law Failure." Jul 1, 2006.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08902858?accountid=6802>.
167. Kinsella, Eileen. "Will Christie's Stop Selling Expensive in California?" *Artnet News*, May 6, 2015. <https://news.artnet.com/market/court-restricts-california-resale-law-294993>.
168. McSmith, Andy, and Louise Jury. "Art Resale Law Means More Money for Poor Artists." *The Independent*, Dec 16, 2005.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10884784?accountid=6802>.
169. Michaud, Chris. "A \$105 Million Warhol Top Pick at Sotheby's Best-Ever \$380 Million Auction." *The Reuters*, November 14,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us-art-auction-idUSBRE9A604L20131114>.
170. Parsons, Michael. "Heirs of Artists in Line for Resale Windfall." *The Irish Times* (Dublin, Ireland), Jan 9, 2012. <http://search.proquest.com/docview/914573587?accountid=6802>.
171. Reyburn, Scott. "Auction Sales Down at Christie's, Sotheby's and Phillips, in a Challenging 2016." *The New York Times*, February 9, 2017. <https://www.nytimes.com/2017/02/09/arts/christies-sothebys-phillips-2016-auction-sales.html>.
172. Russeth, Andrew. "Court Ruling Reminds Art World That California Resale Royalty Law Remains in Effect." *The Observer*, June 8, 2012. <http://observer.com/2012/06/court-ruling-reminds-art-world-that-california-resale-royalty-law-remains-in-effect/>.
173. Shaw, Anny. "Will Artist Royalty Rights Go Global?: Some Say an International Treaty Will Be Fairer for All, Others That It Will Mainly Benefit the Famous and Dead." *The Art Newspaper* (London, UK), August 28, 2015. <http://www.theartnewspaper.com/market/art-market-news/158603/>.
174. *Sunday Star Times* (Auckland, New Zealand). "Or Fair Share? Pure Greed." Feb 15, 2015.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655119693?accountid=6802>.
175. Tully, Kathryn. "The Most Expensive Art Ever Sold at Auction: Christie's Record Breaking Sale." *The Forbes*, November 13, 2013.

<https://www.forbes.com/sites/kathryntully/2013/11/13/the-most-expensive-art-ever-sold-at-auction-christies-record-breaking-sale/#5f3000655416>.

176. Whyte, Murray. "Ritchies To Pay Artists Royalties." *Toronto Star* (Ontario, Canada), May 14, 201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50384307?accountid=6802>.

국외 인터넷 자료(internet references)

177. [Australia] Arts Law Centre of Australia. "About Us."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slaw.com.au>.
178. [Australia]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Home."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g.au/acc_prod/ACC/Home/ACC/Home.aspx.
179. [Australia] Copyright Agency. "Resale Royalty Scheme Reaches \$1m for Artists." Accessed July 1, 2016.
<http://copyright.com.au/2012/11/resale-royalty-scheme-reaches-1m-for-artists>.
180. [Belgium] Société d'Auteurs Belge – Belgische Auteurs Maatschappij(SABAM). "Volgrech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sabam.be/nl/sabam/volgrecht-0>.
181. [Chile] CREAMAGEN: Sociedad de Gestion de Los Creadores de Imagen Fija. "2015 Memoria." Accessed June 15, 2016. <http://www.creamagen.cl/documentos/Memoria2015.pdf>.
182. [China] China Law Translate. "PRC Copyright Law (Fourth Amendment Revision), Article 14 (2014)."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chinalawtranslate.com/prc-copyright-law-revision-draft-for-solicitation-of-comments/>.
183. [China]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修订草案送审稿), Article 14 (2014)."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chinalaw.gov.cn/article/cazjgg/201406/20140600396188.shtml>.
184. [China] 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修改草案, Article 11 (2012)." Accessed June 15, 2015.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745.html>.
185. [Denmark] VG Bild-Kunst. "The Resale Right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witzerland?" Accessed July 1, 2016.

<http://www.bildkunst.de/en/copyright/resale-right/the-resale-right-in-the-united-states-china-and-switzerland.html>.

186. [EU] EC: European Commissio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Resale Right." Accessed July 1, 2016.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resale-right/index_en.htm.
187. [EU] EUR-Lex: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Regulation (EU) No 731/2010 of 11 August 2010." Accessed May 17, 201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0R0731>.
188. [EU] European Union. "EU member countries." Accessed July 1, 2016. http://europa.eu/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index_en.htm.
189. [EU] European Visual Artists(EVA). "Japan: steps forward for adoption of the Resale Right, The list of countries which are considering an adoption of the Resale Right is growing." Accessed July 1, 2016. <http://resale-right.org/japan-steps-forward-for-adoption-of-the-resale-right/>.
190. [France] Conseil Constitutionnel. "Homepage."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191. [Germany] Federal Supreme Court(Bundesgerichtshof). "Sammlung Ahlers Collection: Case No. I ZR 109/05." Accessed July 1, 2016. http://libproxy.snu.ac.kr/8b9e4c5/_Lib_Proxy_Url_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zeits%2fIIC%2f2009%2fcont%2fIIC%2e2009%2e604%2e1%2ehtm.
192. [Germany] WoltersKluwer Jurion. "Bundesgerichtshof Urt. v. 16.06.1994, Az.: I ZR 24/92." Accessed May 10, 2017. https://www.jurion.de/urteile/bgh/1994-06-16/i-zr-24_92/.
193. [New Zealand] Bowerbank Ninow. "Resale Royalty." Accessed June 1, 2016. <http://bowerbankninow.com/resale-royalty/>.
194. [Norway] Kunstavgiften. "Kunstavgiften/The Art Tax is Applicable to Art Aales Where the Sale Price Exceeds 2000 NOK." Accessed July 1, 2016. <http://www.kunstavgiften.no/en>.
195. [Romania] VISARTA. "Sume Nerevendicate in Sold la 31.12.2013 de Distribuít in 2017." Accessed July 1, 2017.

<http://www.visarta.ro/07.03.2017/sume%20nerevendicate%20DE%20REPARTIZAT%20IN%20202017.pdf>.

196. [UK] Art Quest. "About."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quest.org.uk/>.
197. [UK] Blouin Artinfo. "Art Basel Director Noah Horowitz Takes the Long View." Accessed July 1, 2016. <http://www.blouinartinfo.com/news/story/1288556/art-basel-director-noah-horowitz-takes-the-long-view>.
198. [UK] Blouin Artinfo. "The Unstoppable Revival of Ritchies Now Includes Artist's Resale Rights." Accessed May 15, 2016. <http://ca.blouinartinfo.com/news/story/903138/the-unstoppable-revival-of-ritchies-now-includes-artists>.
199. [UK]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ARR royalty calculator." Accessed July 11, 2016. <https://www.dacs.org.uk/for-art-market-professionals/arr-royalty-calculator.aspx>.
200. [UK] Private Art Investor. "New Zealand Business Breaks New Ground with Voluntary Artists' Resale Royalty by White, Jenny." Article published July 1, 2015. <http://www.privateartinvestor.com/art-business/new-zealand-business-breaks-new-ground-with-voluntary-artists-resale-royalty>.
201. [UK] The Art Newspaper. "Artists add their voices to US resale royalties debate: New York panel pits lawyers against practitioners." Accessed July 1, 2016. www.theartnewspaper.com.
202. [UK] The Institute of Art & Law. "Switzerland: Fourth Attempt to Introduce the Artist Resale Right." Accessed June 1, 2017. <http://www.ial.uk.com/switzerland-fourth-attempt-to-introduce-the-artist-resale-right/>.
203. [USA, UK, Germany, France] Artnet. "France Changes Tax System to Benefit Artists." Accessed July 1, 2016. <https://news.artnet.com/market/france-changes-tax-system-to-benefit-artists-212993>.
204. [USA, UK] Art Law Report. "Third Time a Charm? New Resale Royalty Bill Filed in Congress by O'Donnell, Nicholas." Article published April 23, 2015. <http://www.artlawreport.com/2015/04/23/third-time-a-charm-new-resale-royalty-bill-filed-in-congress>.
205. [USA] Artsy. "What's At Stake in the Artist's Resale Right Debate? by Thackara, Tess." Article published July 31, 2015.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what-s-at-stake-in-the-artist-s>.

206. [USA] Boyd Level. "Boyd Level, Incubator of the Negotiated Resale Right, has Now Launched Level Rights." Accessed July 1, 2016. <http://boydlevel.com/home/home.php>.
207. [USA] Copyright Alliance(CA). "Weekly Copyright Issues Wrap Up - May 6, 2016." Accessed July 1, 2016. https://copyrightalliance.org/content/weekly_copyright_issues_wrap_-_may_6_2016.
208. [USA] DLA Piper Law Firm Blog. "Amendments To The PRC Copyright Law by Chung, Eunice R." Article published August 1, 2014. <https://www.remarksblog.com/2014/08/amendments-to-the-prc-copyright-law-the-practical-implications-for-rights-owners/>.
209. [USA] Rafaël Rozendaal. "Website Sales Contract/Certificate of Authenticity." 2014. <http://newrafael.com/art-website-sales-contract>.
210. [USA] The Art Law Report. "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Claims Dismissed as Preempted by Copyright Law." Accessed July 1, 2016. www.artlawreport.com.
211. [USA]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Moral Rights, Termination Rights, Resale Royalty, and Copyright Term."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gov/regstat/2014/regstat07152014.html>.

국외 법 혹은 공문서(Legal and Public Documents)

국외 추급권 법안 및 법안 관련 사이트

212. Federal Law on Copyrights o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Related Rights (Copyright Act) No. 58/2010. § 16b, 3, 10, 11, 12, 23, 60, 87, 87b (2011) (Austria).
213. Articles XI.175 to XI.178 of the Code of Economic Law and its Implementation Orders. Article XI.175, XI.176, XI.177, XI.178, XI.266, XI.272, XV.110 (2007) (Belgium).
214.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0, 20a, 4, 27, 31, 32, 57(2), 97(12), 99a (2011) (Bulgaria).

215.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and Acts on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11. Article 34, 35, 36, 37, 38, 99, 100, 105, 189(1)8 (2014) (Croatia).
216.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06. Article 11A, 11B, 11Γ, 11Δ, 11Ε, 11ΣΤ, 11Ζ, 5, 13C (2006) (Cyprus).
217. [Cyprus] Cyprus Bar Association(ΠΑΓΚΥΠΡΙΟΣ ΔΙΚΗΓΟΡΙΚΟΣ ΣΥΛΛΟΓΟΣ). "Οι περί του Δικαιώματος Πνευματικής Ιδιοκτησίας Νόμοι του 1976 μέχρι 1993 (59/1976)."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ylaw.org/nomoi/enop/non-ind/1976_1_59/index.html.
218. Consolidated Version of Act No. 121/2000 on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nd on Amendment to Certain Acts (The Copyright Act). Article 24, 26, 27, 96, 100(1)(e), 105a, 105b (2006) (Czech Republic).
219.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4 (Consolidate Act No. 1144 on Copyright). Article 38, 63, 53, 76, 85 (2014) (Denmark).
220. Copyright Act (Consolidated Text of November 1, 2013). § 15, 4, 38, 39, 43, 48, 814 (2013) (Estonia).
221. [Estonia] Riigi Teataja. "Autoriõiguse seadus." Accessed July 1, 2016.
<https://www.riigiteataja.ee/tutvustus.html?m=3>.
222. Copyright Act No. 404 of July 8, 1961 (As Amended up to April 30, 2010). § 26i-26l, 43, 44, 63 (2010) (Finland).
223. Intellectual Property Code (Consolidated Version of the Code of May 11, 2015). Law: L122-8, L123-1, L123-2, L123-6, L123-7, L334-1, Regulatory: R122-2, R122-3, R122-4, R122-5, R122-6, R122-7, R122-8, R122-9, R122-10, R122-11, R122-12 (2015) (France).
224. [France] Assemblée Nationale. "Accueil, Histoire et patrimoine, Abel Ferry(1881 – 1918), rédigée aux Archives de la Chambre des Députés." Accessed May 7, 2017.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tables_archives/abel-ferry.asp#1910.
225. [France]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Informations." Accessed July 1, 2016.
<http://www.legifrance.gouv.fr>.

226. 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pyright Act). § 26, 54(1), 64, 65, 69, 71, 121(5), 137i (2013) (Germany).
227. Law No. 2121/1993 on Copyright, Related Rights and Cultural Matters (Law No. 4281/2014). Article 5, 29, 30, 31, 65 (2014) (Greece).
228. Act No. LXXVI of 1999 on Copyright (Consolidated Text as of January 1, 2007). Article 70, 31, 91, 100, 113 (2007) (Hungary).
229. S.I. No. 312/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Article 1-10 (2006) (Ireland).
230. [Ireland] Irish Statute Book(eISB). "S.I. No. 312/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Accessed July 1, 2016. <http://www.irishstatutebook.ie/2006/en/si/0312.html>.
231. Law No. 633 of April 22, 1941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Decree-law No. 64). Article 144-155, 2, 172(3), 202 (2010) (Italy).
232. Copyright Law (As Last Amended on April 18, 2013). § 17, 1(20), 36, 37(3), 38, 69(2) (2013) (Latvia).
233.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o. VIII-1185 of May 18, 1999 (As Amended on October 7, 2014 by Law No. XII-1183). Article 17, 4, 34, 35, 37, 65, 77 (2014) (Lithuania).
234.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Databases and Patents. Article 1-7, 9, 30, 66, 71bis (2008) (Luxembourg).
235. Act of September 23, 1912 Containing New Regulation for Copyright (Copyright Act 1912, As Last Amended in 2008). Article 43a-g, 43, 37 (2012) (Netherlands).
236. Act No. 83 of February 4, 1994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s Last Amended on October 21, 2010). Article 19-19.5, 1, 5, 36, 39, 115 (2010) (Poland).
237. Law No. 16/2008 of April 1, 2008 (Enforcement of IP). Article 54, 11, 31, 32 (2008) (Portugal).
238. Law No. 8 of March 14, 1996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 No. 329/2006). Article 21, 7, 25, 27, 32, 139 (2006) (Romania).
239. Act No. 618/2003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s Amended up to Act No. 283/2014 Collection). Article 19, 2, 7, 18, 21, 22, 24, 78, 84, 85 (2014) (Slovakia).

240.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of March 30, 1995 As Last Amended on December 15, 2006. Article 35, 1, 59, 60, 67, 147, 159, 176 (2006) (Slovenia).
241. Law No. 3/2008 of December 20, 2008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Art Work. Article 1-13 (2008) (Spain).
242.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s Amended April 1, 2011). Article 26n-p, 1, 41, 42, 49a, 53 (2011) (Sweden).
243. [Sweden] Sveriges riksdag. "Lag (1960:729) om upphovsrätt till litterära och konstnärliga verk." Accessed July 1, 2016.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60729-om-upphovsratt-till-litterara-och_sfs-1960-729.
244. 2006 No. 346 Intellectual Property-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Article 1-17 (2006) (United Kingdom).
245. Law No. 9380 of April 28, 2005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18, 4, 7, 21, 24, 25, 118, 120 (2005) (Albania).
246.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41-45, 55, 56, 60, 135, 160-163, 189 (2010) (Macedonia).
247. Law No. 07-1/11-1/15 of July 12, 2011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mulgated by Decree No. 01-933/2 of July 25, 2011). Article 34-35, 4, 62, 63, 69, 75, 183, 196 (2011) (Montenegro).
248.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4.3.2, Article 35, 36, 2, 102, 103, 106, 217, 221 (2011) (Serbia).
249. Law No. 1079-IIIQ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16, 5, 6, 25, 26, 46, 47 (2010) (Azerbaijan).
250. Law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 262-III of May 17, 2011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18, 6, 16, 20, 56 (2011) (Belarus).
251.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Article 35, 55, 56, 62, 63, 175 (2010) (Bosnia & Herzegovina).
252. Law of Georgia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0, 6, 31, 32, 54, 58 (2010) (Georgia).

253. The Copyright Act No. 73/1972 (As Last Amended by Act No. 126/2011). Article 25.gr.b., 1, 5, 43, 54.gr. (2011) (Iceland).
254.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Copyright Law). Article 15a-15g, 2, 32, 33, 50-53, 57 (2006) (Liechtenstein).
255. Law No. 491 of November 24, 1948 on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11-1, 2, 12, 14, 29 (1948) (Monaco).
256. Law on Copyright Etc. (Copyright Act). § 38c, 40, 51, 54, 57 (2015) (Norway).
257.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mended up to 2014). Article 1293, 1244, 1272, 1281 (2014) (Russia).
258. Ordinance No. 03-05 of 19 Joumada El Oula 1424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28, 4, 54-55, 132, 144 (2003) (Algeria).
259. Law No. 2005-30 of April 5, 2006 o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the Republic of Benin. Article 4.2, 8, 52-54 110, 113 (2006) (Benin).
260. Law No. 032-99/AN of December 22, 1999 on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18, 19, 5, 34, 35, 104 (1999) (Burkina Faso).
261. Decree No. 2001/956/PM of November 1, 2001 Implementing Law No. 2000/11 of December 19, 2000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7 (2001) (Cameroon).
262. Law No. 2000/011 of December 19, 2000 o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Article 3, 37, 80-82 (2000) (Cameroon).
263. Law No. 005/PR/2003 of May 2, 2003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and Expression of Folklore. Article 33, 5, 39-40, 130 (2003) (Chad).
264. Law of March 11, 1957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42, 3, 21, 24, 50, 76 (1957) (Comoros).
265. [Comoros] Droit-Afrique "La loi du 23 septembre 1987 ayant conféré au droit musulman une compétence exclusive sur certains pans du droit civil." Accessed July 1, 2016.
<http://www.droit-afrique.com/upload/doc/comores/Comores-Code-civil.pdf>.

266. Law No. 24/82 of July 7, 1982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0, 7, 61-63, 67, 100, 101 (1982) (Congo).
267. Law No. 96-564 of July 25, 1996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Works and the Rights of Authors, Performers and Phonogram and Videogram Producers. Article 26, 44, 6, 25, 45, 74 (1996) (Côte d'Ivoire).
268. Law No. 154/AN/06 of July 23, 2006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11, 3, 12, 13, 14, 18, 40, 96 (2006) (Djibouti).
269. Law No. 1/87 of July 29, 1987 Instituting Protection for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48/4, 28, 60, 63, 65 (1987) (Gabon).
270. Act No. 043/APN/CP of August 9, 1980 Adopting Provisions Relating to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4, 1, 42, 54 (1980) (Guinea).
271. Copyright Code (Approved by Decree-Law No. 46.980 of March 28, 1972). Article 59, 60, 2, 25, 26, 30, 35, 57 (1972) (Guinea-Bissau).
272. Law No. 94-036 of September 18, 1995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40, 5, 38, 52, 53, 58, 59, 141 (1994) (Madagascar).
273. Law No. 08-024 of July 23, 2008 Laying Down the Regime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in the Republic of Mali. Article 17, 19, 20, 21, 8, 44, 45, 49, 147, 148 (2008) (Mali).
274. Copyright Act (Chapter 68, As Codified 2004), § 12, 15, 30 (2004) (Nigeria).
275. Law No. 2008-09 of January 25, 2008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47-50, 6, 51, 52, 55, 57, 58, 127 (2008) (Senegal).
276. Law No. 91-12 of June 10, 1991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lklore and Related Rights. Article 47, 6, 36-40, 91 (1991) (Togo).
277. Law No. 94-36 of February 24, 1994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25, 18 (1994) (Tunisia).
278. Law No. 1322 of April 13, 1992 on Copyright. Article 50, 51, 6, 18, 19 (1992) (Bolivia).
279. Law No. 9.610 of February 19, 1998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8, 7, 39-45 (1998) (Brazil).

280. Law No. 17.336 on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36, 3, 10 (2010) (Chile).
281. Law No. 6683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No. 8834). Article 151, 58, 97 (2010) (Costa Rica).
282. Law No. 65-00 on Copyright. Article 78, 2, 21-29 (2000) (Dominican Republic).
283. Intellectual Property Law Codification No. 2006-13. Article 38, 39, 8, 18, 80, 304 (2006) (Ecuador).
284. Law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ve Decree No. 604 of July 15, 1993).
Article 35, 37, 86 (1993) (El Salvador).
285.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38, 15, 19, 126bis (2000) (Guatemala).
286.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 (Approved by Decree No. 4-99-E). Article 43, 2, 44-45, 53, 56,
57 (2006) (Honduras).
287.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No. 312. Article 26, 13, 27-30 (2001) (Nicaragua).
288. Law No. 64 of October 10, 2012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6, 2, 11, 59-65, 152,
157, 170, 174 (2012) (Panama).
289. [Panama] Centro Regional para el Fomento del Libr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CERLALC) "Ley 64
de 10 de Octubre de 2012 Sobre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erlalc.org/derechoenlinea/dar/leyes_reglamentos/Panama/Ley_64.htm.
290. Law No. 1328/98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f October 20, 1998. Article 77, 4, 47-53, 150 (1998)
(Paraguay).
291. Copyright Law (Legislative Decree No. 822 of April 23, 1996). Article 82-84, 2, 5, 52-56, 169, 186, 188
(1996) (Peru).
292. Law No. 9.739 of December 17, 1937 on Copyright (As Last Amended by Law No. 18. 046 of October
24, 2006). Article 9, 42, 5, 14 (2006) (Uruguay).
293. Law on Copyright. Article 54, 2, 25-28, 109 (1993) (Venezuela).
294. Copyright Act, 1957 (as consolidated up to Act No. 49 of 1999). § 53A, 2, 17, 22-23, 63 (1999) (India).
295.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17, 28 (2012) (Kazakhstan).

296.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s Amended up to Law No. 14 of January 21, 2014). Article 17, 7, 27, 48 (2014) (Kyrgyzstan).
297.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8293). § 200-201, 10.2, 213, 214 (1997) (Philippines).
298.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42 of July 20, 2006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23, 6, 35, 61 (2006) (Uzbekistan).
299.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f June 15, 2006. Article 27, 3, 37, 66 (2006) (Armenia).
300. Law No. 5846 of December 5, 1951 on Intellectual and Artistic Works (As Last Amended by Law No. 5728 of January 23, 2008). Article 45, 4, 26, 27, 71 (2008) (Turkey).
301.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 1-53 (2009) (Australia).
302. Federal Law on Copyright (As Consolidated up to July 14, 2014). Article 92 bis, 13, 20, 29, 212, 229-236 (2014) (Mexico).

국외 협약 관련

303.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eptember 9, 1886, As Revised at Paris on July 24, 1971 and Amended in 1979), <https://perma.cc/M4BE-X9QX>.
304. EUR-Lex: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Directive 2006/84/EC of 23 October 2006." Accessed July 1, 201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84&qid=1467483190737>.
305. EUR-Lex: European Union Law.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Accessed July 1, 201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L0084:EN:HTML>.

306.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greement Revising the Bangui Agreement of March 2, 1977, on the Creation of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February 24, 1999)," (1999): 1-201.
30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ccessed July 1, 2016. http://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3698.

기타 법 관련

308. [USA] Wikisourc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VARA), §601-§610." Accessed July 7, 2016. https://en.wikisource.org/wiki/Visual_Artists_Rights_Act_of_1990.
309. 2013 Georgia Code, Title 8-Building and Housing, Chapter 5-Art in State Building, § 8-5-7(3) (2013) (Georgia, USA), <http://law.justia.com/codes/georgia/2013/title-8/chapter-5/section-8-5-7/>.
310. 2015 Georgia Code, Title 8-Building and Housing, Chapter 5-Art in State Building, § 8-5-7(3) (2015) (Georgia, USA), <http://law.justia.com/codes/georgia/2015/title-8/chapter-5/section-8-5-7/>.
311. 2016 South Dakota Code, Title 1-State Affairs and Government, Chapter 22-Arts, §1-22-16(5) (2016) (South Dakota, USA), <http://law.justia.com/codes/south-dakota/2016/title-1/chapter-22/section-1-22-16/>.
312. Laws of Puerto Rico Unannotated Title 31. Civil Code, Subtitle 2. Property Ownership and Its Modifications, Part IV-A. Intellectual Property, §1401h (2012) (Puerto Rico), <https://www.lexisnexis.com/hottopics/lawsopuertorico/>.

국외 기타 자료(Other types of references)

기타 정부 및 기관 연구자료

313. Art Market Monotor of Artron(AMMA). "The Art Market in 2015." (2016): 1-87.

314. Australia Copyright Agency. "To. Resale Royalty Review Team." (2013): 1-4.
315. Australia Council. "Don't Give Up Your Day Job An Economic Study of Professional Artists in Australia by Charles David Throsby, Virginia Hollister." (2003): 1-145.
316.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ustralia Council Submission 2013 Review of the Resale Royalty Scheme." (2013): 1-8.
317.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BAMF).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Artist' Resale Rights Directive: Summary of Research by Dr. Clare McAndrew from Arts Economics." (2011): 1-12.
318.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BAMF). "The British Art Market in 2010 by Arts Economics." (2010): 1-9.
319.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BAMF). "The British Art Market in 2014 by Arts Economics." (2014): 1-28.
320. Canada Council for the Arts,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Ontario Arts Council. "A Statistical Profile of Artists in Canada: Based on the 2006 Census by Kelly Hill and Kathleen Capriotti from Hill Strategies." (2009): 1-44.
321. Canadian Artists'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RFAC) and Regroupement des artistes en arts visuels du Québec(RAAV). "Recommendations on Bill C-32, Regarding the Visual Arts and the Digital Environment." (2010): 1-14.
322. Canadian Artists'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CARFAC). "Recommendations for an Artist Resale Right in Canada." (2010): 1-19.
323. Deloitte & ArtTactic. "Art & Finance Report 2016 (4th edition)." (2016): 1-160.
324. European Commission(EC), Brussel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the Resale Right Directive (2001/84/EC) (878 final)." (2011): 1-14.
325. Froschauer, Toby. "The Impact of Artist Resale Rights on the Art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Antiques Trade Gazette* (2008): 1-28. http://www.lapada.org/public/Impact_Study_by_Toby_Froschauer.pdf.

326. Katy Graddy and Noah Horowitz and Stefan Szymanski. "A Study into the Effect on the UK Art Marke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8): 1-103.
327. New Zealand Arts, Culture and Heritage. "Copyright (Artists' Resale Right) Amendment Bill (by Minister Hon Judith Tizard)." (2008): 1-24.
328.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Options for its Possible Application to New Zealand (Discussion Paper)." (2007): 1-46.
329. Resale Right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 European Visual Artists(EVA), 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GESAC)]. "What is the Artists Resale Right." (2014): 1-12.
330. Ricketson, Sam.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ademic study prepared by professor of law, *Melbourne Law School and Barrister*, Victoria, Australia, June 2015. http://www.adagp.fr/sites/default/files/sg15-0565_ricketson_study-definitive_2015-07-06_en.pdf.
331. The Arts Council of England. "Implementing Droit de Suite (Artist's Resale Right) in England by Dr. Claire McAndrew and Lorna Dallas-Conte." (2002): 1-85.
332.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TEFAF). "TEFAF Art Market Report 2014: The Global Art Market, with a Focus on the U.S. and China." (2014): 1-159.
333.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TEFAF).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in 2011: Observations on the Art Trade over 25 Years." (2012): 1-191.
334.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Bill 2008." (2008): 1-32.
335. The Register of Copyrigh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1992): 1-760.
336.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Artist's Resale Right by Philip Ward and Grahame Danby." (2010): 1-14.
337.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2013): 1-124.

기타 추심기관 연구 자료

- 338.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Artist's Resale Right: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Questionnaire." (2014): 1-40.
- 339.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DACS Response to the Inquiry into the Resale Royalty Right by the US Copyright Office." (2012): 1-13.
- 340. The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Copyright Contracts and Earnings of Visual Creators: A Survey of 5,800 British Designers, Fine Artists, Illustrators and Photographers." (2011): 1-179.

〈부록 1〉 추급권 도입 국가 리스트

추급권 도입 국가는 유럽지역 40개국, 아프리카 지역 18개국, 남미 지역 15개국, 아시아 지역 5개국, 중동 지역 2개국, 오세아니아 지역 1개국, 북미 지역 1개국 등 총 82개국임.

유럽 지역 (40)

European Union (28)		On the road to EU membership (4)
(1) 오스트리아(Austria)	(15) 이탈리아(Italy)	(28) 알바니아(Albania)
(2) 벨기에(Belgium)	(16) 라트비아(Latvia)	(29) 마케도니아(Macedonia)
(3) 불가리아(Bulgaria)	(17) 리투아니아(Lithuania)	(30) 몬테네그로(Montenegro)
(4) 크로아티아(Croatia)	(18) 룩셈부르크(Luxembourg)	(31) 세르비아(Serbia)
(5) 키프로스(Cyprus)	(19) 네덜란드(Netherlands)	Non European Union (9)
(6) 체코(Czech Republic)	(20) 폴란드(Poland)	32)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7) 덴마크(Denmark)	(21) 포르투갈(Portugal)	(33) 벨라루스(Belarus)
(8) 에스토니아(Estonia)	(22) 루마니아(Romania)	(3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 Herzegovina)
(9) 핀란드(Finland)	(23) 슬로바키아(Slovakia)	(35) 조지아(Georgia)
(10) 프랑스(France)	(24) 슬로베니아(Slovenia)	(36) 아이슬란드(Iceland)
(11) 독일(Germany)	(25) 스페인(Spain)	(37)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12) 그리스(Greece)	(26) 스웨덴(Sweden)	(38) 모나코(Monaco)
(13) 헝가리(Hungary)	(27) 영국(United Kingdom)	(39) 노르웨이(Norway)
(14) 아일랜드(Ireland)		(40) 러시아(Russia)

아프리카 지역 (18)	남미 지역 (15)	아시아 지역 (5)
(1) 알제리(Algeria)	(1) 볼리비아(Bolivia)	(1) 인도(India)
(2) 베냉(Benin)	(2) 브라질(Brazil)	(2) 카자흐스탄(Kazakhstan)
(3)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3) 칠레(Chile)	(3)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4) 카메룬(Cameroon)	(4) 코스타리카(Costa Rica)	(4) 필리핀(Philippines)
(5) 차드(Chad)	(5)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5)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6) 코모로(Comoros)		
(7) 콩고(Republic of the Congo)	(6) 에콰도르(Ecuador)	중동 지역 (2)
(8)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7) 엘 살바도르(El Salvador)	(1) 아르메니아(Armenia)
(9) 지부티(Djibouti)	(8) 과테말라(Guatemala)	(2) 터키(Turkey)
(10) 가봉(Gabon)	(9) 온두라스(Honduras)	
(11) 기니(Guinea)	(10) 니카라과(Nicaragua)	오세아니아 지역 (1)
(12) 기니비사우(Guinea-Bissau)	(11) 파나마(Panama)	(1)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13)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12) 파라과이(Paraguay)	
(14) 말리(Mali)	(13) 페루(Peru)	북미 지역 (1)
(15) 나이지리아(Nigeria)	(14) 우루과이(Uruguay)	(1) 멕시코(Mexico)
(16) 세네갈(Senegal)	(15) 베네수엘라(Venezuela)	
(17) 토고(Togo)		
(18) 튀니지(Tunisia)		

〈부록 2〉 추급권 도입 국가들의 법안 요약

각 국가들의 추급권 법안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였음. 추급권은 유럽지역 40개국,³⁸³⁾ 아프리카 지역 18개국, 남미 지역 15개국, 아시아 지역 5개국, 중동 지역 2개국, 오세아니아 지역 1개국, 북미 지역 1개국이 도입 중임.

〈유럽 지역 (40)〉

(1) 오스트리아(Austria)

▶ 오스트리아의 추급권은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문학 및 예술 작품과 관련 권리법 §16b, §3, §10, §11, §12, §23, §60, §87, §87b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1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건축, 응용 미술, 사진 작품은 미술작품에 포함되지만 과학적이거나(didactic nature)의 그림을 이용한 표현(pictorial representations)은 미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첫 번째 €50,000는 4%, 그 다음의 €150,000까지는 3%, 그 다음의 €150,000까지는 1%, 그 다음의 €150,000까지는 0.5%, 이밖에 모든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83) EU 국가와 비EU 국가의 구분은 2017년 05월 01일 기준이다

“EU member countries,” [EU] European Union, accessed July 1, 2016,

http://europa.eu/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index_en.htm.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2,500(약 325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전문 회사, 갤러리, 혹은 미술 딜러가 미술시장전문가로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특수한 후계자에게 상속되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87조(1)항에 의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³⁸⁴⁾³⁸⁵⁾

(2) 벨기에(Belgium)

▶ 벨기에의 추급권은 「*Artikelen XI.175 tot XI.178 van het wetboek van economisch recht en de bijhorende uitvoeringsbesluiten*」 재판매권리법 제XI.175조, 제XI.176조, 제XI.177조, 제XI.178조와 제XI.266조, 제XI.272조, 제XV.11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5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 -€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 이상은

384)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85) Federal Law on Copyrights o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Related Rights (Copyright Act) No. 58/2010, § 16b (2011) (Austria).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 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공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2,000(약 260만원)부터이며, 벨기에의 양은 €3,000(약 39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저 판매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공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참여한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 다른 수혜자이며, 호혜주의 원칙하에 외국인 저작권자도 인정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의 경우 벨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단일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SABAM이 맡고 있다. (8) **로열티 지급 방식**은 재판매 후 1달 안에 신고, 2달 안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SABAM은 재판매 가격이 결정된 후 로열티 지불 요청 청구서를 발행하는데 단,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는 방식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XV.110조에 의거 미술시장전문가가 정보청구권을 저해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와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³⁸⁶⁾³⁸⁷⁾

※ 벨기에의 경우 모든 미술시장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SABAM에 재판매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벨기에에서 ‘원-스톱-상점(One-stop Shop)’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재판매 웹사이트

386)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87) Act Transporting into Belgian Law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September 27,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Original Artwork, Article 1-9 (2007) (Belgium).

이트(www.resaleright.be)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작가의 경우 작가 단체(authors' society)에 가입해서 재판매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는 재판매가 이루어진 작품들의 이름, 작가 이름, 재판매 날짜, 재판매가 신고 된 날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어있다.³⁸⁸⁾ 이밖에도,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으로 재판매에 관여하는 미술시장전문가들은 단체로 또 개별적으로 매 3개월마다 재판매 내역을 원-스톱-상점(one-stop shop)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벨기에 재판매 웹사이트(www.resaleright.be)에 공식적인 판매보고서 복사본과 카탈로그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2015년 3분기는 2015년 10월 20일 이전, 2015년 4분기 2016년 1월 20일 이전, 2016년 1분기 2016년 4월 20일 이전, 2016년 2분기 2016년 7월 20일 이전까지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다.

(3) 불가리아(Bulgaria)

▶ 불가리아의 추급권은 「Закон за авторското право и сродните му прав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20조, 제20a조와 제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97조(12)항, 제99a와 추가 조항 §57(2)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1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스케치,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3,000 사이는 5%, €3,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기 전에 판매자나 중개인이 세금을 냈다면 판

388) "Volgrecht," [Belgium] Société d'Auteurs Belge - Belgische Auteurs Maatschappij(SABAM), accessed July 1, 2016, <http://www.sabam.be/nl/sabam/volgrecht-0>.

매가에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약 39만원)부터이며, 만약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 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거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나 중개인이 갤러리나 경매 전문 회사에서 미술작품 거래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며, 작가가 불가리아 시민이거나, 불가리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EU 회원국 출신이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 출신이고 불가리아에 주소지가 없어도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부여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97조(12)항에 의거 제20a조(6)항의 원 저작자에게 2달 안에 재판매 관련 통지를 하고, 2달 안에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389)390)

(4) 크로아티아(Croatia)

▶ **크로아티아의 추급권**은 「Zakon o autorskom pravu i srodnim pravima i Djela o izmjenama i dopunama zakona o autorskom pravu i srodnim pravima」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와 제99조, 제100조, 제105조, 제189조(1)항8)호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5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시각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389)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90)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0, 20a, 99a (2011) (Bulgaria).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크로아티아 쿠나(Croatian Kuna(kn)로 계산하며 €500-€50,000 사이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 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500(약 8만 5천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갤러리, 혹은 다른 아트 딜러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미술시장전문가로 재판매에 관여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수정 및 추가된 제189조(1)항8호에 따르면 작가의 허가 없이 다른 저작권 보유자나 추심기관이 재판매로 지급(제34조)에 실패했을 때 HRK 5,000에서 50,000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³⁹¹⁾³⁹²⁾

(5) 키프로스(Cyprus)

▶ 키프로스의 추급권은 「Ο περί του Δικαιώματος Πνευματικής Ιδιοκτησίας και Συγγενικ

39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92)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and Acts on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11, Article 34, 35, 36, 37, 38 (2014) (Croatia).

ών Δικαιωμάτων (Τροποποιητικός) Νόμος του 2006」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1A조, 제11B조, 제11Γ조, 제11Δ조, 제11Ε조, 제11ΣΤ조, 제11Ζ조와 제5조, 제13C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28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조형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모자이크, 페인팅, 장신구,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수세공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원작 저술가나 작곡가의 원고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재판 매료는 작품 판매가에서 세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장, 갤러리에서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재판매에 참여했거나 미술작품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으로, 제11Ε조에 의거 만약 저작권자가 키프로스 시민권자지만 키프로스에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저작자나 저작자의 상속자의 출신 국가에서 키프로스 출신 저작권자에게 추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호혜주의 원칙하에 인정이 가능하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3C조에 의거 법원은 저작권법 침해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미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35,000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³⁹³⁾³⁹⁴⁾³⁹⁵⁾

393)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9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06, Article 11 (2006) (Cyprus).

(6) 체코(Czech Republic)

▶ 체코의 저작권은 「Zákon č. 121/2000 Sb., zákon o právu autorském, o právech souvisejících s právem autorským a o změně některých zákonů (Autorský zákon)」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96조, 제100(1)(e)조, 제105a조, 제105b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으로 그림, 드로잉, 페인팅, 콜라주, 조각, 판화, 석판화 혹은 기타 그래픽 미술작품으로 사진,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장신구 등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빌딩 형식의 건축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 작곡가와 저술가의 원작 원고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1,500(약 189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저작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갤러리 운영자, 경매인, 딜러와 같이 미술작품을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05a조(1)항c)호나 제105b조(1)항c)호에 의거 제24조(6)항의 통지 의무를 어겼을 시 체코 코루나(Czech Koruna; Kč)로 CZK 50,000(약 235만원)까지의

395) [Cyprus] Cyprus Bar Association(ΠΑΓΚΥΠΡΙΟΣ ΔΙΚΗΓΟΡΙΚΟΣ ΣΥΛΛΟΓΟΣ). "Οι περί του Δικαιώματος Πνευματικής Ιδιοκτησίας Νόμοι του 1976 μέχρι 1993 (59/1976)." Last modified 2016. Accessed August 10, 2016. http://www.cylaw.org/nomoi/enop/non-ind/1976_1_59/index.html.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³⁹⁶⁾³⁹⁷⁾

(7) 덴마크(Denmark)

▶ **덴마크의 추급권**은 「Bekendtgørelse af lov om ophavsret」 저작권법 제38조와 제63조, 제53조, 제76조, 제8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29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미술, 유리 미술, 사진 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건축 작품은 범위에서 제외 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약 39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가 미술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매 전문 회사, 갤러리, 미술 딜러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 사망 후 배우자에게 권리가 계승된다. 또한,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EEA 회원국에 상당 기간 거주한 저작자에게도 권리가 부여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COPY-DAN Billeder이며, **(8) 로열티 지급 방식**

396)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397) Consolidated Version of Act No. 121/2000 on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nd on Amendment to Certain Acts (The Copyright Act), Article 24 (2006) (Czech Republic).

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일 년에 4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15%를 걷는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6조(1)항 (iv)호에 의거 제38조(7)항의 연례보고서나 추급권 관련 정보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와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³⁹⁸⁾

Note: 이밖에도 판매자나 에이전트는 추심기관에 매년 6월 1일마다 작년 한해의 재판매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인회계사와 등록 감사원에 의해 보증을 받아 제출할 의무가 있다.

(8) 에스토니아(Estonia)

▶ 에스토니아의 추급권은 「Autoriõiguse seadus」 저작권법 §15와 §4, §38, §39, §43, §48, §814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4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시각 미술작품으로 페인팅, 그래픽, 조각, 설치 작품, 응용 미술작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64(약 8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판매장, 갤러리나 미술작품 딜러를 통해 재판매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그녀의 법적 후

398)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4 (Consolidate Act No. 1144 on Copyright), Article 38 (2014) (Denmark).

계자이며, **(7) 로얄티 추심기관**은 EAU 혹은 에스토니아 작가단체(Eesti Eesti Autorite Ühing/Estonian Authors' Society; EAU)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81조에 의거 저자 혹은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 받았을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와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³⁹⁹⁾⁴⁰⁰⁾

Note: 에스토니아의 경우 법안은 가제트(Riigi Teataja)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⁰¹⁾

(9) 핀란드(Finland)

▶ **핀란드의 추급권**은 「**Tekijänoikeuslaki**」 저작권법 §26i-§26l과 §43, §44, §63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255(약 32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미술시장전문가로 재판매에 참여했을 경

399)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00) Copyright Act (Consolidated Text of November 1, 2013), § 15 (2013) (Estonia).

401) "Autoriõiguse Seadus," [Estonia] Riigi Teataja, accessed July 1, 2016,

<https://www.riigiteataja.ee/tutvustus.html?m=3>.

우에 한해 인정되며, 개인 자격으로 공공 뮤지엄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며,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EEA 국가에 상당 기간 거주했거나,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7) 로알티 추심기관**은 KUVASTO이며, 핀란드 경매 전문회사의 경매 카탈로그를 보면, 추급권에 관한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에는 재판매 로알티와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를 KUVASTO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 페이지는 작품 구매 시 추급권 신고서로 사용된다.⁴⁰²⁾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261조에 의거 만약 판매자가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을 시 지역의 국가 행정 에이전시에 의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조건부 벌금 형 혹은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알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⁰³⁾⁴⁰⁴⁾

Note: 핀란드는 로알티추심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이 법조문 제261조(1)항, (2)항, (3)항에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의 로알티추심기관은 교육부에 의해서 선정되며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기구만이 이 기능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기구는 재정상이나 운영상 전제조건을 갖추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승인된 기구는 교육부에 반드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핀란드는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지역의 국가 행정 에이전시(The regional

402) Akiko Ogawa, "The Potential of Adapting "Droit de Suite" in Japan- Based on the Interviews and Researches Held in France, Finland, and U.K.,"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228, <http://www.win-cls.sakura.ne.jp/pdf/6/15.pdf>.

403) **(8) 로알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04) Copyright Act No. 404 of July 8, 1961 (As Amended up to April 30, 2010), § 26i-26l (2010) (Finland).

state administrative agency)가 가장 강력하게 의무 준수 감독을 목적으로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력까지 동원이 가능하다고 제261조(2)항과 (3)항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지역 국가 행정 에이전시는 핀란드 추급권 26k(2)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계좌를 제출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감사 목적으로, 판매자는 판매자 소유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 재판매 수당 지급에 해당되는 판매 관련 모든 문서와 사업장에 상응하는 문서, 장부 등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문서도 제시해야 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자는 추심 기관이 전문가로 임명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역 국가 행정 에이전시는 추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추심기관에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61조(3)항에 따라 지역 국가 행정 에이전시의 할당된 의무 실행에 있어 경찰은 필요할 때 공식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수집된 정보가 불법적인 용도로 다른 사업 활동에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 게 취득한 정보를 발설하면 아니 된다.

(10) 프랑스(France)

▶ 프랑스의 추급권은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version consolidée du code au 11 mai 2015)」 지적재산권 법(Law) 제L122-8조, 제L123-1조, 제L123-2조, 제L123-6조, 제L123-7조, 제L334-1조, 지적재산권 규정(Regulatory) 제R122-2조, 제R122-3조, 제R122-4조, 제R122-5조, 제R122-6조, 제R122-7조, 제R122-8조, 제R122-9조, 제R122-10조, 제R122-11조, 제R122-12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5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 음악·영상 혹은 디지털미디어 조형 미술 창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추급권이 시작된 나라답게 가장 자세하게 미술작품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여러 점

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하고,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é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하며,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 본까지 허용된다.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까지 허용되며,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 본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f) 음악·영상 혹은 디지털미디어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 본까지 허용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 이하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 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750(약97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재판매에 관여했을 시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이며 용익권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유자나 양수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저작권자가 유럽공동체 국가나 EEA 가입 국가 출신이 아니어도 제L123-7조에 의거 저작자의 출신 국가에서 호혜주의 원칙하에 프랑스 출신 저작권자에게 추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자의 예술적 경력(artistic career)이 프랑스 미술에 기여 했고, 적어도 5년 동안 (연속 5년이 아니어도) 프랑스에 상시 거주했다면 호혜주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도 추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조항은 저작권자의 상속자에게도 해당된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ADAGP이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ADAGP가 관리 비용으로 추급권료의 20%를 청구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r122-12조에 의거 제r122-8조(1)항의 추급권료 지불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제r122-9조(2)항을

위반하여 해당 저작권자에게 추급권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혹은 제122-9조(3)항의 통지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혹은 제122-10조에 의거 저작권자에게 정보청구권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334-1조에 의거 만약 제122-8조의 규정을 위반 했을 시 구매자와 정부 기관 담당자는 권리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⁰⁵⁾⁴⁰⁶⁾

(11) 독일(Germany)

▶ 독일의 추급권은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26와 §54(1), §64, §65, §69, §71, §121(5), §137i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일자는 2013년 10월 1일이다. [독일은 1962년도 정부 개정안 §26에 추급권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965년도, 1972년도, 2006년도,⁴⁰⁷⁾ 2013년도에 개정되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도 법안을 2010년도에 번역한 자료가 있지만, 아직 2013년도에 개정된 법안을 번역한 자료는 없다.⁴⁰⁸⁾]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나 사진 작품이며,

405) (8) 로열티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06) Intellectual Property Code (Consolidated Version of the Code of May 11, 2015), L122-8, L123-7, L334-1, R122-1, R122-11 (2015) (France).

407) 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pyright Act), §26 (2006) (Germany), quoted in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권리 48 (2007): 188-189.

408) “[독일] 저작권법 (2010년 번역),”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9215>.

건축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 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400(약 52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 딜러나 경매인이 구매자, 판매자, 에이전트로 참여 했을 경우이며, (6) 적용 대상은 호혜주의 원칙하에 외국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 인정 시 해당 저작자에게도 권리가 부여된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단일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VG Bild-Kunst라 불리는데⁴⁰⁹⁾ VG Bild-Kunst는 1980년부터 재판매 로얄티를 징수 및 분배하고 있다. 독일 VG Bild-Kunst가 하는 일은 크게 (1) 추급권을 작가나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일과 (2) 복지 기금인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를 통해 수령된 재판매 로얄티 총액의 절반을 독일 작가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연금 제도 두 가지로 보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⁴¹⁰⁾ (8) 로얄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 유무의 경우 VG Bild-Kunst는 10%의 수수료를 요구 하고, 컨템포러리 시각 미술 진흥을 위한 예술기금(Stiftung Kunstfonds zur Förderung der zeitgenössischen bildenden Kunst/Arts Fund for the Promotion of Contemporary Visual Arts)으로 총 지불가의 5-7%를 연방정부에 납부한다. 이 기금은 작품이 재판매되지 않는 젊고 덜 성공한 예술가

409) VG Bild-Kunst는 VBK, 독일 시각미술가징수단체(Verwertungsgesellschaft Bildender Künstler/Painter Collecting Society; VBK)에서 단체 이름이 변경되었다.

410) Katy Graddy and Noah Horowitz and Stefan Szymanski, "A Study into the Effect on the UK Art Marke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8): 40.

를 지원한다.⁴¹¹⁾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알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⁴¹²⁾

Note: 이밖에도 만약 추심기관이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감사원이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사업자장부나 다른 문서를 검사하고 책임자는 점점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예술가들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이지만 세금율이 높은 것에 대한 관계인들의 불만도 높은 편이다. 독일 갤러리와 미술 딜러 협회 연맹(BVDG) 소속 딜러이자 갤러리 운영자인 아우릴 샤이블러(Aurel Scheibler)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작품을 구입할 때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kasse/Social Insurance for Artists; KSK) 5.2% + 부가가치세 19% + 재판매 로알티까지 내야 되는 실정이라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⁴¹³⁾

(12) 그리스(Greece)

▶ 그리스의 추급권은 「Νόμος 2121/1993, Πνευματική Ιδιοκτησία, Συγγενικά Δικαιώματα

411) Jochimsen, Lukrezia, and Wolfgang Neskovic. "Änderung beim Folgerecht zugunsten der bildenden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erreicht," *Fraktion Die Linke* (Berlin, Germany), June 29, 2006, <https://www.linksfraktion.de/presse/pressemitteilungen/detail/aenderung-beim-folgerecht-zugunsten-der-bildenden-kuenstlerinnen-und-kuenstler-erreicht.pdf>, quoted in Maximilian Gaber, "Chapter 13. The Resale Right Direc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ement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Market*, ed. Valentina Vadi and Hildegard E. G. S. Schneider (Berlin: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4), 303.

412) 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pyright Act), § 26 (2013) (Germany).

413) "France Changes Tax System to Benefit Artists," [USA, UK, Germany, France] Artnet, accessed July 1, 2016, <https://news.artnet.com/market/france-changes-tax-system-to-benefit-artists-212993>.

και Πολιτιστικά Θέματα」 저작권, 관련권리법 및 문화 사안 제5조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4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이나 조형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미술시장전문가나 판매장, 갤러리, 미술작품 딜러를 통해 재판매를 행했을 경우이며,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자격이 있는 자이다. 이밖에도,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거나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둘 다 해당 안 되지만 그리스에 상당 기간 거주한 저작자일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OSDEETE 혹은 그리스 시각미술작품과 시각미술어플리케이션종합관리기구(ΟΡΓΑΝΙΣΜΟΣ ΣΥΛΛΟΓΙΚΗΣ ΔΙΑΧΕΙΡΙΣΗΣ ΕΡΓΩΝ ΕΙΚΑΣΤΙΚΩΝ ΤΕΧΝΩΝ ΚΑΙ ΤΩΝ ΕΦΑΡΜΟΓΩΝ ΤΟΥΣ/Greek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Works of Visual Arts and their Applications; OSDEETE)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65조에 의거 저작권 및 관련법 침해 시 저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¹⁴⁾⁴¹⁵⁾

414)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15) Law No. 2121/1993 on Copyright, Related Rights and Cultural Matters (Law No. 4281/2014), Article 5 (2014) (Greece).

(13) 헝가리(Hungary)

▶ 헝가리의 저작권은 「1999. évi LXXVI. törvény a szerzői jogról (A követő jog)」 저작권법 제70조와 제31조, 제91조, 제100조, 제113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3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이나 원작 응용 미술작품으로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그리고 사진 미술작품이 포함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헝가리 포린트(Hungarian Forint; Ft)로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세금이나 문화 공헌(cultural contribution) 같은 기타 공공 부담금(public dues)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HUF 5,000(약 2만1천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작품 딜러를 통한 거래로 딜러는 자연인, 법인 혹은 미술작품의 마케팅을 하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기구를 포함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며,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이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헝가리에서 상당기간 거주 하였을 시에도 해당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 뮤지엄이 원작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딜러가 아닌 개인에게서 얻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제외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HUNGART 또는 헝가리 시각미술가징수단체협회(Vizuális Művészek Közös Jogkezelő Társasága Egyesület/Visual Artists Collecting Societies Association; HUNGART)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⁴¹⁶⁾⁴¹⁷⁾

(14) 아일랜드(Ireland)

▶ 아일랜드의 추급권은 「S.I. No. S.I. No. 312/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미술가재판매권리규정(S.I. No. 312/2006) 제 1조-제 10조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13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구매자, 판매자, 혹은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구매자나 판매자의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의 국적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거나 EFTA 3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IVARO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8조(3)항에 의거 작가가 재판매 관련자에게 추급권료 지급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90일 안에 수행을 못할 시 작가는 고등법원에 법원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F) 재판매 로얄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¹⁸⁾⁴¹⁹⁾

416)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17) Act No. LXXVI of 1999 on Copyright (Consolidated Text as of January 1, 2007), Article 70 (2007) (Hungary).

Note: 아일랜드의 법안은 전자 아일랜드 법령집(eISB: electronic Irish Statute Book)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²⁰⁾

(15) 이탈리아(Italy)

▶ 이탈리아의 추급권은 「Legge 22 aprile 1941, n. 633 sulla protezione del diritto d'autore e di altri diritti connessi al suo esercizio (decreto-legge n. 64)」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법 제144조-제155조 제2조, 제172조(3)항, 제202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나 원고 원본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 해당되고,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미술시장 전문가로 경매 전문 회사, 갤러리, 미술작품 딜러를 통해 재판매에 관여했을 경우 인정

418)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19) S.I. No. 312/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Article 1-10 (2006) (Ireland).

420) "S.I. No. 312/2006-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Ireland] Irish Statute Book(eISB), accessed July 1, 2016, <http://www.irishstatutebook.ie/2006/en/si/0312.html>.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후계자이고, 만약 저작권자가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이 아니어도 저작자의 출신 국가에서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 저작권자에게 취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호혜주의 원칙하에 인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이 아니고 이탈리아 시민권이 없지만 이탈리아에 상시 거주하는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작가가 6촌 이내에 상속자가 없다면 ENAP에 귀속되어 화가, 조각가, 뮤지션, 작가, 극작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ENAP는 이탈리아 화가·조각가·음악가·저술가·극작가 연금 및 사회보장기금 국립에이전시(L'Ente nazionale di assistenza e previdenza per i pittori e gli scultori, i musicisti, gli scrittori e gli autori drammatici/The National Board of Pension and Insurance Funds for Painters and Sculptors, Musicians, Writers and Playwright; ENAP)이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SIAE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72조(3)항에 의거 제152조와 제153조 위배 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고, €1,034에서 €5,165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와 (F)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관련 조항이 모두 삽입되어 있다.⁴²¹⁾⁴²²⁾

(16) 라트비아(Latvia)

▶ **라트비아의 취급권**은 「Autortiesību likums l nodaļa Vispārīgie noteikumi」 저작권법 §17과 §1(20), §36, §37(3), §38, §69(2)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3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판화, 석판

421)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22) Law No. 633 of April 22, 1941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Decree-law No. 64), Article 144-155 (2010) (Italy).

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 등의 시각 미술이나 그래픽, 조형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간**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갤러리, 미술 살롱, 매장 내 혹은 온라인 매장, 경매 전문 회사와 다른 비슷한 업체들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이고,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 인정 시 해당 저작자에게도 권리가 부여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69조(2)항에 의거 저작권법 관련 저작권자나 대변인은 침해된 권리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⁴²³⁾⁴²⁴⁾

Note: 라트비아 추급권 법안에서 특이한 점은 제17조(7)항에서 작품 소유자(구매자)는 원 저작자에게 작품을 ‘재현(reproduce)’하거나 ‘전시(exhibit)’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때 작품 유지보수 및 운반의 의무는 작가에게 있다.

(17) 리투아니아(Lithuania)

▶ 리투아니아의 추급권은 「**Autorių Teisių Ir retutinių Teisių Įstatymas**」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7조와 제4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65조, 제7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

423)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24) Copyright Law (As Last Amended on April 18, 2013), § 17 (2013) (Latvia).

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4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과 원작문학·음악 작품 원고로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300-€3,000 사이는 5%, €3,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약 39만원) 부터이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판매장, 갤러리, 뮤지엄, 골동품 상점, 경매 주최자,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사람, 작품을 판매하거나 평가하는 중개인으로 참여한 모든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며,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가 제3국이거나 유럽공동체 국가 소속이고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을 시 해당 저작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진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7조에 의거 저작권자의 권리 방어 목적으로 이 법에 규정된 대로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있다.⁴²⁵⁾⁴²⁶⁾

(18) 룩셈부르크(Luxembourg)

▶ 룩셈부르크의 추급권은 「Droits d'auteur, droits voisins, bases de données et brevets d'invention」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1조-제7조와 제9조, 제30조, 제66조, 제

425)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26)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o. VIII-1185 of May 18, 1999 (As Amended on October 7, 2014 by Law No. XII-1183), Article 17 (2014) (Lithuania).

71조bis항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8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으로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품에 해당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4%, €50,000-€2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 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저자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미술품 무역상이 미술시장전문가로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되며, 개인 간의 합의 매매(private sales)는 적용 판매 방법에서 제외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그리고 법적 후계자이며, 만약 저작권자가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이 아니어도 저작자의 출신 국가에서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 저작권자에게 추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호혜주의 원칙하에 인정이 가능하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²⁷⁾⁴²⁸⁾

427)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28)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Databases and Patents, Article 1-7 (2008) (Luxembourg).

(19) 네덜란드(Netherlands)

▶ 네덜란드의 저작권은 「Wet van 23 september 1912, houdende nieuwe regeling van het auteursrecht (Wet Copyright 1912, zoals laatstelijk gewijzigd in 2008)」 저작권법 제43조a항-43조g항과 제43조, 제3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2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으로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0-€50,000 사이는 4%, €50,000 -€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전문적인 아트 딜러나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업으로 삼는 자연인이나 법인, 미술작품 관련 계약을 성립시키는 중개인을 통할 시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계승권에 의한 양수인이며, a. 저작자의 출신국가가 유럽공동체 국가 소속이거나, b. EEA 회원국 출신이거나, c. 네덜란드에 상시 거주하는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제43g조(2)항에 의거 만약 저작권자가 유럽공동체 국가나 EEA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도 저작자의 출신 국가에서 유럽공동체 국가 출신 저작권자에게 지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호혜주의 원칙하에 인정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제43e조(2)항에 의거 2010년 1월 1일까지 지급권을 작가 본인에게만 한정하다가, 제43e조(3)항에서는 이 조항을 2012년 1월 1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PICTORIGHT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있다.⁴²⁹⁾⁴³⁰⁾

(20) 폴란드(Poland)

▶ 폴란드의 저작권은 「Ustawa z dnia 4 lutego 1994 roku o prawie autorskim i prawach pokrewnych」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19조-제19.5조와 제1조, 제5조, 제36조, 제39조, 제11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예술 작품, 사진 작품, 문학이나 음악 작품 원고가 포함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예술, 사진 작품의 경우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 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문학이나 음악 작품 원고 원본의 경우에는 차등비율 방식이 아닌 5%의 균일 비율 방식을 적용한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물품·용역소비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의 경우 €100(약 1만3천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미술작품 혹은 문학·음악 작품 원고 원본 거래에 관련 있는 전문적인 대상을 거쳤을 경우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그/그녀의 상속인 혹은 재판매 당시 폴란드 영토에 영주하는 장소가 있는 EFTA 국가 출신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ZPAP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15조에 의거 저작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벌금형이나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

429)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0) Act of September 23, 1912 Containing New Regulation for Copyright (Copyright Act 1912, As Last Amended in 2008), Article 43a-g (2012) (Netherlands).

체 관련 내용이 있다.⁴³¹⁾⁴³²⁾

(21) 포르투갈(Portugal)

▶ 포르투갈의 저작권은 「Lei nº 16/2008 de 1 de Abril (Respeito dos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지적재산권법(Law No. 16/2008) 제54조와 제11조, 제31조, 제32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8년 4월 1일에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조형미술작품으로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실크 프린트,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건축이나 응용 미술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3,000-€50,000 사이는 4%, €50,000- €200,000 사이는 3%, €200,000 -€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 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작품을 비영리 공공 뮤지엄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일 시에는 적용 판매 방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이며, EU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호혜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³³⁾⁴³⁴⁾

431)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2) Act No. 83 of February 4, 1994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s Last Amended on October 21, 2010), Article 19-19.5 (2010) (Poland).

(22) 루마니아(Romania)

▶ 루마니아의 저작권은 「Lege nr. 8 din 14 martie 1996 privind dreptul de autor si drepturile conexe」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법 제21조와 제7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13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혹은 조형 미술이나 사진 작품이고,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3,000 사이는 5%, €3,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약 39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 미술 전시, 갤러리와 미술작품 거래상을 통한 모든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작가에게 상속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VISARTA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39조에 의거 저작권 침해 시 위배로 간주되어 루마니아 레이(Romanian New Leu; lei)로 RON 3,000-RON 30,000 사이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³⁵⁾⁴³⁶⁾

433)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4) Law No. 16/2008 of April 1, 2008 (Enforcement of IP), Article 54 (2008) (Portugal).

(23) 슬로바키아(Slovakia)

▶ 슬로바키아의 저작권은 「Zákon č. 618/2003 Z.z. o autorskom práve a právach súvisiacich s autorským právom (v znení Zákon 283/2014 Z.z.)」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9조와 제2조, 제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4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페인팅, 드로잉, 콜라주, 태피스트리, 판화, 석판화, 다른 그래픽 작품, 조각, 도자기, 유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장신구 작품, 사진 혹은 다른 시각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건축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 작곡가 혹은 저술가의 원고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0 이상은 5%, €3,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1,000(약 130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저작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인, 판매 전시 주최자, 갤러리 운영자, 미술작품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아트 딜러)이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의 위치에서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그녀의 상속인이고,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저작권 인정 시 해당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

435)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6) Law No. 8 of March 14, 1996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 No. 329/2006), Article 21 (2006) (Romania).

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LITA이며, (8) 로얄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방식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관련 내용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⁴³⁷⁾⁴³⁸⁾

(24) 슬로베니아(Slovenia)

▶ 슬로베니아의 저작권은 「Zakon o avtorski in sorodnih pravicah」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5조와 제1조, 제59조, 제60조, 제67조, 제147조, 제159조, 제17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7년 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원작 미술품으로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판화, 프린트, 사진,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이 해당 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 이상은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품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장, 아트 갤러리, 경매 전문 회사에서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이 미술시장전문가로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권리 보유자이며, 호혜주의 원칙하에 외국인 저작권자도 인정하고 있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85조(1)항3호에 의거 저작권

437)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8) Act No. 618/2003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s Amended up to Act No. 283/2014 Collection), Article 19 (2014) (Slovakia).

로 계산을 위한 정보제공 불응 시 처벌할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열티 지불 책임 주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³⁹⁾⁴⁴⁰⁾

(25) 스페인(Spain)

▶ 스페인의 추급권은 「Ley Nº 3/2008, de 23 de diciembre, relativa al Derecho de Participación en Beneficio del Autor de una Obra de Arte Original」 원작 미술작품과 작가 혜택을 위한 재판매 권리 제1조-제13조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2년 1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 비디오 미술(video art piece)로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50,000 이상은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1,200(약 156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장, 경매 전문 회사, 갤러리, 미술딜러, 미술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미술작품 브로커 일을 수행하는 자연인[自然人] 혹은 법

439)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40)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of March 30, 1995 As Last Amended on December 15, 2006, Article 35 (2006) (Slovenia).

인이나 미술시장전문가인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매 안에서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이며,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가 유럽 공동체 국가 소속이거나 제3국출신 저작자인데 스페인에 상시 거주하는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제3국출신 저작자인데 스페인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추급권을 인정하면 해당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VEGAP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 관련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 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와 (F) 재판매 로얄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441)442)

Note: 스페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이 추급권 법안에 기재되어 있었으며.⁴⁴³⁾, 모든 재판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재판매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스웨덴(Sweden)

▶ **스웨덴의 추급권**은 「Lag (1960:729) om upphovsrätt till litterära och konstnärliga verk」 문학 및 예술 작품 저작권법 제26조n항-p항과 제1조, 제41조, 제42조, 제49a조, 제53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1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 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441)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42) Law No. 3/2008 of December 20, 2008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Art Work, Article 1-13 (2008) (Spain).

443) The right holder or the management bodi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s of confidentiality or privacy trade regarding any information

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이나 개인이 비영리 공공 뮤지엄에 작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 이상은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231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사진의 경우 제49a조에 의거 50년)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에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자, 중개인, 구매자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만 한해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배우자, 상속이나 유언이 인정되고, 제10.3조에 의거 작가 사망 후에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7) 로얄티 추심기관**은 BUS이며, **(8) 로얄티 지급 방식**은 연 3회로 3월 1일(10.1.-12.31. 사이 추급권료), 6월 1일(1.1.-4.30. 사이 추급권료), 11월 1일(5.1.-9.30. 사이 추급권료)에 추급권료를 지불한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BUS는 추급권료의 20%를 청구하는데, 추심기관은 행정·운영 예산 제외 금액을 수혜자에게 지불한다(여러 명이 판매에 관여했을 시 판매자가, 판매자가 미술시장전문가가 아닐 경우 중개인이 추심기관에 지불).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53조에 의거 저작권법 규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C) 재판매 로얄티 지불 책임 주체,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수혜자는 추심기관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판매 로얄티를 수금해야 되는데 이 조항은 추심기관이 수혜자를 찾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했을 때에만 유효하다.⁴⁴⁴⁾

444)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s Amended April 1, 2011), Article 26n-p (2011) (Sweden).

Note: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가는 재판매 수당에 관한 권리가 없다. (1) 사회보장코드(Code for Social Security)의 제2장 §6과 §7에 따라 25%의 표준 부가가치세(만약 작가가 직접 판매했을 경우 12%)를 제외한 판매가가 기본가(basic amount/Prisbasbelopp)의 1/20(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⁴⁴⁵⁾, (2) 판매가 건물의 형태를 가진 건축 작품의 복제와 관련된 경우, (3)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에 참여하지 않고, 판매가 개인에 의해 수행되어 이윤 창출의 목적이 없는 활동을 수행하는 뮤지엄에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스웨덴 법안의 경우 스웨덴 국회(SVERIGES RIKSDAG) 사이트의 문서 및 법률(Dokument & lagar)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⁴⁶⁾

(27) 영국(United Kingdom)

▶ **영국의 추급권은 「2006 No. 346 Intellectual Property-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지적재산권법 제1조-제17조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2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혹은 사진으로 그래픽이나 조형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무주물 (bona vacantia)일 경우에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대량 생산 품목이 아닌 유명한 작가가 만든 독특한 가구나 은작품, 장신구류도 보호 대상에 해당)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445) 스웨덴 사회보장코드 제2장 7§: Prisbasbeloppet räknas fram genom att bastalet 36 396 multipliceras med det jämförelsetal som anger förhållandet mellan det allmänna prisläget i juni året före det som prisbasbeloppet avser och prisläget i juni 1997. Det framräknade prisbasbeloppet avrundas till närmaste hundratal kronor.

446) "Lag (1960:729) om upphovsrätt till litterära och konstnärliga verk," [Sweden] Sveriges riksdag, accessed July 1, 2016,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60729-om-upphovsratt-till-litterara-och_sfs-1960-729.

€50,000까지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1,000(약 130만원)부터이며,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10,000(약 1,299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구매자, 판매자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정이 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와 공공 전시를 목적으로 한 뮤지엄 거래는 제외) (6) **적용 대상**은 작가의 상속인이며, (7) **로열티 추심기관**은 DACS와 ACS이다. DACS는 1983년 영국의 유일한 저작권 관리 및 징수 단체로 설립되어 2006년부터는 추급권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고, ACS는 2006년 영국 미술시장연맹(British Art Market Federation; BAMF)과 런던미술딜러단체(Society of London Art Dealers; SLAD)를 통한 미술가와 딜러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 (8) **로열티 지급 방식**은 DACS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며, ACS의 경우 4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 DACS는 분기별로 미술시장전문가에게 정보 요청서를 보내 분기별로 재판매된 작품들을 신고하도록 청구하고, 법으로 모든 미술시장전문가들은 9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된다. 작성된 서식이 DACS에 제출된 후 DACS는 미술시장전문가들에게 작가에게 지불해야 할 적당할 금액을 청구하고, 청구된 금액이 징수되면 3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DACS가 사용하는 것은 편리한 온라인 송장작성(invoicing) 시스템이다.⁴⁴⁷⁾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DACS와 ACS 두 곳 다

447) Akiko Ogawa, "The Potential of Adapting "Droit de Suite" in Japan- Based on the Interviews and Researches Held in France, Finland, and U.K.,"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229, <http://www.win-cls.sakura.ne.jp/pdf/6/15.pdf>.

재판매 로열티 금액에서 15%를 걷는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만약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미술시장전문가는 관련 재판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가 법원에 요청해 법원 명령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구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⁴⁸⁾⁴⁴⁹⁾

Note: 만약 미술시장전문가가 이베이(eBay)나 아트뱅크(ArtBank) 같은 웹 기반 플랫폼(web-based platform)을 통해 판매를 수행했을 경우, 판매가 모든 다른 적격 기준을 충족시키면 재판매 로열티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⁴⁵⁰⁾

On the Road to EU membership (4)

(28) 알바니아(Albania)

▶ 알바니아의 취급권은 「Ligi Nr. 9380, datë 28.4.2005 për të drejtën e autorit dhe të drejtat e tjera të lidhura me të」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 18조와 제7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118조, 제12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5년 4월 28일에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작품(fine art works)’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모든 작품의 재판매마다 건어 들인 총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

448)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49) 2006 No. 346 Intellectual Property-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Article 1-17 (2006) (United Kingdom).

450)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DACS), “DACs Response to the Inquiry into the Resale Royalty Right by the US Copyright Office,” (2012): 7.

가 기준은 알바니아 렉(Albanian Lek; ALL)으로 Leks 5000(약 5만원)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재판매를 수행하는 자, 판매 진행인의 대표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작가가 사망했을 시 상속받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18조, 제120조에 의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관련 사법 기관에 법적 절차를 밟고 손해 배상을 요청 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⁵¹⁾⁴⁵²⁾

(29) 마케도니아(Macedonia)

▶ 마케도니아의 저작권은 「Закон за авторското право и сродните права」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41조-제44조와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135조, 제160조-제163조, 제18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0년 9월 8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 그래픽 미술, 조형 미술 등 원작 미술작품이며,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그래픽, 판화, 석판화, 조각, 도자기, 카빙, 테피스트리, 유리제품, 사진 등이 범위에 포함되고, 작가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3,000 사이는 5%, €3,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를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판매 당일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국립은행 기준 환율에 따라 마

451)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52) Law No. 9380 of April 28, 2005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18 (2005) (Albania).

케도니아 데나르(Macedonian Denar; MKD)로 계산하며, 세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약 3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아트 딜러, 공공 경매의 주최자 혹은 다른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 혹은 그의 후계자이고, 외국인 거주자도 경우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60조-제163조에 의거 저작권법 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⁵³⁾⁴⁵⁴⁾

Note: 마케도니아 추급권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원고(manuscript)’를 위한 재판매법을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마케도니아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조항 제44조를 보면 (1) 문학 또는 음악 작품의 원고 원본이 판매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disposed) 되었을 때, 원 작가는 모든 후속 재판매에 관서 통지를 받을 권리와 각 판매 가격 정가에서 3%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0) 몬테네그로(Montenegro)

▶ 몬테네그로의 추급권은 「Zakon O Autorskom I Srodnim Pravima」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4조-제35조와 제4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 제75조, 제183조, 제19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며, 제4조에 의거 ‘미술’은 드로잉, 그래픽 작품, 페인팅, 조각 등이고,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1,000-€50,000 사이는 4%,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453)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54)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41-44 (2010) (Macedonia)

1%, €350,000 €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를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1,000(약 130만원)로 책정되었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자, 구매자 혹은 중개인(갤러리, 경매)으로 거래에 참여했을 시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권리 보유자이고, 제196조 국제협약과 호혜주의 원칙하에 외국인도 인정받을 수 있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83조에 의거 권리가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 보호와 손해 요청을 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⁵⁵⁾⁴⁵⁶⁾

(31) 세르비아(Serbia)

▶ **세르비아의 추급권**은 「З А К О Н О АУТОРСКОМ И СРОДНИМ ПРАВИМА」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5조, 제36조(4.3.2. Droit de Suite)과 제2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제217조, 제22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림, 드로잉, 콜라주, 그래픽, 사진, 태피스트리, 조각, 도자기로 만든 미술작품, 유리나 다른 재료로 작가가 직접 제작한(works made by the artists own hand) 유사한 작품 등이 원작 미술작품에 해당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세르비아 디나르

455)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56) Law No. 07-1/11-1/15 of July 12, 2011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mulgated by Decree No. 01-933/2 of July 25, 2011), Article 34-35 (2011) (Montenegro)

(Serbian Dinar; RSD)로 PCД 100,000–5,000,000(약 5,304만원) 사이는 4%, PCД 5,000,000–20,000,000(약 2억1,218만원) 사이는 3%, PCД 20,000,000–35,000,000(약 3억 7,126만원) 사이는 1%, PCД 35,000,000–50,000,000(약 5억3,067만원) 사이는 0.4%, PCД 50,000,001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PCД 1,300,000(약 1,380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PCД 100,000(약 10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 살롱, 갤러리와 경매 전문 회사를 통한 모든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고, 호혜주의 원칙하에 WTO 가입 국적 작가도 인정이 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제 217조에 의거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는 재판매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작가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재판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⁴⁵⁷⁾⁴⁵⁸⁾

Non European Union (9)

(32)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 아제르바이잔의 추급권은 「Müəlliflik Hüququ və Əlaqəli Hüquqlar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Qanunu」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6조과 제5조, 제6조, 제25조, 제26조, 제46조, 제4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원작 미술품 혹은 저술가, 작곡가의 원고 원본

457)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58)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4.3.2, Article 35, 36 (2011) (Serbia).

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는데, 작품가
격이 기존보다 20% 이상 상승했을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
정되어 있지 않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갤러리, 미술 살롱, 상점 등을 통한 공공의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작가의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이 법에 규정 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법
률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삽입되
어 있지 않다.⁴⁵⁹⁾⁴⁶⁰⁾

Note: 아제르바이잔은 추급권이 단 2줄로 쓰여 있다.

(33) 벨라루스(Belarus)

▶ **벨라루스의 추급권**은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т 17 мая 2011 г. № 262-3 о
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8조와 제6조, 제16
조, 제20조, 제5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1년 11월 30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
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나 저술가, 작곡가, 과학자의 원고 원본이며, 제6조5
항에 의거 ‘미술작품’은 조각, 페인팅, 드로잉, 석판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로열티 비**
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
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갤러리, 미술 살롱, 상점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56조에 의거 저작권법과 관련법 침

459)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
는 찾아볼 수 없다.

460) Law No. 1079-IIIQ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Article
16 (2010) (Azerbaijan).

해 시 법원은 위반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 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⁴⁶¹⁾⁴⁶²⁾

(3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 Herzegovina)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저작권은 「Zakon o Autorskom i Srodnim Pravima 2010」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5조와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63조, 제17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0년 8월 10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페인팅, 드로잉, 콜라주, 그래픽, 그라비아(gravures), 사진, 태피스트리, 조각, 예술적 점토 작품, 유리 등의 원작 미술작품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보스니아인 컨버터블 마르카(Bosnian Convertible Marka; BAM)로 KM 1,000–100,000(약 6,625) 사이는 4%, KM 100,000–400,000(약 2억6,519만원) 사이는 3%, KM 400,000–700,000(약 4억6,409만원) 사이는 1%, KM 700,000–1,000,000(약 6억6,297만원) 사이는 0.5%, KM 1,0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권료의 한도는 KM 25,000(약 1,657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KM 1,000(약 6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에이전트가 판매장, 갤러리, 경매 전문 회사를 통해 거래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상속 혹은 제175조에 의거 외국인 거주자도 인정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46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62) Law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 262-III of May 17, 2011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18 (2011) (Belarus).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⁴⁶³⁾⁴⁶⁴⁾

(35) 조지아(Georgia)

▶ 조지아의 추급권은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კანონი საავტორო და მომიჯნავე უფლებების შესახე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20조와 제6조, 제31조, 제32조, 제54조, 제5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0년 5월 4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과 사진 등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개인의 음악·영상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조지아 라리(Georgian Lari; GEL)로 ₾500(약 26만원)–₾100,000(약 5,125만원) 사이는 4%를 적용하고, ₾ 100,000–₾400,000(약 2억500만원) 사이는 3%를 적용한 금액에 ₾4,000(약 205만원)가 추가로 더해진다. ₾ 400,000–₾700,000(약 3억5,877만원) 사이는 1%를 적용한 금액에 ₾13,000(약 666만원)가 추가로 더해지며, ₾700,000–₾1,000,000(약 5억1,252만원) 사이는 0.5%를 적용한 금액에 추가로 ₾16,000(약 820만원)가 더해진다. 마지막으로, ₾1,000,000 이상인 경우 0.25%를 적용한 금액에 ₾17,500(약 897만원)가 추가로 더해져서 추급권료로 산출되는 방식이다. 조지아의 경우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 하는 차등비율 방식이지만 차등비율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추가 금액을 각 가격 구간마다 덧붙이고 있다. 이밖에도,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25,000(약 1,281만원)를 넘을 수 없게 책정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500(약 26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 경매, 미술작품 판매 전시나 상점 등

463)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6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Article 35 (2010) (Bosnia & Herzegovina).

에 한해 전문적인 중개인이 참여했을 시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법이나 유언을 통한 상속인이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GCA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58조에 의거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⁶⁵⁾⁴⁶⁶⁾

(36) 아이슬란드(Iceland)

▶ 아이슬란드의 **추급권**은 「Copyright Act nr. 73/1972, eins og henni var síðast breytt með lögum nr 126/2011」 저작권법 제25.gr.b.조와 제1조, 제5조, 제43조, 제54.gr.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1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유화, 아크릴, 템페라, 수채화, 구아슈(gouache), 파스텔 페인팅, 그림, 드로잉 등 다양한 재료/기법(annarri tækni)을 포함한 원작 미술작품과 석판화, 구리판화(koparstungu), 동판화, 목판화, 조각, 텍스타일, 유리제품, 모자이크, 도자기, 자기, 예술적 금·은 공예 작품, 사진 등 원작 그래픽 미술작품 등이며, 작가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구조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3,000 이상은 10%, €3000–€50,000 사이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를 넘길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3,000(약 390만원)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 구매자, 갤러리의 브로커, 아트딜러들이 판매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특이하게 ‘미술 경매’는 적용 판매 방법에 포함

465)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66) Law of Georgia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0 (2010) (Georgia).

되지 않는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법적 상속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동저작권법 제54.gr.조에 의거 추급권 관련 정보 제공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얄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⁶⁷⁾⁴⁶⁸⁾

Note: 이밖에도 판매자, 구매자, 브로커는 추급권에 의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6개월마다 재판매를 비교하는 회계 보고서를 보증된 공인 회계사를 통해 검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리히텐슈타인의 추급권은 「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URG)」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15a조-제15g조와 제2조, 제32조, 제33조 제50조-제53조, 제5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 중 그림, 콜라주, 페인팅,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제품, 사진 등이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스위스 프랑(Swiss Franc; CHF)으로 CHF 4,700-78,000 사이는 4%, CHF 78,001-312,000 사이는 3%, CHF 312,001-546,000 사이는 1%, CHF 546,001-780,000 사이는 0.5%, CHF 780,001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CHF

467)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68) The Copyright Act No. 73/1972 (As Last Amended by Act No. 126/2011), 25.gr.b. (2011) (Iceland).

19,500(약 2,292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CHF 4,700(약 552만원)으로 만약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한 기간이 재판매 날짜 기준 3년이 안되었거나 가격이 CHF 15,600(약 1,830만원) 이하이면 추급권에서 제외된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전문 회사, 갤러리, 딜러 등이 판매자, 구매자, 중재인으로 관여했을 시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법적 후계자이며, 리히텐슈타인 거주 외국 국적 작가를 포함해서 호혜주의 원칙하에 해당 저작자의 출신국가가 추급권을 인정 할 시 권리를 부여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57조에 의거 저작권이나 관련 법 침해 시 법원에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⁴⁶⁹⁾⁴⁷⁰⁾

(38) 모나코(Monaco)

▶ 모나코의 추급권은 「Loi n° 491 du 24/11/1948 sur la protection des oe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11조-1과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1981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 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조형 작품이며, 제2조에 따르면 ‘문학 및 예술 작품 (oe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의 범위 중에는 드로잉, 페인팅,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작품 혹은 사진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작품 등도 포함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원천 징수 하지 않은 판매 수익금에서 10% 룩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

469)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70)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Copyright Law), Article 15a-15g (2006) (Liechtenstein).

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생존 배우자 혹은 상속자이고, 수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29조에 의거 어떠한 저작권법 법규 위반이라도 재정적 손실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대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⁴⁷¹⁾⁴⁷²⁾

(39) 노르웨이(Norway)

▶ **노르웨이의 추급권**은 「Lov om opphavsrett til åndsverk m.v. (åndservkloven)」 저작권법 §38c와 §40, §51, §54, §57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신의 개정은 2015년도에 이루어졌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으로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판화, 프린트,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자기, 유리 미술, 사진 작품 등이며 건축물은 제외이지만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은 원본 인정이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50,000까지는 5%, €50,000-€200,000 사이는 3%, €200,000-€350,000 사이는 1%, €350,000-€500,000 사이는 0.5%, €500,000 이상은 0.25%의 가격 구간 대 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비율 방식이 적용되며, 각 미술작품마다 받을 수 있는 추급권료의 한도는 €12,500(약 1,626만원)를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3,000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시장전문가가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으로 참여한 것에 한해 인정이 되며, 개인이나 비영리 뮤지엄은 원칙적으로는 제외 되지만 중개인이 참여 했을 시에는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노르웨이 시민

47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72) Law No. 491 of November 24, 1948 on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11-1 (1948) (Monaco).

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작가나 그의 상속인이고, (7) 로얄티 추심기관은 BONO가 맡고 있다. 노르웨이는 추급권은 BONO가 미술세는 BKH 혹은 노르웨이 예술가 구호기금 (Bildende Kunstneres Hjelpesfond/The Artists' Relief Fund; BKH)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1948년 이후 '미술세(Kunstavgiften/The Art Tax)' 법률에 의거 노르웨이에서의 시각 미술작품 판매 일체에 대해 3-5% 정도의 세금이 붙었는데, 현재 '미술세' 법률은 NK2,000 이상인 미술작품을 거래 할 때마다 5% 정도를 부과하며, 가격이 €50,000 이상일 경우 % 비율은 합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게 개정되었다. 판매자나 미술시장전문가는 미술세 고지 및 지불 의무가 있으며, 미술세 관련 홈페이지에는 계산기가 있어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 세금은 작가에게 직접 구매한 공공 미술작품, 작가에게 의뢰한 작품, 대회 제출한 작품 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BKH를 통해 예술가에게 보조금 등 혜택을 주는데 사용된다.⁴⁷³⁾ (8) 로얄티 지급 방식은 재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3달 정도 후에 재판매 로얄티가 지급되는 방식이며,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기관 축적 보상금은 추급권료 징수 및 분배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54e)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⁴⁷⁴⁾

(40) 러시아(Russia)

▶ 러시아의 추급권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의 민법 제1293조와 제1244조, 제1272조, 제128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12월 8일에

473) "Kunstavgiften/The Art Tax is applicable to art sales where the sale price exceeds 2,000 NOK," [Norway] Kunstavgiften, accessed July 1, 2016, <http://www.kunstavgiften.no/en>.

474) Law on Copyright Etc. (Copyright Act), § 38c (2015) (Norway).

〈아프리카 지역 (18)〉

▶ 알제리의 저작권은 「الموافق 1424 جمادى الأولى عام 19 مؤرخ فى 03-05 الأمر رقم 2003 يو عام يتعلق بحقوق」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28조와 제4조, 제54조-제55조, 제132조, 제14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3년 7월 24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조형 미술이며, 제4조에 의거 조형 미술 혹은 응용 미술의 범위는 드로잉, 유화, 조각, 카빙, 석판화, 자라비 미술(Zaraby art) 등이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작품의 재판매 총액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혹은 전문적인 거래상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

476)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mended up to 2014), Article 1293 (2014) (Russia).

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32조에 의거 알제리 국립저작권및저작인접권국(National Bureau of Copyrights & Neighboring Rights)은 저자와 상속인의 권리 대변 및 중개 역할을 하며, 제144조에 의거 피해를 입은 권리권자는 사법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방지 절차를 취할 수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⁴⁷⁷⁾⁴⁷⁸⁾

(42) 베냉(Benin)

▶ 베냉의 **추급권**은 「Loi n° 2005-30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en République du Benin」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4.2조와 제8조, 제52조-제54조, 제110조, 제113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4월 5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혹은 입체미술품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에서 베냉의 추급권 규정에 제정된 %에 따라 책정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정해진 바 없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혹은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10조와 제113조에 의거 제4.2조 추급권 위반 시 만·형사상 처벌이 가능 하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⁷⁹⁾⁴⁸⁰⁾

477)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78) Ordinance No. 03-05 of 19 Joumada El Oula 1424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28 (2003) (Algeria).

479)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3)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 부르키나파소의 저작권은 「Loi n° 032-99/AN du 22 décembre 1999 portant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18조, 제19조와 제5조, 제34조, 제35조, 제10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래픽 혹은 입체 미술작품이며, 제5조에 따른 미술의 범위는 드로잉, 페인팅, 조각, 판화, 석판화, 태피스트리 등이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각 작품의 원천 징수 하지 않은 전체 가격에서 부과되며,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와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04조에 의거 동 법률의 조항을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권리권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 거래 관련 책임자가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있다.⁴⁸¹⁾⁴⁸²⁾

(44) 카메룬(Cameroon)

▶ 카메룬의 저작권은 「Décret n° 2001/956/PM du 1er novembre 2001 fixant les

480) Law No. 2005-30 of April 5, 2006 o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the Republic of Benin, Article 4.2 (2006) (Benin).

48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82) Law No. 032-99/AN of December 22, 1999 on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18, 19, 104 (1999) (Burkina Faso).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 2000/11 du 19 décembre 2000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3조-제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1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이나 입체 미술작품 혹은 원고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세금 공제(tax allowance) 계산을 하지 않은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매도인(vendor), 무역상, 공공이나 정부의 관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그녀의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동저작권법 조항 80-82에 의거 관련 법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483)484)485)

(45) 차드(Chad)

▶ 차드의 취급권은 「Loi n° 005/PR/2003 du 2 mai 2003 portant Protection du Droit d'Auteur, des Droits Voisins et des Expressions du Folklore」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전통문화 표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5조, 제39조-제40조, 제13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2일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483)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84) Decree No. 2001/956/PM of November 1, 2001 Implementing Law No. 2000/11 of December 19, 2000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7 (2001) (Cameroon).

485) Law No. 2000/011 of December 19, 2000 o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Article 3, 37, 80-82 (2000) (Cameroon).

작품 혹은 입체 미술작품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원천 징수 하지 않은 판매 가격 수익금에서 10% 몫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EMAC) 회원 6개국에서 통용되고, 중부아프리카중앙은행(Ban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BEAC)에서 발권하는 화폐인 CFA 프랑(Communauté Financière d'Afrique Franc; CFA Franc)으로 CFA 50,000(약 95,800원)부터 적용된다.⁴⁸⁶⁾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혹은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30조에 의거 추급권 침해 시 구매자나 정부의 관리는 수혜자에게 손해 배상을 명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⁴⁸⁷⁾⁴⁸⁸⁾

(46) 코모로(Comoros)

▶ 코모로의 추급권은 「Loi du 11 mars 1957 sur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42조와 제3조, 제21조, 제24조, 제50조, 제7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57년 4월 8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과 조형 미술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원천 징수 하지 않은 전체 판매 가격에서 3%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코모로 프랑(Comorian Franc; KMF)으로 CF 5,000(약 13,100원)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486)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라 XAF로 표기되는 화폐이다.

487)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88) Law No. 005/PR/2003 of May 2, 2003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and Expression of Folklore, Article 33, 130 (2003) (Chad).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와 무역상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자격이 있는 후계자인데, 코모로 민법 제578조 용익권(De l'usufruit)이 적용된다. 생존 배우자인데 아직 최종 별거 판결이 안 났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부부재산제(le régime matrimonial)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상속자를 남겼고, 민법 제913조와 제915조에 의거 상속자가 원할 시 재산의 비율과 차이 조정에 따라 용익권이 줄어들 수도 있다. 단, 이 법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중단되는 특징이 있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6조에 의거 추급권 위반 시 습득자와 법 담당관은 재판매료와 수해자의 피해 보상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음을 선언 받을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⁴⁸⁹⁾⁴⁹⁰⁾⁴⁹¹⁾

(47) 콩고(Republic of the Congo)

▶ 콩고의 추급권은 「Loi n° 24/82 du 7 juillet 1982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30조와 제7조, 제61조-제63조, 제67조, 제100조, 제10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82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혹은 입체 미술작품이며, 건축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

489)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90) Law of March 11, 1957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42 (1957) (Comoros).

491) [Comoros] Droit-Afrique "La loi du 23 septembre 1987 ayant conféré au droit musulman une compétence exclusive sur certains pans du droit civil." Last modified May 15, 2015. Accessed April 19, 2016. <http://www.droit-afrique.com/upload/doc/comores/Comores-Code-civil.pdf>.

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00조, 제101조에 의거 관련 법 위반 시 소를 제기하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⁹²⁾⁴⁹³⁾

(48)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 코트디부아르의 **추급권**은 「Loi n° 96-564 du 25 juillet 199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oeuvres de l'esprit et aux droit des auteurs, des artistes-interprètes et des producteurs de phonogrammes et vidéogrammes」 지적 저작물의 보호와 저자, 공연가, 음반·비디오그램 제작자 권리법 제26조, 제44조와 제6조, 제25조, 제45조, 제7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래픽과 입체 미술작품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수익금의 '일부분'이라고 지정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99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나 딜러를 통한 모든 연속적인 판매나 소유권 이전(transfers)에 한해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4조에 의거 제44조 위반 시, 습득자, 판매자, 공공 경매를 통한 판매 수행에 책임이 있는 자는 수혜자의 손해 배상 지불에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선고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⁹⁴⁾⁴⁹⁵⁾

492)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93) Law No. 24/82 of July 7, 1982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0 (1982) (Congo).

494)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9) 지부티(Djibouti)

▶ 지부티의 저작권은 「Loi n°154/AN/06 du 23 juillet 2006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droit d'auteur et du droit voisin」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11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40조, 제9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23일에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혹은 입체 미술작품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딜러를 통한 작품 판매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그의 상속인 혹은 자격이 있는 후계자가 그 대상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제96조에 의거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부티 저작권및관련권리국(le Bureau Djiboutien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Djiboutian Offic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DDA)이나 관련 법원은 권리 침해 중단을 위한 보호 조치를 명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⁴⁹⁶⁾⁴⁹⁷⁾

(50) 가봉(Gabon)

▶ 가봉의 저작권은 「Loi n° 1/87, du 29 juillet 1987, instituant la protection du droit

495) Law No. 96-564 of July 25, 1996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Works and the Rights of Authors, Performers and Phonogram and Videogram Producers, Article 25, 26, 44, 74 (1996) (Côte d'Ivoire).

496)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97) Law No. 154/AN/06 of July 23, 2006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11 (2006) (Djibouti).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48조와 제4조, 제2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29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혹은 입체 미술작품이며, 조항 4에 따르면 드로잉, 페인팅, 석판화, 동판화, 목판화나 다른 비슷한 종류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딜러의 중개 혹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63조, 제65조 등에 의거 이 법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사법부의 관할 하에 있고, 관할 법원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관련법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⁴⁹⁸⁾⁴⁹⁹⁾

(51) 기니(Guinea)

▶ 기니의 취급권은 「Loi n° 043/APN/CP du 9 août 1980 portant adop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24조와 제1조, 제42조, 제5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80년 9월 15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과 입체 미술작품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8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498)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499) Law No. 1/87 of July 29, 1987 Instituting Protection for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8, 48, 60 (1987) (Gabon).

공공 경매 혹은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54조에 의거 추급권(제24조) 침해 시, 습득자와 정부의 관리는 재판매료를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⁵⁰⁰⁾⁵⁰¹⁾

(52) 기니비사우(Guinea-Bissau)

▶ 기니비사우의 추급권은 「Código do Direito de Autor (aprovado pelo Decreto-Lei n° 46.980 de 28 de Marco de 1972)」 저작권법 제59조, 제60조와 제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5조, 제5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72년 3월 28일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작품, 원고 원본 혹은 지적인 작품(intellectual work)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10,000\$까지의 판매는 1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판매는 20%가 적용된다. 통화 가치의 절하로 인한 작품 가격의 상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당한 가격의 증가로 매도인이 혜택을 보았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매 로열티 외에 제60조에 의거 추가적인 보상 요청이 가능한데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권리를 이미 처분한 작가가 향후 있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불충분한 예측으로 인해 상당히 불이익을 입었고, 그가 받은 수익금이 권리 취득자가 벌어들인 이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었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 요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보상 요청은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평가에는 작가의 작품 전체가 고려되며, 판사는 공정한 의사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매도인을 통한 거

500)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01) Act No. 043/APN/CP of August 9, 1980 Adopting Provisions Relating to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24 (1980) (Guinea).

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 혹은 유언 집행자·법정 대리인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502)503)

(53)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 마다가스카르의 저작권은 「Loi n° 94-036 du 18 septembre 1995 portant sur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40조와 제5조, 제38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59조, 제14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5년 9월 18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작품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중개인 혹은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이며 수유자와 자격이 있는 후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직 법적 이혼이 성립이 안된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재산계획(marital property scheme)이나 법 No. 67-030(1967.12.18.)의 제38조와는 관련 없이 미성년자 또는 법적 능력이 없는 상속인의 양육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 No. 68-012 (1968.07.04.)의 제55조에 지정된 비율과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저작권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동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141조에 의거, 저작권료 미납 시 구매자와 정부의 관리는 재판매료를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제정되어 있지

502)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03) Copyright Code (Approved by Decree-Law No. 46.980 of March 28, 1972), Article 59, 60 (1972) (Guinea-Bissau).

않다.⁵⁰⁴⁾⁵⁰⁵⁾

(54) 말리(Mali)

▶ 말리의 저작권은 「Loi n° 08 - 024 / du 23 juillet 2008 fixant le régime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n République du Mali」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제8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147조, 제14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26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그래픽 미술, 조형 미술, 원고 등이며 건축 작품과 응용 미술작품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말리의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여 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혹은 무역상을 통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이며, 응익권이 적용되고, 수익자와 후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말리의 법안에는 전문 추심기관을 위해 일정 비율을 금액(재판매 로얄티)에서 공제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 적혀있지만 정확한 %는 정하고 있지 않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47조항과 제148조에 의거 저작권료 불납 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⁵⁰⁶⁾⁵⁰⁷⁾

504)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05) Law No. 94-036 of September 18, 1995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40, 141 (1994) (Madagascar).

506)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5) 나이지리아(Nigeria)

▶ 나이지리아의 저작권은 「Copyright Act (Chapter 68)」 저작권법 §12와 §15, §30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9년 5월 10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입체 미술작품, 원고 등이며, 건축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NCC 혹은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NCC)에 의해 확립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딜러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방식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자격이 있는 후계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15에 의거 저작권법 위반 시 저작권자는 소를 제기해서 관할 연방고등법원을 통해 관련 절차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⁵⁰⁸⁾⁵⁰⁹⁾

(56) 세네갈(Senegal)

▶ 세네갈의 저작권은 「Loi n° 2008-09 du 25 janvier 2008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47조-제50조와 제6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12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8년 1월 25일 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이나 입체 미술작품 혹은 원고에 해당되며 건축

507) Law No. 08-024 of July 23, 2008 Laying Down the Regime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in the Republic of Mali, Article 19, 20, 21, 147, 148 (2008) (Mali).

508)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09) Copyright Act (Chapter 68, As Codified 2004), § 12, 15, 30 (2004) (Nigeria).

작품이나 응용 미술작품은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제정하고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상속인, 소유자가 그 대상이며, 만약 상속인이 없을 경우 작가의 경제적 권리는 국가에 귀속 되고 추급권 추심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27조에 의거 저작권자는 법의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⁵¹⁰⁾⁵¹¹⁾

(57) 토고(Togo)

▶ 토고의 추급권은 「Loi n° 91-12 du 10 juin 1991 portant protection du droit d'auteur, du folklore et des droits voisins」 저작권, 전통문화 및 관련권리법 제47조와 제6조, 제36조-제40조, 제9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1년 8월 2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그래픽 작품, 입체 미술작품, 욕필 작품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경매나 상업적인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그의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91조에 의거 추급권 위반 시, 구매자, 판매자, 공공 경매 책임자는 재판매 로열티의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⁵¹²⁾⁵¹³⁾

510)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11) Law No. 2008-09 of January 25, 2008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47-50 (2008) (Senegal).

(58) 튀니지(Tunisia)

▶ 튀니지의 저작권은 「 يتعلق بالملكية ا 1994 فيفري 24 مؤرخ في 1994 لسنة 36 قانون عدد » 문학 및 예술적 소유권법 제25조와 제1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4년 3월 1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원고 작품이나 입체 미술작품이며, (2) 로알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딜러를 통하거나 경매를 통한 거래가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나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⁵¹⁴⁾⁵¹⁵⁾

〈남미 지역 (15)〉

(59) 볼리비아(Bolivia)

▶ 볼리비아의 저작권은 「Ley N° 1322 del 13 de abril de 1992 sobre el derecho el

512) (7) 로알티 추심기관, (8) 로알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13) Law No. 91-12 of June 10, 1991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lklore and Related Rights, Article 47, 91 (1991) (Togo).

514) (7) 로알티 추심기관, (8) 로알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15) Law No. 94-36 of February 24, 1994 o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rticle 25 (1994) (Tunisia).

autor」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와 제6조, 제18조, 제1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2년 4월 13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예술적이거나 그래픽 혹은 입체 미술작품 혹은 원고이며, 건축이나 응용 미술작품은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가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아트딜러나 경매인이 판매자, 구매자 혹은 에이전트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수유자, 그리고 자격이 있는 후계자 등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⁵¹⁶⁾⁵¹⁷⁾

(60) 브라질(Brazil)

▶ 브라질의 저작권은 「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 (Lei dos Direitos Autorai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38조와 제7조, 제39조-제45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8년 6월 20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나 원고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미술작품 값에 어떠한 증가가 있으면 적어도 5% 이상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브라질의 경우 가격에 변화가 없으면 재판매 로열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매 재판매시라고 규정되어 있고, **(6) 적용 대상**은 혼인 계약에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작가에게만 적용된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은 AUTVIS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찾아볼 수 없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F) 재판매 로열티 보관 의무 등의 존재유무 관련 조항이 있다.⁵¹⁸⁾⁵¹⁹⁾

516)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17) Law No. 1322 of April 13, 1992 on Copyright, Article 50 (1992) (Bolivia).

(61) 칠레(Chile)

▶ 칠레의 저작권은 「Ley N° 17.336 sobre la Propiedad Intelectual」 지적재산권법 제 36조와 제3조, 제1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칠레 작가의 페인팅, 조각, 드로잉, 스케치 등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작품 습득자에 의해 획득된 가장 높은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혹은 입증된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 본인만 포함이 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 양수인등은 범위에서 제외 된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동법 93c)에 의거 30%가 넘지 않게 책정되어야 하며, 칠레의 CREAMAGEN 혹은 고정된 이미지를 위한 작가 권리단체(Sociedad de Gestión de los Creadores de Imagen Fija/Authors Rights Society of Fixed Images; CREAMAGEN)에서는 20%를 책정하여 작가들에게 걷고 있다. 만약 외국인 작가일 경우 호혜주의 원칙하에 20-25% 사이에서 책정한다.⁵²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8조에 의거 5-50의 월말 결산 단위(monthly accounting units)의 벌금형이나 제79조(e)항에 의거 권리 보유자나 법률의 동의 없이 로얄티 지급금을 수집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⁵²¹⁾⁵²²⁾

518)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19) Law No. 9,610 of February 19, 1998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8 (1998) (Brazil).

520) "2015 Memoria," [Chile] CREAMAGEN, Sociedad de Gestion de Los Credores de Imagen Fija, accessed June 15, 2016, <http://www.creamagen.cl/documentos/Memoria2015.pdf>.

(62) 코스타리카(Costa Rica)

▶ 코스타리카의 추급권은 「Ley N° 6683 sobre el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Ley N° 8834)」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51조와 제58조, 제97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이나 저술가나 작곡가의 원고 원본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동법 제58조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되어 있지만 추급권에 해당하는 제151조에는 50년이라 별도 지정되어 있다. (2008년 11월 21일에 코스타리카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판매자’를 통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혈족의 상속인이 포함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나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⁵²³⁾⁵²⁴⁾

(63)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 도미니카 공화국의 추급권은 「Ley N° 65-00 de Derecho de Autor」 저작권법 제78조와 제2조, 제21조-제2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신의 개정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의 그림 작품이나 조각, 구상 미술작품, 입체

52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22) Law No. 17.336 on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36 (2010) (Chile).

523)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24) Law No. 6683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No. 8834), Article 151 (2010) (Costa Rica).

미술작품 등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2%보다 낮은 비율이 책정되어야 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전시, 혹은 전문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배우자, 상속인, 그리고 후계자가 포함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⁵²⁵⁾⁵²⁶⁾

(64) 에콰도르(Ecuador)

▶ 에콰도르의 저작권은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Codificación N° 2006-013)」 지적재산권법 제38조, 제39조와 제8조, 제18조, 제80조, 제30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입체 미술작품이나 저술가나 작곡가의 원고 원본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인데 작가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작가가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시작해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혹은 딜러가 구매자, 판매자, 에이전트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는 제113조(b)항에서 행정 비용이 30%가 넘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확히 몇 %를 걷는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304조에 의거 권리 보유자가 받았어야 할 로얄티 전체 값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

525)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26) Law No. 65-00 on Copyright, Article 78 (2000) (Dominican Republic).

지 의무 및 소멸시효와 (D)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⁵²⁷⁾⁵²⁸⁾

(65) 엘 살바도르(El Salvador)

▶ **엘 살바도르의** **추급권**은 「**Ley de Fomento y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Decreto Legislativo N° 604, del 15 de julio de 1993)**」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와 제8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신의 개정은 2009년도에 이루어졌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심미안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의 입체 미술작품들로 페인팅, 드로잉, 판화, 석판화 등을 예시로 들었고, 사진, 건축 작품, 음악·영상 작품은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2%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나 전문 아트 딜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한해 인정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⁵²⁹⁾⁵³⁰⁾

527)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28) Intellectual Property Law Codification No. 2006-13, Article 38, 39 (2006) (Ecuador).

529)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30) Law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ve Decree No. 604 of July 15, 1993), Article 37 (1993) (El Salvador).

(66) 과테말라(Guatemala)

▶ 과테말라의 취급권은 「Ley de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38조와 제15조, 제19조, 제126bis조 등에 제정 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0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미술작품과 작가나 작곡가의 원고 원본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 가격에서 10%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도입하지 않고 있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5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전문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나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26bis조에 의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법의 의무나 추심기관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⁵³¹⁾⁵³²⁾

(67) 온두라스(Honduras)

▶ 온두라스의 취급권은 「Ley del Derecho de Autor y de los Derechos Conexos (aprobada por Decreto N° 4-99-E)」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43조와 제2조, 제44조-제45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등에 제정 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작품이나 저술가나 작곡가의 원고 원본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5년인데 다른 국가의 적용 기한이 75년보다 길 경우 국내법을 적용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전문 거래상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법적 권리 후계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56조, 제157조 등

53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32)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38 (2000) (Guatemala).

에 의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⁵³³⁾⁵³⁴⁾

(68) 니카라과(Nicaragua)

▶ 니카라과의 취급권은 「Ley de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Ley N° 31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26조와 제13조, 제27조-제3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06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원작 미술품이나 저술가나 작곡가의 원고 원본이며 건축이나 응용 미술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거래 영업체, 판매 에이전트나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에 의한 후계자이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없다.⁵³⁵⁾⁵³⁶⁾

(69) 파나마(Panama)

▶ 파나마의 취급권은 「Ley N° 64 de 10 de Octubre de 2012 sobre el Derecho de

533)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34)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 (Approved by Decree No. 4-99-E), Article 43 (2006) (Honduras).

535)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36)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No.312, Article 26 (2001) (Nicaragua).

Autor y Derechos Conexo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36조와 제2조, 제11조, 제59조-제65조, 제152조, 제157조, 제170조, 제17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2년 10월 10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이나 조형미술로 페인팅, 조각, 스케치, 드로잉, 판화, 석판화가 포함되며, 사진, 건축 작품, 음악·영상 작품, 응용 미술은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전문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52조, 제157조, 제170조, 제174조 등에 의거 저작권법의 조항이나 법령을 위반하면 저작권 산업총국에 의해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 .537)538)539)

(70) 파라과이(Paraguay)

▶ 파라과이의 취급권은 「Ley N° 1328/98 de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77조와 제4조, 제47조-제53조, 제150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8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드로잉, 페인팅, 조각, 판화, 석판화를 포함한 입체 미술작품이고,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

537)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38) Law No. 64 of October 10, 2012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36 (2012) (Panama).

539) [Panama] Centro Regional para el Fomento del Libr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CERLALC) “Ley 64 de 10 de Octubre de 2012 Sobre Derecho de Autor y Derechos Conexos.” Last modified May 15, 2015. Accessed April 14, 2016.

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나 전문 아트 딜러를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제150조에 의거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을 위반하면 파라과이 국립지적재산권국(La Dirección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National Directorate of Intellectual Property; DINAPI)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재판매 통지 후 1년간 재판매 로열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금 기한이 만료되며, 그 금액은 문화발전기금으로 파라과이 국립지적재산권국에 적립된다.⁵⁴⁰⁾⁵⁴¹⁾

(71) 페루(Peru)

▶ **페루의 취급권**은 「Ley sobre el Derecho de Autor (Decreto Legislativo N° 822 del 23 de abril de 1996)」 저작권법 제82조-제84조와 제2조, 제5조, 제52조-제56조, 제169조, 제186조, 제18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신의 개정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입체 미술작품이며 (응용미술로 여겨지는 것과 관계없이) 스케치, 드로잉, 페인팅, 조각, 판화, 석판화를 포함하는데 사진과 건축 작품이나 음악·영상 작품은 제외된다.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3%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에 동의할 수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540)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41) Law No. 1328/98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f October 20, 1998, Article 77 (1998) (Paraguay).

경매나 전문 아트 딜러를 통한 것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69조, 제186조, 제188조 등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있다. 페루의 경우 재판매 통지 후 3년간 재판매 로열티를 찾아가지 않을 시 문화 개발을 목적으로 페루 국립문화기관(Instituto Nacional de Cultura/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of Peru; INC)에 기부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⁵⁴²⁾⁵⁴³⁾

(72) 우루과이(Uruguay)

▶ 우루과이의 취급권은 「Ley N° 9.739 de 17 de diciembre de 1937 sobre Derechos de Autor (modificada por última vez por la Ley N° 18.046 de 24 de octubre de 2006)」 저작권법 제9조, 제42조와 제5조, 제14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일자는 2006년 10월 24일이다. (1) **인정되는 미술품 범위**는 조형미술(회화 또는 조각 따위)과 조각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3%의 균일 비율이고,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으로 2013년도에 의회에 70년으로 연장하자고 했으나 한 차례 기각 당했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상업적인 영업체 혹은 에이전트나 거래상을 통한 거래에 한해 인정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는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와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⁵⁴⁴⁾⁵⁴⁵⁾

542)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43) Copyright Law (Legislative Decree No. 822 of April 23, 1996), Article 82-84 (1996) (Peru).

(73) 베네수엘라(Venezuela)

▶ 베네수엘라의 저작권은 「Ley sobre el Derecho de Autor」 저작권법 제54조와 제2조, 제25조-제28조, 제109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1993년 10월 15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입체 미술작품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2%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6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전문 미술 딜러를 통하거나 공공 경매를 포함시키고 있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109조에 의거 권리를 침해당하면 법원에 요청해 권리를 찾고 침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법안에 담고 있지 않았다.⁵⁴⁶⁾⁵⁴⁷⁾

<아시아 지역 (5)>

(74) 인도(India)

▶ 인도의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57 (as amended by The Copyright Act,

544)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45) Law No. 9,739 of December 17, 1937 on Copyright (As Last Amended by Law No. 18, 046 of October 24, 2006), Article 9 (2006) (Uruguay).

546)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47) Law on Copyright, Article 54 (1993) (Venezuela).

1999, No. 49, and The Copyright Act, 2012, No. 27)」 저작권법 §53A와 §2, §17, §22-§23, §63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신의 개정은 2012년도에 이루어졌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페인팅, 조각, 드로잉이나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원고 원본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인도 저작권청(India Copyright Board)에 의해 작품 종류에 따라 다른 할당률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 할당률은 재판매 가격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인디안 루피(Indian Rupee; INR)로 ₹ 10,000(약 17만원)부터이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60년 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재판매의 경우(in the case of resale)'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법적 상속인이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63은 §53A(추급권)를 처벌 대상에서 면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⁵⁴⁸⁾⁵⁴⁹⁾

Note: 인도의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 중 압둘 아지즈 래바(Abdul Aziz Raiba, 1922-2016)는 60여년의 기간 동안 작업을 지속하였고, 인도와 해외에서 주요한 현대미술 작가로 자리 잡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여전히 인도 날라소파라(Nala Sopara) 근처 방 하나짜리 플랫폼 형태의 주거지에서 힘겹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2012년 그의 90살 생일에는 추급권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함께 개최되기도 하였다.⁵⁵⁰⁾

(75) 카자흐스탄(Kazakhstan)

▶ 카자흐스탄의 추급권은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авторских и смежных

548)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49) Copyright (Amendment) Act 1994, § 53A (1994) (India).

550) Kasmin Fernandes, "Give Artists What They Deserve," *The Times of India* (Gurgaon, India), Jul 6, 2012,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023493998?accountid=6802>.

права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제17조와 제2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일자 는 2015년 11월 24일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이라고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따로 없고,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 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 경매, 갤러리, 전시, 상점 등에서 이루어진 각 재판매에 한해서 인정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법이나 유언을 통한 상속인에 해당하고,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와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⁵⁵¹⁾⁵⁵²⁾

(76)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 키르기스스탄의 취급권은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ыйзамы «Автордук Жана Чектеш Укуктар Жөнүндө» (КР 2014-жылдын 21-январындагы № 14 Мыйзамынын редакциясына ылайык)」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17조와 제7조, 제27조, 제48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일자 는 2014년 1월 21일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이라고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 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공의 경매, 갤러리, 상점 등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법이나 유언을 통한 상속인에 한정한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48조에 의거해 동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상의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⁵⁵³⁾⁵⁵⁴⁾

55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52)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ticle 17 (2012) (Kazakhstan).

(77) 필리핀(Philippines)

▶ 필리핀의 저작권은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8293)」 지적재산권법 §200-§201과 §10.2, §213, §214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연도는 2012년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작 페인팅이나 조각 혹은 저술가나 작곡가가 쓴 원고 원본 등에 해당하고, 프린트, 동판화, 판화, 응용미술이나 복제화(reproductions) 혹은 유사한 종류의 작품군은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판매나 대여(lease)의 총 수익금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이며, (5) 적용 판매 방법은 첫 번째 양도 이후의 모든 판매와 대여에 해당하고,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10.2에 의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며, (11)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555)556)

(78)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553)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54)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s Amended up to Law No. 14 of January 21, 2014), Article 17 (2014) (Kyrgyzstan).

555)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56)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8293), § 200-201 (1997) (Philippines).

▶ 우즈베키스탄의 취급권은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Қонуни № 42, 20.07.06 Муаллифлик ҳуқуқи ва турдош ҳуқуқлар тўғрисида」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23조와 제6조, 제35조, 제6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21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시각 미술이며, (2) 로얄티 비율 퍼센트는 재판매 가격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는데 재판매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적어도 20% 이상 상승했을 시에만 적용한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50년 이다.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시각 갤러리, 아트쇼, 쇼핑 등 모든 재판매에 해당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그의 후계자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61조에 의거 저작권법 관련법 위반 시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책임을 감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⁵⁵⁷⁾⁵⁵⁸⁾

〈중동 지역 (2)〉

(79) 아르메니아(Armenia)

▶ 아르메니아의 취급권은 「Зако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제27조와 제3조, 제37조, 제66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22일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본의 미술작품이고,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가능하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의 경우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아르메니아 화폐(Armenian Dram, AMD)로 ֏250,000(약 60만원)이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

557)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58)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42 of July 20, 2006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rticle 23 (2006) (Uzbekistan).

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 갤러리, 미술 살롱, 매장의 소유주 혹은 다른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에 해당한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작가의 상속인, 후계자에 해당하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66조(2)항e)호에 따라 저작권자는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법원을 통해 권리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에는 (D) 재판매 로알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있다.⁵⁵⁹⁾⁵⁶⁰⁾

(80) 터키(Turkey)

▶ 터키의 **추급권**은 「5846 sayılı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son ile değiştirilen 23 Ocak 2008 Tarihli ve 5728 Sayılı Kanunla)」 지적 및 예술작품 법 제45조와 제4조, 제26조, 제27조, 제71조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일자는 2008년 1월 23일이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원본의 미술작품이고 건축 작품은 범위에서 제외되며,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가능하다. (2) **로알티 비율 퍼센트**의 경우 10% 이하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전 판매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 로알티 추급이 가능하다.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전시나 경매, 매장에 한해 인정이 된다. 단, 재산을 처분하는 강제집행 판매(executionary sale)의 경우, 모든 다른 부채들이 완전히 변제된 이후에만 재판매 로알티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2촌 이내의 법적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까지 인정이 되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의 경우 제71조에 의거해 모든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 관련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는 (D) 재판매 로알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와 (E) 재판매 로알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559) (7) 로알티 추심기관, (8) 로알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560)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f June 15, 2006, Article 27 (2006) (Armenia).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고, 터키의 경우 재판매 로얄티 지불 의무에 대한 소멸 시효 기간은 그와 같은 의무를 발생시킨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되어 있다.⁵⁶¹⁾⁵⁶²⁾

〈오세아니아 지역 (1)〉

(81)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 오스트레일리아의 추급권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시각 미술가를 위한 재판매로얄티권리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2009년 12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미술가들의 책(artists' books)⁵⁶³⁾, 바틱(batiks) 미술, 카빙⁵⁶⁴⁾, 도자기 미술, 콜라주, 디지털 미술작품, 드로잉, 판화, 미술 장신구(fine art jewelry), 유리제품, 설치, 석판화, 다중매체 미술작품, 그림, 사진, 프린트, 조각, 태피스트리, 비디오 미술작품, 위빙 등이고, 작가나 그의 동의에 의한 한정판 작품도 원본으로 인정 가능하다. 반면, 빌딩, 드로잉, 빌딩 모형, 빌딩 도면, 「1989 회로레이아웃법(Circuit Layouts Act 1989)」에 따른 회로레이아웃(circuit layout), 문학, 드라마, 음악 작품 등의 원고 원본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로얄티 비율 퍼센트

561) (7) 로얄티 추심기관, (8) 로얄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562) Law No. 5846 of December 5, 1951 on Intellectual and Artistic Works (As Last Amended by Law No. 5728 of January 23, 2008), Article 45 (2008) (Turkey).

563) artists' books/livre d'artiste: 미술가들의 책 [북아트로도 불리며, 문학과 미술이 결합한 형태의 책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작품을 총칭하는 용어]

564) carving, carvings in high/low relief: 카빙 [목조나 석조같이 재료를 쪼아내어 조각하는 것으로 깊은 양각이 high-relief 얇은 양각으로 새기는 것이 low relief]

는 판매가에서 5%의 균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판매가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물품·용역소비세는 포함되지만 구매자의 프리미엄과 세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⁵⁶⁵⁾ **(3) 최저 판매가 기준**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Australian Dollar; AUD)로 \$1,000 (약88만원)이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70년이고, **(5) 적용 판매 방법**은 경매인, 갤러리나 뮤지엄 소유주 혹은 경영자, 아트 딜러, 미술작품 거래 비즈니스에 참여한 미술시장전문가가 관련된 상업적인 재판매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자 작가,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자 작가와 그들의 상속인이다. 호혜주의 원칙하에 저작자의 출신국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자의 추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권리를 부여한다. 호혜주의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은 ‘거주자시험(Residency Test)’과 유언에 의한 처분의 경우 개인, 자선 단체, 혹은 커뮤니티 단체가 ‘상속시험(Succession Test)’을 통과할 것을 법에서 명하고 있다. **(7) 로열티 추심기관**의 경우 CAL에서 관리하고 있다. **(8) 로열티 지급 방식**의 경우 먼저 작가는 CAL에 작가 등록을 해야 하며, 작품이 재판매가 이루어지면 CAL에서 웹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21일 후에 청구서를 보낸다. 이 기간 안에 작가는 자신이 직접 로열티를 수집할 것인지 기관이 대행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선택이 가능하다.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15%를 수집하고 있으며,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제39조에 의거 민사 규정 위반 시 연방 법원 명령을 통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E) 재판매 로열티 수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

565) “[오스트레일리아] 시행 1년을 맞은 오스트레일리아 추급권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7565&list.do?pageIndex=1&brdct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항이 존재한다.⁵⁶⁶⁾

Note: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안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정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술법센터: 미술을위한 국립지역사회법률센터(The National Community Legal Centre for the Arts; Arts Law Centre of Australia)라는 비영리회사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범위에서 미술 관련 법적, 경제적 사항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미술가나 미술단체를 위한 교육 혹은 리소스를 제공한다. 이 웹사이트에는 추급권 관련 법안 및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⁵⁶⁷⁾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위원회(Australian Copyright Council; ACC)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급권 관련 법안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⁵⁶⁸⁾

〈북미 지역 (1)〉

(82) 멕시코(Mexico)

▶ **멕시코의 추급권**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refundida hasta el 14 de julio de 2014)**」의 제92bis조와 제13조, 제20조, 제29조, 제212조, 제229조-제236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2014년 7월 14일에 통합 개정되었다. (1) 인정되는 **미술작품 범위**는 입체 미술, 사진, 문학이나 예술 작품 원고 원본 (응용미술은 제외)이며, (2) **로열티 비율 퍼센트**는 설정되지 않았고, (3) **최저 판매가 기준**도 없다. (4) **적용 기한**은 작가의 생애와 사후 100년이다. [2003년 연방 저작권법(신법) 제

566)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 1-53 (2009) (Australia).

567) "About Us," [Australia] Arts Law Centre of Australia, accessed July 1, 2016, <http://www.artslaw.com.au>.

568) "Home," [Australia]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accessed July 1, 2016, http://www.copyright.org.au/acc_prod/ACC/Home/ACC/Home.aspx.

29조에 개정되었다.⁵⁶⁹⁾ (5) **적용 판매 방법**은 공개 경매, 상업적인 영업체, 거래상이나 상업적인 에이전트를 통한 것에 한해 인정이 되며, (6) **적용 대상**은 작가와 상속인이다. (10) **처벌 규정 존재유무**는 동저작권법 제229조-제236조에 의거 저작권법 법률 규정 위반 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11) **의무 및 소멸시효**의 경우 (A) 재판매 발생 통지·고지 의무 및 소멸시효, (B) 정보청구권: 정보 제공·요청 의무 및 소멸시효, (D) 재판매 로열티 지불 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⁵⁷⁰⁾⁵⁷¹⁾

569) 김현철 and 박덕영, “FTA체결에 있어 저작권분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19, quoted in

이규호, “멕시코 저작권법제의 개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3, no. 1 (2009): 146.

570) (7) **로열티 추심기관**, (8) **로열티 지급 방식**, (9) **추심기관 행정·운영 할당 예산 존재유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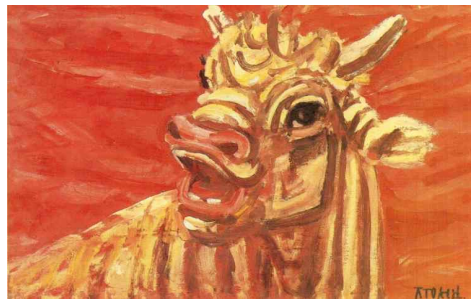
571) Federal Law on Copyright (As Consolidated up to July 14, 2014), Article 92 bis (2014) (Mexico).

도 판

도판 1. 박수근(1914-1965), <굴비, 1962>



도판 2. 이중섭(1916-1956), <황소, 1953>



도판 3. 장-루이포랭(Jean-Louis Forain, 1852-1931), <굶주리는 미술가(Starving Artist), 1920>



도판 4.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곡예사들(Family of Saltimbanques), 1905>



도판 5. 그랜트 우드(Grant Wood, 1891-1942),
<혁명의 딸(Daughter of Revolution), 1932>



도판 7. 로버트 바라(Robert Ballagh, 1943-),
<워홀을 바라보는 소녀(Girl Looking at a Warhol),
연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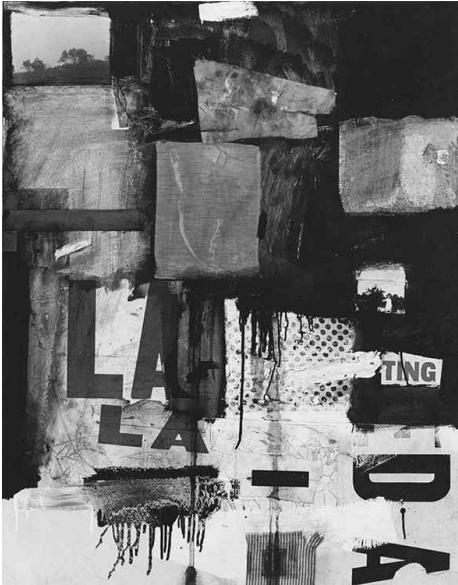
도판 6. 로버트 바라(Robert Ballagh, 1943-), <JP
돈레비의 초상(Portrait of JP Donleavy), 1969>



도판 8.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 <걷고 있는 남자(Walking Man I),
1960>



도판 9.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해빙(Thaw), 1958>



도판 10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동시 상영(Double Feature), 1959>



도판 11.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더블 화이트 맵(Double White Map), 1965>



도판 12.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플라워(Flower),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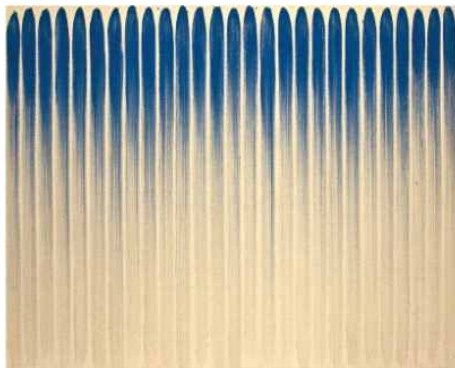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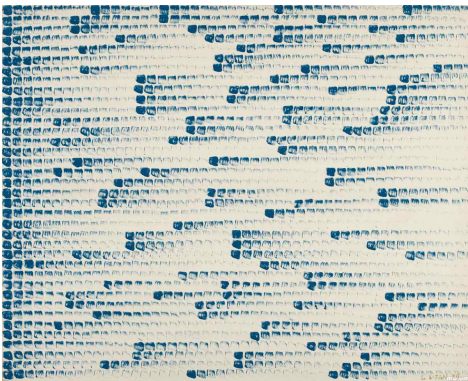
도판 13. 마이클스미서(Michael Smither, 1939-),

<밴 안의 가족(Family in the Van), 1971>



도판 15. 이우환(1936-), <점으로부터, 1970년대

시리즈작>, <선으로부터, 1970년대 시리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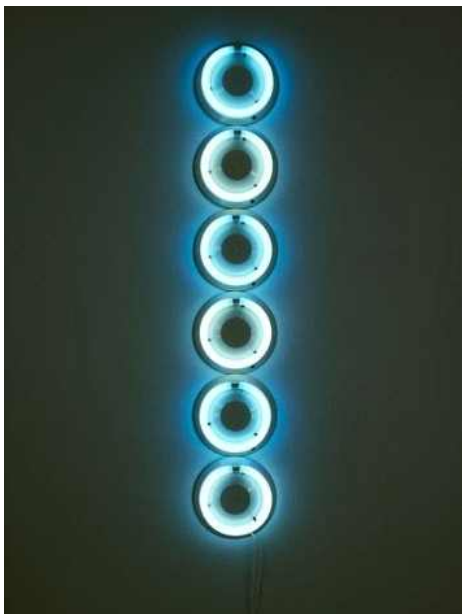
도판 14. 천경자(1924-2015), <미인도, 1977>



도판 16.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 <공간 속의 새(Bird in Space), 1923>



도판 17. 댄 플래빈(Dan Flavin, 1933-1996),
 <6개의 교번 형광등 클화이트/웜화이트 수직 및
 중심(Six Alternating Cool White/Warm White
 Fluorescent Lights Vertical and Centered), 1973>



도판 18.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여행 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 1935-1941>



영 문 초 록

Implementing the Artist's Resale Right(Droit de Suite) in Korea

Hyemin Lee

Art Managements,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riters or musicians can make profit from the reproduction of their works over several generations. The same applies to the copyright owners of a music or a text who can earn a significant economical reward from a reproduction of a single work (i.e. a popular song or a bestseller book).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fine arts, where the 'original' has values over the reproduction, owners profit from the singularity, rarity, and the prestige of the painter. Valuing a work of a painter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stige of the painter established by a body of work formed over the years. However, artists (or their families) do not profit

directly from the rising value of their works. Such changes are better represented in arts market composed of collectors, dealers, investors, galleries, auction houses, etc. This puts creators of fine arts at a considerable disadvantage compared to writers or musicians, putting them outside of the equity standard.

European jurists have been putting a large amount of effort in setting the equity standards and fixing the unfairness problem between copyright owners in the world of fine arts. For example, in 1920, France first enacted the 'resale right,' or 'Droit de Suite,' an inalienable right for the artists and their family to receive a certain rate of profit from any resale of their works. This right was the first piece of the puzzle in protecting the basic benefits of artists, and is currently in effect in 82 countries. As of now, it has become easy to predict what the resale right brings to the arts market, as many countries followed suite since France first enacted this right in 1920, with the whole of European Union further establishing the right with the EU Directive 2001/84/EC in September 21st, 2001, and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312 of 2006 in June 13th, 2006.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ones outside of EU enacting there sale right to a great effect, now is the time for Korea to discuss the matter of applying it to the country in depth.

This paper is comprised of 5 chapters in total, and discuss the following: First, this paper deals with the status of the legislation

system oversea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directive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status of nations currently attempting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Second, this paper discusses what the resale right brought to the arts market since 2012 when the right started being applied equally to all EU member countries. Lastly, this paper uses this information as the basis to discuss the line of policy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the resale right in Korea, which leads to the research on the legislation draft. This paper researches the difference in the system between countries in depth through detailed comparative law studies, trends in policies and enactments to offer viable possibilities that the legislative body can opt to use.

Korea has been consistent in adapting to sudden changes from the strengthening awareness to copyright issues, which leads the author to believe that the resale right can soon be enacted in Korea. WIPO SCCR(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lready had a discussion on the matter of the resale right in December 2015, and multiple organizations have been lobbying for the enactment of the resale right in China, US, Switzerland, Canada, etc., which makes Korea a likely candidate in the near future as well. The year 2020, 3 years from now, is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first resale right enacted in France. The author hopes that this right will be discussed more actively for the benefit of the artists in the coming years.

.....

Keywords: Droit de Suite, Folgerecht, Artists' Resale

Royalty(추급권), Artists' Right, EU Directive

2001/84/EC

Student Number: 2012-31016